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 김선화 · 박주화 · 송정호 · 이상근  
전연숙 · 허문영 · 현인애 · 홍석훈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 김선화 · 박주화 · 송정호 · 이상근  
전연숙 · 허문영 · 현인애 · 홍석훈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신통일대계 2015)

---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소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엔피(02-2277-4718)  
인 쇄 처 현대아트컴(02-2278-4482)

ISBN 978-89-8479-823-6 93340  
남북 통일, 정치 제도, 경제 제도  
3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01146  
가 격 15,500원

---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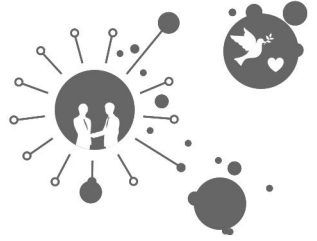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Contents

요약 / xiii

<b>I. 서론</b> .....	1
1. 연구 목적 .....	3
2.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 .....	7
<b>II.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 개념</b> .....	13
1. 북한수용 관점에서 기존 연구 분석 .....	15
2. 북한수용의 개념 .....	21
<b>III.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Ⅰ): 제도 차원</b> .....	31
1. 남북한 정치제도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	33
2. 남북한 경제제도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	100
<b>IV.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Ⅱ): 인식 차원</b> .....	135
1. 조사 개요 .....	137
2. 통일에 대한 인식 .....	142
3. 삶의 만족도, 정체성에 대한 인식 .....	157
4. 정치제도 통합에 대한 인식 .....	174
5. 경제제도 통합에 대한 인식 .....	192
6. 주요 지표의 교차 분석 .....	218



V. 남북한 제도통합 추진 방향 .....269

참고문헌 / 280

부록 / 288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67

# 표 차례

표 I-1	1단계 4개년 통일연구 .....	4
표 I-2	남북한 통일환경: 북한요인 및 지표 .....	6
표 II-1	북한주민 통일의식 중 「통일인식」 관련 문항 .....	19
표 II-2	남북통합지수 중 의식통합지수 세부 지표 .....	20
표 II-3	수용 개념의 조작적 정의 .....	29
표 III-1	사회주의 체제 변화의 모델 .....	35
표 III-2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유형 .....	46
표 III-3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변화 전개과정 .....	54
표 III-4	현대의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주요 영역: 상호 관련한 제 원칙과 영향을 주는 제 분야 .....	74
표 III-5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를 위한 이전 비민주주의 체제 유형의 함의 .....	77
표 III-6	남북한 체제통합 시 정치체제의 수용력 지표 .....	83
표 III-7	정치적 거래비용과 제도 정합성에 따른 제도통합 수용력 .....	133
표 IV-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징 .....	141
표 IV-2	평화유지 전제의 분단 고착에 대한 동의의 평균 및 표준오차 .....	221
표 IV-3	통일에 대한 행동 점수의 평균 및 표준오차 .....	224
표 IV-4	통일이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문항 평균과 표준오차 .....	225
표 IV-5	통일 이익의 평균 및 표준오차 .....	227
표 IV-6	통일 이유의 평균 및 표준오차 .....	229
표 IV-7	삶의 만족도 평균 및 표준오차 .....	231
표 IV-8	남한주민과의 동화의 평균과 표준오차 .....	234
표 IV-9	남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의 평균과 표준오차 .....	235
표 IV-10	민주주의 생활의 평균과 표준오차 .....	237
표 IV-11	정당정치 이해의 평균과 표준오차 .....	240
표 IV-12	반권위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	242



표 IV-13   표현의 자유의 평균과 표준오차 .....	244
표 IV-14   절차 민주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	240
표 IV-15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이해도 예측의 평균과 표준오차 .....	248
표 IV-16   자본주의 생활의 평균과 표준오차 .....	251
표 IV-17   자본주의 생활 문항별 평균과 표준오차 .....	251
표 IV-18   노동과 경쟁의 평균과 표준오차 .....	254
표 IV-19   분배 정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	256
표 IV-20   능력 중심 사회의 평균과 표준오차 .....	258
표 IV-21   사유재산제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	260
표 IV-22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이해 정도 예측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	262

# C 그림 차례

그림 Ⅲ- 1   세 가지 유형(종속변수와 지표에 의한)	39
그림 Ⅲ- 2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	48
그림 Ⅲ- 3   민주주의 제도의 구조	53
그림 Ⅲ- 4   정치체제	73
그림 Ⅲ- 5   정치체제 변화의 유형	80
그림 Ⅳ- 1   통일의 필요성	143
그림 Ⅳ- 2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통일 필요성	144
그림 Ⅳ- 3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견해	145
그림 Ⅳ- 4   통일 관련 뉴스 청취 정도	146
그림 Ⅳ- 5   통일관련 세금 납부 의도	147
그림 Ⅳ- 6   통일관련 기부 경험	148
그림 Ⅳ- 7   통일관련 행사 참여 여부	149
그림 Ⅳ- 8   통일관련 논의 여부	150
그림 Ⅳ- 9   통일의 이유	151
그림 Ⅳ-10   남한 입국 후 통일의 이유 변화 추세	152
그림 Ⅳ-11   통일의 국가적 이익	153
그림 Ⅳ-12   통일의 남북한 주민에 대한 이익	154
그림 Ⅳ-13   통일이 응답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155
그림 Ⅳ-14   통일 이후 남북한 생활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간	156
그림 Ⅳ-15   삶의 만족도 I	157
그림 Ⅳ-16   삶의 만족도 II	158
그림 Ⅳ-17   삶의 만족도 III	159
그림 Ⅳ-18   삶의 만족도 IV	160
그림 Ⅳ-19   삶의 만족도 V	161
그림 Ⅳ-20   정체성(유대감) I	162
그림 Ⅳ-21   정체성(유대감) II	163
그림 Ⅳ-22   정체성(유대감) III	164
그림 Ⅳ-23   정체성(자긍심) I	165
그림 Ⅳ-24   정체성(자긍심) II	166



그림 IV-25	정체성(자긍심) III	167
그림 IV-26	민족 정체성(유대감) I	168
그림 IV-27	민족 정체성(유대감) II	169
그림 IV-28	민족 정체성(유대감) III	170
그림 IV-29	민족 정체성(자긍심) I	171
그림 IV-30	민족 정체성(자긍심) II	172
그림 IV-31	민족 정체성(자긍심) III	173
그림 IV-32	전반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	174
그림 IV-33	복수 정당에 대한 이해도	175
그림 IV-34	정당 간 정권교체에 대한 이해도	176
그림 IV-35	단일 정당에 의한 지배에 대한 이해	177
그림 IV-36	야당의 역할에 대한 이해	178
그림 IV-37	강력한 법질서 기반 사회에 대한 이해	179
그림 IV-38	시위 허용에 대한 이해	180
그림 IV-39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	181
그림 IV-40	폭력적 의견 개진에 대한 이해	182
그림 IV-41	투표 행위에 대한 이해	183
그림 IV-42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	184
그림 IV-43	선거 참여에 대한 응답 결과	185
그림 IV-44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이해	186
그림 IV-45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예측	187
그림 IV-46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선거제도 이해에 대한 예측	188
그림 IV-47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정당제도 이해에 대한 예측	189
그림 IV-48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에 대한 예측	190
그림 IV-49	전반적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192
그림 IV-50	자본주의적 역량에 대한 본인 평가	193
그림 IV-51	자본주의 역량 학습에 대한 본인 평가	194
그림 IV-52	자신의 수입에 대한 평가	195
그림 IV-53	1년 이상 근무 경험	196

그림 IV-54	경쟁에 대한 평가 .....	197
그림 IV-55	노동자 임금에 대한 기준 .....	198
그림 IV-56	자본주의와 성실성의 관계 .....	199
그림 IV-57	성실성과 빈곤의 관계 .....	200
그림 IV-58	성실성과 실패의 관계 .....	201
그림 IV-59	공정한 사회와 능력의 관계 .....	202
그림 IV-60	성실성과 자본주의 관계 .....	203
그림 IV-61	역량과 급여의 관계 .....	204
그림 IV-62	노동의 의미 .....	205
그림 IV-63	사업적 결정의 주체 .....	206
그림 IV-64	기업경영과 파업에 대한 인식 .....	207
그림 IV-65	사유제에 대한 평가 .....	208
그림 IV-66	기업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이익 .....	209
그림 IV-67	노동조합과 국가 발전 .....	210
그림 IV-68	부자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생각 .....	211
그림 IV-69	국가의 기업 통제에 대한 견해 .....	212
그림 IV-70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개인소유제에 대한 공감 예측 .....	214
그림 IV-71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개인소유제에 대한 이해도 예측 .....	215
그림 IV-72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취업수준에 대한 예측 .....	216
그림 IV-73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기대 충족 수준에 대한 예측 .....	217
그림 IV-74	평화로운 분단 고착에 대한 그래프 .....	222
그림 IV-75	통일을 위한 행동에 대한 그래프 .....	224
그림 IV-76	통일 이익에 대한 그래프 .....	228
그림 IV-77	통일 이유에 대한 그래프 .....	230
그림 IV-78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래프 .....	232
그림 IV-79	남한주민과의 동화에 대한 그래프 .....	234
그림 IV-80	남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그래프 .....	235
그림 IV-81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그래프 .....	237
그림 IV-82	정당정치의 이해에 대한 그래프 .....	241





그림 IV-83	반권위주의에 대한 그래프 .....	243
그림 IV-84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래프 .....	245
그림 IV-85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그래프 .....	246
그림 IV-86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래프 .....	249
그림 IV-87	자본주의 생활에 대한 그래프 .....	252
그림 IV-88	노동과 경쟁에 대한 그래프 .....	255
그림 IV-89	분배 정의에 대한 그래프 .....	257
그림 IV-90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그래프 .....	259
그림 IV-91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그래프 .....	261
그림 IV-92	통일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본주의 이해정도 예측에 대한 그래프 .....	263



그동안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제도통합 차원에서 분야별 제도통합을 위한 기본 구상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제도통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로 통합할 것인지 분야별 통합의 내용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통일이 성사된 시점에서 남북한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역량, 남북한 제도화 수준, 북한의 역량, 국제적 역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합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도통합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추진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제도 차원과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기본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수용력 평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인식 조사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활용한 인식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2가지 차원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기별 수용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주민 전체 차원의 수용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간접 조사를 통해 남북한 제도통합이 추진될 때 북한 전체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통합문제를 새롭게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수용’의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제도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통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유형 및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문제이다. 즉, 인식 차원에서 수용력의 주체는 ‘북한주민’이고, 그러한 수용을 측정하는 근거는 ‘인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인식’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이해, 만족도(공감)의 2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차원 수용력이다. 이해 차원의 수용력은 상이한 체제와 제도 속에서 정치·경제생활을 해온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 수용력의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공감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통합의 주체로서 제도의 이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족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라는 인식 차원에서의 수용은 새로운 제도 아래 북한주민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한 ‘기대’와 연관된다. 그리고 만족과 공감 차원에서의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수용은 제도통합에 따른 편익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결과의 합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만족도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 주민의 수용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는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회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북한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제도 통합 시에 북한 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 이행이 경제체제의 이행 및 전환에 맞춰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기능해보아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는 3가지 경로를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희망하는 변화 경로는 현재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김정운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어 허용되는 형태이다. 둘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경제건설을 위한 체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의 권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제3의 변화 경로는 정치체제의 쇠퇴 유형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쇠퇴’란 정치체제의 통제력 상실이나 약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행한 상태에서 제도통합이 본격화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순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사례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경제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형중의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박형중

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볼 경우 북한은 현재 3단계 정도에 도달해 있다. 이는 1985~1992년의 중국, 1986~1991년의 베트남, 1987~1991년의 소련 정도에 해당하는 이행 정도라고 그는 평가한다.

그리고 정치적 거래비용과 제도의 정합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용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4가지로 시나리오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화를 기본으로 제도통합 시의 수용력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의 기본틀을 구성한 뒤에 북한의 체제 이행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여타의 초기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통합 시 북한지역의 수용력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북한의 실정에 맞는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제도통합에 따른 북한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인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합추진 기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당제 정당제도와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의 경우 남성의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당제도와 절차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높은 편인 반면, 반권위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감도가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 체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가치 중 ‘노동의 가치와 경쟁을 통한 발전’,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 재산 제도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나타내었지만 ‘능력에 기반한 분배 정의’에는 매우 큰 반감을 나타냈다.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재산제도의 효율성’, ‘능력에 기반한 분배 정의’는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제도와 달리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적 평등관 속에서 생활한 북한주민들도 경쟁과 능력, 분배 정의 등에 대해 공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쟁과 능력, 분배정의 등에 대해 공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세부 통합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가치 부여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합해나갈 것인지를 핵심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제도의 통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교육을 통한 지식획득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의 취업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초창기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 아래 사회화를 거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위한 차별화된 직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합 당시 북한주민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통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내용과 이행

---

방안 못지않게 북한주민들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의 ‘효율성’과 더불어 북한주민을 주체화하는 노력도 병행 및 조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통합, 정치체제, 경제체제, 제도, 인식,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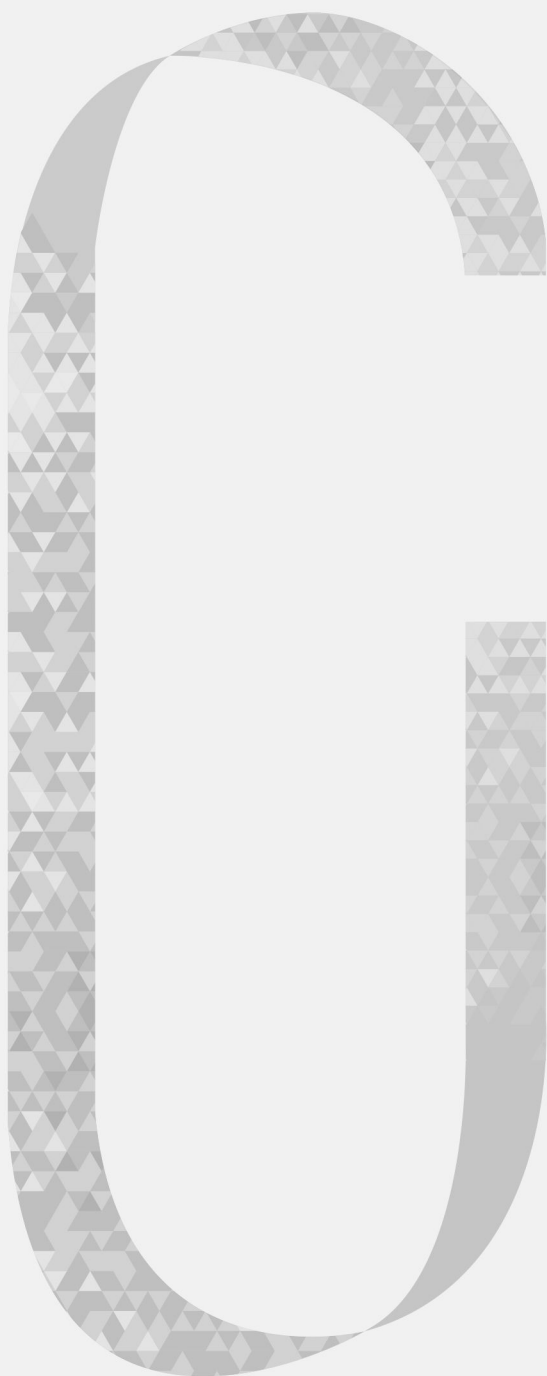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a Systemic and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Past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unification in terms of systemic integration has been about proposing a basic framework for systemic integration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researches have mainly dealt in detail about the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s that integration may happen in by focusing on the process. Future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must also keep in mind the North Korean element and consider the matter of adaptability by North Korea. Furthermore, it must establish a development strategy and action plan that can achieve a systemic integration that bears in mind the North Korean el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daptability of North Korea regarding a Korean integration from a systemic and perceptive level. First, in the systemic level, the report will focus on presenting a basic classification of chang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existing researches and introduce a basic direction for assessing North Korean adaptability. Second, in terms of perception, a method of surveying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will be adopted to indirectly assess the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citizens regarding an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Keywords:** Integration,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institution, perception, adaptability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이명박 정부는 통일항아리 등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을 일부 추진하였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이 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하고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국내외적으로 통일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과제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속가능하며 실현가능한 통일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2014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이래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통일준비 관련 연구업적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통일준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 차원에서 통일준비 구체화 작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대계연구’라는 연속과제를 수행하였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는 2단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먼저 통일연구원은 1차 4개년 ‘통일대계연구’를 통하여 통일환경 평가, 통일비전의 개발, 통일대비 북한변화 및 한중협력, 남북 친화력 확대방안, 통일대비 국내과제, 통일대비 대북정책 모색,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 북한의 민주화 및 시장화 등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 4개년 연구를 통하여 통일연구원에서는 남북한 국력 및 북한의 요인, 통일대비 대북전략, 국내적 준비,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이라는 3가지 커다란 축을 바탕으로 통일준비 대강을 제시하였다.

I

II

III

IV

V

표 1-1 1단계 4개년 통일연구

연도	연구과제	연구개요
1차 연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환경 평가</li> <li>• 통일비전 개발</li> <li>•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li> <li>• 사회주의 체제전환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li> <li>•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li> <li>•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li> <li>•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li> </ul>	남북합의통일 대계 연구
2차 연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li> <li>•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li> <li>•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li> <li>•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li> <li>•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li> <li>•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li> </ul>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전략
3차 연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li> <li>•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li> <li>•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 Order</li> </ul>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구체적 시행
4차 연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li> <li>•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li> <li>• 통일외교포럼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li> </ul>	북한지역의 민주화와 시장화

출처: 박형중·이승렬,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 논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3)을 토대로 작성.

그리고 2014년부터 2차 4개년 ‘신통일대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단계 ‘신통일대계’ 연구는 1단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통일준비의 대강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기존 통일대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창의적 통일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sup>1)</sup> 그리고 앞으로 3년간 후속연구에서 국내 차원, 남북 차원(북한 차원), 국제 차원의 3가지 차원에서 통일준비를 구

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향후 신 통일대계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제도통합 차원에서 분야별 제도통합을 위한 기본 구상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제도통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로 통합할 것인지 분야별 통합의 내용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정치제도 통합의 경우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할 때 제도통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정치제도 통합의 형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통합추진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략한 상황이다. 앞으로 통일이 성사된 시점에서 남북한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역량, 남북한 제도화 수준, 북한의 역량, 국제적 역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합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통합추진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한 축인 북한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을 객체화하면서 남북한 통합을 연구하는 것이 기존 연구의 기본 접근방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 통일대계연구 1차 연도인 2010년도에서는 『통일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요인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요인으로는 당국의 통일관, 주민의 통일인식, 다원화 및 시장화의 3가지 변수와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

1)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고 있다. <표 I-2>에서 보듯이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북한요인을 고려하면서 3가지 변수와 6가지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0년도 연구는 북한요소를 고려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표 I-2 남북한 통일환경: 북한요인 및 지표

요인	변수	지표
북한 요인	당국의 통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 통일관의 변화 가능성</li> <li>•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li> <li>• 남북합의통일에 대한 가능성</li> </ul>
	주민의 통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기존 대남 인식</li> <li>• 200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 및 통일 인식</li> <li>• 북한주민의 남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li> </ul>
	다원화 · 시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권력의 연성화</li> <li>• 민주절차의 제도화</li> <li>• 시장요소의 제도화</li> <li>• 시민사회의 자율성</li> <li>• 경제구조의 민주화</li> <li>• 대외경제의 개방화</li> </ul>

출처: 박형중·이승렬,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 논의』, p. 13.

효과적인 남북한 통합추진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합의 주체로 설정하고 북한의 역량을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 통합을 추진할 때 북한체제 상황과 북한주민들이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파트너로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제도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북한의 수용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2차 연도에는 북한요소에 중점을 두고 신통일대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제도통합의 형태와 제도통합의 내용 구성 중심의 연구



를 넘어 이러한 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추진전략과 행동계획의 수립 차원에서 북한요소를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한 통합의 파트너로서 북한이 남북한 제도통합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남북한 통합추진전략과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

### 가. 연구의 구성

제Ⅱ장에서는 남북한 제도통합을 추진할 때 통합의 주체로서 북한이 어떻게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수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성사되어 남북한 통합이 구체적으로 수행되는 시점의 북한 정치체제(제도) 및 경제체제(제도), 북한주민들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제도의 측면과 인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제도의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제도,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이 성사되어 남북한 통합이 구체적으로 수행될 때 북한이 어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을 규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을 것인지가 핵심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 시점에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유형과 제도통합이 어떠한 상관성을

I
II
III
IV
V

갖고 이행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체제 이행과 관련한 기존논의 속에서 북한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변화 유형 및 수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남북한 통합이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유형과 수용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각각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유형별 수용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 및 유형별로 특화된 통합추진 전략과 이행계획은 후속과제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제Ⅳ장에서는 인식의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식 측면에서 북한의 수용력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인식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제도 측면과 인식 측면에서 북한의 수용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추진전략과 세부적인 이행계획에서는 후속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 나. 연구방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요소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이라는 북한요소를 중심으로 남북한 통합 관련 기존 연구를 분석·정리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남북한 통합 관련 연구를 북한요소, 특히 수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수용을 반영한 연구 수행 필요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남한 주도의 일방향성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방안을 연구하여 왔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한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시각에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력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연구를 정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크게 제도의 측면과 인식의 측면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기본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수용력 평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변화유형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체제 이행 연구를 수용력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체제 이행의 시각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유형을 정리하고 북한을 평가하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시론적 시도라는 점에서 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수용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를 국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식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통합은 개인적 통합과 구조적 통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민이나 귀화에서 보듯이 개인적 통합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이다. 구조적 통합은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공동의 질서하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sup>2)</sup>

이러한 통합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활용한 인식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2가지 차원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경험을 통해 북한주민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수용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기별 수용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주민 전체 차원의 수용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간접 조사를 통해 남북한 제도통합이 추진될 때 북한 전체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전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에서 적용하는 연구방법은 설정 시점과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의 수용력과 인식 측면의 수용력은 그 설정 시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수용력 측정에 본질적인 한계이다. 제도 측면의 수용력은 통합이 시행되는 시점을 상징하는 반면, 인식 측면의 수용력은 현재 시점을 상징하는 조사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통한 수용에 대한 간접적 평가는 개별적 차원인 반면, 남북한 통합 당시 북한주민의 수용력은 북한주민 전체의 수용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 남북한 통합은 전체차원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2)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32.

셋째, 남북한 통합 당시 북한주민의 수용력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예측을 통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I


II

III

IV

V





## II.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 개념





## 1. 북한수용 관점에서 기존 연구 분석

남북한 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존연구를 북한의 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수용력 평가를 위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통합 중심의 남북한 통합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정치제도의 통합, 경제제도의 통합, 교육통합, 행정통합, 법제통합 등 분야별로 어떠한 형태로 제도통합을 이룰 것인가가 주된 연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제도통합과 관련하여 체제 이행과 시나리오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통합 관점에서의 기존연구의 경우 통일연구원에서 일부 미시적 차원의 제도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 영역별 미시연구는 소략한 상황이다.

둘째, 정체성의 관점에서도 남북한 통합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sup>4)</sup>

셋째,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에 초점을 두고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통합 및 갈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연구는 통일의 이행 유형과 시나리오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넷째, 국내 차원, 남북관계 및 북한 차원, 국제 차원 등 3가지 차원에서 통일에 이르는 구상을 다루는 종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가 이러한 종합연구의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

3)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은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pp. 7~15 참조.

4) 박종철 외,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는 정체성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표적 업적이다.

5)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등을 참조.

여 동서독 통합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주로 일방향적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 통합은 양자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일방향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남북한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없다. 남북한 통합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와 수용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제도통합은 수렴보다는 이식의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인식을 가진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수용자의 관점에서 제도통합이 어떻게 수용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상교양을 통해 자기 주체성이 강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이식 형태의 제도통합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이식의 방식으로 제도통합을 추진한 동서독 통합과정의 선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한 통합 관련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여전히 일방향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통합의 주체로 설정하기보다 객체로 설정하고 통합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은 북한이라는 통합 파트너를 고려하여 추진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 통일대계 연구에서 일부 북한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분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요소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인식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 관련 기존의 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인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 조사와 국경지역에서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조사로 대별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접근의 어

I
II
III
IV
V

려움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간접조사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등에서 통일 및 통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례로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기 직전 북한사회에서의 생각과 판단, 그들이 보고 겪었던 바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탈북한지 1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통일인식, 대남인식, 북한실태 인식, 주변국 관계인식, 남한 적응 실태 등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등 일부 기관에서 중국 등의 현지에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조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는 정도이다.

2014년 7월 조선일보가 친인척 방문 혹은 사업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 사람 2.0%, 협력대상 41.0%,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 56.0%이다.<sup>7)</sup> 그리고 강동완·박정란은 제3국에서 국경을 왕래하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의식과 대남인식 및 남한사회 호감도 등

6)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7) “중국 내 北주민 100명 심층 인터뷰(上): 대남 인식,” 『프리미엄조선』, 2014.7.8.,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8/2014070800357.html](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8/2014070800357.html)>. (검색일: 2015.10.31.).

을 조사하였다.<sup>8)</sup>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변화하는 북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통일과 관련된 인식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다.

둘째,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및 남북한 통합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남북한 통합 관련 전문연구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과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2014년도부터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이슈별 갈등과 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사는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의식 조사이다.<sup>9)</sup> 이 외에도 2011년 KBS에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sup>10)</sup>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통합지수를 산정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3영역에서의 구조통합지수(제도적 통합/관계적 통합)와 의식통합지수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남한통합지수를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통합과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조사를 분석할 때 전반적으로 수용

---

8) 강동원·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9)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10) KBS 남북협력기획단 편,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서울: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

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력이라는 관점을 적용한 조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남한주민의 인식 조사라는 점에서 북한요소를 고려한 조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는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이라는 관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은 <표Ⅱ-1>과 같다.

● 표 Ⅱ-1 북한주민 통일의식 중 「통일인식」 관련 문항

<p>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lt;통일인식&gt;에 관한 10개 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까?</li> <li>-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까?</li> <li>-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까?</li> <li>-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까?</li> <li>-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까?</li> <li>-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li> <li>-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까?</li> <li>-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통일 후 사회통합)?</li> <li>-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li> </ul>
--------------------------------------------------------------------------------------------------------------------------------------------------------------------------------------------------------------------------------------------------------------------------------------------------------------------------------------------------------------------------------------------------------------------------------------------------------------------------------------------------------------------------------------------------------------------------------------------------------------------------------------------------------------------------------------------------------------------------------------------------------------------------------------------------

출처: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북한주민통일의식 2014』, pp. 231~232.

I
II
III
IV
V

이상의 문항에서 보듯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인식 중 통일인식 관련 문항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편익, 통일방식, 사회통합 및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수용력의 관점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 중 의식통합지수는 일부 북한요소를 고려하여 통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의식통합지수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사회문화영역으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첫째, 정치영역에서 남북한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둘째, 경제영역에서 북한변인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셋째, 사회문화영역에서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등의 세부 지표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이라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통합지수의 일부분으로서 인식 차원에서 북한요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북한요소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11-2 남북통합지수 중 의식통합지수 세부 지표

	영역	세부 문항
의식 통합지수	정치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필요성</li> <li>•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li> <li>•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li> <li>• 남북한 정치제도 차이 인식</li> <li>•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li> </ul>
	경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li> <li>•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 기여도</li> <li>• 대북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li> <li>•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li> <li>• 개혁의 성과와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li> </ul>

	영역	세부 문항
		• 대북투자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사회문화 영역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사회문화양식의 동일성 •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 pp. 127~128.

남북한 통합 관련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제도 측면과 인식 측면에서 북한요소를 고려하는 연구와 조사는 소략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요소를 독자적 변수로 설정하고 남북한 통합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변수를 독자적 변수로 설정하고 제도와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통합연구 지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북한수용의 개념

### 가. 통합의 방식 및 주체

현재 남북한 통일과 통합은 2가지 핵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는 우리 주도와 가치에 입각한 통일과 평화적인 통일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I
II
III
IV
V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식을 상정하고 급변사태(contingency plan)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러한 2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을 추진할 때 제도통합은 남북한 합의에 의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의 통합은 크게 주체와 제도라는 2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첫째, 통합 주체의 측면이다. 남북한 통합은 남북한 당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통합, 제도통합은 통합의 한 축으로서 북한당국과 주민이 객체화되어 주체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할 경우 북한을 주체로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통합의 주체는 당국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통합에 접근할 경우 북한주민도 주요 주체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통합 방식의 측면이다. 남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70년 이상 이질적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아래 삶을 영위하여 왔다. 이러한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가 제도통합의 핵심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통합의 방식은 크게 ‘이식’의 유형과 ‘수렴’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질적인 주체와 제도가 우월한 제도로 통합될 경우 다양한 제도통합의 유형 중 ‘이식’의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렴모델은 이질적인 체제가 사회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구조와 가치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수렴모델은 양 체제가 각자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수정을 통해 하나로



수렴됨으로써 동일한 체제를 갖는 방식이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합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제도통합 방식에 대해 이식의 유형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식의 유형으로 남북한 제도통합을 상정할 경우 남북한 간 제도의 우월성과 통합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도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질적인 제도를 유지해 온 주체의 한축인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통합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의 제도통합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정책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동독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맞추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식민화’, ‘2등 시민’ 등 동독주민들의 사회적 소외의식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화폐통합, 재정 및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반드시 효율성만이 고려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독지역 주민들이 정치·사회적 소외의식이 존재하며, 동독지역에 대한 특혜가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만 인식되기는 어려웠다.<sup>13)</sup>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식을 통한 동서독 제도통합에서 결여되었던 점은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동독을 주체로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동서독 사례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도로 제도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통합의 한 축으로서 북한주민을 주체로서 설정하고 통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타자화, 객체화할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설

12)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pp. 34~35.

13) 위의 책, pp. 71~72.

정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나. 수용의 개념

본 연구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통합문제를 새롭게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수용’의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 새로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의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에 대해 제도 측면과 인식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제도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통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측면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유형 및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즉, 인식 차원에서 수용력의 주체는 ‘북한주민’이고 그러한 수용을 측정하는 근거는 ‘인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 이식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식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인식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은 이해, 만족도(공감)의 2가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차원의 수용력이다. 새로운 제도를 이식할 경우 북한주민들은 이질적인 제도나 규범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해 차원의 수용력은 상이한 체제와 제도 속에서

정치·경제생활을 살아온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은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개인 차원의 내면화와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규범과의 충돌을 겪고 새로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해 차원의 수용력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이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해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은 남북한 통합 당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북한당국의 사상교양과 통제, 시장화, 외부정보의 유입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상호 작동하면서 변화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차원은 북한당국의 사상교양과 통제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문제이다. 정치체제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다당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상교양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수용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경제체제 차원에서는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사실상 시장을 매개로 생존하는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상교양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수용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이다.

또한 북한 당국의 사상교양과 통제는 북한 내 시민사회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등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기제가 시장화와 정보유통의 확산 과정에서 외면적인 순응과 달리 내부적인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I
II
III
IV
V

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해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은 통합 당시 북한 내 시민사회의 형성 수준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차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정보를 접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유동이 증가하면서 주민들 간 정보소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유동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정도의 문제이다.

둘째,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 수용력의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공감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통합의 주체로서 제도의 이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족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해 차원의 수용력은 개인적 성격이 강한 반면, 만족도(공감) 차원의 수용력은 연령, 계층 등 집단적 성격이 보다 강한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연령, 계층, 지역 등 집단의 성격에 따라 혜택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만족도는 집단별로 상이하게 표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 이식 과정에서 기존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기존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이해관계 수준의 차이가 남북한 제도통합의 효율적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족도라는 인식 차원에서의 수용은 새로운 제도 아래 북한주민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한 ‘기대’와 연관된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는 통일 이전 남한의 체제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연관을 갖고 형성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 특히 우호적 인식의 형성은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제도통합에 대한 기대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평등관도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로의 통합과정 중 기대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수용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을 핵심 부정적 현상으로 강하게 사상교양을 실시하여 왔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북한 내 삶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 확산에 따른 삶의 양극화가 경제제도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기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서독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내재된 기본적 가치 및 규범에 대해서는 동독주민들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은 ‘자유’보다 구동독체제하에서 내면화된 ‘평등’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자유’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동독주민의 불만은 자유보다는 평등, 즉 기회에 대한 평등과 결과로서의 평등을 중요시하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sup>14)</sup> 북한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인식의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만족과 공감 차원에서의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수용은 제도통합에 따른 편익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결과의 합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즉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북한주민의 만족도(공감)는 기대와 결과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제도의 통합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제적 부에 대한 동경, 통합에 따른 기대

14) 위의 책, pp. 57, 74.

I
II
III
IV
V

와 실제 경제적 삶의 수준, 실업(생계 문제)과 빈부격차(상대적 빈곤, 사회적 평등) 등이 북한주민들의 남북한 경제제도 통합에 대한 만족 차원의 수용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는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회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북한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 동서독 사례에서도 참여와 대표성의 문제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 과거 공산 엘리트들이 상급관리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독지역의 행정, 사법, 군, 교육 그리고 기업의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동독주민들은 배제되고 서독인들이 과도하게 진출한 것이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다.<sup>15)</sup> 동서독 사례에서 보듯이 기회균등과 참여가 만족도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수용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만족도는 북한주민의 정체성 형성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만족도 수준의 정체성 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체성은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상관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정체성은 관계의 우호성<sup>16)</sup>과도 상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관계의 우호성 정도는 남북한 제도통합 당시의 신뢰와 호감도의

---

15) 위의 책, p. 61.

16) 관계의 우호성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66의 <그림 III-1> 참조.

문제이다. 이러한 신뢰와 호감은 남북한 통합 당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우호성은 북한주민들의 대남 우호적 인식의 문제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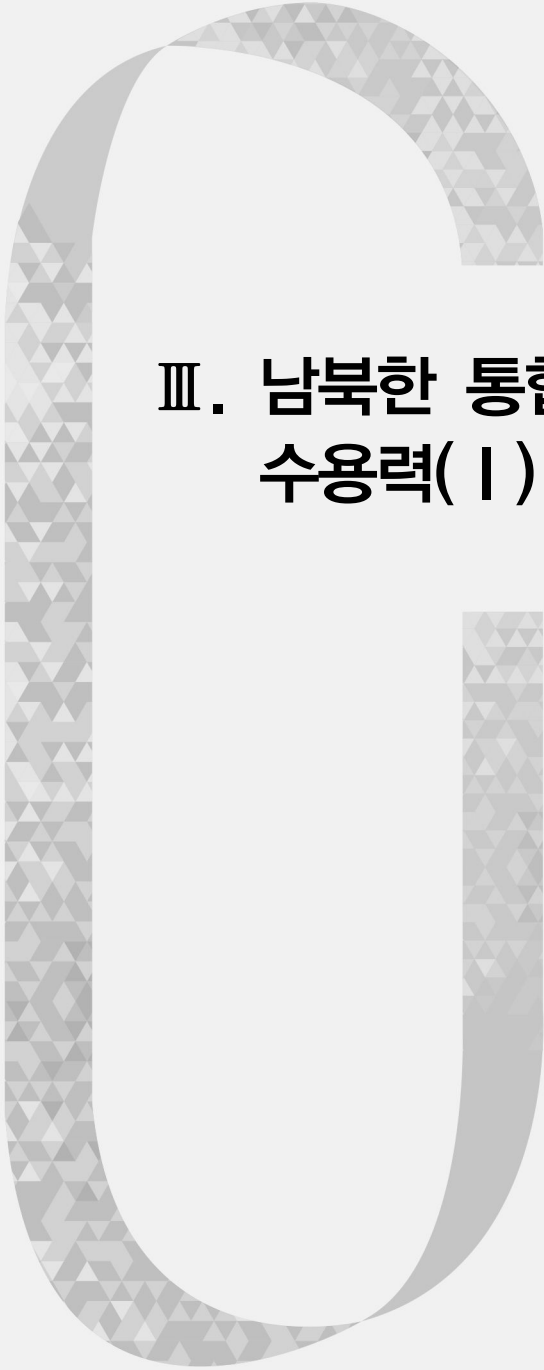
● 표 11-3 수용 개념의 조작적 정의

구성	변수	평가 요소
제도 차원	정치체제(제도)	•통합 당시 북한 정치체제 유형 및 특성
	경제체제(제도)	•통합 당시 북한 경제체제 유형 및 특성
+		
인식 차원	이해 차원	•통합 당시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 수준
	만족도(공감) 차원	•통합에 대한 기대 vs 실질적 삶의 결과 - 높은 수준의 만족도(공감) ↔ 결과 > 기대 - 보통 수준의 만족도(공감) ↔ 결과 = 기대 - 낮은 수준의 만족도(공감) ↔ 결과 < 기대
		•기회균등과 참여 정도
	•정체성 형성 정도	

출처: 필자 작성







### Ⅲ.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Ⅰ): 제도 차원



# 1. 남북한 정치제도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 가. 북한의 정치체제 이행 단계와 제도통합

### (1) 정치체제 이행 단계

남북한의 정치제도 통합 시에 북한 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 이행이 경제체제의 이행 및 전환에 맞춰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기늴해보아야 한다. 체제붕괴와 거의 동시에 정치제도 통합이 이루어진 동독에서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현재 경제체제의 이행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향후 상당기간 자유선거와 다당제 등을 수반한 정치적 다원주의에 의한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체제붕괴와 함께 정치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구(舊)소련 및 동유럽과는 달리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던 중국과 베트남에서 확인된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개혁·개방으로 나섰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지만, 정치체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도입하였던 것과 달리,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레닌주의 시스템인 공산당의 일당독재, 또는 공산당과 국가가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어 있는 당-국가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sup>17)</sup>

북한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들이 시행되어왔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로

17)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과주: 나남, 2006), p. 25;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분단 70년, 북한체제의 변화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5.6.26.), p. 188.

I
II
III
IV
V

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시장경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 허용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향후 북한체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에 조응하는 정치체제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갖는 선행연구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후안 린츠(Juan J. Linz) 그리고 앨프레드 스테판(Alfred Stepan)의 공동 연구<sup>18)</sup>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탈냉전 이후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전체주의, 탈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 권위주의, 술탄주의(sultanism)<sup>19)</sup>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들은 탈전체주의를 다시 초기(early) 탈전체주의, 동결된(frozen) 탈전체주의, 성숙한(mature) 탈전체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이전 학자들이 고대와 근대의 정치체제를 주로 통치자의 수나 통치 목적 등 체제나 정권(regime)의 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반면, 체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정치체제가 대체로 ‘전체주의’가 ‘탈전체주의’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가 ‘민주주의’ 단계로 이행 및 전환 과정을 전개한다고 본다.

박형중의 연구<sup>20)</sup>는 역사적·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의 체제변화가

18)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후안 린츠 & 알프레드 스테판, 김유남 외 옮김,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서울: 삼영사, 1999).

19) 술탄(Sultan)은 오스만제국의 지배자를 말한다. 술탄주의란 세습주의라는 극한 형태의 정권지배다. 특징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용된 정치, 가족적인 권력과 왕가의 세습이 강한 성향을 드러낸다.

20)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치적인 차원의 전체주의는 극단적인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원주의의 말살과 국가에 의한 개인의 완전한 종속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전체주의의 진화에 따른 탈전체주의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통제의 이완이 경제적인 분권화, 사회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점진적인 재구성과 상호 연계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sup>22)</sup> 대체로 이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 감으로써 구체제의 특성이 거의 해체가 되는 상태에서 공산화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체제전환 이후에 서구형의 체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물론 탈전체주의화하는 도중에 체제전환이 일어날 경우, 비(非)서구형 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려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 사회주의 체제 변화의 모델

		공산주의 체제			체제전환 이후 두 가지 가능성	
정치	전체주의	초기 탈전체주의	동결된 탈전체주의	좌·우 포퓰리즘적 권위주의	민주주의	
			성숙한 탈전체주의			
경제	스탈린적 중앙집권체계	부분 분권화 중앙집권체계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마피아 경제 정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	이단그룹 부재	이단그룹 맹아	이단그룹 등장/ 2차 사회 형성		극좌·우 집단주의 우세 취약한 다원주의	다원주의 정치사회
			당-국가 대 사회 대결			

출처: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p. 77.

출: 통일연구원, 2001).

21)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p. 26.

22) 위의 책, p. 26.

23)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 77.

나아가 박형중은 이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일반적 변화 양상을 네 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산당 통치 + 생산수단의 국유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두 번째 단계는 ‘공산당 통치 + 생산수단의 국유 + 분권화된 계획경제’, 세 번째 단계는 ‘공산당 통치 + 생산수단의 국유 + 계획지령의 폐기’, 네 번째 단계는 ‘공산당 통치 + 생산수단의 민영화’로 구성된다고 본다.<sup>24)</sup> 네 가지 단계에서 공통적인 점은 정치체제가 공산당 통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김정은 시대와 중국의 1980년대 후반은 각각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25)</sup>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 이행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민주주의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각 국가의 민주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평가는 10개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항목과 15개의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정치적 권리는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결사와 집회의 권리, 개인의 자율과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점수는 1~7점으로 매겨지며,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1.0~2.5점은 ‘자유로운(free) 국가’로, 3.0~5.0점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 5.5~7점은 ‘자유롭지 못한(not free) 국가’로 분류된다.<sup>26)</sup>

24)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9, 2015.4.29.), pp. 1~2.

25) 위의 글, p. 2.

26)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5 Methodology,”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Methodology\\_FIW\\_2015.pdf](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Methodology_FIW_2015.pdf)>. (검색일: 2015.10.15.).

2014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195개국 중 ‘자유로운 국가’는 89개국에 달한다. 북한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두 항목에서 모두 최하 점수인 7점을 기록하였다.<sup>27)</sup> 1860년 37개 국가 중 1개의 국가만이 다두제(polyarchy)의 민주주의 체제에 도달하였던 현실과 비교하면, 150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이 정도까지 확산된 것도 커다란 발전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하지만 많은 국가가 아직까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주의는 계속 확산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정치체제 변화 경로

야노스 코르나이(János Kornai)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전적 사회주의’가 ‘개혁사회주의’로 변화하고, 다시 개혁사회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혁사회주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시장화’에서 ‘사유화’로, 다시 사유화에서 ‘자유화(민주화)’의 단계로 구분한다.<sup>29)</sup> 그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정치체제의 전환으로 달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자유화(liberalization) 또는 구체제의 붕괴’ 단계가 ‘민주화 또는 체제 교체 및 제도 구축’ 단계로, 다시 이것이 ‘체제의 대체·전환 과정인 공고화(consolidation)’로 변화하는 경로를 제

27)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5,” <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5>. (검색일: 2015.10.15.), pp. 7~8, 24.

28) 정해구, “민주주의 역사와 그 궤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민주주의 강의 1: 역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 11.

29)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18~30, 565~570; 권속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북한, 베트남 사례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 18~19에서 재인용.

시한다.

브레진스키 역시 정치적 변화를 체제전환의 완성으로 상정한다.<sup>30)</sup> 또 브레진스키<sup>31)</sup>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집권당인 공산당이 정치체제를 통제하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사회와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 권위주의’를 공산당이 정치체제를 통제하기는 하나 시민사회의 등장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세가 도전받게 되는 단계로 파악한다. 또한 ‘탈공산주의 권위주의’를 민족주의에 근거하는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여 이념이 형식화되고, 시민사회가 정치사회가 되며,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세가 후퇴하는 단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탈공산주의 다원주의’를 정치·사회·경제 등 체제의 모든 면이 다원화되는 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로 구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1단계로 설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집권당인 공산당이 시민사회의 등장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수세에 처하게 되며, 3단계 탈공산주의 권위주의를 거쳐 마지막인 탈공산주의 다원주의 단계로 이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sup>32)</sup>

박종철 등의 연구<sup>33)</sup>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수많은 변수에 의한 다양한 경로를 단순화하여 북한 경로, 중국 경로, 동유럽 경로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로를 단순화하면, 결국 세 가지 유형으로 좁혀진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다원화’와

---

30) Zbigniew Brzezinsk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National Interest*, no. 33 (1993), p. 4; 권숙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p. 19에서 재인용.

3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MacMillan, 1990);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명순희 옮김, 『대실패: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서울: 을유문화사, 1990).

32)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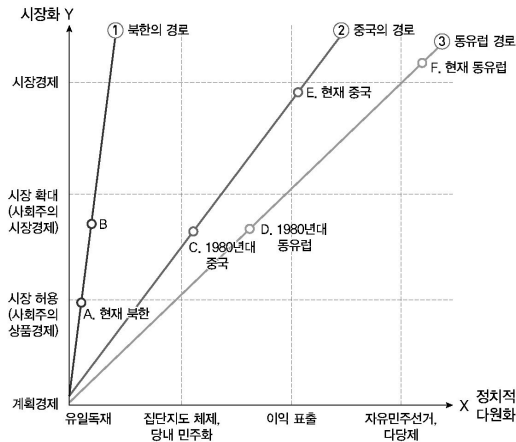
33) 위의 책.



‘시장화’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① 북한 경로, ② 중국 경로, ③ 동유럽 경로라는 세 가지 변화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다원화는 정치제도 변화가 민주화의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sup>34)</sup> 정치적 다원화는 유일독재(1단계) → 집단지도 체제와 당내 민주화(2단계) → 이익 표출(3단계) → 자유민주선거와 다당제(4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35)</sup> 여기에서 유일독재의 단계는 전체주의 정치체제로, 집단지도 체제와 당내 민주화 단계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북한과 같은 수령 제하에서 집단지도 체제와 당내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 다원화가 진행된 것임을 의미한다.

● 그림 III-1 세 가지 유형(종속변수와 지표에 의한)



출처: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p. 22.

34) 위의 책, p. 21.

35) 위의 책, p. 21.

I
II
III
IV
V

①과 같은 북한 경로의 경우에는,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체제로서, 수령에 의한 유일독재 체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형태이다. ②와 같은 중국 경로의 유형은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일정 정도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되, 정치적 분야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경제적인 개혁·개방은 특정 공간과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는 사회에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격, 생산, 분배 부문 등에서 개혁 조치와 수출입 및 외환, 북한 관광, 개성공단의 제한적 개방과 같은 개방 조치가 추진되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개혁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다. ③과 같은 동유럽 경로의 유형은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뛰어 넘어서 가격, 생산, 분배 등의 분야에서 개혁 조치와 수출입 및 외환, 북한 관광, 개성공단의 개방 등과 같은 개방 조치가 실시되고, 정치 분야에서도 정치개혁이 시작되어 당내 민주화를 넘어서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을 상정한다.<sup>36)</sup>

구사회주의권의 정치체제 변화를 설명하자면,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후반 자오쯔양(趙紫陽) 시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된 시기도 있었지만, 1989년 6·4 천안문 사태와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보수화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개혁·

---

36) 위의 책, pp. 25~31.

개방 이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시민사회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바야흐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정치(中國特色社會主義民主政治)’를 추진하게끔 강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독재에 기초한 ‘탄력적 권위주의 체제(resilient authoritarian regime)’를 유지하고 있다.<sup>37)</sup>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급진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져 민주주의 제도들이 급속히 이식된 경우지만, 2000년대 들어 푸틴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가 채 공고화되기도 전에 다시 과거 독재체제와 유사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였다. 러시아는 서구식 다당제를 수용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통일러시아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독주하고 있는 일종의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sup>38)</sup> 선거민주주의는 다당제에 기반을 둔 정기적인 선거 및 기타 민주주의의 공식적인 제도, 예컨대 의회, 사법부 헌법 등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체제가 경직되어 국민들이 희망하는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지 못하는 사이버 의사민주주의(pseudo-democracy) 체제라 할 수 있다.

37)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0집 (2010), p. 138. 탄력적 권위주의에서 ‘탄력적’이라는 용어는 앤드류 내이션(Andrew J. Nathan)의 ‘권위주의적 탄력성(authoritarian resilience)’에서 빌려온 용어로 이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탈전체주의적’과 비슷한 용어이다. Andrew J. Nathan, “China’s Political Trajectory: What Are the Chinese Saying?” in *China’s Changing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ed. Cheng Li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pp. 25~43.

38)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pp. 142~143, 168.

I
II
III
IV
V

## 나. 체제 이행 관련 이론 및 선행 사례 검토

### (1) 정치체제 이행 관련 이론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는 기능과 구조로 구성되는데, 기능(function)은 행해져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고, 구조(structure)는 제도, 기구, 장치 및 이들이 행해지는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정치체제(political regime)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인 구조물들의 결합체,” 즉 정치제도와 정치조직의 총체를 총칭한다.<sup>39)</sup>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인 제 관계가 구성되고 유형화되며 조직화되는 방식을 의미한다.<sup>40)</sup> 하지만 대체로 정치체제의 다의성(多義性)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관한 의견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사회주의권이나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있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정치체제의 변화는 국가(state), 체계(system), 체제 혹은 정권(regime)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이 물러난다고 해도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체제의 붕괴보다는 ‘리더십 교체(leadership change)’, 즉 정권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sup>41)</sup> 역사적으로 사회

---

39) 차창훈,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서울: 박영사, 2015), p. 273.

40) Roy C.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pp. 3, 10; 로이 맥크리디스, 김강녕 옮김, 『현대정치체제론: 유형과 제도』 (부천: 인간사랑, 1990), pp. 18~19, 31;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195.

41) 정세현, “김정은 몰락, 北 체제 몰락과 별개 문제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박근혜의 대북 전단 옹호, 남북관계 가로 막아,” 『프레시안』, 2015.6.18.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state 혹은 system-인용자)이 무너지고, 개혁·개방을 할 때는 북한 정권(regime-인용자)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닷컴』, 2012.1.20.

주의 체제의 전환은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경제적 시스템의 변화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정 국가에서 권력 변화가 국가 소멸로 직결된 사례는 식민지화, 전쟁패배 등 국제체제적 수준의 변동과 맞물리는 흔치 않은 경우이었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북한체제의 급변사태 혹은 정권의 변동을 ‘북한’이라는 국가 소멸에 이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과 연관 지어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sup>42)</sup>

현재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주로 개혁(reform), 혁신(innovation), 개선 혹은 개진(renovation), 혁명(revolutionary) 등이다. 이 중 개선 혹은 개진은 공학적 개념을 가미한 것으로서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구사회주의권이냐 중국·베트남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급진적인 혹은 혁명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혹은 진화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여 체제 이행(transition)과 체제전환(transformation) 그리고 체제붕괴(collapse) 등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급진적인 체제전환은 구소련 및 동유럽의 선진사회주의(developed socialism)들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실시한 경험과 같은 ‘이중전환(dual transition)’으로, 점진적인 체제전환은 개발도상의 사회주의(developing socialism)들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만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단일전환(mono transition)’의 의미로도 표현되고 있다.<sup>43)</sup>

그런데 급진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전환으로 구분하는 분류방법에는

42) 함택영·김정, “김정일 체제하 북한의 장래,”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p. 8;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206.

43)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2009), p. 95.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라는 용어는 ‘급진적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쓸 수 없는 점진적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제전환의 용어에는 ‘점진적인’ 차원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를 거친 체제 성격의 변화라는 과정(process)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은 급진적인 체제전환이라기보다는 체제붕괴에 가깝다는 것이다.<sup>44)</sup> 즉 이는 중앙집권과 계획경제를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 (socialist system)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에 정치체제를 분류하는 기본 단위로서 국민국가를 필수 조건으로 하였다. 현대의 어떠한 정치체제도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민주주의적으로 공고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45)</sup>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체제를 분류한 학자들은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정치체제로 구분하였다.<sup>46)</sup> 이에 의하면 거의 모든 연구는 전체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를 거쳐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혹은 전환되는 것을 분석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주의가 보다 중요하게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체제가 확산되는 기간 동안이었다.<sup>47)</sup> 냉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모두 뭉뚱그려 공포의 체제라는 의미로서 전체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sup>48)</sup> 당시 한나 아렌트(Hannah

44) 권숙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pp 22~23.

45)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 7.

46) 21세기 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 113;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198.

47)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할 시간』 (서울: 개마고원, 2013), p. 144.

Arendt)의 『전체주의의 기원』<sup>49)</sup>과 칼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의 『전체주의』 이 두 저술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졌다. 이들은 ‘테러’와 ‘이데올로기’를 전체주의의 핵심적인 두 원리로 들었다.<sup>50)</sup>

프리드리히는 여기에 더해 전체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체주의가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양극단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주의 통치행태의 특징으로 이상향의 이데올로기, 비밀경찰의 테러, 유일 정당체제, 대중언론매체의 독점, 무기의 장악 등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브레진스키와 함께 펴낸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sup>51)</sup>에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와 관련하여 ‘전제 경제체제에 대한 중앙당국의 통제와 지시’를 하나의 특징으로 추가하였다.<sup>52)</sup>

권위주의의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단일한 혹은 소수의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국민을 국가의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차원에서는 비슷하다. 린츠에 의하면, 권위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다(<표 III-2> 참조). 린츠와 스테판은 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많은 현대 국가들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3)</sup> 데이빗 이스턴(David Easton)이 제시하는 정치체제 개념에 따르면,

48) 위의 책, p. 144.

49)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Meridian Books, 1960);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2』 (서울: 한길사, 2006).

50)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p. 145;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203.

51)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칼 요아킴 프리드리히, 최운지 역, 『全體主義獨裁政治論』 (서울: 정입사, 1972).

52)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p. 146.

53) 21세기 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 pp. 124~125.

민주주의란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의미하는 투입(input)과, 법률이나 정책의 결정을 나타내는 산출(output)이 아무 단절도 없이 진행되는 정치체제다. 권위주의는 이와 다르게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고 집약되는 투입 과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정책결정과 집행을 의미하는 산출 과정만이 크게 확장된 정치체제를 의미한다.<sup>54)</sup>

표 Ⅲ-2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유형

		통치 구조	지지·동의 조직	이익 조직	권리 조직
전제군주체제		절대적, 개인적	강제와 공모	종속, 착취	없음
왕조정치체제		절대적, 개인적 및 가족적, 전제적	전통적 가치, 복종	종속	제한적(약간의 사회적 권리 허용)
군사 정치 체제	직접적 지배형	절대적·개인적 또는 단체조직적 (군사혁명위원회)	강제	종속 및 다양한 정도의 자유	없음
	간접적 지배형 통제조정 거부권	군장교와 민간공무원, 간접적인 통제, 중재와 거부권	강제 또는 조작, 제한적 대표	조합주의	불확실
일당정치체제		지도자와 당지도층	일부의 동원과 참여	일부의 침투와 재판성, 통제	불확실

출처: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p. 218.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모델들은 분명히 지적 기원이 다르다. 흔히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sup>55)</sup>과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사회계약론』<sup>56)</sup>에서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유래를 각각 찾는다. 홉스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

54)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p. 71.

55) 토마스 홉스, 최진원 옮김,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2009).

56) 장 자크 루소, 권기도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주)웅진씽크빅, 2015).



호하고 그들의 평화적인 이익추구를 가능케 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하였다. 반면 루소는 대중적 참여와 동원을 수반한 인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를 옹호하였고, 인민은 그들의 집단적인 능력 면에서 무오류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지배하에서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홉스의 주장은 권위주의의 독재적 유래를 제공하고, 인민주권과 인민의 무오류성에 대한 루소의 주장은 전체주의의 민주적 기원을 알려준다.<sup>57)</sup>

많은 학자들은 강제력에 의한 지배(rule by force)를 다양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든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절대정치(autocracy), 참주(僭主)정치(tyranny), 총독정치(satrapy), 독재정권(dictatorship), 절대왕정(absolutism), 철권통치(bonapartism), 전제정치(despotism), 군사지배체제(military rule), 혁명위원회체제(junta), 과두제(oligarchy), 정치보스체제(political boss), 신권정치(theocracy), 노골적 폭력체제(outright gangster)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체제들은 ‘동의(consent)’의 조직화와 ‘이익(interest)’의 조직화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1인 또는 소수의 수중에 권력과 강제력을 집중하는 통치 체제를 주조해 놓고 있다. 권위주의는 거의 적나라하게 강제력의 보편적 행사를 일삼는다. 군대와 경찰 그리고 감옥 또는 강제수용소, 심지어는 반대자에 대한 암살조차도 항상 존재하고 이용된다.<sup>58)</sup> 또한 린츠는 참여의 정도와 유형, 이데올로기화와 멘탈리티(mentality)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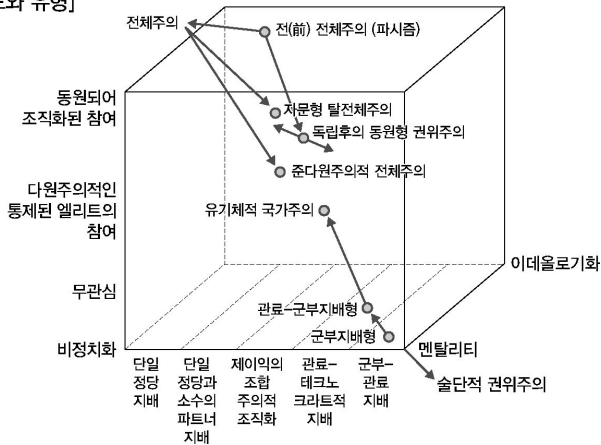
57)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p. 126;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200.

58)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p. 13;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p. 200~201.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합의에 의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권력엘리트가 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체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국민 다수가 정치적 무관심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국민들은 체제에 대해 맹종적이거나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지배집단과 그 반대세력 사이의 대립·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그 배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국민 다수의 무(無)정치화와 극히 제한된 정치적 다원주의가 권위주의 체제 정치과정의 성격을 형성하는 상황적 요인이다. 다원주의가 제한되어 있는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원적인 이익집단의 수는 극히 제한되며 공식적으로 인정·허가하는 이익집단은 대개 친(親)체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sup>59)</sup>

### ● 그림 III-2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

[참여의 정도와 유형]



출처: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London: Boulderm, 2000), p. 175.

59) 김창희, 『남북관계와 한반도: 대결과 갈등에서 신뢰의 장으로』 (서울: 삼우사, 2014), p. 250.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체제 자체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경제와 사회가 분화 및 발전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제도가 만들어져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지와 요구가 수렴되면서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민주주의란 말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이면서 논쟁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그 어원대로 ‘가난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스어인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인민’(원래는 가난한 다수의 사람)을 나타내는 ‘데모스(demos)’와 ‘권력 혹은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티아(kratia)’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둘째로 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에서는 정치원리로 파악되나,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영역의 실천원리로도 이해된다. 또 민주주의는 ‘최소 강령’에서는 “성인에게 투표권을 비롯한 효과적인 시민권이 보장되고, 시민권을 행사해서 정부의 최고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최대 강령’에서는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인민적인 통제 원리와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장치”로 규정된다. 셋째,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다.<sup>60)</sup>

그러나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이의 집행과 관련된 사상 또는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60) 21세기 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 pp. 116~117.

민주주의 사상을 구체적인 제도로 바꾸면, 민주적인 사회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정치적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선거에 적용하려면, 국적, 성, 연령, 정신건강상태, 거주 기간, 범죄로 인한 처벌 등을 기준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sup>61)</sup>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권력분립제, 대표제와 선거, 경쟁적 정당제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 행위자들의 행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권력의 승계와 관련하여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되는 정기적인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제도가 실천되면, 선거의 패자는 차기 선거를 기대하면서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제도가 공동체 소속의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입증될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신생 국가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sup>62)</sup>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들은 발생 시기와 최초 도입국가, 존재 양태와 구체적인 내용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각 국가의 민주주의 제

---

61) 정영태, “민주주의와 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민주주의 강의 3: 제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pp. 19~22.

62) 위의 글, pp. 19~22.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서 기인한다. 경로 의존성은 특정한 제도가 일단 도입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구속력이 점차로 강화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도가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 내 행위주체들의 의도와 전략, 이들 행위 주체들 간의 역관계(물리적인 힘, 교섭력과 정치력,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패배, 식민지, 구소련의 붕괴 등과 같은 국제적인 정치·군사적인 조건하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한꺼번에, 단기간 내에 받아들였다. 그 결과,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도는 대체로 과거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선발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sup>63)</sup>

이와 같이 민주주의 제도의 기원과 현존 양태가 다양하였던 것은 각 국가가 당시 국제적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질서에서 차지하였던 위상, 국내적인 정치·사회집단 간의 이해관계 및 세력관계, 정치·사회집단의 전략적 선택 등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제도가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행위자 주체들의 의지와 능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제도가 원래 의도하였던 성과를 획득하지 못하고 같은 제도가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세력과 같은 주요 행위자가 무지하거나 무능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민주주의적 실천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는 없는 비공식 제도가 기능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거나, 그것이 수행하는 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64)</sup>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인가 비민주주의 체제인가를 판단할 때는 각 나라마다 국가나 사회의 형태뿐만 아니라 운영과 속성 등 그 내용까지

63) 정영태, “민주주의와 제도,” p. 25.

64) 위의 글, p. 27.

I
II
III
IV
V

도 포함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구분은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서서 하나의 사회체제에서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형식과 내용을 포함 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자들을 파악할 때도 그 형식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는 마음만 먹으면 외양을 얼마든지 그럴 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여부를 가릴 때는 형식보다도 오히려 내용을 따져보아야 한다.<sup>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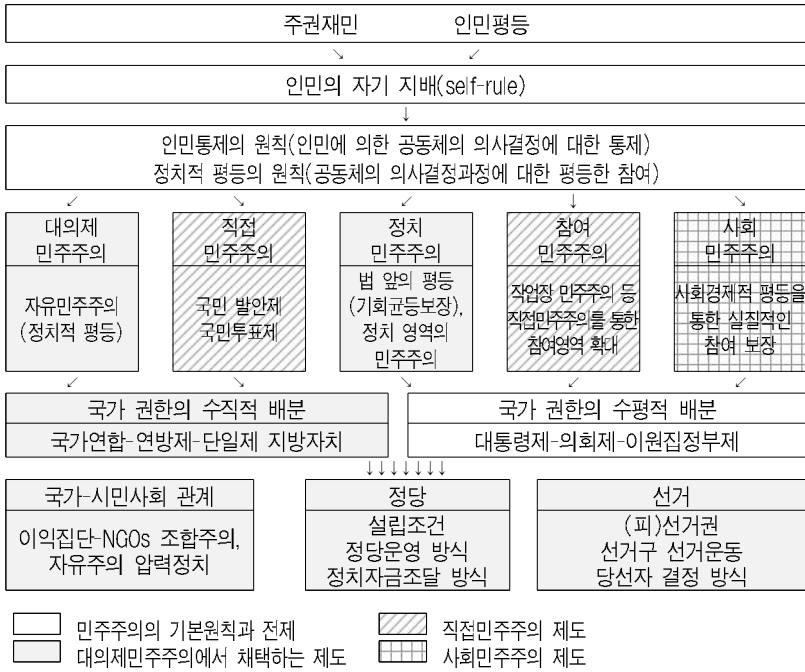
여기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민통제와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원형으로서의 민주주의로부터 아주 세부적인 정당-선거제도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위계구조를 이룬다.<sup>66)</sup> 이를 그림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

65) 21세기 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 p. 123;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197.

66) 정영태, “민주주의와 제도,” pp. 28~39.

● 그림 III-3 민주주의 제도의 구조



출처: 정영태, “민주주의와 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주의 강의 3: 제도』, p. 40.

## (2) 체제 이행 및 전환의 선행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 간의 첨예한 냉전적 대결은 1980년대 말 이후 소련을 위시한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으로써 해소되었다. 구소련과 동유럽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정부형태의 출현과 통치제도의 변화, 새로운 정당체계의 도입과 발전, 사회통제 방식의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형은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전적으로 대비되는 전체주의 체제였던 사회주의 국가들로

I
II
III
IV
V

하여금 권위주의나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기본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체제의 이행과 전환은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구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민주화의 경로가 나타나게 되었다.<sup>67)</sup>

우선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우, 이들 국가들이 성립되었을 때에 정치체제의 기본구조는 동일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후 각국의 정치체제 변화는 양상을 달리하였다. 이것은 각국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역사적 발전경험의 차이와 각국의 근대화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국가들을 중국·베트남과 비교하여 정치체제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경제개혁과 동시에, 또는 연이은 정치개혁으로 인해 체제 붕괴에 달하는 정치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보인 체제변화의 유형과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III-3> 참조).

● 표 III-3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전개과정

		변화의 발단	변화의 전개	변화 후 상황
위로 부터 변화	소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르바초프 등장</li> <li>페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세력의 분열과 보수 쿠데타 실패</li> <li>개혁에 따른 시민개혁세력 형성, 민중봉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산당 내 개혁세력 집권</li> <li>급격한 체제 변화</li> <li>장기간 경제 침체</li> </ul>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공산권 변화</li> <li>정권, 개혁 거부</li> <li>반(反)체제 세력 확대, 노조 독립선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산당 내 개혁파 집권, 개혁정책 추진</li> <li>정부-시민세력 협상, 다당제 등 민주화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조로운 체제 변화</li> <li>정치·사회적 안정 유지</li> </ul>

67) 진승권,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pp. 64~65.



		변화의 발단	변화의 전개	변화 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선거, 반체제 세력 집권</li> </ul>	
아래로 부터 변화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공산권 변화</li> <li>• 정권, 개혁 거부</li> <li>• 대규모 주민 탈출</li> <li>• 반체제 세력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 요구 시위 확산</li> <li>• 공산당 내 개혁 지지 세력과 보수파와 대립</li> <li>• 정부-시민협상, 다당제 수용, 총선 실시, 정권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통합 결정</li> <li>• 서독에 흡수통합</li> </ul>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공산권 변화</li> <li>• 정권, 개혁 거부</li> <li>• 대규모 반체제 민중봉기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중봉기 유혈진압, 정치적 혼란 극심</li> <li>• 정부군 반(反)정권시위 가담</li> <li>• 지배세력내 반(反)체우세스쿠 '민중구원전선' 결성, 차우세스쿠 처형</li> <li>• '민중구원전선'(시민당) 산갈 통해 집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권 시민당, 전공산당 귀족 기득권 보호, 개혁 부진</li> <li>• 경제난 극심, 정치적 혼란 지속</li> </ul>
	알바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공산권 변화</li> <li>• 정권, 부분적 개혁 추진</li> <li>• 시민들 욕구 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저항세력 형성 및 반체제 시위 확산</li> <li>• 정부의 강경 진압</li> <li>• 다당제 수용, 선거로 노동당 재집권</li> <li>• 경제난, 불안정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정 집권으로 정권교체</li> <li>• 정치적 혼란 지속</li> </ul>
타협에 의한 변화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공산권 변화</li> <li>• 기존 자유노조 등 사회세력 존재</li> <li>• 자유노조, 정부에 개혁조치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자유노조 정치 및 경제 개혁 합의</li> <li>• 다당제 수용 및 총선거를 통해 자유노조 집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li> <li>•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li> </ul>
	체코 슬로 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공산권 변화</li> <li>• 정권, 개혁 거부</li> <li>• 반(反)정부 시위 발생, 정부 강경 진압</li> <li>• 반체제 세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반체제 세력 협상, 반체제 세력 내각 임명</li> <li>• 공산당 정부 비공산계 정부 승인</li> <li>• 총선거를 통해 하벨 대통령 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 변화 순조롭게 진행</li> <li>•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li> </ul>

출처: 김진무, “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4), pp. 26~28.

중국에서는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197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1970년대 말 가난하고 힘없던 국가



에서 30여 년 만에 초강대국 미국과 국제질서를 논하는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제개혁과는 달리 정치체제의 개혁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현재도 공산당 일당에 의한 권력독점은 지속되고 있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데 있어 공산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역할은 과거에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파악하여도 무방하다.<sup>68)</sup>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 기층민주 그리고 당내민주 등으로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야당은 존재하지 않고 공산당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법치가 법제로 이해되고 국가 관료도 기층 단위에서만 민주적으로 제약될 뿐이다. 중앙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인민의 지배와 선출, 그리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 의한 감독 및 견제와 균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69)</sup>

그럼에도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정치체제 변화를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중국에서도 정치개혁은 추진되었다.<sup>70)</sup> 중국의 정치개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정치개혁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유지라는 전제하에서만 추진되었다. 그것은 첫째, 사회주의,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셋째, 공산당 지배, 넷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견지라는 ‘4항 기본원칙(四項基本原則)’ 견지를 원칙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 공산당에 의한 일당 지배가 가장 중

68) 진승권,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pp. 68~69.

69)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p. 168.

70)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전성홍,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회고와 전망: 주요 영역과 추동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2001), p. 308;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지도부, 당의 지도력 그리고 정치체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p. 9.

요한 원칙으로 간주되었다. 삼권분립과 다당제 실시 등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된 개혁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직접선거의 실시 등 국민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정치개혁은 극히 제한적으로 기층 단위에서만 추진되었다. 둘째,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은 경제발전을 최고 목표로 하여 그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개혁은 애초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을 이루었다. 행정개혁은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고, 인사개혁은 유능한 통치 엘리트의 충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sup>71)</sup>

베트남에서의 체제변화는 중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도 공산당 독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쇄신’이나 ‘혁신’으로 번역되는 도이모이(Doi Moi)<sup>72)</sup> 정책을 채택하였다. 베트남은 6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며 개혁정책을 시도하였다. ‘빈곤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에서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사회주의’로의 발상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73)</sup> 하지만 베트남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개혁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당의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71)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p. 27;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p. 210~211.

72) 이 용어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pp. 15~16 참조.

73)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p. 43;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48.

I
II
III
IV
V

과정 그리고 당의 사회주의적인 역할 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sup>74)</sup> 물론 부분적인 당 개혁에 힘입어 인민회의를 보다 실질적인 인민의 대표기구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혁 조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sup>75)</sup> 하지만 공산당의 사회통제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신장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공산당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사법부도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76)</sup>

몽골에서의 정치체제 변화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192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 몽골은 유일정당으로서 권력을 독점하였던 몽골인민혁명당의 통치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구소련에서의 개혁·개방의 움직임으로 인해 집권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약화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집권세력과 체제저항세력 간의 몇 차례 협상을 통해 획기적인 정치제도적 변화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몽골의 정치체제 변화과정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sup>77)</sup> 구체적으로 몽골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몽골인민혁명당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발휘하는 가운데 새로 생겨난 정당인 민주당이 권력을 분점하는 모습을 보였

74) 진승권,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pp. 74~75.

75) 이에 대해서는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김종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제13권 2호 (한국동남아학회, 2003) 참조.

76) 진승권,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p. 75.

77) 위의 글, p. 71.

다. 몽골인민혁명당은 1990~1996년과 2000~2004년 기간 동안 단독으로 집권하였고, 2004~2006년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과 대등한 차원에서 연립정부에 참여하였다.<sup>78)</sup> 그리고 몽골인민혁명당은 이후 형성된 연립정부에서 다수정당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2008년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승리를 확보하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996~2000년 기간 동안 다수당이 되어 연립정부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저항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부정선거에 따른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민주화 추진 정도는 아시아의 체제전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79)</sup>

라오스의 사회주의 체제는 베트남과 유사하게 1953년부터 1975년까지 긴 내전을 거친 후 수립되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체제 수립 이후의 정치과정에서도 베트남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라오스는 정권수립 이후 소련식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였으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자 베트남에서 도이모이 정책이 시작된 해인 1986년에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경제기제(New Economic Mechanism: NEM)’를 도입하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이 진척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공산당 독재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1991년에 채택된 새로운 헌법에서도 라오인민혁명당은 국가지도적 역할을 부여받아 라오스의 유일정당으로 권력을 독점하여 왔고,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은 라오인민혁명당의 정상 기구들이 담당하여 왔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회 선거

78) 위의 글, p. 71.

79) 위의 글, pp. 71~72.

I
II
III
IV
V

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라오인민혁명당이 의회를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라오스의회는 라오인민혁명당의 정책을 승인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크게 제약받고 있고, 기타 언론·출판·집회 등과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sup>80)</sup>

캄보디아에서는 베트남·라오스와는 매우 다른 모습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한 것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던 1975년 폴포트(Pol Pot)가 이끄는 크메르루즈(Khmer Rouge)가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캄푸치아’를 선포하면서 서부터였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겪게 되었다. 1975~1978년 철저한 사회개조를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100여만 명 이상의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폴포트 정권은 1978년 말 베트남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1979년 초에 붕괴하였고, 베트남으로 망명하였던 크메르루즈 장교 출신 행삼린(Heng Samrin)과 훈센(Hun Sen)이 정권을 획득한 가운데 1979년 초에 ‘캄푸치아인민공화국-캄보디아국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세력은 베트남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중국과 미국의 지원 그리고 과거 국왕이었던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와의 공조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무력투쟁을 이어갔다. 20년 이상 걸쳐진 이 내전은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이 체결되는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 캄보디아는 1993년 유엔의 중재 속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호를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으로 바꾸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

80) 위의 글, pp. 75~76.

다당제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의 길로 향하는 획기적인 정치체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인민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1당우위의 정당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자유화의 추진 속에서 여러 형태의 결사체들이 등장하여 시민사회의 폭이 확대되었다. 국제사회의 평가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수준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같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들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민주화 수준이 대폭 진전된 몽골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1)</sup>

미얀마에서는 2015년 11월 현재 53년 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대표하는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었다. NLD는 단독 집권의 마지노선인 329석을 넘어서면서 2016년 2~3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sup>82)</sup> 1948년 1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1962년 3월에 발생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네윈(Ne Win)에 의해 1988년까지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1988년 3~9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반정부시위로 네윈이 사임하고 시위대와 군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988년 9월 네윈의 막후 조종을 받는 소몽(Saw Maung) 총사령관 겸 국방장관 주도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 군사정부가 등장하였다. SLORC은 모든 통치기구를 해체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사회주의의 포기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천명하였다. SLORC

81) 위의 글, pp. 76~77.

82) 『연합뉴스』, 2015.11.13.

은 1989년 6월에 국호를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변경(미얀마는 ‘결속’을 의미)하였다. 1990년 5월 실시된 다당제 총선에서 야당인 NLD가 압승(전체 의석의 82%를 차지)을 거두었음에도 군사정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1991년 2월 소용 SLORC 의장은 NLD에 정권 이양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이후 군사정부는 1997년 11월 SLORC를 해체시키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NLD를 지속적으로 탄압, 정치세력화를 사전 차단하였다. SPDC 군부 지도자들은 2003년 민주화 로드맵 7단계를 제시한 이후 국민회의를 수차례 소집하여 신헌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외부의 민주화 압력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여 왔으나, 2015년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군사정권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sup>83)</sup>

한편 쿠바는 북한과 함께 기존 사회주의 체제와 일당독재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는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쿠바는 미국과 반세기 이상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였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이 실권을 물려받은 2006년 이후 꾸준한 개혁개방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2월 16일 북한이 하루속히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과 같이 개혁·개방의 노선을 선택해야 하고 쿠바와 같이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sup>84)</sup>

쿠바는 1990년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처럼 일종의 지역적 신

83)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mmr.mofa.go.kr/korean/as/mmr/policy/overview/index.jsp>>. (검색일: 2015.10.15.).

84) 『국민일보』, 2015.2.16.



(新)냉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력은 199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희망적이지 않았다. 쿠바는 당-국가 위계 체제를 고수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쿠바 주민들은 카스트로 정권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탄압을 경험하였다. 몇 차례의 정변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한 쿠바에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라울 카스트로는 실권을 이양 받은 이후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그는 실권을 잡기 이전까지 40여 년간 국방장관을 지냈고, 1959년 쿠바혁명 직후에 국방과 정보기관 등 권력기구의 설치를 주도하면서 반혁명세력 척결에 나서 상당히 잔인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이어받은 후 물자와 개인자유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쿠바의 문제가 상당부분 자생적인 것으로, 즉 사회주의 체제 고유의 것이라고 하면서 “변화의 방향과 관련한 공개적 토론을 촉구”하였다.<sup>85)</sup>

하지만 쿠바가 국제사회가 바라는 만큼 변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쿠바는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제의 핵심 부분은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이는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울 의장의 개혁·개방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근본적인 원칙하에서만 허용된다. 라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개혁(reform)’ 대신 혁명의 ‘갱신(updating)’이라고 규정한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탄압이 진행된다.<sup>86)</sup> 따라서 쿠바에서

85) “변화의 방향 토론하자”...라울 카스트로식 ‘백화제방,’” 『한겨레』, 2015.1.3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76018.html>>. (검색일: 2015.10.15.).

I
II
III
IV
V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경제와 사회의 분화가 확대되어 쿠바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행 및 전환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에 대한 국가 역할의 축소와 그에 따른 자발적인 사회 영역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산당 일당에 의한 정치권력 독점과 경제적 자산의 국가적 소유에 기반을 두어 국가가 모든 사회 부문을 장악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해 온 데 있었다. 탈사회주의 체제 이행 및 전환이란 필연적으로 이러한 국가 역할의 변환이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의 민주화, 즉 분권화와 다원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화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sup>87)</sup>

### (3) 기존 이론 및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우선 구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사용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행(transi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행이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sup>88)</sup>들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인 데 비해, 전환이란 ‘구분이나 단절 혹은 실질적 변화’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회주의

---

86) 위의 글.

87) 진승권,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p. 64.

88)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 특징으로서 마르크스-레닌 정당의 나눠지지 않는 권력, 국가의 우월한 지위, 관료적 조정의 우위, 연성예산제약, 만성적 부족경제 등을 설명하였다. János Kornai,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and Does Not Mea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 (2000), p. 29.

체제 고유의 특성이 변화되어 제도화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행이라는 용어는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초기에 나타났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인 반면, 전환이란 1990년대 중국, 2000년대 베트남과 같이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체제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이행과 전환의 개념을 이해할 때, 단기간에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국가 정체성이 바뀐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전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이 체제붕괴에 가까운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이행’의 경험 없이 바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9)</sup>

두 번째, 전체주의는 독재(주의)와의 개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와 독재,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구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엘리트주의)’이나, 많은 논의들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가르는 기준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 즉 다수 대 소수(1인)의 지배를 가리킨다. 물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독재는 ‘홀로 재단한다’는 의미로서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이 자의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sup>90)</sup> 독재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1인 독재’,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사독재’, 민간인이 통치하는 ‘문민독재’, 그

89)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pp. 95~96.

90)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201.

I
II
III
IV
V

리고 인민 등 계급이 통치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계급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독재’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독재, 그리고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가 있을 수 있다.<sup>91)</sup> 역사상 존재하였던 독재체제, 귀족제, 과두제, 전제정치는 모두 독재(엘리트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정당의 독재도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집단지도 체제는 과두제로서 독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주의와 독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정치권력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서 공적 그리고 사적인 영역의 어느 부분까지를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단순한 독재는 개인적 삶의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사적인 영역은 대개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 독재정치는 독재자의 정치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공적인 영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독재정치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이나 사생활 등에는 개입이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독재체제 대부분은 권위주의 체제에 해당한다.<sup>92)</sup>

하지만 전체주의 체제는 독재체제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특수한 통치방식 혹은 정치형태로서 20세기적인 현상이다. 전체주의라는 말은 ‘전체적’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토탈리타리오(totalitario)’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sup>93)</sup> 전체주의는 단

9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E%AC>>. (검색일: 2015.10.27.).

92)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pp. 142~143.

93) 이 말은 1923년에 이탈리아의 자유주의자 지오바니 아멘돌라(Giovanni Amendola)가 파시스트들의 선거법 개악을 지켜보면서 이 악법이 ‘전체주의 정신’에 의해 제정되

순하게 정치권력의 독점과 유지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그를 통해 전체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동원하고 유도해 나가려는 정치행태다. 즉 전체주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체주의는 일반적인 독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의 자유에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sup>94)</sup>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중국·베트남과 같은 체제 이행 및 전환 국가들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유선거’에 중점을 둔 ‘슈페터식 선거적 접근방식(Schumpeterian or electoralist approach)’이나 민주적 절차나 ‘다두정치를 강조하는 달식 절차적 접근(Dahlian or procedural approach)’, 분배 등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경제문제에 착목하는 ‘급진적 대안론(radical approach)’, 법치나 시민사회의 존재를 강조하는 ‘서구식 접근방식’ 가운데 어떤 접근방식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sup>95)</sup>

중국과 러시아 등은 자유경쟁 선거의 실시를 통해 자국 특색에 맞는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슈페터식의 접근방법을

---

었다고 비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런데 파시스트들은 이 비난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여 전체주의라는 말을 ‘새로운 정치’와 동의어로 간주하였다. 이런 표현의 유행 때문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지식인인 겐틸(Gentil)은 파시즘을 ‘삶에 대한 전체적인 발상(a total conception)’으로 이해하였으며 무솔리니는 자신이 만든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라고 불렀다. 위의 책, p. 143.

<sup>94)</sup> 위의 책, pp. 142~143.

<sup>95)</sup> M. Steven Fish, “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 in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eds.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215~216; 서동주, “러시아 푸틴 정부의 정치개혁: 집권 1기 평가와 2기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4집 3호 (2004), p. 162;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p. 141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통해 민주주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조지프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민주주의란 “개인들이 인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나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6)</sup> 이러한 접근방법은 ‘최소정의(minimal definition)’에 가까운 것으로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채 선거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선거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다.<sup>97)</sup>

따라서 민주주의의 ‘최대정의’를 적용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진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열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는 ‘강한 측면(thick side)’에서 최대정의에 따라 민주주의 체제들을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barometer)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마이클 맥플(Michael McFaul)은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열 가지 기준과 특징을 선별해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sup>98)</sup>

- ①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 및 국가의 핵심 정책결정이 통제되며, 특히 군부가 국민이 선출한 민간관료들에 의해 종속되어야 한다.
- ② 행정 권력이 사법부, 의회 그리고 정부 외 기관들과 제도들의 자

96)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st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2); 슈페터 저, 이상구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서울: 삼성출판사, 1990).

97)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pp. 141~142.

98) Larry Diamond, *The Spirit of Democrac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8), p. 22; Michael McFaul, Nikolai Petrov and Andrei Ryabov, *Between Dictatorship and Democrac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4), pp. 3~4;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pp. 142~143, 152~153에서 재인용.

율적 힘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 권력이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sup>99)</sup>을 띠어야 한다는 것으로, 즉 삼권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집권 가능한 중요한 야당의 득표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선거 결과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준수하는 그 어떤 집단들도 정당을 구성하거나 경쟁선거를 하는 데 있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 ④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의 집단들이 정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거나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정당과 선거를 초월하여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⑥ 정부로부터 독립된 미디어가 존재하여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정보접근에서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에게 대안적 정보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⑦ 모든 개인들의 신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토론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 ⑧ 시민들이 법 앞에 모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 ⑨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 ⑩ 법치가 국가나 비국가 혹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개인들의 부당한 감금, 테러, 고문 등과 같은 불법적 개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99) 수평적 책임성은 정치사회 내 대의기관이나 조직들에 의해 제약되는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

I
II
III
IV
V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은 오로지 ④와 ⑧ 정도 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④마저도 신장위구르, 티베트 봉기에 대한 강제진압 사태에서 보듯이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다.<sup>100)</sup> 우리의 통일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대정의를 북한체제에 적용하면 ⑧마저도 실현되기 어려운 계급정책, 즉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등의 구분에 의해 법 앞의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연구한 박형중 등의 연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박형중 등의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단계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경제체제의 이행과 전환의 결과를 정치적인 측면에 맞추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가 해체되어 다른 유형의 체제(권위주의나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간다는 입장이다.<sup>101)</sup> 첫 번째 비판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서로 일대일의 조응관계를 보이며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중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중·동부유럽 일부 국가, 아시아 체제 전환 국가들에서 경제체제의 변화가 커다란 정치체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도 일정한 성과(performance)를 성취하였음을 예시로 든다. 두 번째,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의 개념에 대한 구분 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보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 장의 “(2) 북한의 수용력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에서 <그림 III-5, p. 80>와 같이 X, Y, Z축에 의한 입체적 모형을 통해 향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모습과

100)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p. 153.

101) 권숙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p. 21.



구사회주의권의 전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에서 교환관계 (trade-of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점은 구 소련의 유라시아 지역 국가의 체제전환 이후 권위주의의 약화 혹은 민주주의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정(正)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점진적인 체제전환 전략을 선택한 국가들이 두드러진 경제 성과를 나타낸 반면, 중간적인 체제전환 모델을 채택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오히려 경제 실적이 낮았다. 중국·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체제전환 국가에서 공산당 독재하에 강력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경제적 성공이 항상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증한다.

또한 박종철 등의 연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단순히 ‘정치적 다원화’의 기준을 ‘유일독재 → 집단지도체제와 당내민주화 → 이익표출 → 자유민주선거와 다당제’로만 제시하면,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 예컨대 당-국가 체제에서 당-국가관계의 점진적 분화, 당-정관계의 변화 등 공산당의 권력분산과 같은 변화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다당제나 선거와 같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출현 이전에 경제적·사회적 다원주의가 시장의 확대와 함께 발현되는 것을 정치체제의 미시적 변화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시장의 허용 단계 이전부터 시장의 확장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이익표출이 나타나게 되고 기존 당의 인전대, 즉 전송벨트 역할을 하던 당 외 조직 이외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회단체가 출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연구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등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권력의 집중과

I
II
III
IV
V

분산,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인 점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이 매크리디스(Roy C. Macridis)의 분석은 일반적인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분석에 원용할 수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등 모든 정치체제는 도입하는 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통치 기능을 수행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각 정치체제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능력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모든 정치체제에는 ‘정부’로 지칭되는 통치 구조와 함께, 동의 조직, 이익 조직, 권리 조직과 같은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있다.<sup>102)</sup>

예컨대 구소련의 경우에는, 첫 번째, 통치(command) 구조로는 대표자회의인 소비에트 최고회의와 연방제도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기관을 통제하고 모든 정책을 결정한 것은 소련 공산당이였다. 공산당은 중복적 또는 이중적 멤버십, 노멘클라투라 등의 통제방법을 통해 정부를 통제하였다. 두 번째, ‘동의(consent)’ 조직으로 동원, 통합, 강요(imposition), 침투(penetration) 등이 활용되었다. 이 네 가지는 전체주의 체제의 공통된 특징이다. 세 번째, ‘이익(interests)’ 조직으로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기타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노동자·농민, 화이트칼라 노동자, 공장이나 기업의 경영자 집단, 공학자나 과학자 등 사회적·기능적 조직과, 지식인, 변호사, 작가 및 예술가, 정보기관 및 경찰 단체, 군부세력, 국가 및 당 관료 등 이해관계 집단 등이 그것이다. 네 번째, ‘권리(rights)’ 조직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

<sup>102)</sup>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p. 4.

문화적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등이 있었다.<sup>103)</sup>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각기 상호작용하는 과정(<그림 III-4> 참조)을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그림 III-4 정치체제



출처: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p. 11.

## 다.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지역의 수용력 평가

### (1) 정치체제 변화 관련 선행이론의 활용

일반적으로 민주화 과정의 단계는 독재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인 자유화,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주의의 공고화(내포적 심화 단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기술한 린츠와 스테판의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공고화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의 상호 연관된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공산주의의 하부 형태

103)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p. 195.

인 전체주의 체제에서 시작된다면,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각 영역을 동시에 만드는 과제를 수반할 것이다.<sup>104)</sup>

다섯 가지 영역이란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사회, 정치사회, 법의 지배, 국가기구, 경제사회 등이다. 민주주의는 체제 혹은 정권(regime)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호작용하는 체계(system)이다. 이러한 체계 내 어떠한 영역도 다른 영역의 지원 없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다. 예컨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는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며, 단체를 결사하기 위해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국가기구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더욱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 영역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정치사회는 헌법과 주요 법률을 만들고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경제사회를 위한 전반적인 통제기구를 만들어낸다.<sup>105)</sup>

● 표 III-4 현대의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주요 영역: 상호 관련한 제 원칙과 영향을 주는 제 분야

영역	기본적 조직의 원칙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불가결한 지원	다른 영역으로의 주요한 영향
시민 사회	결사와 통신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인 보장을 확립해 주는 법의 지배</li> <li>• 시민사회가 조직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옹호하는 국가기구</li> <li>• 시민사회에 불가결한 자율성과 활발함을 지지하고, 충분히 다원성을 가진 경제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와 제 가치는 정치사회를 생성하는 주요한 원천이다</li> <li>• 시민사회는 이념을 생성하고, 국가기구와 경제사회를 감시하는 데 기여한다</li> </ul>

104)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 55.

105) *Ibid.*, pp. 13~15.

영역	기본적 조직의 원칙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불가결한 자원	다른 영역으로의 주요한 영향
정치 사회	자유적이고 포괄적 선거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견지에서 정통성을 필요로 한다</li> <li>• 법의 지배에 지원되고, 공평한 국가 기구에 의해 유지되는 법적인 보장을 필요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및 주요 법률을 만들어낸다</li> <li>• 국가기구를 관리한다</li> <li>• 경제사회를 규제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li> </ul>
법의 지배	입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에 강한 근거를 두고, 정치 사회와 국가기구에 의해 존중되는 법적 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영역의 제 활동에 정통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계서 제적인 규범을 확립한다</li> </ul>
국가 기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관료제적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이고 법적인 권위와 그것에 수반한 정당한 폭력의 독점에 대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규범적인 지지</li> <li>• 정치사회가 과세하고, 경제사회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잉여를 충분히 낚아 국가에 환수되는 재정상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정치사회, 경제사회에 대해 민주적으로 규정된 법률과 정치사회에 의하여 확립된 과징에 의한 엄격한 집행</li> </ul>
경제 사회	제도화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사회가 생성하고 시민사회가 존중하며 국가기구가 집행하는 법과 규제의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불가결한 잉여를 낚고,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의 다원성과 자율성에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한다</li> </ul>

출처: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p. 13~15.

따라서 어떻게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지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체제 이행 및 전환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체제 이행 및 전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영역이라는 프리즘을 투사시켜 비교해 보면, 다섯 가지 영역이 온전히 충족되어 있지 못한 데다 그 결핍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약한 사회’와 ‘강한 국가’의 면모들을 공통적으로 띠고 있어 다섯 가지 영역이 각각 비대칭적일 뿐만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최고 지도자나 일부 특정 집단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

I
II
III
IV
V

되어 있으며, 정당체제, 시민사회, 법치 등 여러 측면에서 미발달 상태에 있다. 즉 형식적 선거민주주의는 존재하나, ‘공고화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임은 분명하다.<sup>106)</sup>

이러한 기준을 북한체제 변화에 적용해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훨씬 더 결핍된 상태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전체주의 체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각 영역을 동시에 만드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완전한 함의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sup>107)</sup>

한편 탈전체주의와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분석적 유용성은 분명해야 한다. <표 III-5>에서 알 수 있듯이, 탈전체주의 체제는 정치사회의 자율성 영역을 제외하고는 공고화된 민주주의에 필요한 각 조건에서 ‘하-중’ 혹은 ‘중’의 단계가 혼합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108)</sup> 1989년 초중반 헝가리와 같은 성숙한 (mature) 탈전체주의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다섯 가지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로 이행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106)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p. 145.

107)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p. 62~64의 <표 4.3> 참조.

108) *Ibid.*, p. 55.

● 표 III-5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를 위한 이전 비민주주의 체제 유형의 함의

영역의 특징	권위주의	전체주의	탈전체주의	술탄주의
시민사회의 자율성	중-하	하	하-중	
정치사회의 자율성	하-중	하	하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	하-고	하	중	
직업주의적 규범과 국가관료제의 자율성	하-고	하	하-중	
시장 자율성과 소유권 형태의 다원성을 갖는 경제사회	하-고	하(공산주의자) 중(파시스트)	하-하중	

참고: 이행의 시작에 비교적 밀접하게 도달한 시기 동안에 기존의 비민주주의적인 정권의 각 영역이 갖는 특징들은 민주 지도자들이 직면할 업무과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역이 탈 발전될수록, 민주 지도자들이 새 정권이 공고화되기 이전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과제는 더욱더 많아진다.

출처: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 56.

탈전체주의와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린츠와 스테판의 논의가 유용하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들은 탈전체주의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전체주의 체제의 탈전체주의로의 변화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early) 탈전체주의’는 적어도 한 분야,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동결된(frozen) 탈전체주의’는 시민사회의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은 지속적으로 허용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 당-국가의 통제 기제는 장기간 존속한 채로 변화하지 않는다. 1977~1989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에서 콘스탄틴 체르넨코(Konstantin Usitnovich Chernenk)까지의 소련,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의 동독 등이 해당된다. ‘성숙한(mature) 탈전체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정치적으로 신성시된다. 정치적·경제적·사회

I
II
III
IV
V

적 다양성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며 반대파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 및 문화와 구별되는 2차 문화(second culture)와 병행문화(parallel culture)를 조직한다. 1980년대의 폴란드, 1982~1988년의 헝가리 등이 그러하다.<sup>109)</sup>

## (2) 북한의 수용력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북한체제 변화의 기준들 중에서 현 체제가 붕괴하고 다른 체제가 등장하는 ‘단절적인’ 변화, 즉 흔히 급변사태라고 일컬어지는 ‘체제붕괴’나 ‘급진적 민주화’는 제외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보통 체제붕괴나 급진적 민주화의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및 동구권의 정치체제 변화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현 북한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상정한다. 이 경우에는 변화가 체제 내에서 시작되는 경우로 기존 지도부 가운데 개혁가들이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새로운 질서의 창출에 참여하게 되는 북한 정치체제 변화를 가정한다.

향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아래 <그림 III-5>와 같이 X축으로 당-국가, Y축으로 시장, Z축으로 사회(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각각 상정하여 모형화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주로 ①과 ②의 측면에서 5~10년 후 북한의 전체주의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나아감에 있어 당-국가의 권력 분산에 착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중국·베트남 등과 같은 비민주적 체제 내에서 경제체제의 변화가 수반하는 보다 덜 분명한 형태의 정치체제 변화를 이해

---

<sup>109)</sup> *Ibid.*, pp. 42~51; 린츠 & 스테판,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pp. 71~81;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7), p. 6.



하는 데 한계를 보인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형 수립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박종철 외의 연구 결과<sup>110)</sup>를 적극 반영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박종철 등의 연구는 북한체제 변화에 작용하는 거시적인 변수를 상정하고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단순화하여 세 가지 경우로 유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소련 및 동유럽경로’와 같은 체제붕괴 내지 급진적 민주화의 경우를 배제하고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 경로를 <그림 III-5>에서와 같이 ① 북한이 희망하는 변화, ②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③ 제3의 변화로 유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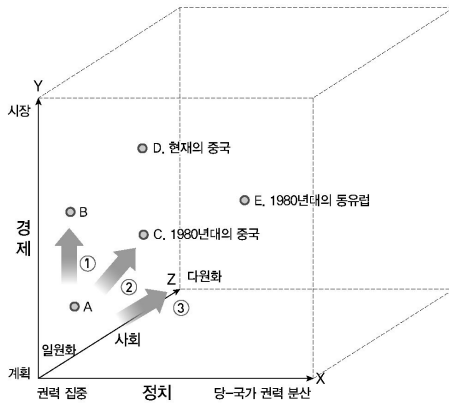
다음으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린츠와 스테판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즉 이들이 구분하는 전체주의의 변화 유형, 초기 탈전체주의와 후기 탈전체주의(동결된 후기 탈전체주의, 성숙된 탈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로의 변화 유형을 X축의 당-국가 부분의 변화에 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로서 최완규<sup>111)</sup>와 박형중<sup>112)</sup>의 연구는 린츠와 스테판의 연구 결과를 원용하고 있다. 특히 박형중의 연구는 체제의 변화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10)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111)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p. 33~38.

112)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 그림 III-5 정치체제 변화의 유형



출처: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①과 같은 북한이 희망하는 변화 경로는 현재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체제로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유지되면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어 허용되는 형태이다. 이 유형에서는 당의 국가에 대한 지배가 강력히 실시되고, 당의 지도력이 전 사회적으로 여전히 관철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에서는 애초부터 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적 자유나 다원화와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장의 확대와 허용은 ‘수령의 영도’와 ‘당의 영도’ 간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당내 이견이나 갈등을 조장하며,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의 분화에 따른 이익 표출과 집약이 초보적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단계를 전제한다. 물론 이러한 이익 표출과 집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 시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다.

②와 같은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경제건설을 위한 체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의 권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당과 국가 관계, 당-정 관계, 국가와 사회관계 등의 변화로 발현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당-국가 체제라는 정치체제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둔 채 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온건한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상정한다. 당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당의 권력 가운데 일부를 당 외 조직이나 세력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정치체제 내 주요 조직들 간의 권력관계와 노동당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예컨대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한 투입(input)을 허용하는 것은 인민의 대표기구인 최고 인민회의의 권력을, 또 정책의 실천권을 위임하려는 시도로서 정부의 권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세력의 이익표출을 허용하는 정책은 노동당과 사회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당 지도력을 둘러싼 변화는 당의 지도력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임을 가정한다. 이 경로에서 제한적이고 덜 분명한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형태상의 변화’에만 초점을 집중시키기보다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집단들과 그 참여방식을, 그리고 노동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과 같은 제3의 변화 경로는 정치체제의 쇠퇴 유형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쇠퇴’란 정치체제의 통제력 상실이나 약화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발전이 성공하면 할수록 정치권력의 일원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경제와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노동당의 권력독점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당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대 추구(rent-seeking)<sup>113)</sup> 등 권력형 부패가 더욱 악화될수록 당의 정책

I
II
III
IV
V

과 노선을 집행하고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의 능력은 계속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치체제의 부적응은 급격한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변화 경로를 전제로 5~10년 후 남북한 체제 통합 시 북한의 수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 III-6>과 같다.<sup>114)</sup>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체제의 개혁이 성공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체제의 개혁은 현재의 전체주의적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같은 분명한 형태를 띠기보다는 정치체제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둔 채 노동당의 권력독점 정도가 약화되는 온건한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수령’의 권력 장악 정도와 반비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노동당의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이행과 같은 분명한 형태를 띠기보다는 노동당의 권력 장악은 계속되지만, 그 정도가 달라지는 ‘제한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

113) 지대추구(rent seeking)는 원래 정부의 시장개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는 고든 툴록(Gordon Tullock)의 이론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독점지대(반사이익)가 발생하게 되고, 이익집단들이 독점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체제라면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였을 자금을 정부에의 로비 등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손실(사다리꼴 크기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14) 이하 정치체제의 수용력 부분에 대한 기술은 김재철의 연구(『중국의 정치개혁』)에서 도움을 받았다.

표 III-6 남북한 체제통합 시 정치체제의 수용력 지표

	탈전체주의						전체주의					
	약 ←-----> 강											
	0	1	2	3	4	5	6	7	8	9	10	
당 최고지도부의 변화												
수령과 당 지도력의 변화												
당과 국가 관계의 변화												
당-정 관계의 변화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												
권력엘리트와 세대교체												
이데올로기의 변화												
※ 0점에서 5점에 해당하는 정치체제는 탈전체주의적인, 5점에서 10점에 해당하는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탈전체주의의 다양한 유형은 린츠와 스테판의 분류에 따른다												

출처: 필자 작성

### (3) 당 최고지도자의 변화

구사회주의권의 변화는 당의 최고 리더십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소련에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등장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과 덩샤오핑(鄧小平)의 최고지도자 등극으로, 베트남에서는 최고지도부의 퇴진으로 개혁 추진이 가능하였다. 특히 중국·베트남의 경우에는 정치체제의 개혁은 당 지도부의 선택의 결과로서 당 개혁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당 지도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화궈펑(華國鋒)을 비롯한 이른바 문화대혁명의 수혜자들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한 반면, 덩샤오핑과 원로 혁명가들을 포함한 개혁지도부들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통일 직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부분

I
II
III
IV
V

적인 개혁 정책이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도이모이 정책이 채택되는 1986년 제6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최고지도부를 이루던 레주언(Le Duan)의 사망에 이어 보수파인 레득토(Le Duc Tho)와 함께 쩌엥찐(Truong Chinh), 팜반동(Pham Van Dong)이 모두 물러남으로써 새로운 개혁 인사들이 등용되었다.

이와 같이 구사회주의권의 정치체제 변화는 대부분 당 최고지도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개혁 지도부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정치체제의 변화는 개혁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김정은의 정상 등극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대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대체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부적으로 권력에 대한 도전, 북한붕괴 시나리오 등에 기반을 둔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한, 종신 권력을 유지하면서 30~40여 년 이상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을 대체할만한 대안도 부재한 관계로, 김정은에게 갑작스러운 변고(變故)가 생긴다면, 해도 북한의 강경 보수 세력은 혈통계승을 주장하면서 김씨 일가에 의한 통치의 지속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등장으로 구사회주의권에서 최고지도자가 교체되어 나타난 모습만큼 북한에서도 정치체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일단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개방형·공개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up>115)</sup> 김정은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개방형·공개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종의 ‘북한판 글라스노스트(glasnost)’로 사회주의권의 점진

적인 사상해방에 비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대표적인 조치로 김정은이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위해 만경대유희장에서 풀을 뽑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내세워 당 관료들의 부패와 세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대목을 꼽는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해외인사 초청,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북한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카메라 촬영의 부분적인 허용, 주요 행사 시 외국 언론 초청, 각종 관심사에 대한 해외언론 소개 등도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개방형, 공개형 조치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선과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당 최고지도자가 김정은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2013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지만, 이 노선이 경제건설에 방점을 두었다는 전제하에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지도부는 당 개혁을 경제발전과 체제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 세도와 관료주의, 즉 당의 일방적인 권력 독점과 행사 방식이 체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구성과 작동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김정일 시대에 작동 불능 상태이었던 당 체제를 정상화하고 당 개혁을 강령으로 설정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군부 강경 세력 등 변화 부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사회의 불만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당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에 대한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16)</sup> 따라서 노동당을 개혁하려는 노

115) “새바람이 분다/제1위원장의 령도술(1),” 『조선신보』, 2012.5.8.

116) 김정은 시대 들어 당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에 대한 민도의 증가에 대해서는 송정호·

I
II
III
IV
V

력은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4) 수령과 당 지도력의 변화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 길항 관계에 있는 ‘수령의 영도’와 ‘당의 영도’라는 리더십의 변화 여부를 남북한 체제통합 시 수용력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서 정치체제의 변화가 없으면,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변화는 수령의 영도 및 당의 영도와 관련한 당 개혁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 노선의 채택과 추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등 ‘업적 정당성’의 획득을 통해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 개혁과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는 당 지도력을 종식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당 개혁의 추진은 어디까지나 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합의에 기초한다. 하지만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에게 고도로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 정치체제의 개혁은 소위 ‘수령의 영도’와 ‘당의 영도’라는 서로 길항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요구를 포함한다. 이는 수령에 의한 소위 ‘유일지배체제’와 권력 엘리트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의 쟁투를 의미한다.<sup>117)</sup> 북한 당국은 이러한 서로 다른 요구들이 조화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오직 ‘수령의 영도’하에 당의 영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

---

이상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김정일·김일성 시대 비교,”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5.10.13.) 참조.

117) 이와 관련한 시론적인 연구로는 이기동,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2호 (2012년 여름) 참고.



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요구들은 갈등을 유발하고 이와 같은 서로 부딪히는 요구들의 조화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등장 이후 ‘당의 영도’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도 개정 전 ‘수령’이라는 단어가 위치한 자리에 ‘당’을 대체하여 넣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수령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헌을 분석해 보면, 좁은 의미의 수령을 김일성으로, 넓은 의미의 수령을 김일성과 김정일을 포함하여 ‘최고영도자’인 김정은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18)</sup>

하지만 북한은 복수(複數)의 수령과 함께 당의 영도 또한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인민군이 아니라 노동당이라는 정치체계를 활용하여 북한 체제를 통치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던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을 복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당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등 정상(頂上) 기구들을 통해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119)</sup> 북한이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당의 정상화를 통한 권력의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을 대내외에게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120)</sup>

하지만 다른 한편 북한은 헌법과 당 규약 그리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을 개정하면서 ‘백두 혈통’에 대한 명기를 공

118) 송정호·이상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p. 73.

119) 장용훈,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32호 (2013), pp 3~5.

120) 송정호·이상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p. 76.

식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미 김씨(金氏) 일가에 의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개정 헌법에서 영원한 주석으로 김일성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일을 옹립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고, 당의 지도이념은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명기하였다. 더욱이 당 규약과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교시의 실행지침적인 10대 원칙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21)</sup> 2013년 12월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에서도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것이 백두의 혈통”<sup>122)</sup>이라고 하여 김씨 일가에 의한 권력세습 의도를 감추지 않는다. 김정일이 생전에 입헌군주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김씨 일가의 수령 자리를 보장해주고 노동당과 같은 정치 시스템을 통해 국가 운영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sup>123)</sup>

따라서 향후 수령의 영도와 당의 영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당내 견해와 입장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가장 강경한 보수 세력은 레닌주의적인 당-국가체제의 복원을 넘어서는 변화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혁 주도 세력은 수령의 지도력에 확신을 가지고 정당성 확보의 기반인 경제발전을 위해 당의 실질적인 변화 방

121) 위의 글, p. 79.

122) 『조선통신』, 2013.12.8.

123) 장용훈,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p. 4.

안을 제시하거나 이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겨야 하는 시스템에서 당-국가의 권력 분산을 통한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 한, 시장의 확대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이익 분화에 따른 요구와 지지를 정치체제가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

#### (5) 당과 국가 관계의 변화<sup>124)</sup>

당-국가 체제에서 당과 국가 관계의 변화는 남북한 정치제도 통합 시 수용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채택할 수 있다. 레닌주의적 시스템에서 당과 국가기구 간에 존재하는 인적·기능적 중첩성은 당과 국가기구 사이의 실질적인 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당-국가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토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분화되고 이에 조응하여 변화하는 당과 국가 관계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당과 국가 관계는 당의 국가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국가의 완전한 독자성 유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변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당과 국가기구는 형식상 구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시되었다. 2008년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와병은 그가 곧 당이고 체제이며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당의 정상화와 함께 당과 국가 관계의 변화도 전망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의 정상기구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등 형식적인 대의기구들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입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

124) 이 부분은 김재철의 연구(『중국의 정치개혁』, 제4장)를 참고하여 작성.

I
II
III
IV
V

인다. 북한 정치체제는 체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또 정책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인민의 대표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입법권, 감독권, 그리고 국가의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기능이 형식적이라도 강화되는 것은 과거 중요한 정책이 당의 문건으로 발표되고, 심지어 김정일 개인의 명령에 의해 대체되었던 것에 비해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위시한 입법 조직과 인력의 강화는 인민의 대표기구로 하여금 입법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권능이 강화되면 대표들이 입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쟁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노동당이 승인한 안건 또한 비판받고 수정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 최고인민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당의 독점권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증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요한 정책이나 인사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 오기 전에 노동당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사실은 권력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권재민과 인민평등의 사상하에 인민의 자기지배 원리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으로서의 독자성을 획득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체제 성격 변화를 진단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6) 당-정 관계의 변화<sup>125)</sup>

당-정 관계의 변화 또한 남북한 정치제도 통합 시 정치체제의 수용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개혁이 추진되고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짐으로써 당-정의 직능적 분리는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일부는 노동당 지도자의 국가기구 직위에 대한 검직을 타파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한정시켜 이해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당과 정부를 직능상 분리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부의 업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체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는 노동당과 정부의 직능 분리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노동당과 정부 기구의 지도자들이 분리됨으로써 정부가 노동당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놓이고, 또 당에 의해 대체되었던 현상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당과 정부를 직능상으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은 두 조직 간의 구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이 보유하고 있는 당과 정부의 제1직위를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 공산당 독재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권력분립 양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당-정 관계의 변화는 탈(脫)선군과 당의 정상화라는 과제에 밀려 후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당-정 관계의 변화는 당-정의 인적·기능적 중복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경제관료 등을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당 정치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125) 이 부분은 김재철의 연구(『중국의 정치개혁』, 제5장)를 참고하여 작성.

I
II
III
IV
V

체제 들어 박봉주 등 경제 관료들의 당 정치국 등 정상기구로의 진출을 눈여겨 볼 수 있고, 이를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과정에서 나타난 권력엘리트 변화의 특징과 비교할 수 있다.

노동당과 정부의 직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강조되면, 정부 업무에 대한 당 조직의 관여가 점차 배제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그 동안 정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던 당 조직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노동당을 행정 업무로부터 분리시키는 당의 탈행정화는 당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것이다. 당이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면 당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당 간부들 사이에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촉발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노동당이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당의 사무기구들이 축소되거나 철폐되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작용이 강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정책결과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강조되는 경제개혁의 추진 상황에서 노동당 사무기구의 철폐는 정부기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 기간 동안 정부는 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정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할 것이지만, 여전히 당은 정부에 대해 독자성을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독자성을 제약할 것이다.

#### (7)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sup>126)</sup>

시장의 확대와 허용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 여부는 남북

한 체제통합 시 정치체제의 수용력을 기능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시장의 확대에 의한 시장화와 사유화라는 경제적 변화는 노동당의 인전대로 작동하는 대중조직들만 존재하였던 북한에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회단체의 출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단체들은 기존 정치권력과 연계를 통해 자신과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관계는 당과 국가 권력이 대중조직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였던 과거로부터의 분명한 변화로 당의 지도력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당과 국가의 권력기구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로까지 이어졌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국가와 사회 간의 대립을 상정하는 시민사회의 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사회단체의 출현과 유지는 당과 국가권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과 국가권력은 시장화와 사유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세력의 출현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포용하고 동화시킴으로써 이들이 독자성을 갖는 도전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관계가 재조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노력에 의해 북한에서 경제개혁의 추진으로 출현하는 사회세력은 권력에 대해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 권력의 보조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정치권력과 사회단체의 연계는 양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권력은 사회단체를 통해 새롭게 출현한 사회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통제력을 유지함으

I
II
III
IV
V

126) 이 부분은 김재철의 연구(『중국의 정치개혁』, 제6장)를 참고하여 작성.

로써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다. 한편 사회세력 또한 정치권력과의 제휴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자신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력과 사회단체 간의 연계는 당과 정부기구가 사회단체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통로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정치권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도 통용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세력이 정치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8) 권력엘리트와 세대교체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엘리트와 세대교체 여부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수용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베트남에서는 개혁·개방 초기에 폭넓은 권력엘리트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가 개혁·개방 초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노령화 문제이었다. 중국에서는 권력엘리트들의 은퇴를 제도화하기 위해 당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준비하였다. 특히 덩샤오핑의 집권 시기에는 당 중앙위원 교체율이 지속적으로 60% 이상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역시 1986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젊고 참신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 새롭게 등용되는 등 세대교체가 폭넓게 이루어졌다.<sup>127)</sup>

중국·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기술간부와 테크노크라트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덩샤

127)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p. 67.



오핑 집권 이후 등용된 당 통치엘리트들은 마오쩌둥 시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전문관료들이었다. 1982년 당 중앙위원의 2%(4명)에 불과하였던 기술간부들은 1987년에 26%(34명), 10년 후인 1997년에는 51%(98명)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들 중에 당·정 간부 출신 비율은 제9기(1969) 때는 당 중앙위원의 27.6%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1982년 12기 때에는 66.7%, 1987년 13기 때에는 77.5%로 대폭 증가하였다.<sup>128)</sup> 베트남에서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모이 정책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판단하에 많은 기술관료들과 고급 지식인층이 1991년 7차 당대회 이후 발탁되었다.<sup>129)</sup>

이러한 권력엘리트 집단 가운데 당·정 간부 출신 그리고 기술관료와 고급지식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 데 반해, 군 출신의 비율은 꾸준히 줄어들어 문민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내정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중국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으로 빚어진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군이 동원되었고, 개혁파들과 군부 원로들이 4인방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군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군의 정치화 경향이 심해 군 출신이 과다 대표되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에서는 제5차 당대회(1982) 당시 군 출신 위원 비율이 13%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군 출신 비율이 제6차 당대회 이후 더욱 떨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내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가 추진되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유지되고 군의 전문화가 확대되면서 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축소·조정되었다.<sup>130)</sup>

128)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25.

129)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pp. 67~68.

I
II
III
IV
V

2012년 4월에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 시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인물들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우선 2012년 이영호 총참모장에 대한 숙청을 계기로 군 수뇌부에서 70대가 모두 물러나고 젊은 세대들로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다. 국가정보원은 2015년 7월 국회에,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의 당·정기관 인사는 20~30% 정도 교체된 데 비해, 군의 경우에는 40% 이상 교체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p>131)</sup> 통일부 또한 2013년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당·정·군의 주요 인물 218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하였다.<sup>132)</sup>

북한에서 원로 혁명지도자들의 퇴장과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은 제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원로 혁명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북한 정치의 제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앙 권력으로 진출하는 혁명 제3~4세대들은 관료조직을 통해 성장한 혁명후세대로서, 이들은 혁명세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혁명보다 경제적 업적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혁명지도자들에 비해 개인적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려 하고, 이에 따라 제도는 제3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통로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정치에서 조직과 제도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지도자들 또한 점차 제도의 제약을 느낄 것이다. 북한에서 최고지도부 구성원들의 퇴직과 관련된 규범이 확립되면, 당 정치국 확대회의 등을 통해 중요한 문

130) 위의 책, p. 68.

131) 『연합뉴스』, 2015.7.15.

132) 『연합뉴스』, 2013.10.9.

제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의 권위에 의해 당의 공식적인 조직들이 압도당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 당 조직을 정상화하는 노력들은 분명 제도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정책의 결정과 같은 전문적인 문제의 경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내각 산하의 부서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 (9)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변화 여부는 정치체제의 수용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권위주의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구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대한 집착이 약한 반면에 체제의 기능적 작용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이 추진되고 경제발전이 강조되면 될수록 이데올로기의 비중이 약화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당 규약 등에서 밝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순수이데올로기화와 아직 제시되지 않는 실천이데올로기의 기능적 작용 여부를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노선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장의 확대와 허용을 수용하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라는 차원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실제로는 점차 탈사회주의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서만 사회주의혁명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공식적인 이념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현실 사이의 부조화 속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엘리트 내의 논쟁과 같

I
II
III
IV
V

등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과 구소련 및 동유럽 그리고 베트남 모두에서 체제 이행과 전환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소련의 경우에 고르바초프는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yov)가 그랬던 것처럼 스탈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의 왜곡을 비판하고 레닌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중국의 개혁파도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개혁·개방을 위한 역사적인 노선 전환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sup>133)</sup> 베트남 역시 통일 이후 급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 정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다. 요컨대 이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 모두에서는 과거 정책이나 노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34)</sup>

그러나 구소련이 개혁에 나서면서 스탈린 시대는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마오쩌둥 시대는 일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국과정에서 마오쩌둥 시대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도 없었기 때문이다.<sup>135)</sup> 이 점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에서 이미 헌법과 당 규약 모두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규정하여 순수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대를 부정하면 결국 이것은 그들의 공적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 자신의 노선과 정책도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정은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노선과 정책을 전환한다면, 아마도 그 노선과 정책의 내용

---

133)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51.

134)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pp. 60~61.

135)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51.

은 기본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대한 부분적 비판과 기본적 수용의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 수령들의 노선과 정책을 계승해야만 하는 김정은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sup>136)</sup> 그런데 선대 수령들이 만들어 놓은 ‘주체’의 폐쇄성, 극단적 자기중심성, 기반의 협소성 등은 이를 제약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sup>137)</sup> 따라서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 김정은 앞에 놓인 숙제다.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강조하거나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를 규율하는 대신에 경제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합하고 또 이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거 이데올로기의 교조적 해석이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던 데 반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정책목표가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해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순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탈전체주의화하여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데 관건으로 남을 것이다.

136)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pp. 60~61.

137)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 (서울: 창비, 2010), p. 80.

## 2. 남북한 경제제도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 가.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단계와 제도통합

남북한의 제도통합 시에 북한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도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통합과 체제 이행이 동시에 시작된 동독에서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이미 경제체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경제 관련 제도들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김정은 집권하에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주민들은 체제 이행의 가속화와 제도통합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행한 상태에서 제도통합이 본격화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순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사례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경제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단계를 벗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까지 포함하여 사회주의 체제 이행의 일반적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논한 경우는 박형중의 연구가 유일할 것이다. 박형중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볼 경우 북한은 현재 3단계 정도에 도달해 있다. 이는 1985~1992년의 중국, 1986~1991년의 베트남, 1987~1991년의 소련 정도에 해당하는

이행정도라고 그는 평가한다.<sup>138)</sup>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행의 일반적 단계들 중 1단계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가 유지되며 공산당 통치가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분권적 계획경제가 운영되고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가 유지되며 공산당 통치도 유지된다. 1979~1982년의 중국이 이 단계에 해당하고, 베트남의 경우 1980~1982년이, 북한의 경우 2002년 7·1조치가 실시된 이후의 상황이 2단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3단계에서는 계획 및 지령에 따른 경제운영이 폐기되지만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공산당 통치는 유지된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제3단계에 들어선 상태이고 나진·선봉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박형중은 평가한다.<sup>139)</sup> 4단계에 이르게 되면 생산수단도 민영화된다.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가 완성되지만 공산당의 통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종의 관치형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게 된다. 1992년 이후의 중국과 베트남이 이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제 이행이 4단계에 이르면 소규모 국유기업은 거의 모두 민영화된다. 중대형 국유기업은 보통 주식회사로 만들어 국가가 대지주로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운영에 개입할 통로를 유지한다.<sup>140)</sup> 북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이행단계로 평가되는 3단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 계획과 지령은 폐기되지만 정치권력이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 수단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유기업이 유지되고 있고 각종 임명권,

138) 박형중, “북한 경제 기본 체제, 그리고 그 변화 현황과 전망,” (2014.4.16.), 미간, pp. 3~4.

139) 위의 글, p. 3.

140) 위의 글, p. 4.

인허가권 등도 정치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제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문들이 공존한다. 전통적 계획부문, 관치적·상업적 국유부문, 시장형 기업 등이 병존하는 것이다. 정권은 각종 인허가권을 장악한 채 이를 배분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이윤을 얻을 기회가 정치적으로 배분된다. 생산수단의 국유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기업은 존재할 수 없지만 일종의 반관반민기업이 등장한다. 국유기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이다. 앞으로는 소형기업의 민영화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단계에 다다르면 일반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게 된다.<sup>141)</sup>

북한경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행이 이루어진 데 따른 일반적인 성격에 더하여 북한만의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박형중은 중국과 베트남 등이 서방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은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른 군비 절감, 서방문화와의 접촉에 대한 경계심 약화로 인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용이성, 자본과 해외시장 획득 등의 혜택을 누린 데 비해 북한은 미·일 등과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42)</sup> 대내적으로도 중국에 비해 북한은 매우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권력은 경제적 독과점을 형성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북한도 이런 경향으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적 기회가 정치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라도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재투자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143)</sup> 약

---

141) 위의 글, pp. 3~4.

142) 위의 글, pp. 4~5.



탈적 성격과 이윤 기회의 정치적 배분 등을 강조하며 시장이 북한정권의 지배수단이 된 결과 ‘정상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은 윤철기, 최봉대 등의 견해와 일치한다.<sup>144)</sup>

## 나. 체제 이행 선행 사례 및 관련 이론 검토

제도통합과 이로 인한 체제 이행의 가속화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체제 이행 선행사례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1) 성공적 체제 이행의 조건

#### (가) 초기조건

체제 이행 선행사례들을 검토한 연구자들은 이행기 경제의 혼란을 줄이면서 경제적 성과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초기조건과 이행전략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이행전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도 순조로운 체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곤 한다. 초기조건의 차이는 이행에 따른 충격은 물론 정책 집행 방향, 제도 형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145)</sup>

중·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 GDP 중 경제상호

143) 위의 글, p. 5.

144)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47권 1호 (2013), pp. 47~73;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2014), pp. 161~195.

145) 정일용,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경제발전연구』, 13권 1호 (2007), pp. 243~244.

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소속 국가와의 교역 비중, 이행 이전의 대외부채 규모, 중앙계획경제 시행 기간, 천연자원 부존 정도, GDP 대비 농업소득 비중, 이행 이전의 중등교육 취학률, 뒤셀도르프(Düsseldorf)를 기준으로 측정한 서유럽과의 거리 등에서의 차이가 체제 이행의 진전도와 전환침체에서 벗어나는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IMF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sup>146)</sup> 전반적으로 체제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국가로는 헝가리와 체코를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일 것이다. 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 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SI) 구성국들은 체제 이행을 위한 개혁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초기조건들이 크게 달랐다는 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설명된다.<sup>147)</sup>

중국이 체제 이행 중에 기록한 높은 경제성장도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저축률, 화교자본의 존재 등 우호적 초기조건이 작용한 덕분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유화가 체제 이행의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실업의 급증과 국민소득 하락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전환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30%에 달하는 높은 저축률과 화교자본의 유입 덕분에 체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외자

146)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IMF Working Paper 00/30 (2003).

147) 정일용,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p. 244.

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급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중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sup>148)</sup>

#### (나) 이행전략

이행전략 면에서는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급진주의 전략은 각국이 가진 특유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프라이부르크학과(Freiburg School)가 제시한 경제통합 방안과 러시아 등에 적용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이행 프로그램이 급진적 체제 이행 전략에 해당된다. 급진적 이행 전략은 빅뱅, 충격요법 등으로 불리는 급진적 시장경제개혁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이질적이어서 어떠한 수렴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두 체제가 공존하는 중간적 상황은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지지자들은 사회주의 가격 형성 체제는 무원칙적이며, 부분적 개혁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이행 초기의 범죄와 부패는 행정적 수단으로 줄일 수 없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빠른 이행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제도들을 이식하는 것을 성공적 체제전환의 관건으로 여겼다. 다수의 급진론자들은 새로운 제도들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계획경제가 남긴 제도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주장하였다.

급진적 전략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유화와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특히 재정적 안정이 이루어진 뒤에야 생산

148) 김병연,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통일 유형,” 『경제논집』, 48권 1호 (2009), pp. 7~9.

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예산적자 청산, 기업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특혜 대폭 삭감, 대대적 가격 자유화, 세계시장과의 통합 및 개방, 인플레이 억지, 국내가격의 세계시장 가격 접근, 환율 안정화, 자유시장 원칙에 기초한 경제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급진적 이행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었다.

급진적 전략을 지지하는 이들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차이와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따른 선택적 정책 수행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 이론의 보편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경제개혁 방안을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 이행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적용하였다.

한편, 점진적 이행 전략은 급진적 전략을 적용한 국가들의 정책 실패와 점진적 이행 과정을 거친 중국, 베트남 등의 상대적 성공을 근거로 제기되었다. 점진적 이행론자들은 국유재산에 기반을 둔 경제부문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비시장 부문이 시장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체제와 제도적 구조의 타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불합리한 제도의 대체에도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영기업의 급속한 민영화는 혼란을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보다 새로 출현하는 민간부문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데 정책의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 국내경제 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라이선스(license), 할당 등의 형태를 띤 국가통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순차적 개혁을 통해 시장제도의 하부구조가 먼저 건설되어야만 체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점진적 개혁론자들은 중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선행된 개혁의 성

과를 바탕으로 다른 개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혁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용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큰 개혁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보다 저항이 큰 개혁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9)</sup>

급진적 전략에 따라던 러시아 등에서의 체제 이행 프로그램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략을 적용했던 국가들이 경제적 침체와 혼란에 빠져든 뒤로 급진적 이행 전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제럴드 롤랑(Gerard Roland)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행기 경제는 성공한 자본주의 경제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상응하는 제도적 틀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롤랑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것에 앞서서 사유재산, 주주의 권리, 채권자의 권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들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기업가 정신, 신뢰, 법률 존중 등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 발전하여 이러한 법률들이 집행될 수 있는 포괄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들을 처음부터 마련해 두어서 경제적 거래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한 뒤 시행착오를 통해 적절한 제도들이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

<sup>149)</sup> Matias Dewatripont and Gérard Roland, "The Design of Reform Package under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5 (1995), pp. 1207~1223; Matias Dewatripont and Gérard Roland, "Transition as a Process of Large Scale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s in Economic Theory*, eds. David Kreps and Kenneth Wall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240~163.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경제가 도입된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지하경제 성장, 생산 감소, 자산 착복, 마피아 창궐, 조세저항 등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진화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화, 사유화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50)</sup>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도 무모한 민영화와 자본시장 자유화가 자본의 국외 반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법률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영화 추진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산을 약탈하려는 동기와 능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나친 긴축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다는 점도 비판하였다.<sup>151)</sup>

롤랑은 초기조건이 개혁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제기하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구체제의 경제구조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파괴하여 백지 위에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실패로 새로운 제도들을 발전시키는 동안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것이 롤랑의 주장이다.<sup>152)</sup> 스티글리츠도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략이 체제 이행국 정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각 나라의 조건에 맞는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였다.<sup>153)</sup>

---

150) Gérard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151) 스티글리츠 저, 강신욱 역,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신고전학과 시장이론과 시장사회주의론 비판』 (파주: 한울, 2003), pp. 277~286.

152) 박제훈,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pp. 17~18.

153) 스티글리츠 저, 강신욱 역, 『시장으로 가는 길』, pp. 277~286.

#### (다) 국가의 역할

이행전략과 관련되어 체제 이행기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급진적 이행론자들은 국가 경제를 강력히 통제해 온 사회주의적 국가기구들이 건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를 약화시켜 시장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약화되자 마피아가 성장하고 불법행위가 만연하였다. 이런 경험은 법을 집행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sup>154)</sup>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이자 조직이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이윤 창출 동기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조건들을 국가가 창출해야만 한다고 본다. 또 시장경제가 출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집행되게 하며, 거시경제적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해야만 제도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행기 경제에서는 시장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시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55)</sup>

일반적으로 강한 국가는 인플레이 억제 등 거시경제적 안정화, 시장의 제도화, 재산권 보호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런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일반예산을 확보하고 있다.<sup>156)</sup>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강한 권위주의 국가와 형

154)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p. 174~179.

155) 신영재, “러시아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모델 연구,” 『러시아 지역연구』, 2권 (1998), pp. 168~170; 정일용,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p. 242.

I
II
III
IV
V

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강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체제 이행을 전후한 일반예산의 변동 폭이 적었는데, CIS 국가들이나 발칸 국가들은 일반예산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체제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예산의 감소 비율이 낮았던 국가들이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체제 이행기의 경제적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57)</sup>

러시아의 경우 약한 국가를 이상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체제 이행전략이 추진되었는데 가격자유화 및 사유화와 함께 경제에 대한 국가의 명령이 폐지되자 1991년부터 1998년에 걸쳐 GDP의 46%가 축소되고 총투자는 81%나 줄어들었다.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매각되자 가치가 큰 자산들은 내부자들에게 양도되거나 범죄집단과 연결된 관리자들에 수중에 들어갔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산해체(asset stripping)가 만연하였다. 한편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철회함에 따라 국가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공무원 실질임금의 폭락, 임금 지불 지연 등으로 국가가 거의 무력화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국가 기능 약화를 틈타 범죄집단들이 출현하여 관할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러시아가 가진 우량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소수의 ‘올리가르히(oligarchy)’가 출현하였다.<sup>158)</sup>

중아시아 국가들이 체제 이행기에 보여준 경제적 성과의 차이도

156) 권만학,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붕괴와 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2002), p. 253.

157) 위의 글, p. 253.

158) 김영진, “체제전환기 러시아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 『비교경제연구』, 16권 1호 (2009), pp. 224~227.



국가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 CIS국가들 중 최초로 1989년의 실질GDP 수준을 초과하였다. 소련 해체 후의 체제 이행으로 인해 1992년부터 1995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GDP의 18.4%가 축소되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4% 가량의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sup>159)</sup> 2004~2006년에도 7%가 넘는 성장을 했으며,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에도 9%가 넘는 GDP 성장률을 보여주었다.<sup>160)</sup>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우즈벡 성장의 수수께끼”를 낮은 공업화 수준, 풍부한 천연자원 등 초기조건 덕택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61)</sup>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체제 이행 초기조건은 다른 CIS국가들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중앙계획경제가 유지된 기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일하였고, 부존된 천연자원은 많았지만 개발이 되지 못한 상태여서 원료 및 주요 에너지의 순수입국이었다. 1인당 소득은 소련연방 평균의 62%로, 1989년 당시 소련에서 두 번째로 빈곤한 공화국이었다고 인구의 44%가 공식 빈곤선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sup>162)</sup>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과는 점진적 이행전략과 국가의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MF와 세계은행 등의 권유와 경고를 무시하고 주택과 소규모 기업은 신속히 사유화하되, 대기업의 사유화는 유예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시하였다. 또 다수의 생

159)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초기조건, 체제 전환 전략, 경제 실적,” 『비교경제연구』, 17권 1호 (2010), p. 112.

160) 위의 글, pp. 113~114.

161) Jeromin Zettelmeyer, “The Uzbeki Growth Puzzle,” IMF Working Paper 98/133 (September 1998).

162)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p. 99.

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정책적 고려에 의해 신용을 할당하며 국영은행이 주도하는 식으로 금융정책을 폈다. 또, 대규모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국가가 최대주주로 남아 지주회사 등을 통해 기업운동을 통제하였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이용하여 면화를 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출한 자원을 밀 생산 증대와 석유 및 가스 채굴에 투입하여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게 되었다. 이후 공업화를 목표로 수입대체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편으로는 GDP의 약 10% 수준에 달하는 교육부문 지출을 유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펴왔다.<sup>163)</sup>

제도변화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체제 이행의 낙제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강력한 경제개입으로 시장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가 출현하지 못하였고,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있으며, 소비재의 자급을 달성했으나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164)</sup> 그러나 발전국가와 유사한 면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매년 8%가 넘는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sup>165)</sup> 우즈베키스탄과 유사하게 점진적 이행전략을 선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대기업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등 적극적 경제개입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안정적인 GDP 증가를 기록하였다.<sup>166)</sup> 2010년에서 2014년에 걸친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163) 위의 글, pp. 105~108.

164) 위의 글, p. 122.

165) “GDP Growth (annual %),”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검색일: 2015.10.2.).

166) 김영진, “중아시아에 있어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과 특성: 경제 성과와의 관련성,”

증가율은 연평균 11.1%에 달한다.<sup>167)</sup>

중국의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는 달리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과 기업으로 분권화하는 전략을 택한 결과 경제체제 이행 정도와 경제적 성과 모두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경제개입 정도가 높거나 낮은 것 보다는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이행과정을 관리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의 병행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의 병행이 이루어진 사례들로 동서독 통일, 중·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홍콩 및 마카오와 중국의 통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68)</sup> 이런 사례들은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함께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통일이다. 연방국가로서 주들이 일정한 제도적 자율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지역에 적용되었으므로 서독의 경제제도가 이식되는 형태로 제도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따른 제도통합으로 급진적 체제 이행이 이루어진 동독지역의 경제적 성과는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이는 제도통합과 급진적 이행전략

『비교경제연구』, 18권 1호 (2011), pp. 1~38.

167) “GDP Growth (annual %),”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검색일: 2015.10.2.).

168) 김병연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통일 유형,” pp. 1~20.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서독 마르크화의 1대1 교환, 고임금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도 급속한 체제 이행 및 제도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험은 이행기 경제를 가진 지역의 자생력을 고려한 이행 및 제도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간에 제도를 이식하려 했을 경우 통합의 당사자 모두가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중·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은 체제 이행이 시작된 뒤 제도통합이 시작되어 양자가 병행하게 된 경우이다. 유럽연합은 가입조건으로 유럽공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할 것과 유럽연합의 법적 권한 및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일 것을 제시하였다.<sup>169)</sup> 이로 인해 중·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개혁하게 되자 이 국가들의 체제 이행이 촉진되는 동시에 경제제도도 유럽연합 기준 가입국들과 유사해졌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국가들의 연합체이므로 가입국들의 경제제도가 모두 같지는 않다. 서독의 제도가 동독에 이식된 것과는 달리 중·동유럽 국가들은 기존 유럽 국가들과 같은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유사한 경제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과의 제도통합은 유럽연합 가입이 2004년에야 성사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국가는 1991년에 유럽연합과 준회원국 관계를 맺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3년에 걸친 가입준비와 협상을 거친 후에야 경제통합에 성공할 수 있었

---

169) 박재복, “유럽연합의 중·동유럽 정책과 EU 확대 현황,” 『세계지역연구논총』, 17집 (2001), p. 119.

다.<sup>170)</sup> 중·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에 조속히 가입하기를 원했으나 기존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통합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점진적 통합은 결과적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이행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될 때까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제도를 고쳐나간 결과 여러 나라들이 자생력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체코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이 지연되었음에도 급속한 체제 이행을 진행시킨 국가이다. 그러므로 제도통합이 진행되기 전에 체제 이행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코가 이런 전략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국들에 비해 초기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대외부채도 적었고 생산성도 높은 편이었으며 재정도 건전했다. 급진적 전략을 택하면 서도 이행 초기에는 코루나(Koruna)를 평가절하하고 고정환율제를 택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른 체제 이행국들에 비해 인플레이션도 빨리 억제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회복을 촉진하려면 환율정책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sup>171)</sup> 체코의 체제 이행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의 경우 이른바 바우처 사유화 등을 통해 대규모로 신속하게 민영화를 진행한 결과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았다. 대규모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막은 것도 실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사유경제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유화가 이루어졌고, 은행보다 생산기업 등을 먼저 사유화한 결과 사유화 과정이 정치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sup>172)</sup>

170) 김병연,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통일 유형,” p. 11.

171) 위의 글, pp. 9~11.

I
II
III
IV
V

점진적 제도통합과 점진적 체제 이행이 이루어진 국가로는 헝가리를 꼽을 수 있다. 헝가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장사회주의 경제를 운용해오고 있었다. 강제적 중앙계획을 집행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였으며 가격도 부분적으로 자유화하였다. 1982년에는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였다. 1986년에는 파산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였으며, 1989년에는 주식회사법을 제정하고 무역자유화를 시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체제 이행이 시작되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이 나빠지고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외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헝가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여러 개인 및 기업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급격한 사유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려 했던 것이다. 또, 철도·체신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기업 50여 개를 국유기업으로 남겨두었다. 매각에는 외국기업도 참여시켰다. 은행 등이 인수한 외국계 기업은 대개 소유의 집중도가 높았는데,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국내자본이 소유한 기업의 1.8배나 되는 등 경영성과가 좋았다. 엄격한 파산법도 시행되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는 자본주의적 인식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헝가리의 사유화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73)</sup>

한편, 중국과 홍콩-마카오는 제도통합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국양제를 내걸고 경제제도의 통합을 미루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경제제도는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중국이 꾸준히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홍콩, 중국-마카오가 각각 경제협력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172) 위의 글, pp. 9~10.

173) 위의 글, pp. 11~12.

을 체결함에 따라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경제제도의 수렴이 가속화했기 때문이다.<sup>174)</sup> 정치제도를 둘러싼 중국-홍콩 간 갈등이 빈발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0년간의 일국양제 시행이 일단락되는 2047년에는 경제제도 통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기존 사례 및 이론의 북한 적용 가능성과 한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이행 및 제도통합 사례들을 토대로 성립된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체제 이행의 경우 여러 이론적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 초기의 조건이 중요하며, 초기조건과 제도적 특성을 무시하는 급진적 이행전략은 실패의 위험이 크고, 이행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정도의 합의만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제도통합의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제도를 도입하는 유형의 선행사례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동서독 통합은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동시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북한은 이미 체제 이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을 계기로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시작된 동독과는 차이가 크다. 중·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은 점진적인 제도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인데, 체제 이행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제도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향후 남북한의 제도통합과 유사한 면이 있다. 체코와 같이 급진적 이행전략을 택하여 제도통합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체제 이행이 거의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고,

174) 하용이, “홍콩의 중국 귀속 10년: 경제 일체화 통해 ‘세계 비즈니스센터’ 유지,” 『Chindia Journal』, 통권 11호 (2007), pp. 9~12; 서창배, “중-홍콩/마카오 CEPA의 경제적 효과,” 『중국학』, 40집 (2011), pp. 389~414.

I
II
III
IV
V

헝가리처럼 점진적 이행전략을 택하여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병행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단일국가가 아니므로 남북한이 단일한 경제제도들을 채택하게 된다면 중·동유럽 나라들의 유럽연합 가입과는 다른 형태의 통합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주권이 영국,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경제제도의 독자적 운영을 보장한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통합도 남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통찰을 제공하지는 못 한다.

북한의 체제 이행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지만 국유재산의 민영화, 재산권 보장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총체적 개혁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급진주의 대 점진주의라는 이행전략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이행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점진적 체제 이행 전략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급진적 이행전략을 택하여 이행과정도 빨리 마무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둔 체코와 같은 사례도 존재한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기조건과 제도적 배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이 급진주의 대 점진주의 논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결론일 것이다. 또, 점진성 면에서도 중국과 같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헝가리와 같이 중기적인 점진주의가 성과를 거둔 예도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개혁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본격적인 체제 이행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그런데 1990년대 말에는 대기업의 사유화까지 거의 완료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도 높았다.<sup>175)</sup> 그러므로 기존 사례들에서 나타난 이행

---

175) 김병연,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통일 유형,” pp. 11~12.



전략의 문제점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북한 현실에 적합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기조건에 맞는 이행 방식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경제의 회복 및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북한의 초기조건이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통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슈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농업의 비중이 큰 것이 유리한 초기조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산업구조는 공업의 비중이 높아서 체제 이행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영공장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거나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도시 주민들이 해마다 농사에 동원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한편 많은 주민들이 장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불리한 초기조건이라는 식의 평가를 선불리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화와 개방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예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체제 이행에 따른 개방으로 외국 상품이 들어오면 국내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이미 외국상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준실업 상태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방화에 따라 밀무역이 양성화되어 외국 제품들이 싼값에 더 많이 유입될 경우에는 대규모 국영기업보다는 생필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협동농장을 해체한 뒤 농민들이 자영농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실업 및 빈곤문제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산 농산물이 원조물자

I
II
III
IV
V

등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값싸게 시장에 풀리면 농업생산력이 증가해도 농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76)</sup>

체제 이행이 본격화되면 빈곤률이 상승한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계획경제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이미 빈곤층이 크게 확대된 상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가 오히려 빈곤계층을 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빈곤층 증가와 연결된 문제인 소득불평등 심화는 어떤 식의 민영화가 진행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남한과 일본 등의 자본이 북한지역에 진출할 경우 외부자본이 설립한 기업 등에 고용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기존 엘리트의 이해를 충족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체제 이행은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낳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한 엘리트의 기득권이 얼마나 보장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민영화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기존 엘리트의 이권이 보장되는 내부자 중심의 민영화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기득권 집단으로의 부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통합의 시각에서 보자면 체제 이행 과정에서의 빈곤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빈곤한 주민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등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빈곤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체제 이행과 제도통합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빈곤문제 해결 방향은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라고 본다. 통일국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

---

176) 이상근, “남북한 지역 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통일연구』, 15권 2호 (2011), pp. 19~20.

곤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체제의 제도에 적응하여 가치를 창출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sup>177)</sup>

선행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이행과정에서 초기조건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경제적 혼란과 침체를 억제하고,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의 경우 체제 이행과 동시에 체제의 통합까지 달성해야 하므로 정치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행기 경제들 중 가장 경제적 성과가 나뉘었던 것은 옛 유고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었다. 연방을 통합하지 못해 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혁도 경제 회복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구소련의 해체,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과 주들의 독립요구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이행기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체제 이행과 체제통합은 경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합과 이행의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패한 권력은 경제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는 독재가 계속되면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으나 관료의 부패와 특권층에의 소유 집중 등으로 인해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되었다.<sup>178)</sup>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체제 이행 및 제도통합

177) 위의 글, pp. 3~32.

178) 황준성·황대연,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적 분석,” 『질서경제저널』, 9권 1호 (2009), p. 85.

I
II
III
IV
V

과정에서 부당한 이권 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국가가 이행과 통합의 과정을 관리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경제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 평가

### (1) 신제도주의 이론의 활용

경제통합은 결국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적 연구와 연결되어 있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특히 신제도주의의 거래비용 이론, 제도들 간의 정합성(consistency) 개념,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 등을 활용하여 이행전략과 초기조건들 중 어떤 요소들이 경제체제 이행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순히 공식적 제도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이행단계를 규명하고 추가적 이행 및 통합의 조건을 평가하기 보다는 통합 초기 거래비용의 정도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 제도들 간의 정합성,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이행 정도와 수용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 거래비용 개념의 활용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거래, 교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장이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거래를 할 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경제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sup>179)</sup> 거래비용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

179) 지광석·김태윤,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제체제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붕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up>180)</sup> 나아가 경제체제의 운용비용에 더하여 체제의 제도적 골격을 설립, 유지, 변화시키는데 드는 비용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81)</sup> 이 글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거래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한 경제체제의 운용과 이 체제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거래비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된 거래비용은 시장적 거래비용(market transaction cost), 관료적 거래비용(managerial transaction cost), 정치적 거래비용(political transaction cost)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182)</sup> 시장적 거래비용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며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보 및 탐색비용은 적당한 상품과 상품제공자를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이들과의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보 획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이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둘째, 협상 및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이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 협상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셋째, 감독 및 실행비용이 있다. 계약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제품, 수량 등을 점검 및 평가하는 데 드는

경감,” 『한국행정정보』, 44권 2호 (2010), p. 269.

180) Kenneth Arrow,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Issues Pertinent to the Choice of Market versus Nonmarket Allocation,” <<http://msuweb.montclair.edu/~lebel/pSC643IntPolEcon/ArrowNonMktActivity1969.pdf>>. (검색일: 2015.10.7.), p. 12.

181) Eirik Grundtvig Furubotn and Rudolf Richter, *Institutions and Economic Theory: The Contribution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182) 황준성·황대연,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적 분석,” pp. 70~71; 김태환·이영선,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거래비용적 접근: 탈사회주의 경로 유형과 북한의 제약된 개혁,” (한국비교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

I
II
III
IV
V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sup>183)</sup>

관료적 거래비용은 관료들이 비대칭적 권위관계나 비대칭적 정보 배분을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혁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관료들의 지대추구로 인해 관료적 거래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혁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관료적 거래비용은 흔히 허가권, 감독권 등과 관련된 뇌물, 향응 등의 형태로 발생한다.<sup>184)</sup>

정치적 거래비용은 정치적 기구를 유지 및 변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정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법을 제정하고, 행정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이행에는 정치적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정치적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체제개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이 주된 비용 발생 원인이다.<sup>185)</sup>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에 따른 비용이 개혁을 위협할 수 있다. 체제 이행기에 특히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까닭은 지나치게 증가한 정치적 거래비용이 개혁으로 감소된 거래비용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내전이 발생할 경우 개혁은 좌절된다. 소련의 초기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도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86)</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제 이행이나 제도통합을 순조롭게 진

---

183) 황준성·황대연,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적 분석,” pp. 71~72.

184) 위의 글, pp. 73~74.

185) 위의 글, pp. 72~73.

행하려면 국가가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변화가 심하거나 정책수행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나) 제도 정합성 개념의 활용

제도는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도는 계약, 정책, 법률 등 공식화,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와 관습, 규범, 공통의 신념처럼 공식적으로 규정되거나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개인의 행동을 실제로 제약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를 공식제도, 후자를 비공식제도라고 부른다.<sup>187)</sup> 제도 정합성(institutional congruence)은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이거나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up>188)</sup> 제도 정합성이 부족한 데 따른 문제들은 공식제도들 사이에서는 물론 공식제도들과 비공식제도들의 묶음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비공식제도와와의 정합성이 약할 경우 공식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은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고전 사회학자들부터 오늘날의 제도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sup>189)</sup>

제도 정합성 문제를 비용 개념과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비효율적인 제도묶음에 포함된 일부 제도를 개혁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대체

186) 위의 글, p. 81.

187) 사공영호, “정책과 공식제도의 비공식적 기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5권 3호 (2006), p. 82.

188) 정정길,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권 1호 (2002), p. 10.

189) 사공영호, “정책과 공식제도의 비공식적 기초,” pp. 84~85.

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들과의 부정합성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행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실적이 개선되기에는 커녕 악화되기도 한다.<sup>190)</sup>

급진적 이행전략이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던 것도 제도 정합성의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제도들을 바꾸는 급진적 개혁의 경우 공식적 제도들이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공식제도들 간의 정합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나 비공식적 제도들이 존재하면서 공식적 제도들과 여러 형태로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공식적 제도들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비공식적 제도와와의 정합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시장적, 관료적, 정치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했던 것이다.

급진적인 방식의 체제 이행이나 체제통합이 어려운 것은 제도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제도는 관행, 의식, 네트워크 등과 연결되어 있다. 비공식적 제도는 물론 공식적 제도도 합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역사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공식적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비공식적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기존의 제도를 형성해 온 의식, 네트워크 등과의 정합성도 떨어뜨리게 된다.<sup>191)</sup>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들이 다른 문화권에 이식 되었을 경우, 제도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의 문화권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외양은 그대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토착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분야 개혁을 위해 성과급

---

190) 김영진, “중양아시아에 있어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과 특성,” p. 10.

191) 정정길은 제도들 간의 부합성을 제도의 내적 정합성이라 부르고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환경, 맥락과의 부합성을 제도의 외적 정합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정길,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p. 10.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된지 1년 만에 토착화돼 버렸다. 성과급은 공무원 보수 중 불과 1% 가량을 차지하며, 성과가 아닌 직급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지급대상자도 원래 상위 70%였던 것이 상위 90%로 바뀌었다. 상여금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성과별 보상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문화에서 발생한 제도가 조직원들의 화합과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sup>192)</sup>

북한의 경우에도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제도들이 그 사회와 역사의 산물로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패의 전사회적 확산과 일상화는 북한의 부패가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부패행위 역시 비공식제도의 일종인 것이다. 부패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지대를 수취하거나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통해 사회적 필요를 실현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제도통합으로 도입된 공식적 제도들이 북한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부패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역사의 산물이자 문화의 일부가 된 부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공식적 제도들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가 남아 있다면 부패는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다. 동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 체제 이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경제관행이 강화되어 대규모 지하경제가 출현하였다.<sup>193)</sup> 경제체제 통합 이후 북한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2) 하태수,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행정논총』, 40권 1호 (2002), pp. 52~53.

193) 오승은, “바뀐 체제, 바뀌지 않은 생계 수단,” 『동유럽발칸연구』, 36권 (2013), pp. 247~268.

I
II
III
IV
V

## (2) 남북한 제도통합 시기의 북한경제체제 이행단계 및 특징

경제제도가 통합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의 제도 수용력을 예측하려면 북한의 체제 이행이 어느 정도로 진전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제도가 통합될 것인지를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장적, 관료적, 정치적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측’ 내지 ‘시나리오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체제의 이행 과정을 네 개의 단계로 나눌 경우 북한은 이미 3단계에 도달해 있다.<sup>194)</sup>

북한체제가 현재의 이행단계보다 더 낮은 단계로 역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선 김정은 집권 후 국내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 정권은 민간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면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엿보인다. 시장을 통해 형성된 부유층으로부터 정권운영 자금을 추출하기 위해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체제의 이행이 순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북한 지도부는 2009년에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철폐를 시도했다가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며 사회적 혼란이 심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행과정을 2단계로 퇴행시키는 정도의 역진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3단계까지의 이행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역진의 가능성이 없다면 남북한 경제제도의 통합은 결국 북한의 체제 이행 정도가 3단계 또는 4단계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194) 박형중, “북한 경제 기본 체계, 그리고 그 변화 현황과 전망,” pp. 3~4.

다음으로는 통합이 시작된 상태에서 거래비용과 제도의 정합성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유럽이나 러시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제도적 정합성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에는 제도통합 및 체제 이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경제적 혼란과 침체를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은 시장적 거래비용, 관료적 거래비용, 정치적 거래비용이 모두 높은 상태이다.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시장적 거래비용이 높고, 부패의 만연으로 관료적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국가권력의 남용 등으로 인한 정치적 거래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적 거래비용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진 상태에서 남북한의 제도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유기업의 민영화까지 이루어지는 체제 이행 4단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적 거래비용은 크게 줄어든 상태일 것이다. 3단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시장적 거래비용은 지금보다 다소 적거나 유사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 우선, 북한 지도부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점차 안착하고 있다. 또 김정은이 경제발전 의지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여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느리게나마 추가적 제도개혁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제도변화는 시장적 거래비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시장적 거래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의 제도가 통합되는 시기에 관료적 거래비용은 현재 수준이거나 조금 낮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관료적 거래비용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 증대, 경제관련 법규의 정비와 준수 등이

I
II
III
IV
V

이루어질 경우 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행 4단계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민영화의 과정에서 관료적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민영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가 증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적이 있다.<sup>195)</sup> 내부자 중심의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관료들의 이권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민영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관료적 거래비용이 다시 줄어들 것이다.

정치적 비용은 현재의 수준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국가운영이 조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상태에 진입할 경우에는 정치적 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개혁의 지속 여부나 속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거나 권력투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치적 거래비용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 개혁으로 인한 분권화와 통제의 이완 등으로 인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를 포섭하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엘리트와 대중 간 갈등, 사회집단들 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남한과의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이 남한 대중 및 엘리트의 합의와 북한 대중 및 엘리트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 거래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장적 거래비용이나 관료적 거래비용에 비해 정치적 거래비용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적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적지만 크게 높아질 수도 있고 약간 낮아지거나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도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합성은 체제 이행

---

195) 황준성·황대연,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적 분석,” pp. 75~77.

의 진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남북한의 제도가 통합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제도 적합성이 떨어지면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이행 4단계로의 진전이 제도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을 경우 민영화를 둘러싼 경제적 혼란이 증가하여 제도 적합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 제도들 간의 적합성이 높은 상태라 하더라도 남한과의 제도 통합으로 인해 제도 적합성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대적 우수성을 이유로 남한의 경제제도들을 북한지역에 이식하는 형태의 제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도 부정합성이 초래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관습, 의식 등의 변화가 공식적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여 비공식제도가 존속하며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 간의 적합성이 낮고 양자 간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새로 도입한 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기존 제도의 작동도 억제되어 경제활동의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는 더욱 큰 충격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반대로 체제 이행으로 인해 북한의 제도 적합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제도통합을 계기로 북한지역의 제도 적합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3) 북한의 수용력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거래비용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때 제도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통해 북한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

I
II
III
IV
V

활을 안정시키려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 제도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체제 이행이 지속되는 동안 시장적 거래비용이 크게 높아지거나 관료적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주로 정치적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상정하여 제도통합에 따른 북한의 수용력을 예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 제도 정합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제도통합에 따른 북한의 수용력을 예측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① 제도 정합성 높음 + 정치적 거래비용 높음
- ② 제도 정합성 높음 + 정치적 거래비용 낮음
- ③ 제도 정합성 낮음 + 정치적 거래비용 높음
- ④ 제도 정합성 낮음 + 정치적 거래비용 낮음

정치적 거래비용이 제도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정합성이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수준이어야 위와 같은 조합을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가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의 이행과정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과 제도의 부정합이 각각 체제 이행 과정에서의 경제적 충격 및 침체와 사회적 혼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런 식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 표 III-7 정치적 거래비용과 제도 정합성에 따른 제도통합 수용력

구분		제도 정합성	
		높음	낮음
정치적 거래비용	높음	수용력 보통	수용력 낮음
	낮음	수용력 높음	수용력 보통

출처: 필자 작성

위의 가정에 따라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지역의 수용력을 예측해 보자면, 제도 정합성이 높고 정치적 거래비용도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겠지만 국가가 제도의 집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지역의 수용력은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정합성이 높고 정치적 거래비용은 낮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이 시장적 거래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새 제도들의 시행을 촉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한의 제도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 정합성이 낮고 정치적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큰데다 국가가 제도의 시행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정치적 거래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통합에 대한 수용력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제도 정합성이 낮고 정치적 거래비용도 낮은 경우에는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들이 도입되어 제도통합에 따른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혼란을 수

I
II
III
IV
V

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통합에 대한 수용력은 보통 정도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화를 기본으로 제도통합 시의 수용력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의 기본 틀을 구성한 뒤에 북한의 체제 이행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여타의 초기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통합 시 북한지역의 수용력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 북한의 실정에 맞는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제도통합에 따른 북한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IV.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II): 인식 차원



## 1. 조사 개요

인식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의식 조사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표준화된 설문지 구성<sup>196)</sup>이었다.

설문 문항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의식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으며, 설문 문항이 간접 추론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추론을 위해서는 올바른 문항 선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통일의식 관련 연구 및 설문,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단일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 문항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측면을 현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sup>197)</sup> 이 문항의 적절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당위적·도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social desirability)에서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통일의 필요성 중 당위적 측면이 통일의 필요성으로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일반화의 문제는 데이터 해석의 문제를 넘어 정책적 함의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

196) 표준화된 설문에 대해서는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2010); 이순목·이봉건, 『설문·시험·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서울: 학지사, 1995); 그리고 이종승, 『표준화 심리검사』 (서울: 교육과학사, 2005)를 참고 바란다.

197)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p. 157.

I
II
III
IV
V

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느끼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에 더 가깝다. 첫 번째 해석은 젊은 세대가 통일 그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인 반면, 두 번째 해석은 젊은 세대가 당위적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의 방향을 좌우 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정책의 성패는 남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일 의식의 정확한 파악은 조사 실시과정의 표준화가 아닌 문항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조사는 조사 문항의 표준화 보다는 조사 과정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sup>198)</sup> 조사 과정의 표준화는 응답자들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비교적 동일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의 신뢰성은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타당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199)</sup> 다시 말해서 조사가 밝혀내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을 설문 문항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과정의 표준화는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 의식 조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 의식 조사』,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들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설문조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지만 두 연구에 사

198) 박명규 외, 『2014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31.

199) 이순목·이봉건, 『설문·시험·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p. 27.

용되는 설문 문항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 집필자의 토론을 통해 최소 3개 이상의 문항을 사용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부 문항은 선행 연구와의 일관성 등의 이유로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요 설문 문항은 본 연구의 기본 문제 인식인 북한주민의 수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은 이러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인식 차원에서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다. 주요 설문 문항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의 당위성”, “경제적 희생을 전제로 한 통일의 필요성”, “평화 고착을 통한 분단 유지에 대한 동의”를 묻는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대상을 남한, 북한, 남한주민, 북한주민, 응답자 본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성을 현저하게 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에드 디너(Ed Diener) 외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sup>200)</sup>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척도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척도이다<sup>201)</sup>. 남한에 대한 정체성 및 민족

200) Ed Diener, Robert A. Emmons, Randy J. Larsen, and Sharon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1985), pp. 71~75.

20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SWLS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는 임영진,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3호 (2012)를 참고 바란다.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금미(2011)<sup>202</sup>가 사용한 집단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집필진의 논의를 통해 6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각각 남한 집단 정체성 및 민족 집단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존 로빈슨(John Robinson), 필립 셰이버(Phillip R. Shaver), 로렌스 라이츠먼(Lawrence S. Wrightsman)<sup>203</sup>이 소개한 다양한 척도 중 집필진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당한 10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데니스 충(Dennis Chong), 허버트 맥클로스키(Herbert McClosky), 존 젤러(John Zaller)<sup>204</sup>가 사용한 26개 문항 중 집필진의 논의를 통해 15개를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치 및 경제 제도에 대한 적응 실태에 대한 문항,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문항은 집필자들의 논의를 통해 3개 이상의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질문지의 모든 질문과 선택지에 대해 언어적 이해의 용이성을 평가하였다. 이해 용이성 평가 결과가 낮은 문항과 선택지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설문 면접원을 모집하였으며 4명의 대학원 재학 이상의 여성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

202) 김금미,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25권 3호 (2011).

203) John P. Robinson, Phillip R. Shaver, and Lawrence S. Wrightsman,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1999).

204) Dennis Chong, Herbert McClosky, and John Zaller, “Patterns of Support for Democratic and Capitalist Values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4 (1983), pp. 401~440.

면접원들은 설문지의 언어적 이해 용이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과 선택지는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면접원들은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면접 중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처법 등을 포함한 설문 실시의 과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설문조사는 1:1 개별 면접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의식 조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240명이었다. 특히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의식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한 거주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버전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IV-1>에 제시하였다.

● 표 IV-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징

구분		표본 수(명)	구성비(%)
전체		240	100.0
성별	남	79	32.9
	여	161	67.1
연령대	20대 이하	38	15.8
	30대	52	21.7
	40대	74	30.8
	50대	52	21.7
	60대 이상	24	10.0
결혼상태	미혼	56	23.3
	기혼	112	46.7
	이혼, 사별, 동거 등	72	30.0
탈북 이후	5년 이하	72	30.0

I
II
III
<b>IV</b>
V

구분		표본 수(명)	구성비(%)
생활 기간	6~10년 이하	84	35.0
	11~15년 이하	37	15.4
	16년 이상	47	19.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22.9
	4~6년 이하	63	26.3
	7~9년 이하	85	35.4
	10년 이상	37	15.4
북한 거주 시 학력 <sup>205)</sup>	중졸 이하	58	24.3
	고졸	111	46.4
	대졸 이상	70	29.3

## 2. 통일에 대한 인식

### 가.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행동분석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 (1)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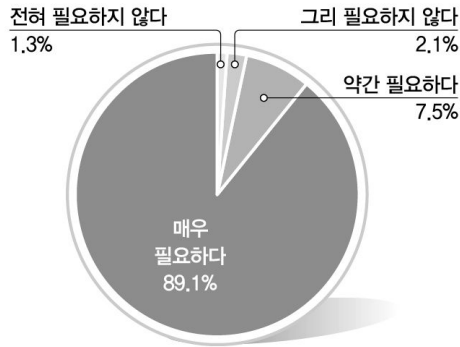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실제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변화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5) 미응답자 1명



● 그림 IV-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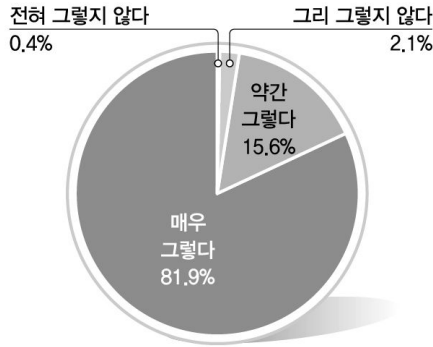
먼저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94.84점, 통일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인식이 96.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89.1%, 약간 필요하다 7.5%, 그리 필요하지 않다 2.1%,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로 측정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95.86점으로 남성(92.73점) 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다소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92.98점, 30대 94.87점, 40대 94.14점, 50대 96.73점, 60대 이상 95.83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입국 후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하 응답자가 98.18점으로 가장 높고, 10년 이상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92.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남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탈북 후 경제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층 50점, 중층 91.43점, 하층 95.85점으로 탈북 후 경제적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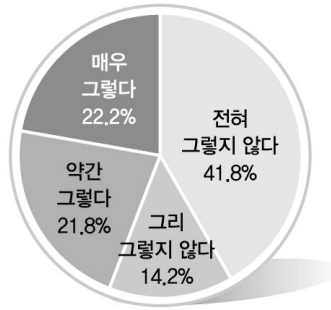
으로 여유가 없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림 IV-2**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통일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설문조사에 응답자들은 92.97점으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남북한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81.9%, 약간 그렇다 15.6%, 그리 그렇지 않다 2.1%, 전혀 그렇지 않다 0.4%로 집계되었다. 남성이 93.16점으로 여성 92.87점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93.86점, 30대 87.18점, 40대 93.61점, 50대 95.42점, 60대 이상 97.10점으로 나타났다. 북한 탈북 이후 남한 거주 기간으로 보면 3년 이하 97.53점, 4~6년 이하 94.09점, 7~9년 이하 89.52점, 10년 이상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90.74점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탈북 후 경제 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층 66.67점, 중층 88.23점, 하층 94.0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탈북 후 남한 거주 기간이 길고, 경제적으로 부유 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그림 IV-3 평화적 분단고착에 대한 견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남북한 간 전쟁중지, 자유로운 왕래,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통일에 대해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도구적 필요, 실용적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를 측정해 보았다.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22.2%, 약간 그렇다 21.8%, 그리 그렇지 않다 14.2%, 전혀 그렇지 않다 41.8%로 북한이탈주민들의 56.0%가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 과반 이상이 통일이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4.0%의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들은 도구적 통일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48.03점으로 남성 27.78점 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6.32점, 30대 38.46점, 40대 45.5점, 50대 46.4점, 60대 이상 48.61점으로 나타났다. 북한 탈북 이후 남한 거주 기간으로 보면 3년 이하 36.97점, 4~6년 이하 44.09점, 7~9년 이하 42.35점, 10년 이상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41.44점으로 산출되었고, 탈북 후 경제 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층 83.33점, 중층 34.29점, 하층 42.45점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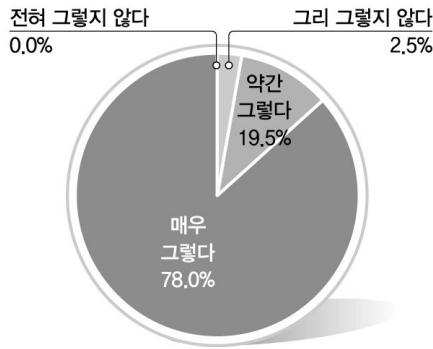
I
II
III
IV
V

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도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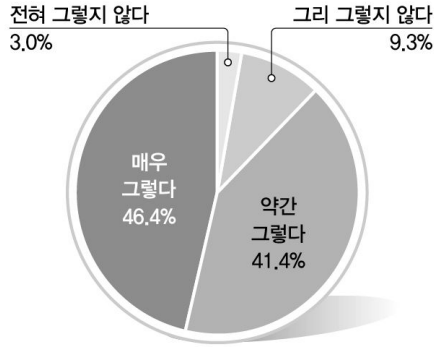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조사항목들이다.

● 그림 IV-4 통일 관련 뉴스 청취 정도



먼저 통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으로 “나는 통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집중해서 시청하거나 듣는다”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종합적으로 그렇다에 97.5%가 대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7.38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는 83.33으로 가장 낮았다. 탈북 후 경제 계층을 기준으로, 상층 83.33점, 중층 88.57점, 하층 92.59점으로 집계되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왔고, 경제 계층이 낮을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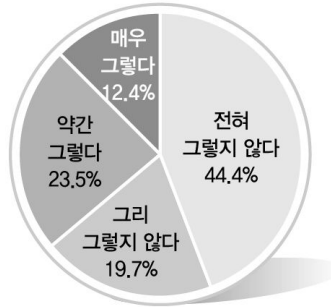
● 그림 IV-5 통일관련 세금 납부 의도



“나는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질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통일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질문에 대해 통일비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응답자가 87.8%로 나타났다. 100점을 기준으로 77.07점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 30대가 79.78점으로 가장 높았고, 탈북 후 경제 계층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수치가 산출되었다(하층 78.06점, 중층 73.33점, 상층 50.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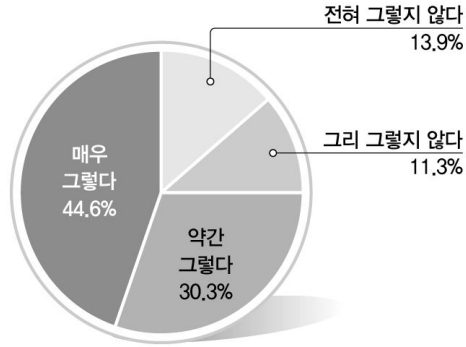
I
II
III
IV
V

● 그림 IV-6 통일관련 기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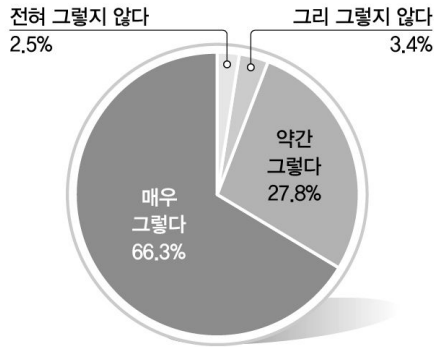
세 번째 문항은 통일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나는 통일을 위해서 기부금(돈)을 내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1%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34.62점의 평균점을 보였다. 남성이 39.47점, 여성이 32.28점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가 42.98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5.0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 계층 기준으로는 중층이 38.09점, 상층이 16.67점, 하층이 34.35점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통일을 위한 기부금 실천에 상대적으로 낮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IV-7 통일관련 행사 참여 여부



“나는 통일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4.9%로 나타났다(평균점 68.54). 연령대 별로 60대 이상이 75.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한 거주 기간 기준으로 6~10년 이하 거주자가 75.14점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 계층 별로는 하층 70.81점으로 높은 반면, 상층은 16.67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 그림 IV-8 통일관련 논의 여부



마지막으로 “나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94.1%가 통일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85.93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9.39점으로, 남한 거주 기간이 4~6년 이하 응답자가 92.22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 계층별로는 하층이 87.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층은 50.00점으로 낮은 평균 점을 보였다.

(3) 요약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보다 적극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탈북 후 남한 거주 기간이 길고, 경제적 상황이 부유한 계층일수록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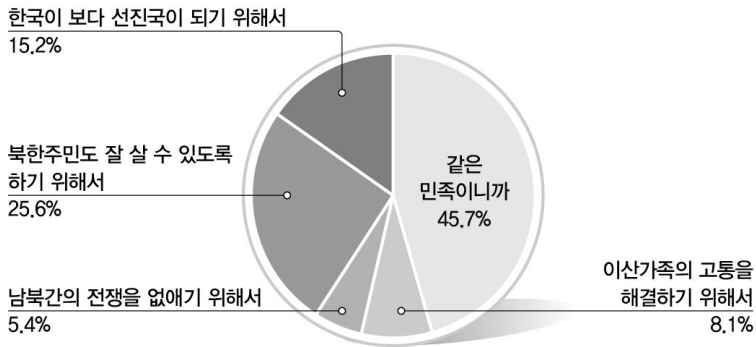
## 나. 통일의 이유와 편익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통일정책 수립 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의 이유와 통일편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1)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통일의 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이 왜 통일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남북한 통일의 이유를 재고하고,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이유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 그림 IV-9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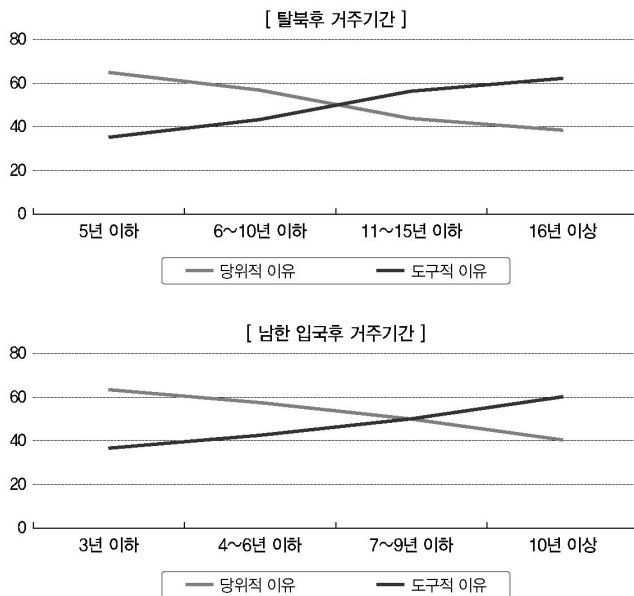
먼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답변(45.7%)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25.6%, 세 번째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15.2% 순으로 집계되었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당위적 통일 이유로 분류하고,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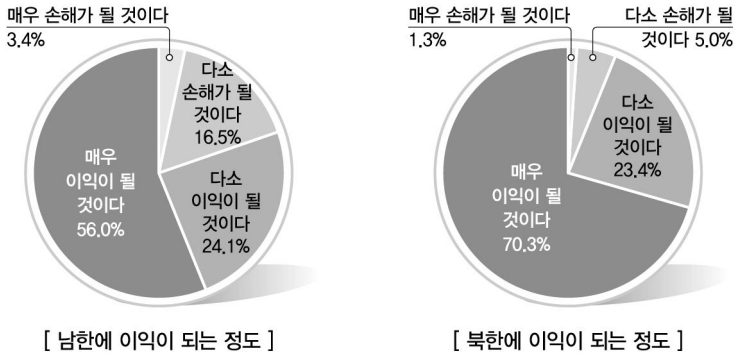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를 도구적 통일 이유라고 분류한다면 당위적 통일 이유가 53.8%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우리의 숙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통일의 이유를 당위적·도구적 이유로 분류하고 이를 남한 입국 후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당위적 이유는 감소하고 도구적 이유는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의 이유에 대해 북한을 떠나 생활하면서 통일의 편익과 현실적 측면들을 고려하는 성향들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0 남한 입국 후 통일의 이유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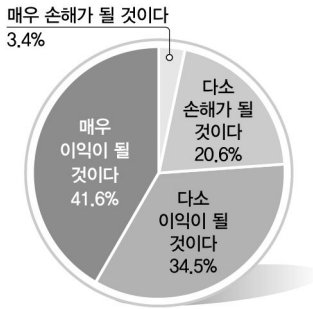
● 그림 IV-11 통일 의 국가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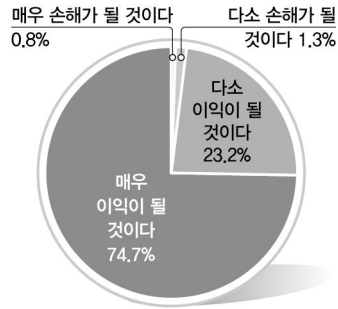
남북한 정부, 남북한 주민, 개인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의 이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통일이 국가적으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와 “통일이 국가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가적으로 남한에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80.1%(매우 이익 56.0%, 다소 이익 24.1%), 북한에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93.7%(매우 이익 70.3%, 다소 이익 23.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며, 남북통일이 북한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
II
III
<b>IV</b>
V

● 그림 IV-12 통일 의 남북한 주민에 대한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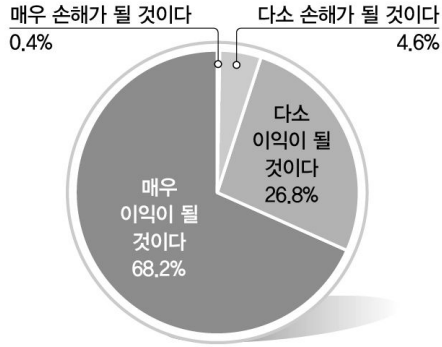
[ 남한주민에 이익이 되는 정도 ]



[ 북한주민에 이익이 되는 정도 ]

남북한 주민 차원에서 “통일이 남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와 “통일이 북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에게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76.1%(매우 이익 41.6%, 다소 이익 34.5%), 북한주민에게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97.9%(매우 이익 74.7%, 다소 이익 23.2%)로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며, 남북통일이 남한주민보다 북한주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적 차원 보다는 북한주민의 관점에서 통일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림 IV-13 통일이 응답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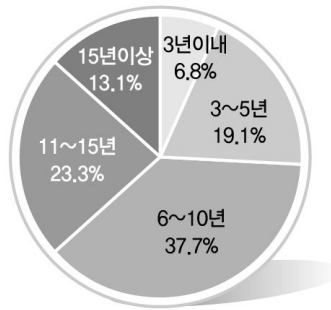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이 응답자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통일이 자신에게도 이익이라는 응답이 95%(매우 이익 68.2%, 다소 이익 26.8%)로 나타났다.

I
II
III
IV
V

## (2) 남북한 통일 이후 생활수준 격차 해소

남북한 통일이 된 후 남북 지역 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림 IV-14 통일 이후 남북한 생활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간



“통일이 되어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지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6~10년 37.7%, 11~15년 23.3%, 3~5년 19.1%, 15년 이상 13.1%로 집계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해소되려면 적어도 10년 전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3) 요약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통일을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당연한 과제라 인식하고 있으며 탈북 후 거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통일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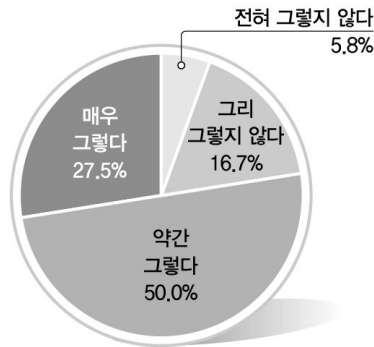
탈주민들은 통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적 이익 측면에서도 남북통일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 이후 남북한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어도 10년 전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 3. 삶의 만족도, 정체성에 대한 인식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제도에의 적응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체성을 조사하였다.

#### 가. 삶의 만족도

● 그림 IV-15 삶의 만족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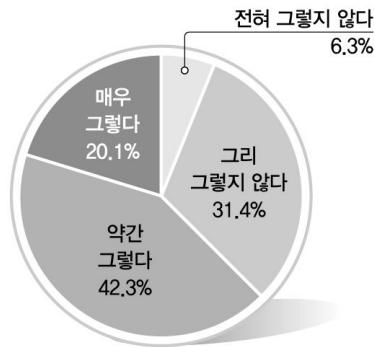


먼저, “남한에서의 나의 형편은 내 이상에 가깝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간 그렇다 50.0%, 매우 그렇다 27.5%로 77.5%가 긍정했다. 4점 평균으로 보았을 때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도(3.02점)가 남성(2.92점)

I
II
III
<b>IV</b>
V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2.79점, 30대는 2.96점, 40대는 2.97점, 50대는 3.10점, 60대는 3.21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르는 만족도는 입국 7~9년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입국 10년 이후에 2.62로 급격히 감소했다. 북한에서 학력이 높았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학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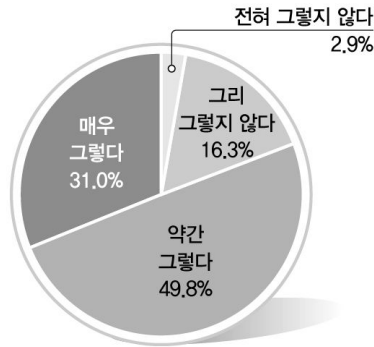
● 그림 IV-16 삶의 만족도 II



“남한에서 내 형편은 매우 좋은 편이다”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 42.3%, 매우 그렇다 20.1%로 긍정적 응답이 62.4%로 나타났다. 4점 평균으로 본 만족도는 남성의 만족도(2.82점)가 여성의 만족도(2.73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2.63점, 30대는 2.73점, 40대는 2.54점, 50대는 3.00점, 60대는 3.22점으로 60대가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한 거주 연한에 따르는 만족도는 4~6년이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떨어져 10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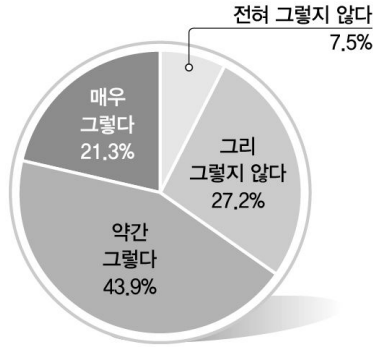
● 그림 IV-17 삶의 만족도 III



“나는 남한에서의 형편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31.0%로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만족도(3.14점)가 여성의 만족도(3.06점)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르는 만족도는 20대 이하 2.92점, 30대 2.98점, 40대 3.01점, 50대 3.25점, 60대 3.48점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남한 거주 연한에 따르는 만족도는 4~6년이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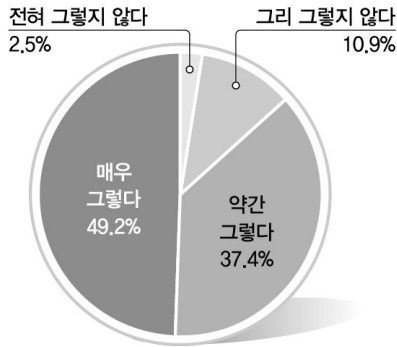
I
II
III
IV
V

● 그림 IV-18 삶의 만족도 IV



“나는 남한에서 내 삶의 의미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다”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 43.9%, 매우 그렇다 21.3%로 65.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도(2.80점)가 남성의 만족도(2.77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40대의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남한 거주 연한에 따르는 만족도는 4~6년까지 높아지다가 점차 낮아졌다.

● 그림 IV-19 삶의 만족도 V



“나는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 남한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 37.4%, 매우 그렇다 49.2%로 86.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만족도(3.39점)가 남성의 만족도(3.22점)보다 높았다. 연령별 만족도는 20대 이하 2.84점, 30대 3.25점, 40대 3.36점, 50대 3.56점, 60대 3.70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르는 만족도는 입국 후 3년 이하(3.4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4~6년(3.41점), 7~9년(3.36점), 10년 이상(3.00점)으로 점차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남한 입국 후 정착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40대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그 요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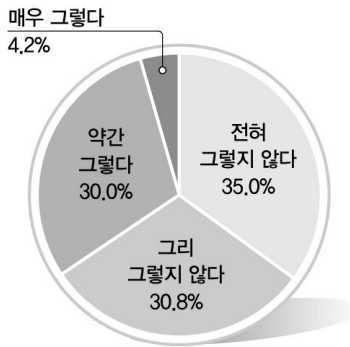
I
II
III
IV
V

## 나. 남한사회 정체성

남한사회 정체성 조사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남한주민과 유대감, 남한주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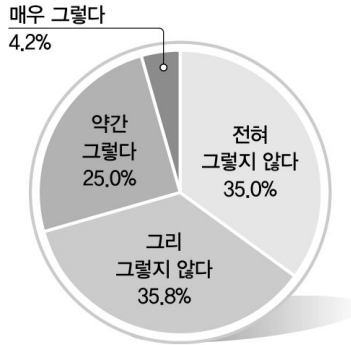
### (1) 남한사회 정체성: 유대감

●그림 IV-20 정체성(유대감) I



남한주민들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나는 다른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2%, 약간 그렇다 30.0%로 34.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4점 척도로 보았을 때 남성은 1.95점, 여성은 2.07점으로 여성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가장 낮았다. 남한 거주 연한이 길어질수록 불편한 감정이 높아졌는데 7~9년에서만은 크게 낮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불편한 감정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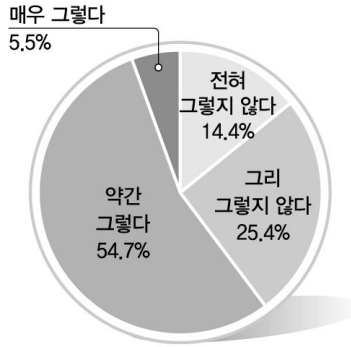
● 그림 IV-21 정체성(유대감) II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2%, 약간 그렇다 25.0%로 2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4점 척도로 본 성별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면을 더 많이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20대 이하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는 7~9년이 제일 낮고 4~6년이 제일 높았다.

I
II
III
<b>IV</b>
V

● 그림 IV-22 정체성(유대감)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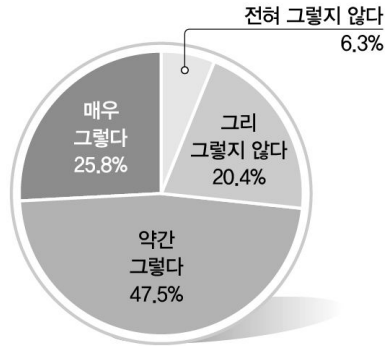


“내 생각은 남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5%, 약간 그렇다 54.7%로 60.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남한주민과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다르다고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점 척도로 보았을 때 여성은 2.55점으로 남성 2.43점에 비해 더 높아 여성이 더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이 제일 낮았다.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3년 이하가 가장 높았고 점차 낮아지다가 10년 이상에서 다시 조금 높아졌다.

(2) 남한사회 정체성: 자긍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긍심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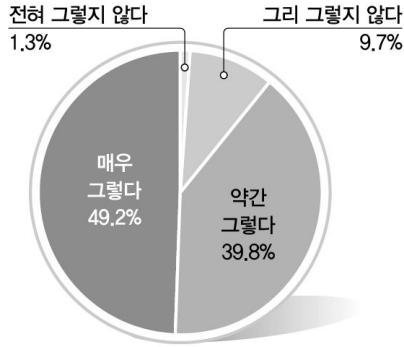
●그림 IV-23 정체성(자긍심) I



“나는 내가 남한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 47.5%, 매우 그렇다 25.8%로 7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4점 척도 점수에서 성별에 따르는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40대가 제일 낮았다. 거주 연한에 따라서는 4~6년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3년 이하가 가장 낮았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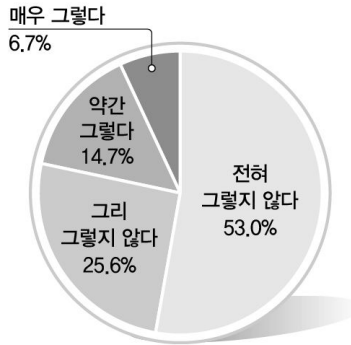
●그림 IV-24 정체성(자긍심) II



“나는 내 자신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는 약간 그렇다 39.8%, 매우 그렇다 49.2%로 89.0%가 긍정했다. 4점 척도 점수에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긍지감이 높아져 60대 이상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나 40대만은 20대보다 긍지감이 더 낮았다. 남한 거주 연한이 길어질수록 긍지감은 조금씩 낮아졌다.



●그림 IV-25 정체성(자긍심) III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7%, 약간 그렇다 14.7%로 21.4%가 긍정했다. 4점 척도로 여성 1.77점, 남성 1.71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남한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을 더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꺼리며 제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40대였다. 그리고 남한 거주 연한 4~6년이 제일 적게, 1~3년이 제일 많이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약

남한주민들과의 유대감에 대한 불편감, 부정적 인식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이 30% 내외 정도로 나타나,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소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한 감정이 늘어나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남한주민과 사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비율은 남한주민과의 유대감이나 남한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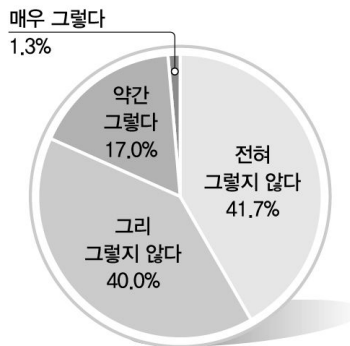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긍정하는 비율이 73.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비율이 8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30% 정도는 여전히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 다. 민족 정체성

민족 정체성도 남한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유대감과 자긍심으로 분류해서 조사했다.

### (1) 민족 정체성: 유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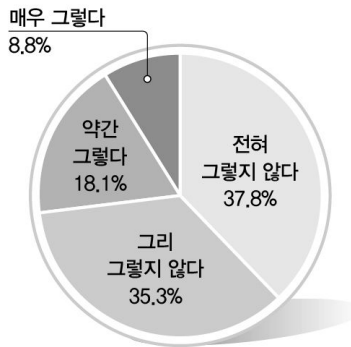
● **그림 IV-26** 민족 정체성(유대감) I



“나는 다른 한민족(남북한 포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1.3%, 약간 그렇다 17.0%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8.3%였다. 4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는 여성 1.80점, 남성 1.74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거주 기간으로 보면 4~6년이 불편함을 느낀 정도가 제일 높았고 7~9년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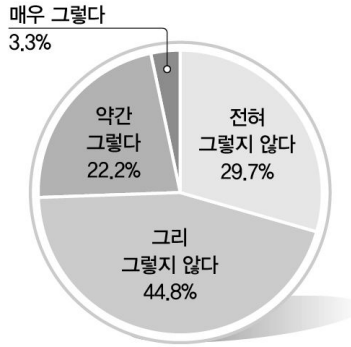
● 그림 IV-27 민족 정체성(유대감) II



나는 우리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8.8%, 약간 그렇다는 18.1%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6.9%였다. 4점 척도 점수로 여성은 1.91점, 남성 2.12점으로 남성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 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점수가 제일 높고 40대가 제일 낮았다. 남한 거주 기간별로는 3년 이하가 부정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제일 강했으며 7~9년이 제일 약했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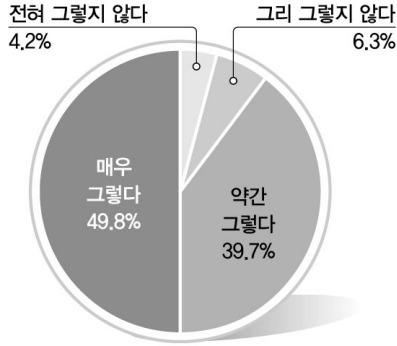
●그림 IV-28 민족 정체성(유대감) III



“내 생각은 한민족(남북한 포함)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3.3%, 약간 그렇다는 22.2%로 긍정적 응답 비율은 25.5%였다. 4점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남성 2.14점, 여성 1.92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생각의 차이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40대의 점수가 낮았다. 남한 거주 기간별로는 7~9년의 점수가 제일 낮았고 10년 이상의 점수가 제일 높았다.

(2) 민족 정체성: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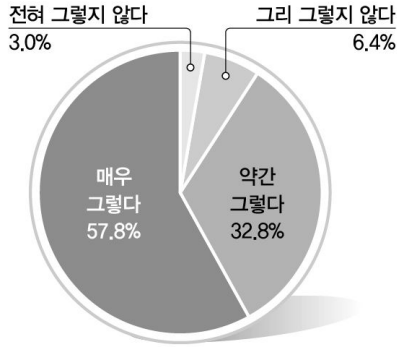
● 그림 IV-29 민족 정체성(자긍심) I



“나는 내가 한민족(남북한 포함)답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39.7%, 매우 그렇다는 49.8%로 긍정적인 비율은 89.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점수가 제일 낮았다. 남한 거주 기간 4~6년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7~9년이 제일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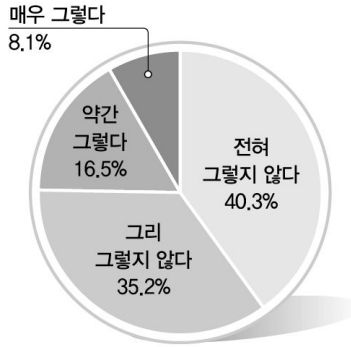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그림 IV-30 민족 정체성(자긍심) II



“나는 내 자신이 한민족(남북한 포함)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32.8%, 매우 그렇다는 57.8%로 긍정적인 비율은 90.6%였다.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4점 척도점수는 60대 이상이 제일 높았으며 20대 이하가 제일 낮았다. 남한 거주 연한별로는 입국해서 6년까지는 높아졌지만 그 이후부터 점차 낮아졌다.

● 그림 IV-31 민족 정체성(자긍심) III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한민족(남북한 포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밝히지 않을 것이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8.1%, 약간 그렇다 16.5%로 긍정적 응답이 24.6%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민족이라고 밝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제일 밝히는 것을 꺼렸고 30대의 밝히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남한 거주 기간 4~6년이 밝히는 비율이 제일 낮았고 3년 이하가 밝히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 (3) 요약

남한 사람과 비교하여 한민족 전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민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려는 비율은 불편함에 대한 인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민족 전체와의 생각의 차이는 남한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체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긍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족적 자

I
II
III
IV
V

공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정치제도 통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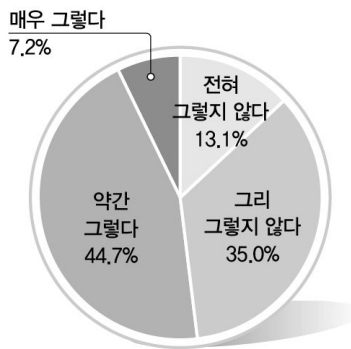
#####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조사하였다.

###### (1) 정치체제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남한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행동하는지는 정치제도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수용을 살피는 데 중요한 척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IV-32 전반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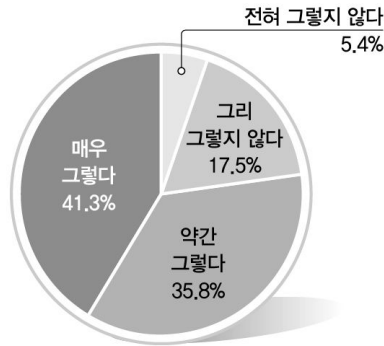




먼저 정치체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나는 남한의 전반적 정치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7.2%, 약간 그렇다 44.7%로 이해한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 그리 그렇지 않다 35.0%, 전혀 그렇지 않다 13.1%로 부정적 응답이 48.1%로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13.1%로 높은 편이다.

남성의 긍정적 응답이 60.8%,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47.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한 입국 연도를 볼 때 3년 이하의 긍정적 응답이 46.3%, 10년 이상이 59.5%로 점차 이해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거주자의 이해도도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림 IV-33 복수 정당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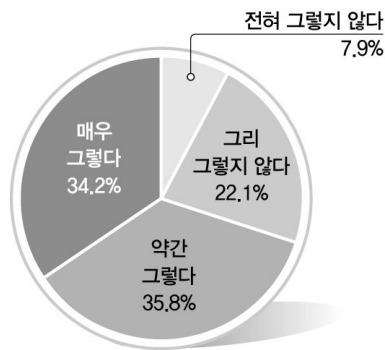


1당 독재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민주주의와 정당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의견이 다른 여러

I
II
III
<b>IV</b>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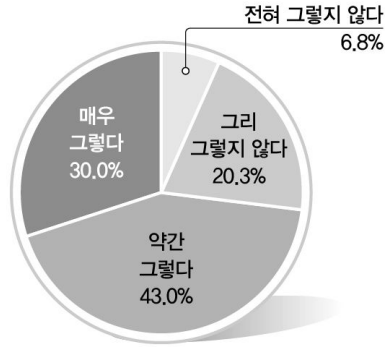
개의 당(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1.3%, 약간 그렇다 35.8%로 77.1%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1당 체제관점의 인식도 22.9%로 정도로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87.3%,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72.0%로 남성이 다당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71.6%, 73.1%로 긍정적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는 긍정적 응답이 70.9%, 10년 이상은 긍정적 응답이 86.5%로 나타났다.

●그림 IV-34 정당 간 정권교체에 대한 이해도



김일성 일가의 세습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당의 정권교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모든 당(정당)들에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34.2%, 약간 그렇다 35.8%로 정권교체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70.0%, 여전히 정권교체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응답이 3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응답이 83.3%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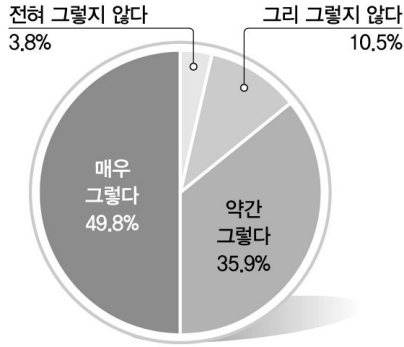
●그림 IV-35 단일 정당에 의한 지배에 대한 이해



정당의 집권 기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하나의 당(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가 잘 안된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30.0%, 약간 그렇다 43.0%로 긍정적 응답이 73.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리 그렇지 않다 20.3%, 전혀 그렇지 않다 6.8%로 부정적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일 정당에 의한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응답이 82.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I
II
III
IV
V

●그림 IV-36 야당의 역할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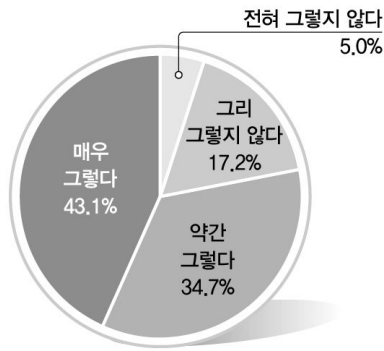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야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야당 (현재 집권하지 못한 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9.8%, 약간 그렇다 35.9%로 협조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판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14.3%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의 경우 40대 이상은 90.5%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0대 71.1%, 30대 82.7%로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 (2)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위 및 (법)질서에 대한 인식

통제기제 아래 생활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원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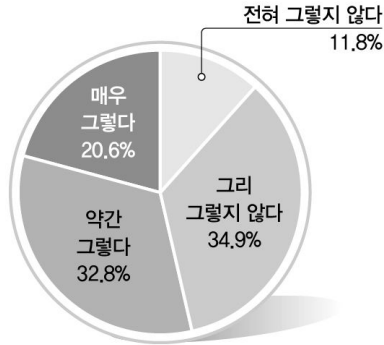
그림 IV-37 강력한 법질서 기반 사회에 대한 이해



“자유가 많아 무질서한 사회에 사는 것보다 강력한 법질서로 운영되는 사회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3.1%, 약간 그렇다 34.7%로 긍정적 응답이 77.8%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은 22.2%로 나타났다. 남성의 긍정적 응답이 73.4%,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80.0%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5.8%, 30대 73.1%, 40대 78.4%, 50대 88.5%, 60대 이상 82.6%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력한 법질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전히 질서 중심과 법의 지배(rule of law)보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익숙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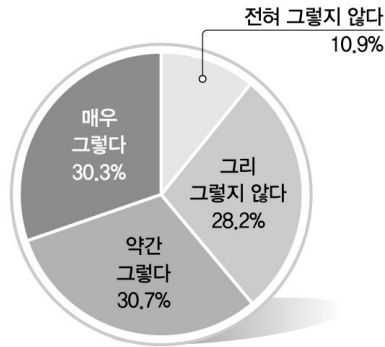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V-38 시위 허용에 대한 이해



이해를 대변하는 시위와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시위는 무질서한 상태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시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20.6%, 약간 그렇다 32.8%로 53.4%로 과반을 넘고 있다. 그리 그렇지 않다 34.9%, 전혀 그렇지 않다 11.8%로 부정적 응답은 46.7%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시위의 경험이 없고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사상교양을 받은 것이 남한 사회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성의 긍정적 응답이 41.8%,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59.1%로 여성이 시위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34.2%, 30대 53.8%, 40대 58.1%, 50대 61.5%, 60대 이상 5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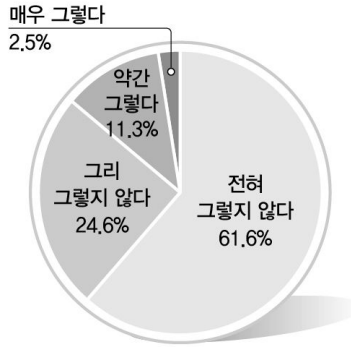
● **그림 IV-39**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



다원적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30.3%, 약간 그렇다 30.7%로 긍정적 응답이 6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리 그렇지 않다 28.2%, 전혀 그렇지 않다 10.9%로 부정적 응답은 39.1%로 나타났다. 당의 외곽단체,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북한의 조직생활이 여전히 시민사회의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었던 인식이 여전히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적 응답의 경우 20대 이하 36.8%, 30대 38.5%, 40대 73.6%, 50대 78.8%, 60대 이상 70.8%로 나타났다. 20대, 30대의 경우 40대 이상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파악되었다.

I
II
III
<b>IV</b>
V

●그림 IV-40 폭력적 의견 개진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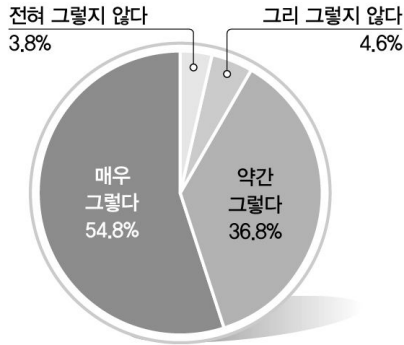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절차와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내 주장이 옳다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5%, 약간 그렇다 11.3%로 긍정적 응답이 13.8%로 나타났다. 반면 그리 그렇지 않다 24.6%, 전혀 그렇지 않다 61.7%로 부정적 응답이 86.2%로 나타났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14% 정도가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연령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20대 10.5%, 30대 13.5%, 40대 12.2%, 50대 9.6%, 60대 이상 33.3%로 60대 이상의 연령은 다른 연령에 비해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3) 정치제도에 대한 행동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정치생활과 관련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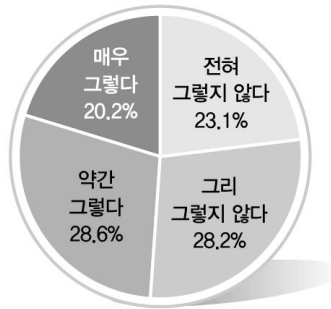
● 그림 IV-41 투표 행위에 대한 이해



먼저 “나는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반적인 이해가 엇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거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4.8%, 약간 그렇다 36.8%로 긍정적 응답이 91.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97.4%, 30대 88.5%, 40대 89.2%, 50대 90.4%, 60대 이상 100%로 긍정적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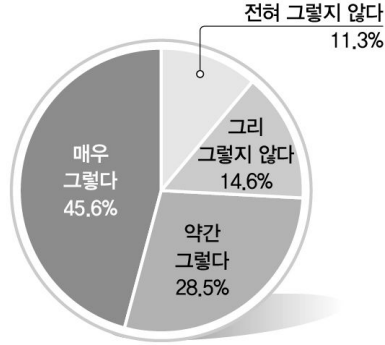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V-42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



투표 대상의 결정권과 함께 결정 대상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나는 우리 지구(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0.2%, 약간 그렇다 28.6%로 긍정적 응답이 48.8%, 그리 그렇지 않다 28.2%, 전혀 그렇지 않다 23.1%로 부정적 응답이 51.3%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투표 대상에 대한 결정권 이해는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31.6%, 30대 52.9%, 40대 59.5%, 50대 42.3%, 60대 이상 47.8%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남한 정착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33.3%, 4~6년 이하 41.9%, 7~9년 이하 55.3%, 10년 이상 67.6%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회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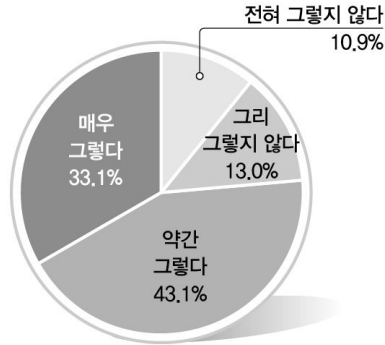
●그림 IV-43 선거 참여에 대한 응답 결과



정치제도의 통합과정에서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선거의 의미와 선거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가운데 선거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5.6%, 약간 그렇다 28.5%로 적극적 행동에 대한 응답이 7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 그렇지 않다 14.6%, 전혀 그렇지 않다 11.3%로 소극적 행동은 2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68.4%, 30대 67.3%, 40대 74.0%, 50대 78.8%, 60대 이상 87.5%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들도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I
II
III
IV
V

● **그림 IV-44**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치·행정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을 조사하였다. “나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기관에 찾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3.1%, 약간 그렇다 43.1%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76.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해결하는 시스템의 이해가 낮은 부정적 응답은 2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요약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도는 50% 정도로 파악되었다. 다당제 정당제도와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야당의 비판적 역할에 대해서는 1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치체제와 제도에 대한 남성의 이해도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력한 법질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법치에 대한 인식은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

13.8% 정도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위와 질서와의 관계에서 질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민단체의 비판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도 낮게 파악되었다. 그리고 정치제도에 대한 행동과 관련하여 투표 대상에 대한 결정권 이해는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는 75% 정도로 남한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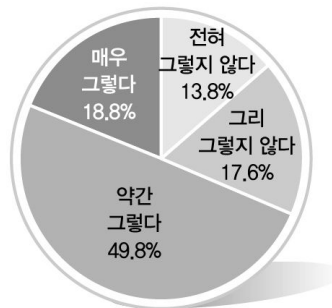
#### 나. 정치제도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 예상

정치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 (1) 통일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예상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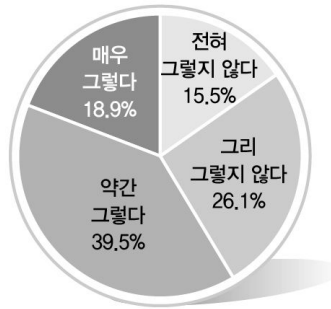
●그림 IV-45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예측



I
II
III
IV
V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18.8%, 약간 그렇다 49.8%로 긍정적 응답이 68.6%, 그리 그렇지 않다 17.6%, 전혀 그렇지 않다 13.8%로 부정적 응답이 31.4%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64.9%, 30대 71.2%, 40대 63.5%, 50대 71.2%, 60대 이상 79.2%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남한 거주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69.1%, 4~6년 이하 68.3%, 7~9년 이하 70.2%, 10년 이상 64.9%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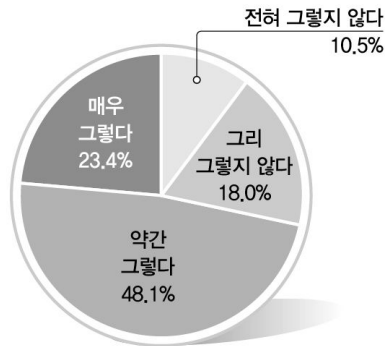
● **그림 IV-46**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선거제도 이해에 대한 예측



구체적으로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18.9%, 약간 그렇다 39.5%로 긍정적 응답이 58.4%, 그리 그렇지 않다 26.1%, 전혀 그렇지

않다 15.5%로 부정적 응답이 41.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42.1%, 30대 61.5%, 40대 55.4%, 50대 66.0%, 60대 이상 70.8%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남한 정착 거주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60.0%, 4~6년 이하 59.0%, 7~9년 이하 61.2%, 10년 이상 48.6%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선거제도에 대해 남한 거주 10년 이상이 되어야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IV-47**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정당제도 이해에 대한 예측



구체적으로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정당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예상 생각을 조사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정당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3.4%, 약간 그렇다 48.1%로 긍정적 응답이 71.5%, 그리 그렇지 않다 18.0%, 전혀 그렇지 않다 10.5%로 부정적 응답이 28.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68.4%, 30대 78.4%, 40대 68.9%, 50대 69.2%, 60대 이상 75.0%로 긍정적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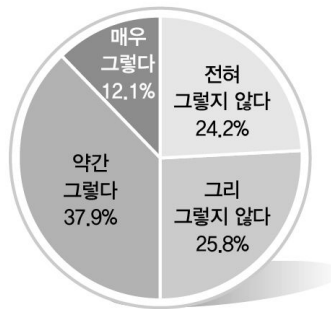
I
II
III
<b>IV</b>
V

답이 나타났다. 남한 정착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74.1%, 4~6년 이하 68.3%, 7~9년 이하 71.8%, 10년 이상 73.0%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보다 정당제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정치적 차별에 대한 인식 예상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이 차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 **그림 IV-48**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에 대한 예측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은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2.1%, 약간 그렇다 37.9%로 긍정적 응답이 50.0%, 그리 그렇지 않다 25.8%, 전혀 그렇지 않다 24.2%로 부정적 응답이 50.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정치적 차별에 대한 예상 인식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57.9%, 30대 53.8%, 40대 37.8%, 50대 46.2%, 60대 이상 75.0%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차별에 대해 낮게 예상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상당히 높게 예상하고 있다. 남한 거주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43.6%, 4~6년 이하 55.6%, 7~9년 이하 49.4%, 10년 이상 51.4%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 (3) 요약

70% 정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58% 정도, 정당제도에 대해 71% 정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거제도보다 정당제도에 대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제도에 대해서는 연령과 정착 기간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제도 통합과정에서 정당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통일 이후 선거제도보다 정당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남북한 정치제도 통합과정에서 정당제도의 이해도 제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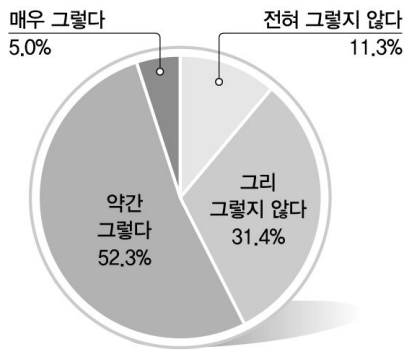
V

## 5. 경제제도 통합에 대한 인식

### 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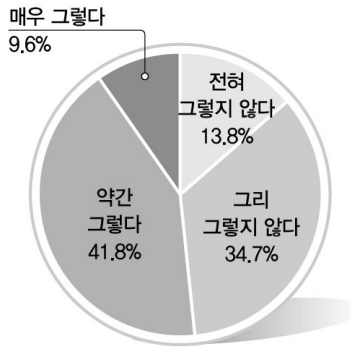
#### (1) 전반적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행동역량에 대한 평가

●그림 IV-49 전반적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경제체제 및 제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나는 남한의 전반적 경제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0%, 약간 그렇다 52.3%로 긍정적 응답이 57.3%, 그리 그렇지 않다 31.4%, 전혀 그렇지 않다 11.3%로 부정적 응답이 42.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60% 이하로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57.9%, 30대 59.6%, 40대 59.5%, 50대 53.8%, 60대 이상 52.2%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남한 정착 거주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45.5%, 4~6년 이하 59.7%, 7~9년 이하 57.6%, 10년 이상 70.3%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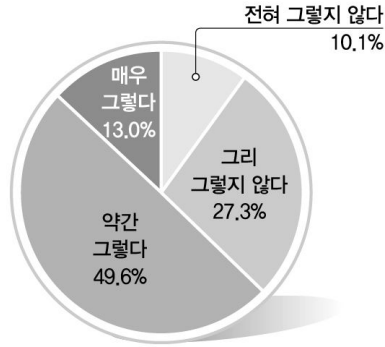
●그림 IV-50 자본주의적 역량에 대한 본인 평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본인의 행동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 제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량에 대한 평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나는 현재 남한에서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9.6%, 약간 그렇다 41.8%로 긍정적 응답이 51.4%, 그리 그렇지 않다 34.7%, 전혀 그렇지 않다 13.8%로 부정적 응답이 48.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과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성 38.5%, 여성 53.4%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자신의 역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39.5%, 30대 35.3%, 40대 51.4%, 50대 59.6%, 60대 이상 58.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61.1%, 4~6년 이하 47.6%, 7~9년 이하 44.7%, 10년 이상 40.5%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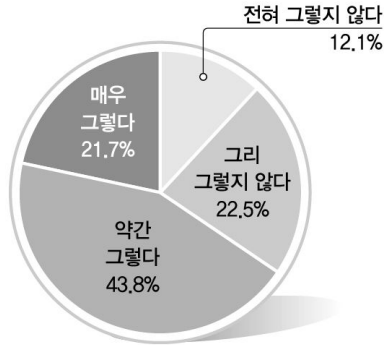
I
II
III
<b>IV</b>
V

● 그림 IV-51 자본주의 역량 학습에 대한 본인 평가



자본주의 제도 아래 역량을 배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나는 남한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3.0%, 약간 그렇다 49.6%로 긍정적 응답이 62.6%, 그리 그렇지 않다 27.3%, 전혀 그렇지 않다 10.1%로 부정적 응답이 37.4%로 나타났다.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역량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71.1%, 30대 69.2%, 40대 56.8%, 50대 58.8%, 60대 이상 6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54.5%, 4~6년 이하 64.5%, 7~9년 이하 61.2%, 10년 이상 75.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2 자신의 수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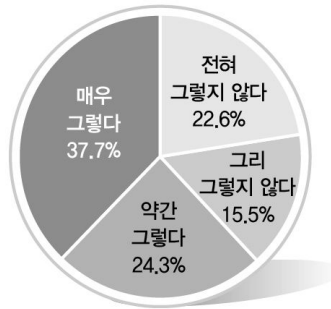


자본주의 제도 아래 자신들의 수입과 생활수준과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는 내가 번 수입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1.7%, 약간 그렇다 43.8%로 긍정적 응답이 65.5%, 그리 그렇지 않다 22.5%, 전혀 그렇지 않다 12.1%로 부정적 응답이 34.6%로 나타났다. 남성이 75.9%, 여성이 60.2%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63.2%, 30대 73.1%, 40대 58.1%, 50대 69.2%, 60대 이상 6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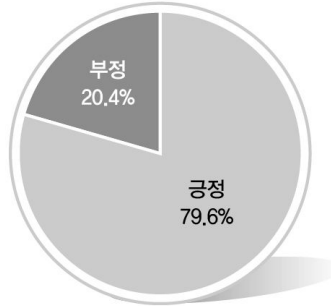
●그림 IV-53 1년 이상 근무 경험



자신의 역량과 고용 및 경영 기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 직장, 한 자영업에서 1년 이상 일을 해보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7.7%, 약간 그렇다 24.3%로 긍정적 응답이 62.0%, 그리 그렇지 않다 15.5%, 전혀 그렇지 않다 22.6%로 부정적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47.4%, 30대 73.1%, 40대 66.2%, 50대 69.2%, 60대 이상 30.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35.2%, 4~6년 이하 52.4%, 7~9년 이하 77.6%, 10년 이상 81.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10년 이상 정착 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취업형태를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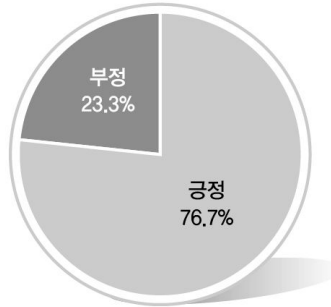
## (2) 경쟁과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림 IV-54 경쟁에 대한 평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교에서나 직장,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사람과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20.4%, 긍정이 79.6%로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60.5%, 30대 80.8%, 40대 85.1%, 50대 82.7%, 60대 이상 83.3%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20대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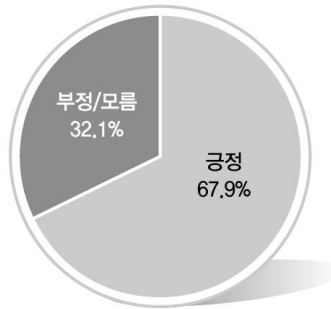
●그림 IV-55 노동자 임금에 대한 기준



능력과 보수(임금)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노동자의 임금은 능력과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23.3%, 긍정이 76.7%로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84.8%, 여성 72.7%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나 동의하는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65.8%, 30대 82.7%, 40대 79.7%, 50대 73.1%, 60대 이상 79.2%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위의 항목과 함께 동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80.0%, 4~6년 이하 77.8%, 7~9년 이하 74.1%, 10년 이상 75.7%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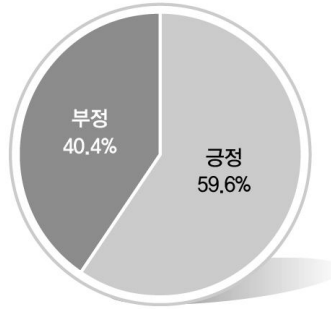
●그림 IV-56 자본주의와 성실성의 관계



성실성과 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본주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질문에 부정이 32.1%, 긍정이 67.9%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74.7%, 여성 64.6%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76.3%, 30대 63.5%, 40대 68.9%, 50대 65.4%, 60대 이상 66.7%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72.7%, 4~6년 이하 69.8%, 7~9년 이하 69.4%, 10년 이상 54.1%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정착 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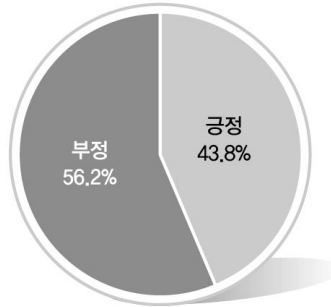
I  
II  
III  
IV  
V

● 그림 IV-57 성실성과 빈곤의 관계



성실성과 가난(빈곤)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40.4%, 긍정이 59.6%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성 69.6%, 여성 54.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2.1%, 30대 51.9%, 40대 66.2%, 50대 65.4%, 60대 이상 70.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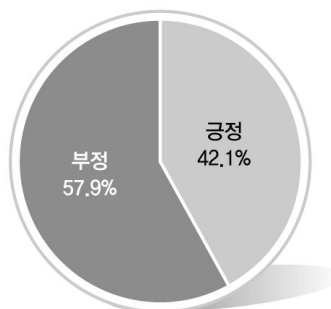
●그림 IV-58 성실성과 실패의 관계



경쟁사회에서 실패와 성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56.2%, 긍정이 43.8%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59.5%, 여성이 36.0% 동의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0.0%, 30대 40.4%, 40대 43.2%, 50대 42.3%, 60대 이상 45.8%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0대가 가장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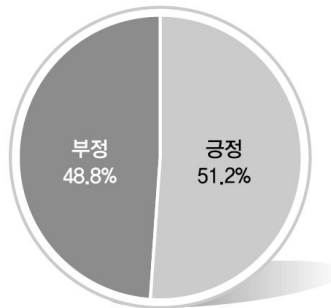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V-59   공정한 사회와 능력의 관계



공정한 사회와 능력(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능력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57.9%, 긍정이 42.1%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59.5%, 여성이 33.5%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4.7%, 30대 59.6%, 40대 33.8%, 50대 34.6%, 60대 이상 41.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30대는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한 정착 기간을 보면 3년 이하 52.7%, 4~6년 이하 38.1%, 7~9년 이하 36.5%, 10년 이상 45.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년에서 9년 사이의 정착 기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60 성실성과 자본주의 관계



개인소유제도와 성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개인소유제도가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48.8%, 긍정이 51.2%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62.0%, 여성이 46.0%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7.9%, 30대 51.9%, 40대 44.6%, 50대 55.8%, 60대 이상 5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50.9%, 4~6년 이하 46.0%, 7~9년 이하 48.2%, 10년 이상 67.6%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10년 이상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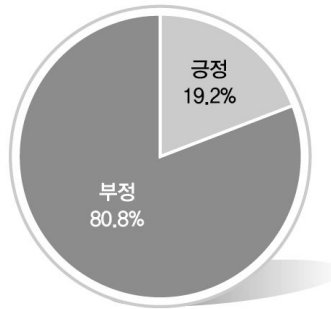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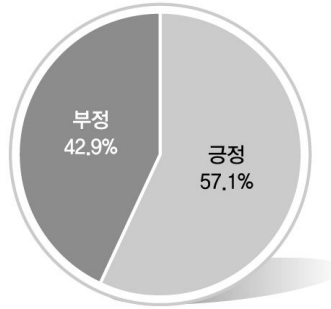
V

● 그림 IV-61 역량과 급여의 관계



역량과 급여 간의 상관관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문적 기술이 없는 노동자(청소부, 식당 주방일, 일용직 노동자 등)가 받는 월급은 자신들의 능력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80.8%, 긍정이 19.2%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29.1%, 여성이 14.3%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한 정착 거주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18.2%, 4~6년 이하 19.0%, 7~9년 이하 15.3%, 10년 이상 29.7%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10년 이상이 되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62 노동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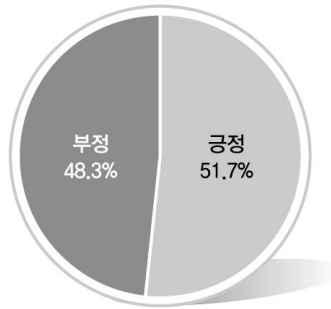


노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42.9%, 긍정이 57.1%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36.8%, 30대 51.9%, 40대 63.5%, 50대 71.2%, 60대 이상 50.0%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0대와 50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기업의 경영에 대한 인식

기업의 경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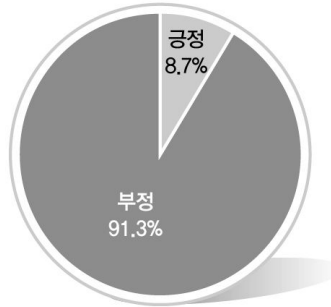
●그림 IV-63 사업적 결정의 주체



공장 경영의 결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장을 경영할 때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48.3%, 긍정이 51.7%로 동의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60.8%, 여성이 47.2%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2.6%, 30대 53.8%, 40대 50.0%, 50대 57.7%, 60대 이상 3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60대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43.6%, 4~6년 이하 46.0%, 7~9년 이하 60.0%, 10년 이상 5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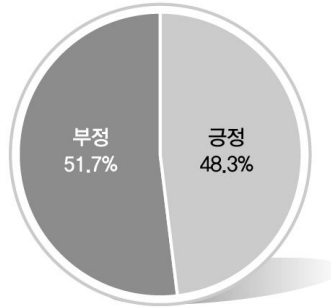
●그림 IV-64 기업경영과 파업에 대한 인식



기업 경영과 파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91.3%, 긍정이 8.7%로 부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86.1%, 여성이 93.8%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92.1%, 30대 94.2%, 40대 87.8%, 50대 90.4%, 60대 이상 95.8%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91.0%, 4~6년 이하 90.5%, 7~9년 이하 93.0%, 10년 이상 89.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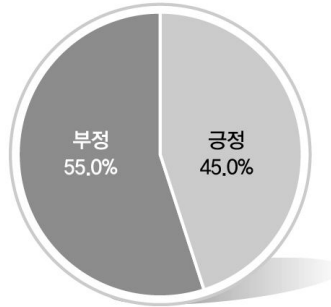
I
II
III
<b>IV</b>
V

●그림 IV-65 사유제에 대한 평가



개인소유 기업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개인소유 기업 제도는 전반적으로 공평하며 효율적인 제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이 51.7%, 긍정이 48.3%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남성이 63.3%, 여성이 41.0%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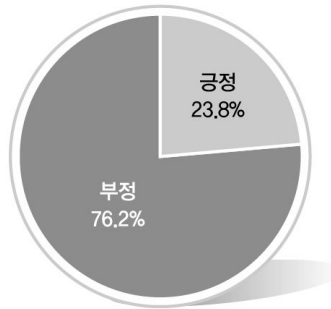
●그림 IV-66 기업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이익



기업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이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55.0%, 긍정이 45.0%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남성이 57.0%, 여성이 39.1%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0.0%, 30대 42.3%, 40대 43.2%, 50대 44.2%, 60대 이상 5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52.7%, 4~6년 이하 42.9%, 7~9년 이하 40.0%, 10년 이상 4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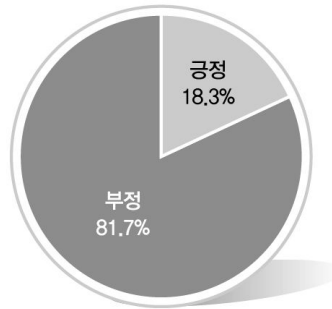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V-67 노동조합과 국가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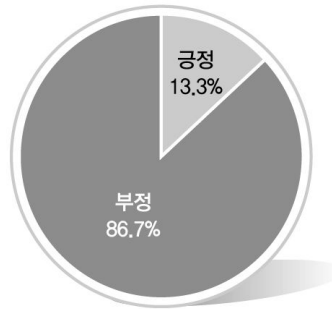
노동조합과 국가 발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노동조합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이 76.2%, 긍정이 23.8%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38.0%, 여성이 16.8%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3.2%, 30대 26.9%, 40대 27.0%, 50대 28.8%, 60대 이상 12.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9.1%, 4~6년 이하 17.5%, 7~9년 이하 30.6%, 10년 이상 40.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한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IV-68 부자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생각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부과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본주의 기업들과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당하게 내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이 81.7%, 긍정이 18.3%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8.4%, 30대 21.2%, 40대 21.6%, 50대 15.4%, 60대 이상 8.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납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23.6%, 4~6년 이하 11.1%, 7~9년 이하 18.8%, 10년 이상 21.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V-69 국가의 기업 통제에 대한 견해



정부의 통제와 기업의 자율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이 86.7%, 긍정이 13.3%로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3.7%, 30대 17.3%, 40대 14.9%, 50대 1.9%, 60대 이상 8.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0대 이상에서 정부의 기업통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14.5%, 4~6년 이하 9.5%, 7~9년 이하 12.9%, 10년 이상 1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 요약

전반적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57%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 아래 취업 등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자신의 역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역량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은 62% 정도로 역량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 높게 파악되었다.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6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취업 기간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정착 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취업형태를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쟁과 사회발전 관계에 대해 80% 정도가 경쟁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역량과 보수의 상관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성실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70%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면 54%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게으름이 실패의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44% 정도만이 동의하였다. 개인소유제도와 성실성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일의 소중성과 성실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57%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52%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10% 정도가 동의하였다. 개인소유 기업의 공평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파악되었다. 기업의 이윤과 개인의 이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5%로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업과 부자들이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절하게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87%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

I
II
III
IV
V

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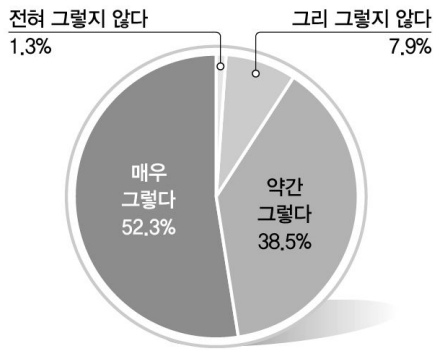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비율이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납부 세금의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나. 경제제도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 예상

### (1)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전망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경제제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IV-70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개인소유제에 대한 공감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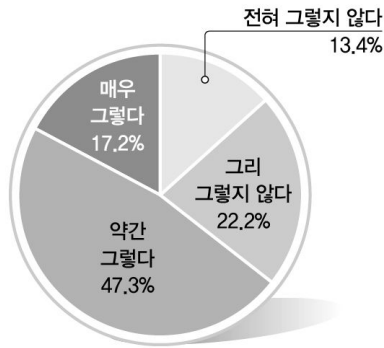


통일 이후 가장 핵심적인 경제제도의 변화는 소유제도의 변화일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소유제도 변화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통일이 되



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2.3%, 약간 그렇다 38.5%로 긍정적 응답이 90.8%, 그리 그렇지 않다 7.9%, 전혀 그렇지 않다 1.3%로 부정적 응답이 9.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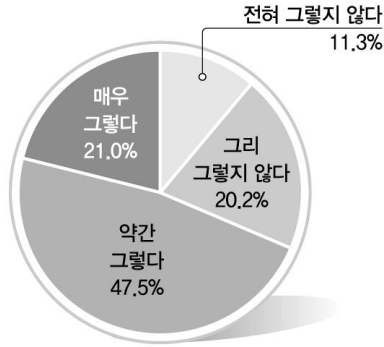
● **그림 IV-71**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개인소유제에 대한 이해도 예측



경제제도에 대한 공감도와 더불어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7.2%, 약간 그렇다 47.3%로 긍정적 응답이 64.5%, 그리 그렇지 않다 22.2%, 전혀 그렇지 않다 13.4%로 부정적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63.2%, 30대 60.8%, 40대 62.2%, 50대 63.5%, 60대 이상 83.3%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하 61.8%, 4~6년 이하 66.1%, 7~9년 이하 68.2%, 10년 이하 56.8%로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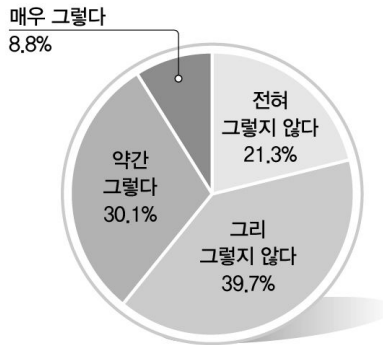
I
II
III
<b>IV</b>
V

● **그림 IV-72**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취업수준에 대한 예측



경제제도가 통합되면 고용시장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취업의 수월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1.0%, 약간 그렇다 47.5%로 긍정적 응답이 68.5%, 그리 그렇지 않다 20.2%, 전혀 그렇지 않다 11.3%로 부정적 응답이 31.5%로 나타났다. 남성 53.2%, 여성 76.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56.3%, 30대 69.2%, 40대 67.6%, 50대 72.0%, 60대 이상 8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한 정착 기간별로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그림 IV-73**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기대 충족 수준에 대한 예측



통일에 따른 경제적 혜택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기대가 충족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기대했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8.8%, 약간 그렇다 30.1%로 긍정적 응답이 38.9%, 그리 그렇지 않다 39.7%, 전혀 그렇지 않다 21.3%로 부정적 응답이 61.0%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이 기대한만큼 실질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4.7%, 30대 33.3%, 40대 23.0%, 50대 50.0%, 60대 이상 6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주민들이 기대한 것보다 실질적 혜택이 낮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요약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될 경우 북한주민들이 개인소유제에 대해

I
II
III
<b>IV</b>
V

공감할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전망하였다. 개인소유제도에 대해 압도적으로 공감하겠지만 이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64%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취업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68%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되어도 북한주민들이 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기대한만큼 실질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61% 정도로 파악되었다.

## 6. 주요 지표의 교차 분석

### 가. 분석 개요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통일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한 논의 속에서도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 정치, 법 등의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사회 문화적 통합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제도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의 심리·문화적 통합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필수적이다.

남북한 주민 간 내적 장벽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 중 하나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북한체제 이외의 사회 경제적 체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북한주민은 통일 이후 자본주의의 경쟁체제 및 사유 재산제도, 자유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낯섬을 인내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주민은 적응

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응 과정에서의 갈등 및 부적응자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 속에서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행동 등을 예측하여, 부적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다면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 내적 장벽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심층 분석의 목적은 남한사회에 거주한 경험의 양, 즉 남한사회에 대한 사회화 기간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삶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성별 중심으로 남한사회에 거주한 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일 북한주민이 자유주의 체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심층분석은 (1) 남한 거주 기간과 성별, (2) 남한 거주 기간과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적으로는 남한 거주 기간, 성별, 연령대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좋으나 설문 참여자의 수가 통계적 유효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분석의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먼저 동일한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개념적 구분을 확인하였다.
- (2) 개념적 구분이 동일한 문항에 대해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일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한 거주 기간, 성별, 연령대의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남한 거주 기간, 성별 연령대의 주효과 및 남한 거주 기간과 성

I

II

III

IV

V

별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남한 거주 기간과 연령대의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탐색적 연구라는 본 조사의 취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유의한 통계치의 기준은 0.05 수준이 아닌 0.1로 설정하였다.

각 통계적 분석의 결과 값, 즉 통계치들은 서술의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였다.

## 나. 분석 결과

### (1) 통일의 이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3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첫 번째는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4점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다~4: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항은 “경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는 것이 좋다”의 질문에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관찰되었다. 즉 응답치가 너무 높아 구체적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당위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사회화는 통일의 당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세 번째 문항인 “남북한 간 전쟁중지, 자유로운 왕래,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응답은 첫 번

째, 두 번째 문항에 비해 응답 간 변산(variance) 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남한 거주 기간, 연령, 성별에 따른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V-2>, <그림 IV-74>에 제시하였다.

● 표 IV-2 평화유지 전제의 분단 고착에 대한 동의의 평균 및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1.96(0.23)	1.83(0.22)	2.08(0.22)	2.21(0.30)	2.00(0.12)
40대	1.75(0.33)	2.82(0.30)	2.32(0.21)	2.45(0.37)	2.36(0.14)
50대 이상	2.63(0.35)	2.48(0.24)	2.38(0.26)	2.08(0.36)	2.41(0.14)
소계	2.11(0.17)	2.32(0.15)	2.27(0.13)	2.24(0.19)	2.24(0.08)
남	1.82(0.27)	1.95(0.23)	1.85(0.24)	1.67(0.29)	1.83(0.13)
여	2.24(0.11)	2.50(0.19)	2.46(0.16)	2.64(0.22)	2.44(0.10)
소계	2.11(0.17)	2.32(0.15)	2.27(0.13)	2.24(0.19)	2.24(0.08)

( ):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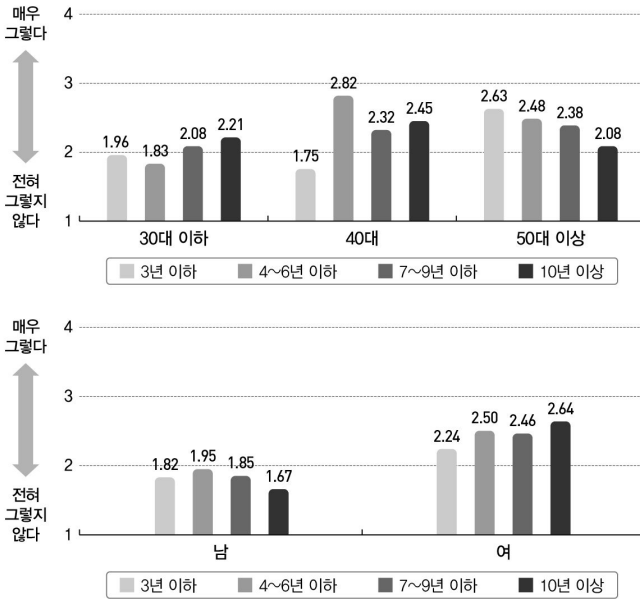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연령대의 주효과와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40대와 50대가 30대 이하 응답자에 비해 평화가 유지된다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정도가 더 강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화 유지 전제의 분단 고착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 비록 남한사회화의 기간과 연령대, 남한사회화의 기간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경우 남한사회화 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40대의 경우 3년 이하 거주자들은 분단 고착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였지만, 4~6년 거주자들은 평화적 분단 고착에 찬성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한 가지 가능한

I
II
III
IV
V

해석은 40대의 경우 30대 이하 또는 50대 이상의 응답자보다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이 많으며, 이러한 경험이 평화적 분단 고착에 찬성하는 경향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림 IV-74 평화로운 분단 고착에 대한 그래프



남한 거주 기간과 성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되었다. 3년 이하 응답자에 대해서는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4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한 찬성의 강도가 더 강하였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40대 이상 응답자가 30대 이하 응답자에 비해 평화적 분단 고착을 선호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화적 분단 고착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남한 거주 4년이 지나고 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2) 통일을 위한 행동

통일은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이다. 전통적 태도이론<sup>206)</sup>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는 행동적 요소와 결합할 때 통일을 위한 행동 의도를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행동적 요소가 빠져있는 관념적 의식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통일 의식 전체를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행동적 요소를 아래 제시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4: 나는 통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집중해서 시청하거나 듣는다.

문항 5: 나는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문항 6: 나는 통일을 위해서 기부금(돈)을 내 본 적이 있다.

문항 7: 나는 통일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문항 8: 나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5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와 <그림 IV-75>에 제시되어 있다.

<sup>206)</sup> Richard E. Petty and Jon A. Krosnick,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xford: Routledge, 20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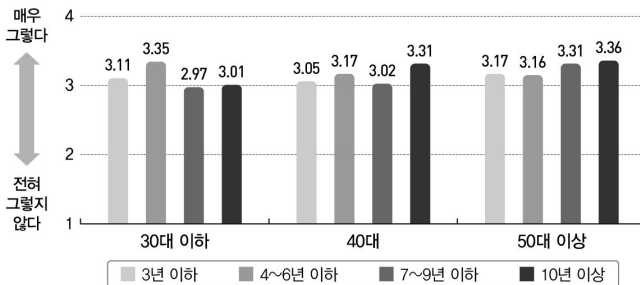
표 IV-3 통일에 대한 행동 점수의 평균 및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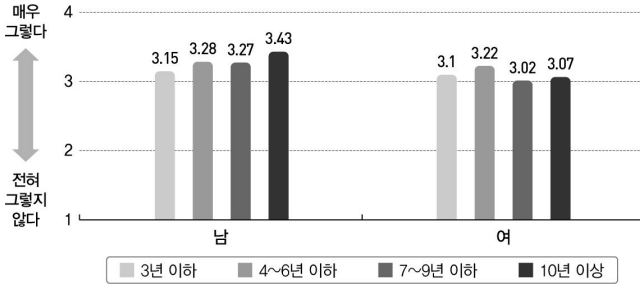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3.11(0.12)	3.35(0.09)	2.97(0.16)	3.01(0.16)	3.12(0.07)
40대	3.05(0.10)	3.17(0.14)	3.02(0.11)	3.31(0.14)	3.10(0.06)
50대 이상	3.17(0.12)	3.16(0.10)	3.31(0.13)	3.36(0.12)	3.25(0.06)
소계	3.12(0.07)	3.24(0.06)	3.09(0.07)	3.21(0.09)	3.15(0.04)
남	3.15(0.13)	3.28(0.12)	3.27(0.12)	3.43(0.15)	3.28(0.06)
여	3.10(0.12)	3.22(0.07)	3.02(0.09)	3.07(0.10)	3.09(0.05)
소계	3.12(0.07)	3.24(0.06)	3.09(0.07)	3.21(0.09)	3.15(0.04)

(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 효과가 유의한 변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에 관련하여 적극적 행동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동 경향성은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사회화 기간에 따른 차이 역시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V-75 통일을 위한 행동에 대한 그래프





### (3) 통일의 이익

통일의 이익은 5개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통일이 (1) 남한 (2) 북한 (3) 남한주민 (4) 북한주민 (5) 응답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통일이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문항 평균과 표준오차

	남한	북한	남한주민	북한주민	본인
남	3.47(0.09)	3.59(0.08)	3.33(0.09)	3.73(0.06)	3.75(0.05)
여	3.26(0.07)	3.64(0.05)	3.05(0.07)	3.71(0.04)	3.57(0.05)
전체	3.33(0.06)	3.63(0.04)	3.14(0.06)	3.72(0.03)	3.63(0.04)

( ): 표준오차

각 문항에 대해 연령대, 성별, 남한 내 거주 기간에 따른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를 평가한 문항에서 성별의 주효과만 관찰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도가 강했다. 그 외의 문항, 통일이 남한에, 북한에, 남한주민에, 북한주민에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연령대, 성별, 거주 기간별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이익이 되는 국가, 연령대, 성별, 남한 내 거주 기간에 따른 사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이익이 되는 국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와 북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에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익이 되는 주민(남한주민 vs 북한주민), 연령대, 성별, 남한 내 거주 기간에 따른 사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이익이 되는 주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통일은 남한주민보다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시사하듯 여성이 판단한 남한주민 대비 북한주민 이익이 남성이 판단한 남한주민 대비 북한주민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북한과 남한에 미치는 통일의 이익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반면 여성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통일의 이익을 더 누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통일이 남한주민보다 북한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이 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후 5개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5개 문항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음을 확인한 후 5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통일의 전반적 이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V-5>와 <그림 IV-76>에 제시하였다.

표 IV-5 통일 이익의 평균 및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3.60(0.08)	3.53(0.09)	3.50(0.12)	3.41(0.18)	3.52(0.05)
40대	3.68(0.15)	3.34(0.12)	3.43(0.09)	3.33(0.12)	3.44(0.06)
50대 이상	3.47(0.10)	3.35(0.14)	3.58(0.08)	3.67(0.11)	3.51(0.06)
소계	3.58(0.06)	3.42(0.07)	3.49(0.06)	3.47(0.08)	3.49(0.03)
남	3.46(0.13)	3.48(0.12)	3.69(0.08)	3.65(0.12)	3.58(0.05)
여	3.64(0.13)	3.39(0.08)	3.41(0.07)	3.35(0.11)	3.45(0.04)
소계	3.58(0.06)	3.42(0.07)	3.49(0.06)	3.47(0.08)	3.49(0.03)

(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과 남한사회화 기간, 즉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통일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3년 이하 거주자에 비해 4~6년 거주자의 통일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판단은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패턴이 40대에게서도 관찰되었다. 40대의 경우 4~6년 이하 거주자의 통일 이익에 대한 판단이 3년 이하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이후 지속되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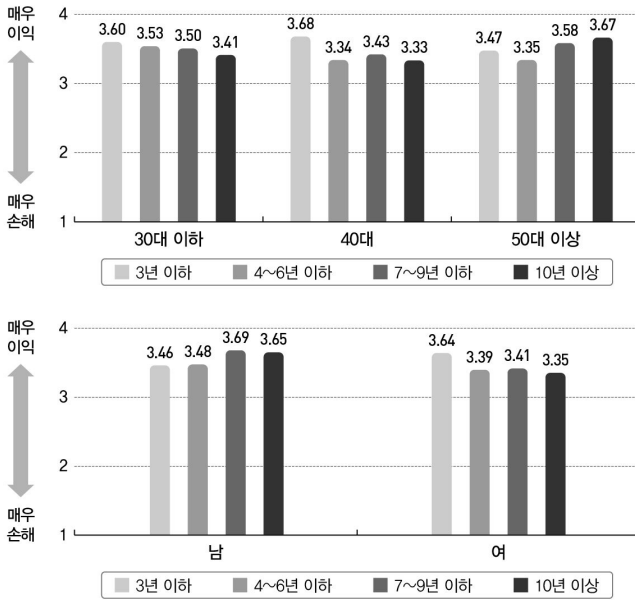
II

III

IV

V

● 그림 IV-76 통일 이익에 대한 그래프



통일 이익에 대한 결과는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 40대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한에 입국한 후 4년 정도에 통일과 관련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

#### (4)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아래와 같이 5개의 선택지를 사용하였다.

- (1) 같은 민족이니까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 (3) 남북 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5개의 선택지 (1)번과 (2)번을 선택한 응답자는 통일의 당위성을, (3), (4), (5) 번을 선택한 응답자는 통일의 도구성을 통일의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V-6>와 <그림 IV-77>에 제시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통일의 당위성을, 0에 가까울수록 통일의 도구성을 선택한 것이다.

● 표 IV-6 통일 이유의 평균 및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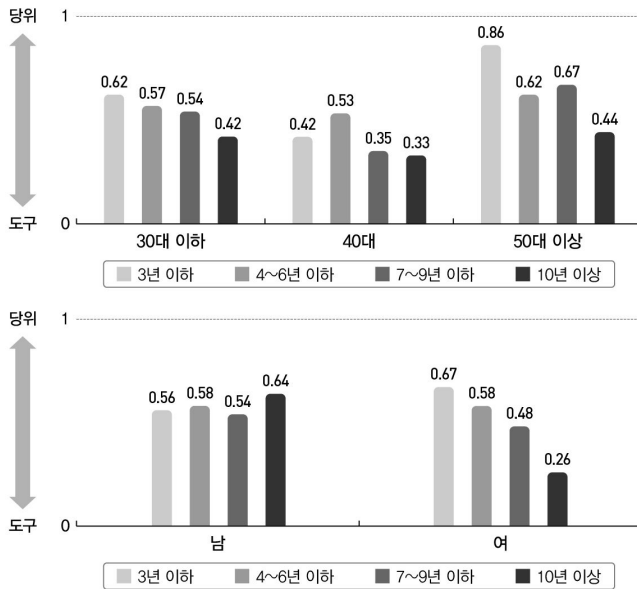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0.62(0.10)	0.57(0.11)	0.54(0.10)	0.42(0.15)	0.55(0.05)
40대	0.42(0.15)	0.53(0.12)	0.35(0.08)	0.33(0.17)	0.40(0.06)
50대 이상	0.86(0.10)	0.62(0.11)	0.67(0.10)	0.44(0.18)	0.66(0.06)
소계	0.63(0.07)	0.58(0.06)	0.50(0.06)	0.40(0.09)	0.54(0.03)
남	0.56(0.13)	0.58(0.12)	0.54(0.10)	0.64(0.15)	0.57(0.06)
여	0.67(0.63)	0.58(0.08)	0.48(0.07)	0.26(0.10)	0.52(0.04)
소계	0.63(0.07)	0.58(0.06)	0.50(0.06)	0.40(0.09)	0.54(0.03)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비록 유의한 변수는 없지만 쌍별 비교로 이루어진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만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남한 거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도구적 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3년 이하 거주자들은 통일의 당위적 이유를 꼽은 비율이 86%에 달하지만,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44%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
II
III
IV
V

● 그림 IV-77 통일 이유에 대한 그래프



성별과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당위적 이유를 선호하지만 도구적 이유에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남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었다. 거주 초기에는 당위적 이유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지만 7~9년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도구적 이유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 (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다음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5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5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V-7>과 <그림 IV-78>에 제시하였다.

문항 16: 남한에서의 나의 형편은 내 리상에 가깝다.

문항 17: 남한에서 내 형편은 매우 좋은 편이다.

문항 18: 나는 남한에서의 형편에 만족한다.

문항 19: 나는 남한에서 내 삶의 의미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다.

문항 20: 나는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 남한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연령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효과 분석 결과 50대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의 삶의 만족도는 30대 이하, 그리고 40대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0대 이하와 40대의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 표 IV-7 삶의 만족도 평균 및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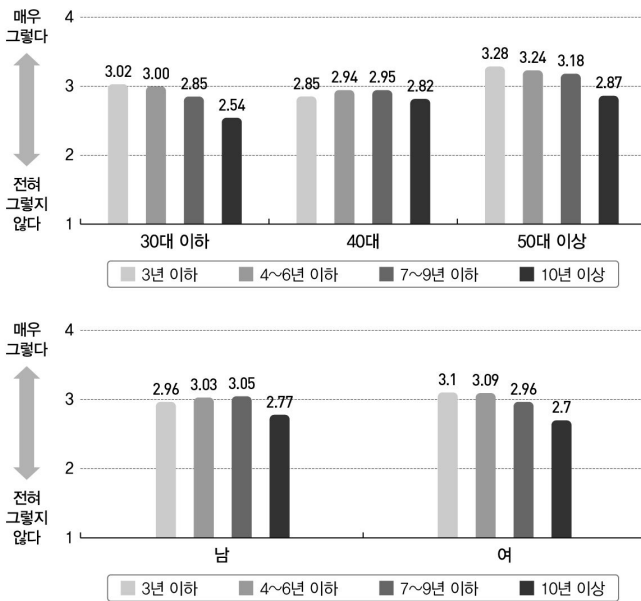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3.02(0.12)	3.00(0.13)	2.85(0.09)	2.54(0.17)	2.89(0.06)
40대	2.85(0.17)	2.94(0.19)	2.95(0.12)	2.82(0.14)	2.91(0.08)
50대 이상	3.28(0.15)	3.24(0.15)	3.18(0.11)	2.87(0.19)	3.17(0.07)
소계	3.06(0.08)	3.07(0.09)	2.99(0.07)	2.73(0.10)	2.99(0.04)
남	2.96(0.16)	3.03(0.16)	3.05(0.11)	2.77(0.20)	2.97(0.08)
여	3.10(3.06)	3.09(0.11)	2.96(0.08)	2.70(0.10)	2.99(0.05)
소계	3.06(0.08)	3.07(0.09)	2.99(0.07)	2.73(0.10)	2.99(0.04)

( ): 표준오차

I  
II  
III  
IV  
V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40대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30대 이하, 50대 이상, 남성 및 여성의 경우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거주한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7~9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반면 40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림 IV-78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래프



비록 10년 이상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지만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남한주민의 평균적인 만족도가 2.7<sup>207)</sup>임을 감안한다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207) 임영진,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10년 이후 떨어지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 (6) 남한사회의 정체성

남한사회에 대한 정체성은 아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6문항은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문항 21, 문항 22, 문항 23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문항 24, 문항 25였다. 문항 26은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았다. 첫 번째 요인을 남한주민과의 동화로 명명하였으며, 두 번째 요인을 남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명명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문항 21: 나는 다른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문항 22: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문항 23: 내 생각은 남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문항 24: 나는 내가 남한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항 25: 나는 내 자신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문항 26: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밝히지 않을 것이다.

남한주민과의 동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8>과 <그림 IV-79>에 제시하였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성별, 연령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남한 사람과 동질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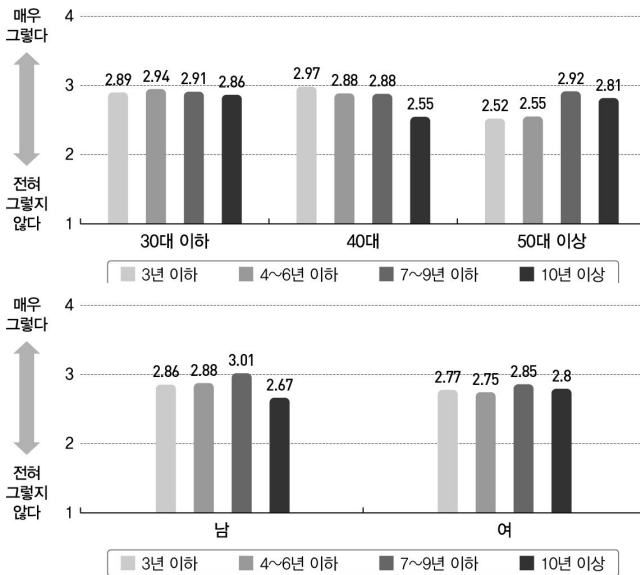
대상으로” p. 889.

● 표 IV-8 남한주민과의 동화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이하	4~6년이하	7~9년이하	10년이상	소계
30대 이하	2.89(0.10)	2.94(0.16)	2.91(0.10)	2.86(0.17)	2.90(0.07)
40대	2.97(0.18)	2.88(0.19)	2.88(0.10)	2.55(0.18)	2.85(0.07)
50대 이상	2.52(0.15)	2.55(0.12)	2.92(0.13)	2.81(0.24)	2.71(0.08)
소계	2.80(0.08)	2.79(0.09)	2.90(0.06)	2.75(0.12)	2.83(0.04)
남	2.86(0.14)	2.88(0.16)	3.01(0.13)	2.67(0.16)	2.88(0.07)
여	2.77(2.80)	2.75(0.11)	2.85(0.07)	2.80(0.16)	2.80(0.05)
소계	2.80(0.08)	2.79(0.09)	2.90(0.06)	2.75(0.12)	2.83(0.04)

( ) : 표준오차

● 그림 IV-79 남한주민과의 동화에 대한 그래프



남한 국민으로서 자긍심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9>와 <그림 IV-80>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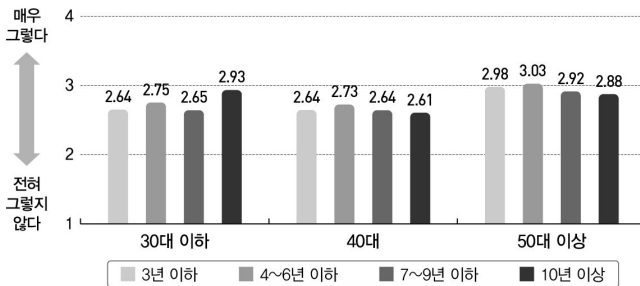
표 IV-9 남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64(0.09)	2.75(0.15)	2.65(0.08)	2.93(0.12)	2.72(0.06)
40대	2.64(0.15)	2.73(0.13)	2.64(0.09)	2.61(0.10)	2.65(0.06)
50대 이상	2.98(0.10)	3.03(0.10)	2.92(0.08)	2.88(0.13)	2.96(0.05)
소계	2.74(0.06)	2.84(0.08)	2.73(0.05)	2.82(0.07)	2.77(0.03)
남	2.75(0.13)	2.67(0.15)	2.76(0.07)	2.91(0.12)	2.76(0.06)
여	2.74(2.74)	2.93(0.08)	2.71(0.07)	2.75(0.08)	2.78(0.04)
소계	2.74(0.06)	2.84(0.08)	2.73(0.05)	2.82(0.07)	2.77(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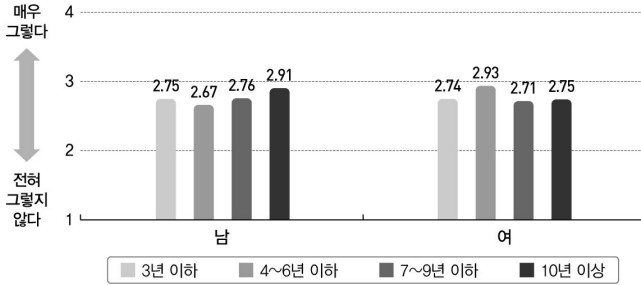
(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남한주민과의 동화와 같이 유의한 통계적 변수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국민으로서 평균 이상의 자긍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 연령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그림 IV-80 남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그래프



- I
- II
- III
- IV
- V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남한사회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모든 변수 수준에서 남한 사람과의 생활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고 남한 사람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남한 국민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입국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적어도 북한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의 이질성 극복에 대해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 (7) 민주주의 생활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5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10>과 <그림 IV-81>에 제시하였다.

문항 33: 나는 남한의 전반적 정치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항 42: 나는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문항 43: 나는 우리 지구(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안다.

문항 44: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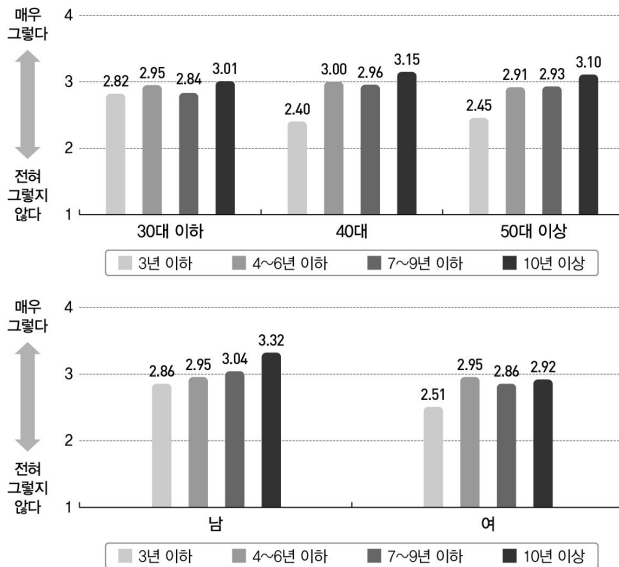
문항 45: 나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기관에 찾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표 IV-10 민주주의 생활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82(0.09)	2.95(0.13)	2.84(0.10)	3.01(0.21)	2.89(0.06)
40대	2.40(0.24)	3.00(0.15)	2.96(0.11)	3.15(0.15)	2.91(0.08)
50대 이상	2.45(0.18)	2.91(0.09)	2.93(0.13)	3.10(0.21)	2.85(0.07)
소계	2.62(0.09)	2.95(0.07)	2.92(0.06)	3.08(0.11)	2.88(0.04)
남	2.86(0.14)	2.95(0.13)	3.04(0.12)	3.32(0.17)	3.03(0.07)
여	2.51(2.62)	2.95(0.09)	2.86(0.08)	2.92(0.14)	2.81(0.05)
소계	2.62(0.09)	2.95(0.07)	2.92(0.06)	3.08(0.11)	2.88(0.04)

( ) : 표준오차

그림 IV-81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그래프



I  
II  
III  
IV  
V

삼원 변량 분석 결과 남한 거주 기간의 주효과 및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변수들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 기간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이하 거주자에 비해 4~6년 이상 거주자들의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지식과 적응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지식과 적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비록 남한 거주 기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3년 이하 거주자와 4~6년 거주자의 차이는 40대와 50대에서 두드러졌다. 30대 이하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40대와 50대의 경우 4~6년 거주자의 응답치가 3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치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민주주의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한 거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차이는 3년 이하 응답자와 10년 이상 응답자의 차이에서만 유의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4~6년 거주자의 응답이 3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지만 이후로는 변화가 없었다. 여성의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적응도 상승하는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 (8) 민주주의 가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후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0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10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요인은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 표현의 자유, 반권위주의, 그리고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였다. 각 요인별 문항은 아래와 같다.



## 정당정치

문항 34: 민주주의를 하려면 의견이 다른 여러 개의 당(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항 35: 모든 당(정당)들에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항 36: 하나의 당(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가 잘 안된다.

## 표현의 자유

문항 37: 야당(현재 집권하지 못한 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외 1개 문항.<sup>208)</sup>

## 반권위주의

문항 38: 자유가 많아 무질서한 사회에 사는 것보다 강력한 법질서로 운영되는 사회에 사는 것이 낫다.

문항 39: 시위는 무질서한 상태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시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문항 40: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 절차 민주주의

문항 41: 내 주장이 옳다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외 1개 문항.<sup>209)</sup>

208) 추가적인 문항은 비공개 자료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입하지 않았다.

209) 추가적인 문항은 비공개 자료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입하지 않았다.

I
II
III
IV
V

## 〈정당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11>과 <그림 IV-82>에 제시하였다.

● 표 IV-11 정당정치 이해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3.09(0.14)	3.19(0.11)	2.88(0.13)	3.38(0.15)	3.10(0.07)
40대	2.78(0.30)	2.82(0.18)	3.01(0.11)	3.06(0.15)	2.94(0.08)
50대 이상	3.04(0.17)	3.03(0.17)	2.88(0.16)	3.11(0.18)	3.00(0.08)
소계	3.01(0.11)	3.03(0.09)	2.93(0.07)	3.20(0.09)	3.02(0.04)
남	3.37(0.18)	3.14(0.16)	2.96(0.14)	3.11(0.14)	3.13(0.08)
여	2.84(0.31)	2.98(0.10)	2.92(0.09)	3.26(0.12)	2.96(0.05)
소계	3.01(0.11)	3.03(0.09)	2.93(0.07)	3.20(0.09)	3.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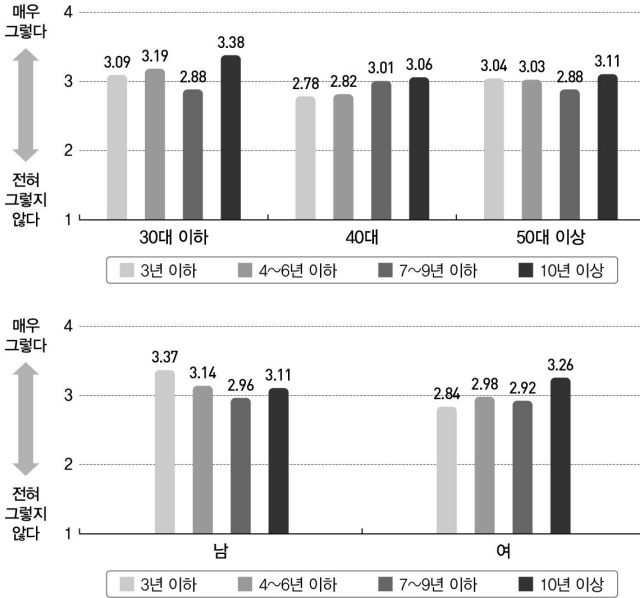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성별의 차이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성별과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었을 때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응답자 간 이해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여성 응답자의 이해도는 다른 조건의 여성보다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10년 이상 남한에 거주한 30대 이하 응답자의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거주한 40대와 50대에 비해서도 30대 이하 응답자의 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

며, 30대 이하 응답자 중에서도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응답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림 IV-82 정당정치의 이해에 대한 그래프



전반적으로 노동당의 일당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 생활하였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본 제도인 다당제에 대한 이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조건에서 평균 이상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10년 이상, 30대 이하 응답의 경우도 10년 이상일 때 정당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 유의미한 증진이 있었다는 면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I
- II
- III
- IV
- V

## 〈반권위주의〉

반권위주의 대한 결과는 <표 IV-12>와 <그림 IV-83>에 제시하였다.

표 IV-12 반권위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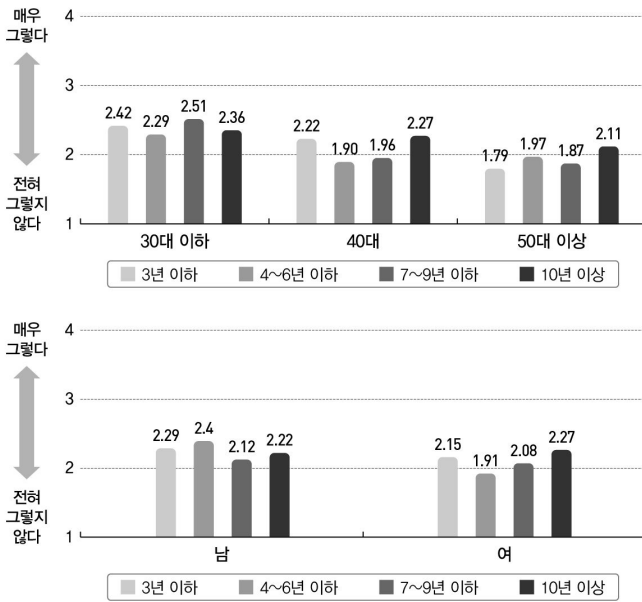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42(0.07)	2.29(0.13)	2.51(0.14)	2.36(0.16)	2.40(0.06)
40대	2.22(0.20)	1.90(0.15)	1.96(0.13)	2.27(0.21)	2.04(0.08)
50대 이상	1.79(0.18)	1.97(0.15)	1.87(0.10)	2.11(0.11)	1.92(0.07)
소계	2.19(0.08)	2.07(0.08)	2.09(0.08)	2.25(0.09)	2.14(0.04)
남	2.29(0.12)	2.40(0.14)	2.12(0.16)	2.22(0.15)	2.25(0.08)
여	2.15(2.19)	1.91(0.10)	2.08(0.09)	2.27(0.12)	2.08(0.05)
소계	2.19(0.08)	2.07(0.08)	2.09(0.08)	2.25(0.09)	2.14(0.04)

(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 성별의 주효과,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40대와 50대의 경우 3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권위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지만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미만의 응답자들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록 10년 이상 여성 응답자의 경우 반권위주의적 태도의 학습이 발생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남성의 반권위주의적 수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V-83 반권위주의에 대한 그래프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집회와 시위를 반대하며 강력한 법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변화가 없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 통념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13>과 <그림 IV-84>에 제시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과는 반권위주의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와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30대 이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 I
- II
- III
- IV
- V

대한 가치가 40대와 50대 이상의 가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보다 높다는 점 역시 반권위주의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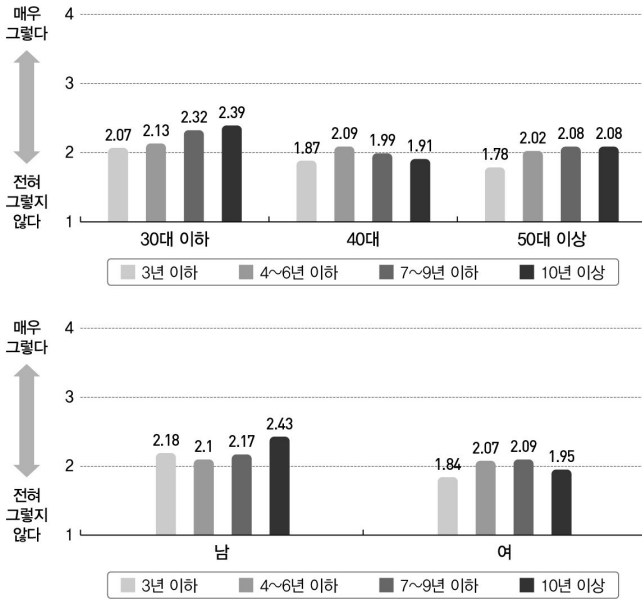
표 IV-13 표현의 자유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07(0.08)	2.13(0.12)	2.32(0.11)	2.39(0.19)	2.21(0.06)
40대	1.87(0.13)	2.09(0.14)	1.99(0.09)	1.91(0.09)	1.98(0.06)
50대 이상	1.78(0.14)	2.02(0.13)	2.08(0.11)	2.08(0.14)	2.00(0.07)
소계	1.95(0.06)	2.08(0.07)	2.11(0.06)	2.15(0.09)	2.07(0.04)
남	2.18(0.09)	2.10(0.14)	2.17(0.08)	2.43(0.14)	2.20(0.06)
여	1.84(1.95)	2.07(0.09)	2.09(0.08)	1.95(0.11)	2.01(0.04)
소계	1.95(0.06)	2.08(0.07)	2.11(0.06)	2.15(0.09)	2.07(0.04)

( ) : 표준오차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습이 30대 미만 응답자에게서만 소폭 발생한다는 것이다. 30대 이하 세대의 경우 7~9년을 기점으로 표현에 자유에 대한 가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4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래프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다수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남한 거주 기간이 증가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단지 30대 미만 세대의 경우 7~9년 정도를 기점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다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4점 척도상 중앙치는 2.5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재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절차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 결과를 <표 IV-14>와 <그림 IV-85>에 제시하였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30대 이하 응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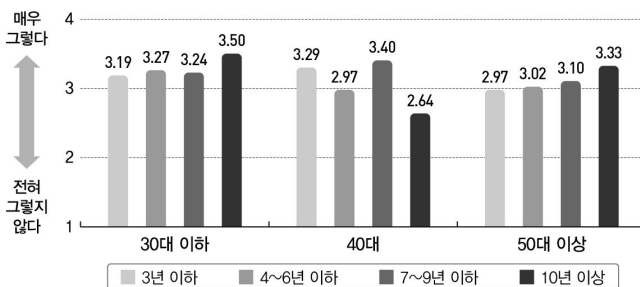
답자가 가지고 있는 절차 민주주의의 대한 가치가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30대와 50대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40대의 경우 다소 퇴보와 학습이 반복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3년 이하 거주자에 비해 4~6년 이하 거주자의 가치 이해가 유의하게 낮았지만 7~9년 응답자의 경우는 상승, 10년 이상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이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학습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표 IV-14 절차 민주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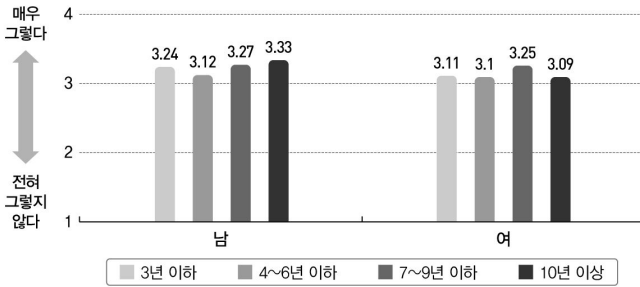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3.19(0.11)	3.27(0.13)	3.24(0.14)	3.50(0.19)	3.27(0.07)
40대	3.29(0.11)	2.97(0.19)	3.40(0.12)	2.64(0.14)	3.17(0.08)
50대 이상	2.97(0.20)	3.02(0.15)	3.10(0.16)	3.33(0.18)	3.09(0.09)
소계	3.15(0.08)	3.10(0.09)	3.26(0.08)	3.19(0.12)	3.18(0.04)
남	3.24(0.14)	3.12(0.18)	3.27(0.14)	3.33(0.19)	3.23(0.08)
여	3.11(0.15)	3.10(0.10)	3.25(0.09)	3.09(0.14)	3.16(0.05)
소계	3.15(0.08)	3.10(0.09)	3.26(0.08)	3.19(0.12)	3.18(0.04)

( ) : 표준오차

그림 IV-85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그래프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제도와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높은 편인 반면 반권위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남한 입국 초기에 학습되며 이후 큰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학습이 발생되더라도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위주로 발생하며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주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반권위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는 매우 완강하며,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주민 역시 표현의 자유 및 반권위주의에 대한 가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권위주의적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생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면에서 통일 이후 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높으며,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이라는 본 조사 결과는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9)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선거, 정당을 비롯한 민주주의 제도 전반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분석 확인 후 세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IV-15>와 <그림 IV-86>에 제시하였다.

문항 46: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항 47: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정당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항 48: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표 IV-15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이해도 예측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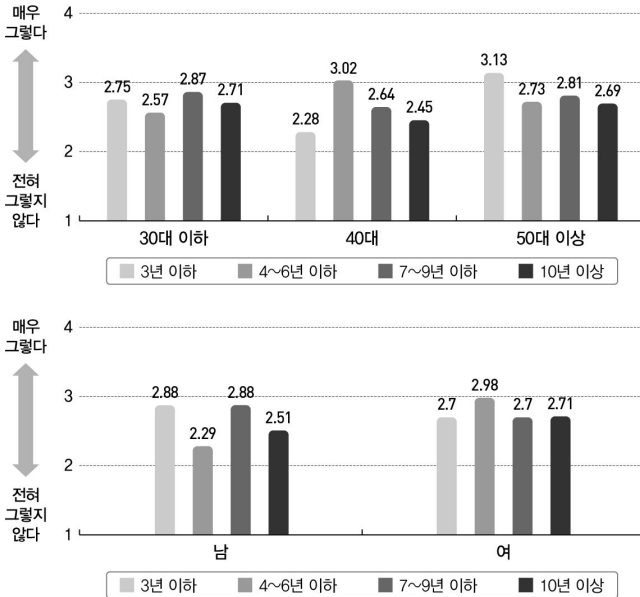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75(0.13)	2.57(0.17)	2.87(0.11)	2.71(0.20)	2.73(0.07)
40대	2.28(0.28)	3.02(0.21)	2.64(0.14)	2.45(0.24)	2.64(0.10)
50대 이상	3.13(0.17)	2.73(0.21)	2.81(0.15)	2.69(0.26)	2.84(0.10)
소계	2.76(0.11)	2.75(0.11)	2.76(0.08)	2.63(0.13)	2.74(0.05)
남	2.88(0.16)	2.29(0.17)	2.88(0.13)	2.51(0.23)	2.65(0.09)
여	2.70(2.76)	2.98(0.13)	2.70(0.10)	2.71(0.16)	2.78(0.06)
소계	2.76(0.11)	2.75(0.11)	2.76(0.08)	2.63(0.13)	2.74(0.05)

( ): 표준오차

북한이탈주민이 예측한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체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중앙치인 2.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북한주민들은 민주주의 체제 이해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과 남한 거주 기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3년 이하 거주자와 7~9년 이하 거주자는 4~6년 이하 거주자 및 10년 이상 거주자에 비해 북한주민들이 통일 이후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4~6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이 3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과 7~9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IV-86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래프



- I
- II
- III
- IV
- V

비록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40대의 경우 3년 거주 시까지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민주주의 제도에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4~6년 거주 응답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7~9년 응답자,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들은 4~6년 이하 거주한 응답자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응답을 보였다.

#### (10) 자본주의 생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후 자본주의와 관련된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다섯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6>에 제시하였다.

문항 50: 나는 남한의 전반적 경제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항 51: 나는 현재 남한에서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

문항 52: 나는 남한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문항 53: 나는 내가 번 수입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다.

문항 54: 한 직장, 한 자영업에서 1년 이상 일을 해보았다.

● 표 IV-16 자본주의 생활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58(0.11)	2.43(0.14)	2.63(0.13)	2.55(0.17)	2.55(0.07)
40대	2.14(0.19)	2.59(0.11)	2.45(0.13)	2.61(0.28)	2.45(0.08)
50대 이상	2.71(0.18)	2.70(0.14)	2.80(0.15)	2.75(0.23)	2.74(0.08)
소계	2.52(0.09)	2.57(0.08)	2.61(0.08)	2.63(0.13)	2.58(0.04)
남	2.57(0.14)	2.40(0.11)	2.49(0.15)	2.44(0.23)	2.47(0.08)
여	2.50(2.52)	2.65(0.10)	2.66(0.09)	2.76(0.14)	2.63(0.05)
소계	2.52(0.09)	2.57(0.08)	2.61(0.08)	2.63(0.13)	2.58(0.04)

( ) : 표준오차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통계적 변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성별, 연령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 생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비록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변수로 묶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다섯 개의 문항이 경제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문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별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IV-17>과 <그림 IV-8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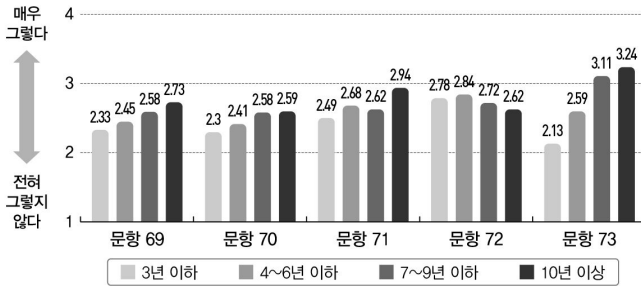
● 표 IV-17 자본주의 생활 문항별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문항 50	2.33(0.10)	2.45(0.10)	2.58(0.08)	2.73(0.11)	2.51(0.05)
문항 51	2.30(0.11)	2.41(0.12)	2.58(0.09)	2.59(0.15)	2.47(0.05)
문항 52	2.49(0.11)	2.68(0.10)	2.62(0.10)	2.94(0.13)	2.66(0.05)
문항 53	2.78(0.11)	2.84(0.12)	2.72(0.11)	2.62(0.15)	2.75(0.06)
문항 54	2.13(0.15)	2.59(0.16)	3.11(0.11)	3.24(0.15)	2.77(0.08)
소계	2.52(0.09)	2.57(0.08)	2.61(0.08)	2.63(0.13)	2.58(0.04)

( ) : 표준오차

I
II
III
IV
V

● 그림 IV-87 자본주의 생활에 대한 그래프



경제체제에 대한 지식을 질문한 문항 69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비록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자신의 취업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항 70의 경우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남성(평균: 2.72)이 여성(평균: 2.35)에 비해 취업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문항 71의 경우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남한 입국 후 9년까지는 취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거주자의 자신감은 9년 이하 거주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았다. 생활비 수준에 대한 문항 72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근로 경험에 관한 문항 73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연령의 효과가 있었다.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정적 근로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기술 및 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취업 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승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정착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남한 사회화를 거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위한 직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착 초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경제체제에 대한 지식과 생활비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특히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1)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을 ‘노동과 경쟁’, 두 번째 요인을 ‘분배 정의’, 세 번째 요인을 ‘능력 중심 사회’, 네 번째 요인을 ‘사유재산제도’로 명명하였다. 네 개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은 아래 두 문항이다.

문항 68: 노동조합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항 70: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 〈노동과 경쟁〉

노동과 경쟁을 구성하는 문항은 다음 5개 문항이며 평균과 표준오차는

I
II
III
IV
V

<표 IV-18>, <그림 IV-88>에 제시하였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주효과 분석 결과 30대 미만과 40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40대와 50대 이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와 경쟁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이해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문항 55: 학교에서나 직장,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사람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문항 57: 자본주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문항 58: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항 59: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항 63: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IV-18 노동과 경쟁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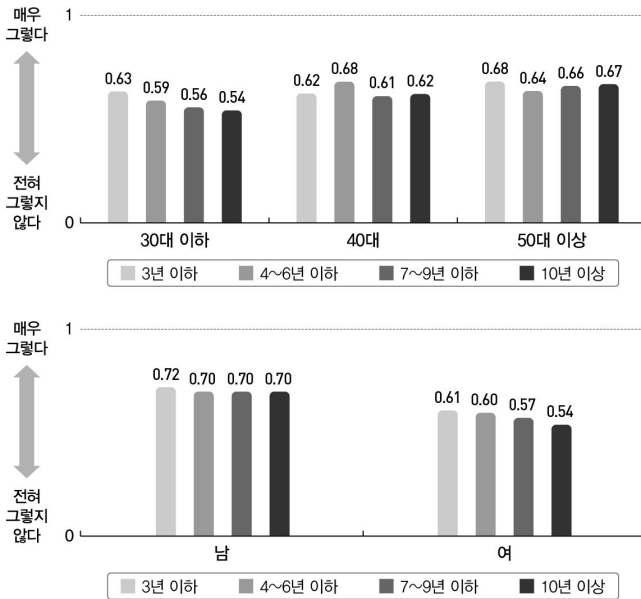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0.63(0.06)	0.59(0.05)	0.56(0.05)	0.54(0.06)	0.59(0.03)
40대	0.62(0.07)	0.68(0.05)	0.61(0.04)	0.62(0.10)	0.63(0.03)
50대 이상	0.68(0.05)	0.64(0.05)	0.66(0.05)	0.67(0.06)	0.66(0.03)
소계	0.64(0.04)	0.63(0.03)	0.61(0.03)	0.61(0.04)	0.62(0.02)
남	0.72(0.07)	0.70(0.05)	0.70(0.04)	0.70(0.07)	0.70(0.03)
여	0.61(0.04)	0.60(0.04)	0.57(0.03)	0.54(0.05)	0.58(0.02)
소계	0.64(0.04)	0.63(0.03)	0.61(0.03)	0.61(0.04)	0.62(0.02)

( ) : 표준오차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경쟁 체제에 대한 이해는 평균 이상이다. 즉 북한 체제를 떠나 남한에 입국한 초기에도 노동의 가치와 경쟁 체제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항 89의 경우 80%이상이 찬성하였다.

●그림 IV-88 노동과 경쟁에 대한 그래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문항별로 분석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가치의 변화는 없었지만 문항 75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자의 응답이 9년 이하의 응답자에 비해 찬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남한 거주 기간이 9년 이하인 응답자들은 평균 74%의 찬성을 나타냈지만 10년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58%만이 동의하였다. 남한사회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자본주의의 약점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I
II
III
IV
V

### 〈분배 정의〉

분배 정의는 다음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19>, <그림 IV-89>에 제시하였다.

문항 62: 전문적 기술이 없는 노동자(청소부, 식당 주방일, 일용직 노동자 등)가 받는 월급은 자신들의 능력에 비추어 봤을때 적절하다.

문항 65: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문항 67: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문항 69: 자본주의 기업과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당하게 내고 있다.

표 IV-19 분배 정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0.43(0.04)	0.33(0.05)	0.22(0.04)	0.29(0.06)	0.32(0.02)
40대	0.35(0.08)	0.25(0.06)	0.26(0.05)	0.47(0.11)	0.31(0.03)
50대 이상	0.35(0.06)	0.38(0.06)	0.31(0.04)	0.20(0.06)	0.32(0.03)
소계	0.39(0.03)	0.32(0.03)	0.27(0.02)	0.31(0.05)	0.32(0.02)
남	0.46(0.05)	0.33(0.05)	0.37(0.05)	0.40(0.08)	0.38(0.03)
여	0.36(0.39)	0.32(0.04)	0.22(0.03)	0.25(0.05)	0.28(0.02)
소계	0.39(0.03)	0.32(0.03)	0.27(0.02)	0.31(0.05)	0.3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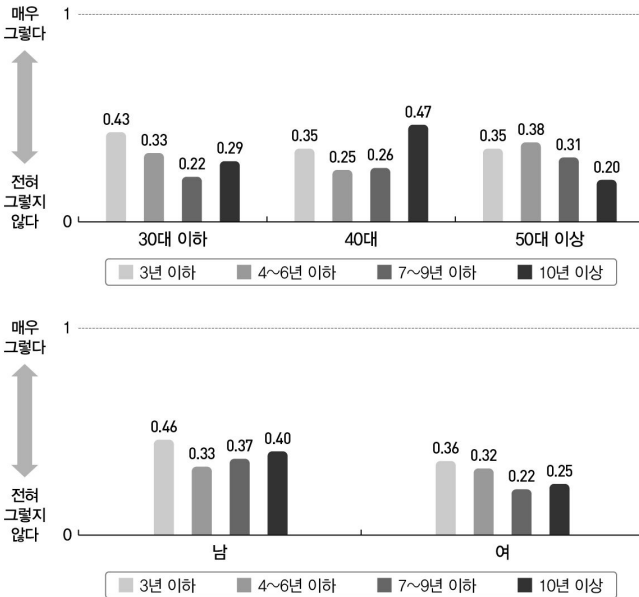
( ): 표준오차

분배정의에 대해서는 성별의 주효과, 남한 거주 기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남한 거주 기간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먼저 성별의 주효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능력 위주의 분배 정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남한 입국 초기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동의하는 정도에 비해 4~6년 이하 거주자가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후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한 입국 후 7년까지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이후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남한 입국 후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30대 이하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40대의 경우 입국 후 9년까지는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89 분배 정의에 대한 그래프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본주의적 분배 정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 분배 정의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능력중심사회〉

능력 중심 사회는 다음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20>과 <그림 IV-90>에 제시하였다.

문항 56: 노동자의 임금은 능력과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문항 60: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능력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문항 61<sup>210)</sup>: 개인소유제도가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문항 64<sup>211)</sup>: 공장을 경영할 때 중요한 결정은 경영자가 내려야 한다.

표 IV-20 능력 중심 사회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0.61(0.03)	0.54(0.05)	0.52(0.04)	0.57(0.07)	0.56(0.02)
40대	0.57(0.07)	0.51(0.05)	0.42(0.04)	0.50(0.09)	0.47(0.03)
50대 이상	0.54(0.03)	0.49(0.04)	0.51(0.05)	0.52(0.05)	0.51(0.02)

210) 분석에 대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항과 점수를 변환하였다. 원 문항은 ‘개인소유제도가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할 것이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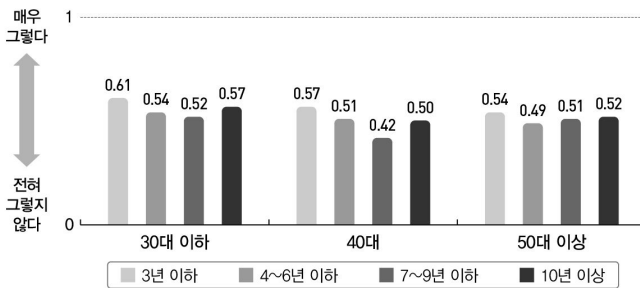
211) 분석에 대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항과 점수를 변환하였다. 원 문항은 ‘공장을 경영할 때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이다.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소계	0.58(0.02)	0.51(0.03)	0.48(0.03)	0.53(0.04)	0.52(0.01)
남	0.65(0.03)	0.58(0.05)	0.61(0.04)	0.62(0.06)	0.61(0.02)
여	0.55(0.58)	0.48(0.03)	0.42(0.03)	0.48(0.05)	0.47(0.02)
소계	0.58(0.02)	0.51(0.03)	0.48(0.03)	0.53(0.04)	0.5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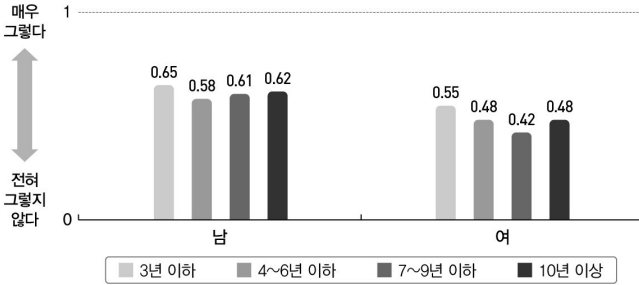
( ) : 표준오차

전반적으로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동의의 중앙치는 0.5점 내외로 분배 정의에 대한 동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동의가 유의하게 높았다. 비록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30대 이하의 동의 정도가 4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7~9년 이하 거주자의 동의가 3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능력 중심의 자본주의 가치 체계에 대한 동의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IV-90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그래프



I  
II  
III  
IV  
V



###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에 대한 요인은 단일 문항으로 문항 76인 ‘개인소유 기업제도는 전반적으로 공평하며 효율적인 제도이다’이다. <표 IV-21>과 <그림 IV-91>에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표 IV-21 사유재산제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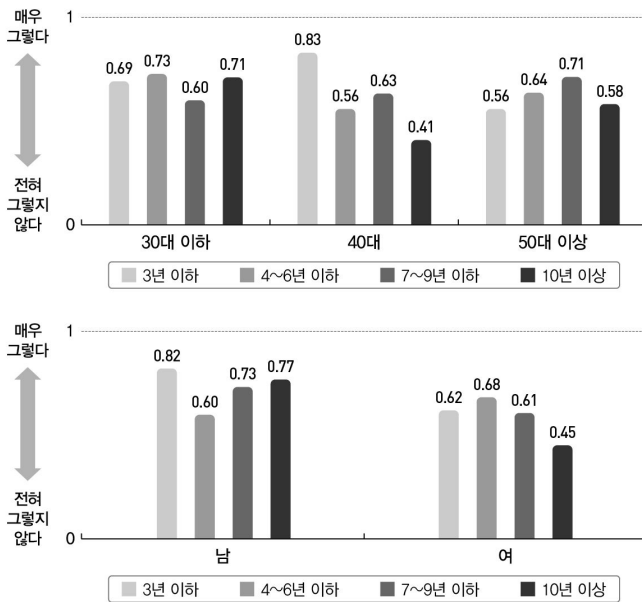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0.69(0.07)	0.73(0.07)	0.60(0.08)	0.71(0.11)	0.68(0.04)
40대	0.83(0.07)	0.56(0.10)	0.63(0.06)	0.41(0.15)	0.61(0.05)
50대 이상	0.56(0.08)	0.64(0.08)	0.71(0.07)	0.58(0.12)	0.64(0.04)
소계	0.68(0.05)	0.65(0.05)	0.65(0.04)	0.58(0.07)	0.65(0.02)
남	0.82(0.07)	0.60(0.10)	0.73(0.08)	0.77(0.10)	0.72(0.04)
여	0.62(0.08)	0.68(0.05)	0.61(0.05)	0.45(0.10)	0.61(0.03)
소계	0.68(0.05)	0.65(0.05)	0.65(0.04)	0.58(0.07)	0.65(0.02)

( ) : 표준오차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동의는 자본주의 가치 체계의 네 요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의 주효과, 남한 거주 기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남한 거주 기간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먼저 남성의 동의 정도가 여성의 동의 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남한 거주 기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을 보면, 30대 미만 응답자와 5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동의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40대의 경우 남한 입국 초기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0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 그림 IV-91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그래프



성별과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남한 입국 초기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이지만 4~6년 거주 동안 급격히 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다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의 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한 거주 9년까지는 사유재산제도의 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에 차이가 없었지만 10년 이후 거주자의 경우 동의의 비율이

- I
- II
- III
- IV
- V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12)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이해 정도 예측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래 4문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짐을 확인하였다. 네 문항의 평균과 표준 오차는 <표 IV-22>와 <그림 IV-92>에 제시하였다.

문항 71: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문항 72: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항 73: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항 74: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기대했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 표 IV-22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이해 정도 예측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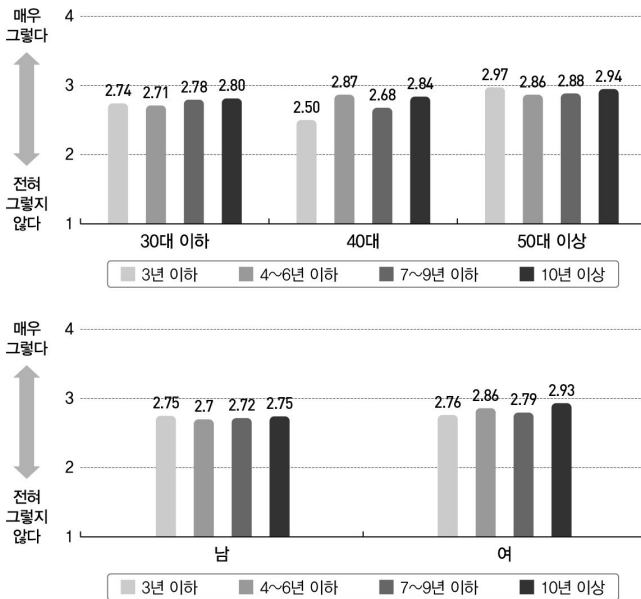
구분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10년 이상	소계
30대 이하	2.74(0.08)	2.71(0.11)	2.78(0.10)	2.80(0.12)	2.75(0.05)
40대	2.50(0.15)	2.87(0.09)	2.68(0.10)	2.84(0.21)	2.72(0.06)
50대 이상	2.97(0.14)	2.86(0.11)	2.88(0.11)	2.94(0.19)	2.90(0.06)
소계	2.75(0.07)	2.81(0.06)	2.77(0.06)	2.86(0.10)	2.79(0.03)
남	2.75(0.09)	2.70(0.08)	2.72(0.11)	2.75(0.17)	2.73(0.06)
여	2.76(2.75)	2.86(0.08)	2.79(0.07)	2.93(0.11)	2.82(0.04)
소계	2.75(0.07)	2.81(0.06)	2.77(0.06)	2.86(0.10)	2.79(0.03)

( ) : 표준오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들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이해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평균인 2.79점은 중앙치인 2.5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삼원 변량 분석 결과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자본주의 이해에 대한 우려는 성별, 남한 거주 기간,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림 IV-92 통일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본주의 이해정도 예측에 대한 그래프



### (13) 요약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당위성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였다. 90%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한 거주 기간, 성별, 연령대의 편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 위협이 없고 남북 왕래가 자유

I  
II  
III  
IV  
V

로운 상태, 즉 평화적 분단 고착 상태가 된다면 통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관찰된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열망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한 선호는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한 거주 기간은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40대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이 4~6년을 기준으로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의 당위성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해 절대적 반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통일정책 및 통일 조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과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는 90%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분단 고착에 대해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응답 결과를 남한 국민 전체의 태도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통일 의식 조사는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의 당위성에 국한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의 틀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평화적 분단 고착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통일 관련 정보의 적극적 정보탐색, 기부금,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통일 준비를 위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일 관련 행동 요소들에 성별, 연령대, 남한 거주 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일의 이익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은 성별의 효과가 뚜렷하

였다. 통일의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 남성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인 정도와 북한에 이익인 정도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통일이 북한에 주는 이익이 남한에 주는 이익보다 크다고 응답하였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에게 주는 이익 역시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이 통일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한주민 대비 북한주민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통일이 응답자 본인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남성의 기대가 여성의 기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0대, 그리고 여성의 경우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4~6년을 기점으로 하락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30대 이하, 50대 이상, 그리고 남성의 경우 통일에 대한 기대는 남한 거주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남한에 입국한 초기에는 민족 동질성,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등 당위적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쟁위협 제거, 경제 발전 등과 같은 도구적 이유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30대 이하, 50대 이상의 세대, 그리고 여성 응답자에게서 뚜렷이 관찰되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통일의 당위적 이유를 선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지만 100점 환산점으로 본다면 67점 수준이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만족도가 30대 이하, 그리고 40대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30대 이하와 40대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는 10년 이후 응답자에게서 나타났다. 남한 입국 후 9년까지 삶의 만족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10년 이후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I
II
III
IV
V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 초기부터 남한사회에 동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체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 연령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 역시 미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남한사회에 동화되어 남한주민들과 교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남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의 이질성 극복에 대해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소수자이며, 다양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른 응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주민들이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의식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민주주의적 정치체계에 대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 정치체제, 국회의원의 명단을 포함한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 문제 해결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응은 남한 거주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응답은 남한 입국 후 4년 이후에 뚜렷해졌다. 3년 이하 거주자의 응답보다 4~6년 이하 응답자의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으며,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40대 이상 응답자에게만 해당되며, 30대의 경우 남한 입국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여성 역시 4~6년 이하 거주자의 적응도가 3년 이하 응답자보다 높았으며 이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응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당제도와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높은 편인 반면, 반권위주의와 표

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가치는 남한 입국 초기에 학습되며 이후 큰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학습이 발생되더라도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위주로 발생하며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감도가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 체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민주주의 가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성별, 연령대별, 남한 거주 기간별로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무선적 경향에 가까운 점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결과는 민주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반권위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는 매우 완강하며,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주민 역시 표현의 자유 및 반권위주의에 대한 가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와 반권위주의적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생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면에서 통일 이후 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높으며,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이라는 본 조사 결과는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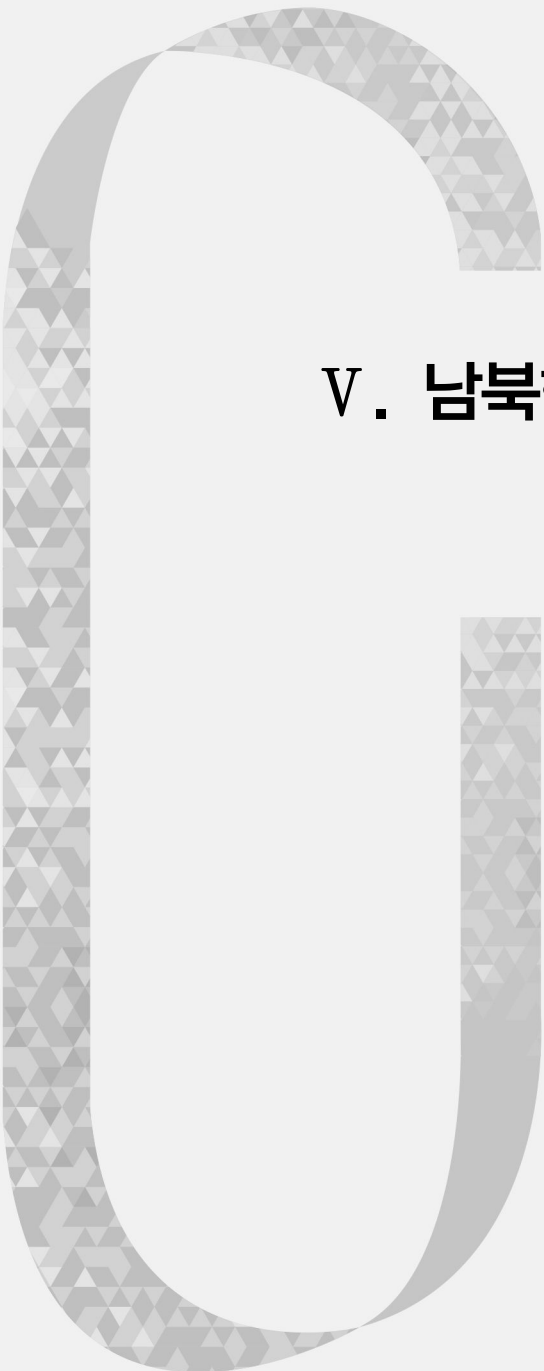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은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긍정적인 면은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안정적 근로 경험이 증가한 것과, 취업과 관련된 기술 및 교육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교육을 통한 지식 획득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의 취업 능

I
II
III
IV
V

력에 대한 평가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정착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남한사회화를 거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위한 직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착 초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체제에 대한 지식과 생활비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가치 중 ‘노동의 가치와 경쟁을 통한 발전’,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 재산제도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나타내었지만 ‘능력에 기반을 둔 분배 정의’에는 매우 큰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노동의 가치와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치는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적 생활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비해 실질적 취업 능력은 향상하고 있지 않은 점, 자신의 노동 수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성별, 연령대, 남한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V. 남북한 제도통합 추진 방향





현재 통일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통일준비, 제도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상황,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채 기계적인 통합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도통합과정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로 통합할 것인지 통합의 내용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도로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이라는 당사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제도통합은 북한요소를 바탕에 둔 수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미시적으로 준비하되, 통합방안을 시행하는 통합추진전략은 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특성, 북한주민들의 인식 등 북한의 수용 역량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합 당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합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이행단계에 따라 남북한의 제도가 통합되는 데 따른 북한의 수용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당제 정당제도와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의 경우 남성의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당제도와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높은 반면 반권위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감도가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 체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민주주의 가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반권위주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는 매우 완강하며,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주민 역시 표현의 자유 및 반권위주의에 대한 가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와 반권위주의적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생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면에서 통일 이후 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높으며,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이라는 본 조사 결과는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제도 통합의 경우 초기조건, 이행전략, 남한 당국의 역할 등을 고려하되, 정치적 거래비용을 낮추고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추진전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특히 통합 당시의 초기조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통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체제 이행이 전개되도록 대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체제의 경우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해 상당한 정도 우리 체제로 수렴되도록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도 개혁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는 한편, 제도통합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

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면 제도통합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남북한 주민 대다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제도통합을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국가가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통일의 방식과 통일된 국가의 비전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가치 중 ‘노동의 가치와 경쟁을 통한 발전’,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재산제도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나타내었지만 ‘능력에 기반을 둔 분배 정의’에는 매우 큰 반감을 나타냈다. ‘능력 중심 사회’, 그리고 ‘사회재산제도의 효율성’, ‘능력에 기반을 둔 분배 정의’는 남한 거주 기간에 따라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적 생활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비해 실질적 취업 능력은 향상하고 있지 않은 점, 자신의 노동 수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제도와 달리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적 평등관 속에서 생활한 북한주민들도 경쟁과 능력, 분배 정의 등에 대해 공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쟁과 능력, 분배정의 등에 대해 공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세부 통합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가치 부여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

의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합해 나갈 것인지를 핵심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제도의 통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교육을 통한 지식획득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의 취업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한국에서 직업 교육을 실시할 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초창기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 아래 사회화를 거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위한 차별화된 직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합 당시 북한주민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통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들이 어떤 비공식 제도들을 통해 생활상의 필요를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 농장 등은 어떤 제도들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들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이해력,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철저히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만 어떤 제도부터 어떤 순서로 남북한의 제도가 통합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의 내용과 이행 방안 못지않게 북한주민들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참여가 남북한 제도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만족도와 정체성 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북한주민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가치와 능동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자율적인 변혁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sup>212)</sup> 이와 관련하여 제도통합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의 ‘효율성’과 더불어 북한주민을 주체화하는 노력도 병행 및 조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남한주민과의 유대성은 7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체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의 이질성 극복에 대해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소수자이며, 다양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른 응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 이후 정치적 차별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적응·부적응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비교할 때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을 추진할 때 정체성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이행계획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력은 1차적으로 통일에 대한 북한주

212)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정책과학연구』, 15권 1호 (2005), pp. 105~106.

I
II
III
IV
V

민의 우호적 인식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정부, 북한주민들이 남한 정부 및 남한주민보다 더 큰 통일의 수혜를 볼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통일편익이 북한에 더 큰 수혜를 줄 것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성장 동력을 넘어 북한주민들에게도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의 이익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은 성별의 효과가 뚜렷하였다. 통일의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 남성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인 정도와 북한에 이익인 정도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통일이 북한에 주는 이익이 남한에 주는 이익보다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남화 및 통합 전략을 수립할 때 성별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합연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수용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제3국에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남북한 제도 통합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수용력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주민의 수용력, 남한주민의 수용력을 별도로 조사하여 분절화되는 현상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식의 관점에서 남한의 수용력과 북한의 수용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조사가 전문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수용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보다 정교하게 개발하고 이러한 설문지를 다양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남북한 제도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한 정착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리 온 통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화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북한 제도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개별적 차원의 적응을 넘어 북한주민 전체로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화한 연구로 머물기 보다는 남북한 통일의 과제들과 연결하여 해당 분야별 혹은 주제별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특성 및 적응상의 특성들을 북한주민 및 북한사회와 연결성을 갖고 분석 및 해석하는 등의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인 남한체제 편입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제도통합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경우 연령, 남한 정착 기간, 계층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도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도통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응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체제 편입과정에서 남한 체제를 이해하고 통합되는 기간의 문제가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착 기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고, 남한주민들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I

II

III

IV

V

그런데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기간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정 주제별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정착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남한 정착 기간을 중요한 영향변수로 인식하고 정착 시기별로 고려되어야 할 적응 이슈들에 대한 분석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통합이라는 관점에서 5년 이상 거주자 혹은 10년 이상의 거주 등 정착시기별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각 분야 정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 경제제도 통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남한 경제체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와 더불어 긍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연구의 경향이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특성을 강점 관점에서 분석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남북한 경제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의 인적 역량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진 약점의 측면보다는 강점의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통일준비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의 역량에 대한 분석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에 시사점이 있다. 앞으로 남북한 제도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강점을 접목한 통합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식의 측면에서 남북한 제도통합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체성 형성이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체성 형성과 관련 연구, 특히 공동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의 당위성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평화적 분단 고착에 대해 절대적 반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통일정책 및 통일 조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기존 통일 의식 조사는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의 당위성 국한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의 틀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평화적 분단 고착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이식 방식을 통한 제도통합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동서독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식을 통한 제도통합과 사회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도통합과 사회통합의 효율적 연계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 참고문헌

### 1. 단행본

- 21세기 정치연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할 시간』. 고양: 개마고원, 2013.
-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지도부, 당의 지도력 그리고 정치체제』.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2.
- 김창희. 『남북관계와 한반도: 대결과 갈등에서 신뢰의 장으로』. 서울: 삼우사, 2014.
- 로이 매크리디스, 김강녕 옮김. 『현대정치체제론: 유형과 제도』. 부천: 인간사랑, 1990.
- 박명규 외. 『2014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_\_\_\_\_.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해남, 2004.
- \_\_\_\_\_.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박형중·이승렬.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 논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서동만저자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 서울: 창비, 201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숨페터 저, 이상구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서울: 삼성출판사, 1990.
- 스티글리츠 저, 강신욱 역.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신고전학과 시장이론과 시장사회주의론 비판』. 파주: 한울, 2003.
- 이교덕 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순목·이봉건. 『설문·시험·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서울: 학지사, 1995.
- 이중승. 『표준화 심리검사』.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 장 자크 루소, 권기도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주)웅진씽크빅, 2015.
-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4』.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파주: 나남, 2006.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명순희 옮김. 『대실패: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칼 요아킴 프리드리히, 최운지 역. 『全體主義獨裁政治論』. 서울: 정임사, 1972.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2010.
- 토마스 홉스, 최진원 옮김.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2009.
-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2』. 서울: 한길사, 2006.
-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후안 린츠 & 알프레드 스테판, 김유남 외 옮김.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서울: 삼영사, 1999.
- KBS 남북협력기획단 편. 『2012년 국민통일외식조사』. 서울: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Meridian Books, 1960.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MacMillan, 1990.
- Diamond, Larry. *The Spirit of Democrac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8.
-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5*.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5.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Furubotn, Eirik Grundtvig, and Rudolf Richter. *Institutions and Economic Theory: The Contribution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 Komai, Já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London: Bouldern, 2000.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Macridis, Roy C. *Modern Political Regim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McFaul, Michael, Nikolai Petrov and Andrei Ryabov. *Between Dictatorship and Democrac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4.
- Petty, Richard E. and Jon A. Krosnick.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xford: Routledge, 2014.
- Robinson, John P., Phillip R. Shaver, and Lawrence S. Wrightsman.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1999.
- Roland, Gérar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st edi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2.

## 2. 논문

- 강동완·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권만학.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붕괴와 개혁.”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2002.
-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2009.
- \_\_\_\_\_.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북한, 베트남 사례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7.
- 김금미.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3호, 2011.
- 김병연.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통일 유형.” 『경제논집』. 48권 1호, 2009.
-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비교경제연구』. 17권 1호, 2010.
- \_\_\_\_\_. “중아시아에 있어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과 특성: 경제 성과와의 관련성.” 『비교경제연구』. 18권 1호, 2011.
- \_\_\_\_\_. “체제전환기 러시아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 『비교경제연구』. 16권 1호, 2009.
- 김종욱.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동학(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제13권 2호, 2003.
- 김진무. “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

1호, 2014.

- 김재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0집, 2010.
- 김태환·이영선.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거래비용적 접근: 탈사회주의의 경로 유형과 북한의 제약된 개혁.” 한국비교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3.
-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1989.
- 박재복. “유럽연합의 중·동유럽 정책과 EU 확대 현황.” 『세계지역연구논총』. 17집, 2001.
- 박형중. “북한 경제 기본 체계, 그리고 그 변화 현황과 전망.” 미간, 2014.4.16.
- 시공영호. “정책과 공식제도의 비공식적 기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5권 3호, 2006.
- 서동주. “러시아 푸틴 정부의 정치개혁: 집권 1기 평가와 2기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4집 3호, 2004.
- 서창배. “중-홍콩/마카오 CEPA의 경제적 효과.” 『중국학』. 40집, 2011.
- 송정호·이상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권력구조 분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5.10.13.
- 신영재. “러시아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모델 연구.” 『러시아 지역연구』. 2권, 1998.
- 오승은. “바뀐 체제, 바뀌지 않은 생계 수단.” 『동유럽발칸연구』. 36권, 2013.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정책과학연구』. 15권 1호, 2005.
-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47권 1호, 2013.
- 이기동. “김정은 유일지도체계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2호, 2012.
- 이상근. “남북한 지역 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통일연구』. 15권 2호, 2011.
- 임영진.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 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3호, 2012.
- 장용훈. “노동당의 기능 강화와 김정은 체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32호, 2013.
- 전성홍.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회고와 전망: 주요 영역과 추동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2001.
- 정영태. “민주주의와 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민주주의 강의 3: 제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 정일용.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경제발전연구』, 13권 1호, 2007.
- 정정길.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권 1호, 2002.
- 정해구. “민주주의 역사와 그 궤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민주주의 강의 1: 역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 지광석·김태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감.” 『한국행정학보』, 44권 2호, 2010.
- 진승권.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 차창훈.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서울: 박영사, 2015.
-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2014.
-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하용이. “홍콩의 중국 귀속 10년: 경제 일체화 통해 ‘세계 비즈니스센터’ 유지.” 『Chindia Journal』, 통권11호, 2007.
- 하태수.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행정논총』, 40권 1호, 2002.

함택영·김정. “김정일 체제하 북한의 장래.”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황준성·황대연.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거래비용적 분석.” 『질서경제저널』.  
9권 1호, 2009.

Brzezinski, Zbigniew.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National Interest*.  
no. 33. 1993.

Chong, Dennis, Herbert McClosky, and John Zaller. “Patterns of Support  
for Democratic and Capitalist Values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4. 1983.

Dewatripont, Mathias and Gérard Roland. “The Design of Reform  
Package under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5. 1995.

---

\_\_\_\_\_. “Transition as a Process of  
Large Scale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s in Economic  
Theory*. Edited by David Kreps and Kenneth Wall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Diener, Ed, Robert A. Emmons, Randy J. Larsen, and Sharon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1985.

Fischer, Stanley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IMF Working Paper 00/30. 2003.

Fish, M. Steven. “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 In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Edited by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Kornai, János.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and Does Not Mea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 2000.

Nathan, Andrew J. “China’s Political Trajectory: What are the Chinese



Saying?" In *China's Changing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Edited by Cheng Li.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Zettelmeyer, Jeromin. "The Uzbeki Growth Puzzle." IMF Working Paper  
98/133. September 1998.

### 3. 기타

『국민일보』.

『연합뉴스』.

『위키백과』.

『조선닷컴』.

『조선신보』.

『조선통신』.

『프리미엄조선』.

『프레시안』.

『한겨레』.

주미안마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mmr.mofa.go.kr/>>.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

The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5-09, 2015.4.29.

송정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분단 70년, 북한체제의 변화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5.6.26.).

Arrow, Kenneth.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Issues Pertinent  
to the Choice of Market versus Nonmarket Allocation."  
<<http://msuweb.montclair.edu/>>.

## 부록

### 1. 조사설계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거주한 경험을 통해 삶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이를 통해 남북한 제도통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나.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남한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 (2) 표 본 수: 240명
- (3) 조사방법: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
- (4) 조사 시기: 2015년 9월 15일~9월 28일
- (5)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Structured Questionnaire)
- (6) 표본추출방법: 성/연령대/남한 거주 기간 중심

다.  
조사내용

- (1) 통일에 대한 인식
- (2) 삶의 만족도, 남한 정체성 및 민족 정체성
- (3)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
- (4) 경제제도에 대한 인식

## 라. 응답자 특성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전체		240	100.0
성별	남	79	32.9
	여	161	67.1
연령대	20대 이하	38	15.8
	30대	52	21.7
	40대	74	30.8
	50대	52	21.7
	60대 이상	24	10
결혼 상태	미혼	56	23.3
	기혼	112	46.7
	이혼, 사별, 동거 등	72	30
탈북 이후 생활 기간	5년 이하	72	30
	6~10년 이하	84	35
	11~15년 이하	37	15.4
	16년 이상	47	19.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22.9
	4~6년 이하	63	26.3
	7~9년 이하	85	35.4
	10년 이상	37	15.4
북한 거주 시 학력	중졸 이하	58	24.3
	고졸	111	46.4
	대졸 이상	70	29.3

## 2. 조사 결과 집계표<sup>213)</sup>

문1)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시례수 (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40	1.3	2.1	7.5	89.1	3.3	96.7	3.85	94.84	
성별	남성	79	1.3	6.4	5.1	87.2	7.7	92.3	3.78	92.73
	여성	161	1.2	0.0	8.7	90.1	1.2	98.8	3.88	95.86
연령	20대 이하	38	2.6	2.6	7.9	86.8	5.3	94.7	3.79	92.98
	30대	52	1.9	1.9	5.8	90.4	3.8	96.2	3.85	94.87
	40대	74	1.4	2.7	8.1	87.8	4.1	95.9	3.82	94.14
	50대	52	0.0	2.0	5.9	92.2	2.0	98.0	3.90	96.73
	60대 이상	24	0.0	0.0	12.5	87.5	0.0	100.0	3.88	95.83
결혼 상태	미혼	56	1.8	3.6	8.9	85.7	5.4	94.6	3.79	92.86
	기혼	112	1.8	0.9	7.2	90.1	2.7	97.3	3.86	95.19
	이혼, 사별 등	72	0.0	2.8	6.9	90.3	2.8	97.2	3.88	95.8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1.4	2.8	94.4	2.8	97.2	3.90	96.76
	6~10년 이하	84	2.4	2.4	11.9	83.3	4.8	95.2	3.76	92.06
	11~15년 이하	37	0.0	5.6	2.8	91.7	5.6	94.4	3.86	95.37
	16년 이상	47	0.0	0.0	10.6	89.4	0.0	100.0	3.89	96.45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0.0	0.0	98.2	1.8	98.2	3.95	98.18
	4~6년 이하	63	0.0	3.2	7.9	88.9	3.2	96.8	3.86	95.24
	7~9년 이하	85	2.4	2.4	8.2	87.1	4.7	95.3	3.80	93.33
	10년 이상	37	0.0	2.8	16.7	80.6	2.8	97.2	3.78	92.59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1.7	6.9	89.7	3.4	96.6	3.84	94.83
	고졸	111	1.8	0.9	7.2	90.1	2.7	97.3	3.86	95.19
	대졸 이상	70	0.0	4.3	8.7	87.0	4.3	95.7	3.83	94.20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0.9	1.9	6.6	90.6	2.8	97.2	3.87	95.60
	낮음	132	1.5	2.3	8.4	87.8	3.8	96.2	3.82	94.1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5.9	11.8	82.4	5.9	94.1	3.76	92.16
	중층	141	2.1	1.4	6.4	90.0	3.6	96.4	3.84	94.76
	상층	82	0.0	2.4	8.5	89.0	2.4	97.6	3.87	95.53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4.8	0.0	90.5	9.5	90.5	3.76	92.06
	중층	125	1.6	1.6	8.1	88.7	3.2	96.8	3.84	94.62
탈북전 남한정보	상층	93	0.0	2.2	8.6	89.2	2.2	97.8	3.87	95.70
	알고 있었음	124	1.6	3.2	10.5	84.7	4.8	95.2	3.78	92.74
정치 이념	모르고 있었음	115	0.9	0.9	4.3	93.9	1.7	98.3	3.91	97.10
	진보	78	0.0	5.1	2.6	92.3	5.1	94.9	3.87	95.73
	중도	96	2.1	1.0	8.3	88.5	3.1	96.9	3.83	94.44
탈북후 경제 계층	보수	60	0.0	0.0	13.6	86.4	0.0	100.0	3.86	95.48
	하층	202	0.5	2.0	7.0	90.5	2.5	97.5	3.88	95.85
	중층	35	2.9	2.9	11.4	82.9	5.7	94.3	3.74	91.43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213) 반올림으로 인해 본문의 그래프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문2) 경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는 것이 좋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0.4	2.1	15.6	81.9	2.5	97.5	3.79	92.97	
성별	남성	79	0.0	3.8	12.8	83.3	3.8	96.2	3.79	93.16
	여성	161	0.6	1.3	17.0	81.1	1.9	98.1	3.79	92.87
연령	20대 이하	38	0.0	0.0	18.4	81.6	0.0	100.0	3.82	93.86
	30대	52	1.9	5.8	21.2	71.2	7.7	92.3	3.62	87.18
	40대	74	0.0	2.7	13.7	83.6	2.7	97.3	3.81	93.61
	50대	52	0.0	0.0	13.7	86.3	0.0	100.0	3.86	95.42
	60대 이상	24	0.0	0.0	8.7	91.3	0.0	100.0	3.91	97.10
결혼 상태	미혼	56	0.0	1.8	16.1	82.1	1.8	98.2	3.80	93.45
	기혼	112	0.9	3.6	12.6	82.9	4.5	95.5	3.77	92.49
	이혼, 사별 등	72	0.0	0.0	20.0	80.0	0.0	100.0	3.80	93.3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0.0	0.0	9.7	90.3	0.0	100.0	3.90	96.76
	6~10년 이하	84	1.2	2.4	20.2	76.2	3.6	96.4	3.71	90.48
	11~15년 이하	37	0.0	5.7	20.0	74.3	5.7	94.3	3.69	89.52
	16년 이상	47	0.0	2.2	13.0	84.8	2.2	97.8	3.83	94.20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0.0	7.4	92.6	0.0	100.0	3.93	97.53
	4~6년 이하	63	0.0	3.2	11.3	85.5	3.2	96.8	3.82	94.09
	7~9년 이하	85	1.2	2.4	21.2	75.3	3.5	96.5	3.71	90.20
	10년 이상	37	0.0	2.8	22.2	75.0	2.8	97.2	3.72	90.7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0.0	0.0	17.5	82.5	0.0	100.0	3.82	94.15
	고졸	111	0.9	2.7	18.0	78.4	3.6	96.4	3.74	91.29
	대졸 이상	70	0.0	2.9	10.3	86.8	2.9	97.1	3.84	94.61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0.0	1.0	18.1	81.0	1.0	99.0	3.80	93.33
	낮음	132	0.8	3.1	13.8	82.3	3.8	96.2	3.78	92.56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11.8	11.8	76.5	11.8	88.2	3.65	88.23
	중층	141	0.7	0.7	16.5	82.0	1.4	98.6	3.80	93.28
	상층	82	0.0	2.5	14.8	82.7	2.5	97.5	3.80	93.41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5.0	10.0	85.0	5.0	95.0	3.80	93.33
	중층	125	0.8	2.4	17.7	79.0	3.2	96.8	3.75	91.67
	상층	93	0.0	1.1	14.1	84.8	1.1	98.9	3.84	94.56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0.0	1.6	19.5	78.9	1.6	98.4	3.77	92.41
	모르고 있었음	115	0.9	2.6	11.4	85.1	3.5	96.5	3.81	93.57
정치 이념	진보	78	0.0	3.9	7.8	88.3	3.9	96.1	3.84	94.80
	중도	96	1.1	1.1	20.0	77.9	2.1	97.9	3.75	91.58
	보수	60	0.0	1.7	18.6	79.7	1.7	98.3	3.78	92.65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0.0	2.0	14.0	84.0	2.0	98.0	3.82	94.00
	중층	35	2.9	2.9	20.6	73.5	5.9	94.1	3.65	88.23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3) 남북한 간 전쟁중지, 자유로운 왕래,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41.8	14.2	21.8	22.2	56.1	43.9	2.24	41.42	
성별	남성	79	57.7	15.4	12.8	14.1	73.1	26.9	1.83	27.78
	여성	161	34.2	13.7	26.1	26.1	47.8	52.2	2.44	48.03
연령	20대 이하	38	57.9	21.1	5.3	15.8	78.9	21.1	1.79	26.32
	30대	52	40.4	17.3	28.8	13.5	57.7	42.3	2.15	38.46
	40대	74	39.2	10.8	24.3	25.7	50.0	50.0	2.36	45.50
	50대	52	39.2	9.8	23.5	27.5	49.0	51.0	2.39	46.40
	60대 이상	24	33.3	16.7	20.8	29.2	50.0	50.0	2.46	48.61
결혼 상태	미혼	56	55.4	25.0	8.9	10.7	80.4	19.6	1.75	25.00
	기혼	112	43.2	8.1	24.3	24.3	51.4	48.6	2.30	43.24
	이혼, 사별 등	72	29.2	15.3	27.8	27.8	44.4	55.6	2.54	51.3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46.5	14.1	19.7	19.7	60.6	39.4	2.13	37.56
	6~10년 이하	84	40.5	16.7	16.7	26.2	57.1	42.9	2.29	42.86
	11~15년 이하	37	43.2	13.5	32.4	10.8	56.8	43.2	2.11	36.94
	16년 이상	47	36.2	10.6	25.5	27.7	46.8	53.2	2.45	48.2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50.9	10.9	14.5	23.6	61.8	38.2	2.11	36.97
	4~6년 이하	63	35.5	19.4	22.6	22.6	54.8	45.2	2.32	44.09
	7~9년 이하	85	42.4	10.6	24.7	22.4	52.9	47.1	2.27	42.35
	10년 이상	37	37.8	18.9	24.3	18.9	56.8	43.2	2.24	41.4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43.1	10.3	24.1	22.4	53.4	46.6	2.26	41.95
	고졸	111	33.3	18.9	25.2	22.5	52.3	47.7	2.37	45.65
	대졸 이상	70	55.1	10.1	14.5	20.3	65.2	34.8	2.00	33.33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46.2	17.0	18.9	17.9	63.2	36.8	2.08	36.16
	낮음	132	38.2	12.2	24.4	25.2	50.4	49.6	2.37	45.5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41.2	17.6	41.2	0.0	58.8	41.2	2.00	33.33
	중층	141	45.0	12.9	18.6	23.6	57.9	42.1	2.21	40.24
	상층	82	36.6	15.9	23.2	24.4	52.4	47.6	2.35	45.12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28.6	19.0	33.3	19.0	47.6	52.4	2.43	47.62
	중층	125	46.0	13.7	16.9	23.4	59.7	40.3	2.18	39.25
	상층	93	39.8	14.0	25.8	20.4	53.8	46.2	2.27	42.2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2.3	14.5	28.2	25.0	46.8	53.2	2.46	48.66
	모르고 있었음	115	51.8	14.0	14.9	19.3	65.8	34.2	2.02	33.92
정치 이념	진보	78	38.5	12.8	21.8	26.9	51.3	48.7	2.37	45.73
	중도	96	40.6	18.8	19.8	20.8	59.4	40.6	2.21	40.28
	보수	60	50.8	8.5	25.4	15.3	59.3	40.7	2.05	35.0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40.8	13.9	22.4	22.9	54.7	45.3	2.27	42.45
	중층	35	48.6	17.1	17.1	17.1	65.7	34.3	2.03	34.29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4) 나는 통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집중해서 시청하거나 듣는다.

(단위: %)

	시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0.0	2.5	19.5	78.0	2.5	97.5	3.75	91.81	
성별	남성	79	0.0	2.6	21.8	75.6	2.6	97.4	3.73	91.02
	여성	161	0.0	2.5	18.4	79.1	2.5	97.5	3.77	92.19
연령	20대 이하	38	0.0	5.3	39.5	55.3	5.3	94.7	3.50	83.33
	30대	52	0.0	5.9	23.5	70.6	5.9	94.1	3.65	88.23
	40대	74	0.0	0.0	19.2	80.8	0.0	100.0	3.81	93.61
	50대	52	0.0	2.0	3.9	94.1	2.0	98.0	3.92	97.38
	60대 이상	24	0.0	0.0	13.0	87.0	0.0	100.0	3.87	95.65
결혼 상태	미혼	56	0.0	3.6	30.9	65.5	3.6	96.4	3.62	87.27
	기혼	112	0.0	1.8	17.3	80.9	1.8	98.2	3.79	93.03
	이혼, 사별 등	72	0.0	2.8	14.1	83.1	2.8	97.2	3.80	93.4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0.0	2.8	18.3	78.9	2.8	97.2	3.76	92.02
	6~10년 이하	84	0.0	2.4	17.9	79.8	2.4	97.6	3.77	92.46
	11~15년 이하	37	0.0	2.9	17.6	79.4	2.9	97.1	3.76	92.16
	16년 이상	47	0.0	2.1	25.5	72.3	2.1	97.9	3.70	90.0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3.6	21.8	74.5	3.6	96.4	3.71	90.30
	4~6년 이하	63	0.0	1.6	19.7	78.7	1.6	98.4	3.77	92.35
	7~9년 이하	85	0.0	2.4	17.9	79.8	2.4	97.6	3.77	92.46
	10년 이상	37	0.0	2.8	19.4	77.8	2.8	97.2	3.75	91.6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0.0	0.0	26.8	73.2	0.0	100.0	3.73	91.07
	고졸	111	0.0	3.6	19.8	76.6	3.6	96.4	3.73	90.99
	대졸 이상	70	0.0	2.9	13.2	83.8	2.9	97.1	3.81	93.63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0.0	2.9	26.0	71.2	2.9	97.1	3.68	89.42
	낮음	132	0.0	2.3	14.6	83.1	2.3	97.7	3.81	93.59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0.0	23.5	76.5	0.0	100.0	3.76	92.16
	중층	141	0.0	2.2	17.5	80.3	2.2	97.8	3.78	92.70
	상층	82	0.0	3.7	22.0	74.4	3.7	96.3	3.71	90.24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5.0	10.0	85.0	5.0	95.0	3.80	93.33
	중층	125	0.0	1.6	17.1	81.3	1.6	98.4	3.80	93.22
	상층	93	0.0	3.3	25.0	71.7	3.3	96.7	3.68	89.4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0.0	4.1	23.0	73.0	4.1	95.9	3.69	89.62
	모르고 있었음	115	0.0	0.9	15.8	83.3	0.9	99.1	3.82	94.15
정치 이념	진보	78	0.0	3.9	23.4	72.7	3.9	96.1	3.69	89.61
	중도	96	0.0	2.1	22.3	75.5	2.1	97.9	3.73	91.13
	보수	60	0.0	1.7	11.9	86.4	1.7	98.3	3.85	94.91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0.0	3.0	16.2	80.8	3.0	97.0	3.78	92.59
	중층	35	0.0	0.0	34.3	65.7	0.0	100.0	3.66	88.57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5) 나는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0	9.3	41.4	46.4	12.2	87.8	3.31	77.07	
성별	남성	79	1.3	10.3	35.9	52.6	11.5	88.5	3.40	79.91
	여성	161	3.8	8.8	44.0	43.4	12.6	87.4	3.27	75.68
연령	20대 이하	38	2.6	18.4	39.5	39.5	21.1	78.9	3.16	71.93
	30대	52	3.9	2.0	47.1	47.1	5.9	94.1	3.37	79.08
	40대	74	0.0	10.8	39.2	50.0	10.8	89.2	3.39	79.73
	50대	52	2.0	7.8	45.1	45.1	9.8	90.2	3.33	77.78
	60대 이상	24	13.0	8.7	30.4	47.8	21.7	78.3	3.13	71.01
결혼 상태	미혼	56	3.6	12.5	35.7	48.2	16.1	83.9	3.29	76.19
	기혼	112	0.9	7.2	35.1	56.8	8.1	91.9	3.48	82.58
	이혼, 사별 등	72	5.7	10.0	55.7	28.6	15.7	84.3	3.07	69.0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8.3	41.7	48.6	9.7	90.3	3.38	79.17
	6~10년 이하	84	4.8	9.6	37.3	48.2	14.5	85.5	3.29	76.30
	11~15년 이하	37	2.9	8.6	51.4	37.1	11.4	88.6	3.23	74.28
	16년 이상	47	2.1	10.6	40.4	46.8	12.8	87.2	3.32	77.30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3.6	50.9	45.5	3.6	96.4	3.42	80.61
	4~6년 이하	63	1.6	14.5	38.7	45.2	16.1	83.9	3.27	75.81
	7~9년 이하	85	5.9	10.6	38.8	44.7	16.5	83.5	3.22	74.12
	10년 이상	37	2.9	5.7	37.1	54.3	8.6	91.4	3.43	80.9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10.3	43.1	44.8	12.1	87.9	3.31	77.01
	고졸	111	4.5	7.3	50.0	38.2	11.8	88.2	3.22	73.94
	대졸 이상	70	1.5	11.8	26.5	60.3	13.2	86.8	3.46	81.86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0.0	9.5	45.7	44.8	9.5	90.5	3.35	78.41
	낮음	132	5.4	8.5	38.5	47.7	13.8	86.2	3.28	76.1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1.8	35.3	47.1	17.6	82.4	3.24	74.51
	중층	141	2.2	9.4	38.4	50.0	11.6	88.4	3.36	78.74
	상층	82	3.7	8.5	47.6	40.2	12.2	87.8	3.24	74.8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15.0	40.0	45.0	15.0	85.0	3.30	76.67
	중층	125	3.3	9.8	40.7	46.3	13.0	87.0	3.30	76.69
	상층	93	3.2	7.5	43.0	46.2	10.8	89.2	3.32	77.4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9	11.4	43.1	40.7	16.3	83.7	3.20	73.17
	모르고 있었음	115	0.9	7.0	39.5	52.6	7.9	92.1	3.44	81.29
정치 이념	진보	78	3.8	5.1	44.9	46.2	9.0	91.0	3.33	77.78
	중도	96	4.2	16.8	43.2	35.8	21.1	78.9	3.11	70.17
	보수	60	0.0	3.4	31.0	65.5	3.4	96.6	3.62	87.36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0	9.0	38.7	49.2	12.1	87.9	3.34	78.06
	중층	35	2.9	8.6	54.3	34.3	11.4	88.6	3.20	73.33
	상층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0



문6) 나는 통일을 위해서 기부금(돈)을 내 본 적이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44.4	19.7	23.5	12.4	64.1	35.9	2.04	34.62	
성별	남성	79	38.2	21.1	25.0	15.8	59.2	40.8	2.18	39.47
	여성	161	47.5	19.0	22.8	10.8	66.5	33.5	1.97	32.28
연령	20대 이하	38	36.8	18.4	23.7	21.1	55.3	44.7	2.29	42.98
	30대	52	46.2	17.3	23.1	13.5	63.5	36.5	2.04	34.62
	40대	74	47.3	18.9	27.0	6.8	66.2	33.8	1.93	31.08
	50대	52	40.0	24.0	20.0	16.0	64.0	36.0	2.12	37.33
	60대 이상	24	55.0	20.0	20.0	5.0	75.0	25.0	1.75	25.00
결혼 상태	미혼	56	39.3	21.4	21.4	17.9	60.7	39.3	2.18	39.29
	기혼	112	44.0	19.3	22.9	13.8	63.3	36.7	2.06	35.47
	이혼, 사별 등	72	49.3	18.8	26.1	5.8	68.1	31.9	1.88	29.47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43.1	20.8	22.2	13.9	63.9	36.1	2.07	35.65
	6~10년 이하	84	42.0	17.3	27.2	13.6	59.3	40.7	2.12	37.45
	11~15년 이하	37	42.9	31.4	14.3	11.4	74.3	25.7	1.94	31.43
	16년 이상	47	52.2	13.0	26.1	8.7	65.2	34.8	1.91	30.4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45.5	21.8	20.0	12.7	67.3	32.7	2.00	33.33
	4~6년 이하	63	40.3	17.7	29.0	12.9	58.1	41.9	2.15	38.17
	7~9년 이하	85	48.8	14.6	25.6	11.0	63.4	36.6	1.99	32.93
	10년 이상	37	40.0	31.4	14.3	14.3	71.4	28.6	2.03	34.29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41.4	24.1	19.0	15.5	65.5	34.5	2.09	36.21
	고졸	111	53.2	16.5	23.9	6.4	69.7	30.3	1.83	27.83
	대졸 이상	70	31.8	21.2	27.3	19.7	53.0	47.0	2.35	44.95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45.3	17.0	25.5	12.3	62.3	37.7	2.05	34.91
	낮음	132	44.4	22.2	22.2	11.1	66.7	33.3	2.00	33.3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43.8	0.0	43.8	12.5	43.8	56.3	2.25	41.67
	중층	141	39.4	23.4	22.6	14.6	62.8	37.2	2.12	37.47
	상층	82	53.1	17.3	21.0	8.6	70.4	29.6	1.85	28.3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2.1	15.8	21.1	21.1	57.9	42.1	2.21	40.35
	중층	125	39.7	22.3	25.6	12.4	62.0	38.0	2.11	36.91
	상층	93	50.5	17.2	21.5	10.8	67.7	32.3	1.92	30.8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9.2	22.1	19.7	9.0	71.3	28.7	1.89	29.51
	모르고 있었음	115	39.6	16.2	27.9	16.2	55.9	44.1	2.21	40.24
정치 이념	진보	78	48.1	16.9	27.3	7.8	64.9	35.1	1.95	31.60
	중도	96	44.1	22.6	21.5	11.8	66.7	33.3	2.01	33.69
	보수	60	40.7	16.9	22.0	20.3	57.6	42.4	2.22	40.68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44.9	19.9	22.4	12.8	64.8	35.2	2.03	34.35
	중층	35	40.0	17.1	31.4	11.4	57.1	42.9	2.14	38.09
	상층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67

문) 나는 통일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9	11.3	30.3	44.6	25.1	74.9	3.06	68.54	
성별	남성	79	9.2	6.6	27.6	56.6	15.8	84.2	3.32	77.19
	여성	161	16.1	13.5	31.6	38.7	29.7	70.3	2.93	64.30
연령	20대 이하	38	21.1	5.3	23.7	50.0	26.3	73.7	3.03	67.54
	30대	52	13.5	5.8	34.6	46.2	19.2	80.8	3.13	71.15
	40대	74	13.5	17.6	35.1	33.8	31.1	68.9	2.89	63.06
	50대	52	10.2	14.3	24.5	51.0	24.5	75.5	3.16	72.11
	60대 이상	24	11.1	5.6	27.8	55.6	16.7	83.3	3.28	75.93
결혼 상태	미혼	56	12.5	8.9	32.1	46.4	21.4	78.6	3.12	70.83
	기혼	112	12.8	9.2	29.4	48.6	22.0	78.0	3.14	71.25
	이혼, 사별 등	72	16.7	16.7	30.3	36.4	33.3	66.7	2.86	62.12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0.0	12.9	32.9	44.3	22.9	77.1	3.11	70.48
	6~10년 이하	84	15.9	6.1	28.0	50.0	22.0	78.0	3.12	70.73
	11~15년 이하	37	11.8	11.8	35.3	41.2	23.5	76.5	3.06	68.63
	16년 이상	47	17.8	17.8	26.7	37.8	35.6	64.4	2.84	61.48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6.7	14.8	29.6	38.9	31.5	68.5	2.91	63.58
	4~6년 이하	63	8.5	6.8	35.6	49.2	15.3	84.7	3.25	75.14
	7~9년 이하	85	19.3	9.6	26.5	44.6	28.9	71.1	2.96	65.46
	10년 이상	37	5.7	17.1	31.4	45.7	22.9	77.1	3.17	72.3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5.9	14.8	24.1	35.2	40.7	59.3	2.69	56.17
	고졸	111	15.6	10.1	35.8	38.5	25.7	74.3	2.97	65.75
	대졸 이상	70	1.5	10.4	26.9	61.2	11.9	88.1	3.48	82.59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12.5	11.5	35.6	40.4	24.0	76.0	3.04	67.95
	낮음	132	15.2	11.2	26.4	47.2	26.4	73.6	3.06	68.5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0.0	23.5	64.7	11.8	88.2	3.41	80.39
	중층	141	11.8	10.3	33.1	44.9	22.1	77.9	3.11	70.34
	상층	82	17.9	15.4	26.9	39.7	33.3	66.7	2.88	62.82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10.0	20.0	60.0	20.0	80.0	3.30	76.67
	중층	125	15.7	9.1	33.1	42.1	24.8	75.2	3.02	67.22
	상층	93	12.4	14.6	29.2	43.8	27.0	73.0	3.04	68.16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4.0	13.2	33.1	39.7	27.3	72.7	2.98	66.12
	모르고 있었음	115	13.8	9.2	26.6	50.5	22.9	77.1	3.14	71.25
정치 이념	진보	78	13.2	11.8	32.9	42.1	25.0	75.0	3.04	67.98
	중도	96	17.4	12.0	27.2	43.5	29.3	70.7	2.97	65.58
	보수	60	10.3	6.9	34.5	48.3	17.2	82.8	3.21	73.56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1.4	11.4	30.6	46.6	22.8	77.2	3.12	70.81
	중층	35	25.7	8.6	28.6	37.1	34.3	65.7	2.77	59.05
	상층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67

문8) 나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5	3.4	27.8	66.2	5.9	94.1	3.58	85.93	
성별	남성	79	0.0	2.5	25.3	72.2	2.5	97.5	3.70	89.87
	여성	161	3.8	3.8	29.1	63.3	7.6	92.4	3.52	83.97
연령	20대 이하	38	5.3	0.0	39.5	55.3	5.3	94.7	3.45	81.58
	30대	52	1.9	7.7	23.1	67.3	9.6	90.4	3.56	85.26
	40대	74	4.1	5.4	27.0	63.5	9.5	90.5	3.50	83.33
	50대	52	0.0	0.0	23.5	76.5	0.0	100.0	3.76	92.16
	60대 이상	24	0.0	0.0	31.8	68.2	0.0	100.0	3.68	89.39
결혼 상태	미혼	56	1.8	1.8	41.1	55.4	3.6	96.4	3.50	83.33
	기혼	112	2.7	3.6	21.4	72.3	6.3	93.8	3.63	87.80
	이혼, 사별 등	72	2.9	4.3	27.5	65.2	7.2	92.8	3.55	85.02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1.4	30.0	67.1	2.9	97.1	3.63	87.62
	6~10년 이하	84	2.4	2.4	25.0	70.2	4.8	95.2	3.63	87.70
	11~15년 이하	37	2.8	2.8	33.3	61.1	5.6	94.4	3.53	84.26
	16년 이상	47	4.3	8.5	25.5	61.7	12.8	87.2	3.45	81.5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0.0	40.0	58.2	1.8	98.2	3.55	84.85
	4~6년 이하	63	0.0	1.7	20.0	78.3	1.7	98.3	3.77	92.22
	7~9년 이하	85	5.9	4.7	28.2	61.2	10.6	89.4	3.45	81.57
	10년 이상	37	0.0	8.1	21.6	70.3	8.1	91.9	3.62	87.39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5.4	3.6	39.3	51.8	8.9	91.1	3.37	79.17
	고졸	111	2.7	3.6	30.6	63.1	6.3	93.7	3.54	84.68
	대졸 이상	70	0.0	2.9	14.5	82.6	2.9	97.1	3.80	93.24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9	3.8	35.2	58.1	6.7	93.3	3.49	82.86
	낮음	132	2.3	3.1	22.3	72.3	5.4	94.6	3.65	88.2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5.9	23.5	64.7	11.8	88.2	3.47	82.35
	중층	141	2.1	3.6	25.7	68.6	5.7	94.3	3.61	86.90
	상층	82	2.5	2.5	32.5	62.5	5.0	95.0	3.55	85.0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5.0	15.0	75.0	10.0	90.0	3.60	86.67
	중층	125	2.4	3.2	25.6	68.8	5.6	94.4	3.61	86.93
	상층	93	2.2	3.3	34.1	60.4	5.5	94.5	3.53	84.25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5	4.9	33.6	59.0	7.4	92.6	3.49	83.06
	모르고 있었음	115	2.6	1.8	21.9	73.7	4.4	95.6	3.67	88.89
정치 이념	진보	78	0.0	7.7	25.6	66.7	7.7	92.3	3.59	86.32
	중도	96	5.3	1.1	31.6	62.1	6.3	93.7	3.51	83.51
	보수	60	1.7	1.7	24.1	72.4	3.4	96.6	3.67	89.08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5	3.5	26.1	68.8	5.0	95.0	3.62	87.44
	중층	35	5.7	2.9	37.1	54.3	8.6	91.4	3.40	80.00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9)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주민 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당위적 이유	도구적 이유
전체		240	45.7	5.4	8.1	15.2	25.6	53.8	46.20
성별	남성	79	54.2	4.2	2.8	19.4	19.4	56.9	43.10
	여성	161	41.7	6.0	10.6	13.2	28.5	52.3	47.70
연령	20대 이하	38	44.7	7.9	15.8	18.4	13.2	60.5	39.50
	30대	52	42.2	6.7	8.9	22.2	20.0	51.1	48.90
	40대	74	33.3	2.8	6.9	18.1	38.9	40.3	59.70
	50대	52	64.4	4.4	6.7	4.4	20.0	71.1	28.90
	60대 이상	24	56.5	8.7	0.0	8.7	26.1	56.5	43.50
결혼 상태	미혼	56	44.2	5.8	5.8	21.2	23.1	50.0	50.00
	기혼	112	42.7	5.8	9.7	19.4	22.3	52.4	47.60
	이혼, 사별 등	72	51.5	4.4	7.4	4.4	32.4	58.8	41.20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54.4	4.4	10.3	13.2	17.6	64.7	35.30
	6~10년 이하	84	51.9	4.9	4.9	17.3	21.0	56.8	43.20
	11~15년 이하	37	37.5	3.1	6.3	9.4	43.8	43.8	56.30
	16년 이상	47	26.2	9.5	11.9	19.0	33.3	38.1	61.90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50.0	7.7	13.5	7.7	21.2	63.5	36.50
	4~6년 이하	63	52.5	3.4	5.1	16.9	22.0	57.6	42.40
	7~9년 이하	85	42.7	4.9	7.3	17.1	28.0	50.0	50.00
	10년 이상	37	33.3	6.7	6.7	20.0	33.3	40.0	60.00
탈북전 희력	중졸 이하	58	46.4	3.6	8.9	10.7	30.4	55.4	44.60
	고졸	111	43.0	8.0	10.0	16.0	23.0	53.0	47.00
	대졸 이상	70	49.3	3.0	4.5	17.9	25.4	53.7	46.30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43.4	6.1	9.1	19.2	22.2	52.5	47.50
	낮음	132	47.5	4.9	7.4	12.3	27.9	54.9	45.1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33.3	6.7	0.0	40.0	20.0	33.3	66.70
	중층	141	45.8	7.6	6.9	15.3	24.4	52.7	47.30
	상층	82	48.1	1.3	11.7	10.4	28.6	59.7	40.3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0	0.0	5.0	20.0	25.0	55.0	45.00
	중층	125	50.0	5.2	6.9	12.9	25.0	56.9	43.10
	상층	93	38.4	7.0	10.5	17.4	26.7	48.8	51.20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4.3	7.8	7.8	11.3	28.7	52.2	47.80
	모르고 있었음	115	47.2	2.8	8.3	19.4	22.2	55.6	44.40
정치 이념	진보	78	50.7	2.8	4.2	14.1	28.2	54.9	45.10
	중도	96	42.7	4.5	7.9	13.5	31.5	50.6	49.40
	보수	60	43.1	8.6	13.8	20.7	13.8	56.9	43.10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45.7	5.9	8.1	14.0	26.3	53.8	46.20
	중층	35	47.1	2.9	5.9	23.5	20.6	52.9	47.10
	상층	2	50.0	0.0	0.0	0.0	50.0	50.0	50.00

문10) 통일이 국가적으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매우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것이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손해	이익			
전체	240	3.4	16.5	24.1	56.1	19.8	80.2	3.33	77.64	
성별	남성	79	1.3	15.4	17.9	65.4	16.7	83.3	3.47	82.48
	여성	161	4.4	17.0	27.0	51.6	21.4	78.6	3.26	75.26
연령	20대 이하	38	2.6	10.5	26.3	60.5	13.2	86.8	3.45	81.58
	30대	52	3.9	13.7	25.5	56.9	17.6	82.4	3.35	78.43
	40대	74	1.4	21.9	24.7	52.1	23.3	76.7	3.27	75.80
	50대	52	5.8	15.4	19.2	59.6	21.2	78.8	3.33	77.56
	60대 이상	24	4.3	17.4	26.1	52.2	21.7	78.3	3.26	75.36
결혼 상태	미혼	56	1.8	8.9	26.8	62.5	10.7	89.3	3.50	83.33
	기혼	112	5.5	19.1	20.0	55.5	24.5	75.5	3.25	75.15
	이혼, 사별 등	72	1.4	18.3	28.2	52.1	19.7	80.3	3.31	76.9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12.7	23.9	62.0	14.1	85.9	3.46	82.16
	6~10년 이하	84	1.2	21.4	21.4	56.0	22.6	77.4	3.32	77.38
	11~15년 이하	37	8.3	8.3	36.1	47.2	16.7	83.3	3.22	74.07
	16년 이상	47	6.5	19.6	19.6	54.3	26.1	73.9	3.22	73.91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9	11.1	25.9	61.1	13.0	87.0	3.46	82.10
	4~6년 이하	63	3.3	21.3	23.0	52.5	24.6	75.4	3.25	74.86
	7~9년 이하	85	4.7	14.1	22.4	58.8	18.8	81.2	3.35	78.43
	10년 이상	37	2.7	21.6	27.0	48.6	24.3	75.7	3.22	73.8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5.2	13.8	25.9	55.2	19.0	81.0	3.31	77.01
	고졸	111	2.7	19.8	29.7	47.7	22.5	77.5	3.23	74.17
	대졸 이상	70	2.9	13.2	13.2	70.6	16.2	83.8	3.51	83.82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2.9	13.5	29.8	53.8	16.3	83.7	3.35	78.20
	낮음	132	3.8	19.1	19.1	58.0	22.9	77.1	3.31	77.1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23.5	0.0	23.5	52.9	23.5	76.5	3.06	68.63
	중층	141	0.0	18.7	21.6	59.7	18.7	81.3	3.41	80.33
	상층	82	4.9	16.0	28.4	50.6	21.0	79.0	3.25	74.9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15.0	10.0	65.0	25.0	75.0	3.30	76.67
	중층	125	0.0	17.6	24.0	58.4	17.6	82.4	3.41	80.27
	상층	93	6.6	15.4	27.5	50.5	22.0	78.0	3.22	73.9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5.8	18.2	26.4	49.6	24.0	76.0	3.20	73.28
	모르고 있었음	115	0.9	14.8	21.7	62.6	15.7	84.3	3.46	82.03
정치 이념	진보	78	7.8	15.6	23.4	53.2	23.4	76.6	3.22	74.03
	중도	96	1.1	17.0	28.7	53.2	18.1	81.9	3.34	78.01
	보수	60	1.7	16.7	16.7	65.0	18.3	81.7	3.45	81.67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0	13.6	24.1	59.3	16.6	83.4	3.40	79.90
	중층	35	5.7	28.6	22.9	42.9	34.3	65.7	3.03	67.62
	상층	2	0.0	50.0	50.0	0.0	50.0	50.0	2.50	50.00

문11) 통일이 국가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매우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것이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손해	이익			
전체	240	1.3	5.0	23.4	70.3	6.3	93.7	3.63	87.59	
성별	남성	79	2.5	7.6	17.7	72.2	10.1	89.9	3.59	86.50
	여성	161	0.6	3.8	26.3	69.4	4.4	95.6	3.64	88.12
연령	20대 이하	38	0.0	5.3	21.1	73.7	5.3	94.7	3.68	89.47
	30대	52	0.0	7.7	25.0	67.3	7.7	92.3	3.60	86.54
	40대	74	1.4	6.8	31.1	60.8	8.1	91.9	3.51	83.78
	50대	52	1.9	0.0	15.4	82.7	1.9	98.1	3.79	92.95
	60대 이상	24	4.3	4.3	17.4	73.9	8.7	91.3	3.61	86.96
결혼 상태	미혼	56	0.0	3.6	23.2	73.2	3.6	96.4	3.70	89.88
	기혼	112	2.7	4.5	21.4	71.4	7.1	92.9	3.62	87.20
	이혼, 사별 등	72	0.0	7.0	26.8	66.2	7.0	93.0	3.59	86.3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6.9	16.7	75.0	8.3	91.7	3.65	88.43
	6~10년 이하	84	1.2	4.8	25.0	69.0	6.0	94.0	3.62	87.30
	11~15년 이하	37	0.0	2.8	33.3	63.9	2.8	97.2	3.61	87.04
	16년 이상	47	2.1	4.3	23.4	70.2	6.4	93.6	3.62	87.2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3.6	18.2	78.2	3.6	96.4	3.75	91.51
	4~6년 이하	63	3.2	4.8	24.2	67.7	8.1	91.9	3.56	85.48
	7~9년 이하	85	1.2	5.9	22.4	70.6	7.1	92.9	3.62	87.45
	10년 이상	37	0.0	5.4	32.4	62.2	5.4	94.6	3.57	85.5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3.4	22.4	72.4	5.2	94.8	3.66	88.50
	고졸	111	0.9	6.3	26.1	66.7	7.2	92.8	3.59	86.19
	대졸 이상	70	1.4	4.3	20.3	73.9	5.8	94.2	3.67	88.89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0.0	3.8	25.5	70.8	3.8	96.2	3.67	88.99
	낮음	132	2.3	6.1	21.4	70.2	8.4	91.6	3.60	86.51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5.9	29.4	64.7	5.9	94.1	3.59	86.27
	중층	141	1.4	4.3	20.7	73.6	5.7	94.3	3.66	88.81
	상층	82	1.2	6.1	26.8	65.9	7.3	92.7	3.57	85.7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5.0	5.0	85.0	10.0	90.0	3.70	90.00
	중층	125	0.8	4.0	25.6	69.6	4.8	95.2	3.64	88.00
	상층	93	1.1	6.5	24.7	67.7	7.5	92.5	3.59	86.38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6	3.3	33.3	61.8	4.9	95.1	3.55	85.09
	모르고 있었음	115	0.9	7.0	13.0	79.1	7.8	92.2	3.70	90.14
정치 이념	진보	78	1.3	3.8	21.8	73.1	5.1	94.9	3.67	88.89
	중도	96	0.0	4.2	31.6	64.2	4.2	95.8	3.60	86.67
	보수	60	3.3	8.3	15.0	73.3	11.7	88.3	3.58	86.11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5	3.5	23.4	71.6	5.0	95.0	3.65	88.39
	중층	35	0.0	14.3	22.9	62.9	14.3	85.7	3.49	82.86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12) 통일이 남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사례수 (명)	매우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것이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손해	이익			
전체	240	3.4	20.6	34.5	41.6	23.9	76.1	3.14	71.43	
성별	남성	79	0.0	17.7	31.6	50.6	17.7	82.3	3.33	77.64
	여성	161	5.0	22.0	35.8	37.1	27.0	73.0	3.05	68.34
연령	20대 이하	38	2.6	21.1	31.6	44.7	23.7	76.3	3.18	72.81
	30대	52	1.9	21.2	28.8	48.1	23.1	76.9	3.23	74.36
	40대	74	4.1	18.9	41.9	35.1	23.0	77.0	3.08	69.37
	50대	52	5.8	25.0	26.9	42.3	30.8	69.2	3.06	68.59
	60대 이상	24	0.0	13.6	45.5	40.9	13.6	86.4	3.27	75.76
결혼 상태	미혼	56	1.8	19.6	30.4	48.2	21.4	78.6	3.25	75.00
	기혼	112	6.3	20.7	28.8	44.1	27.0	73.0	3.11	70.27
	이혼, 사별 등	72	0.0	21.1	46.5	32.4	21.1	78.9	3.11	70.42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21.1	38.0	39.4	22.5	77.5	3.15	71.83
	6~10년 이하	84	1.2	23.8	31.0	44.0	25.0	75.0	3.18	72.62
	11~15년 이하	37	8.3	13.9	38.9	38.9	22.2	77.8	3.08	69.44
	16년 이상	47	6.4	19.1	31.9	42.6	25.5	74.5	3.11	70.21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25.5	30.9	43.6	25.5	74.5	3.18	72.73
	4~6년 이하	63	3.3	24.6	36.1	36.1	27.9	72.1	3.05	68.31
	7~9년 이하	85	4.7	17.6	36.5	41.2	22.4	77.6	3.14	71.37
	10년 이상	37	5.4	13.5	32.4	48.6	18.9	81.1	3.24	74.7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5.2	22.4	41.4	31.0	27.6	72.4	2.98	66.09
	고졸	111	3.6	26.4	31.8	38.2	30.0	70.0	3.05	68.18
	대졸 이상	70	1.4	10.1	31.9	56.5	11.6	88.4	3.43	81.16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0.9	25.5	33.0	40.6	26.4	73.6	3.13	71.07
	낮음	132	5.4	16.9	35.4	42.3	22.3	77.7	3.15	71.54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7.6	29.4	41.2	29.4	70.6	3.00	66.67
	중층	141	2.9	17.3	36.0	43.9	20.1	79.9	3.21	73.62
	상층	82	2.4	26.8	32.9	37.8	29.3	70.7	3.06	68.7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20.0	30.0	40.0	30.0	70.0	3.00	66.67
	중층	125	2.4	15.3	35.5	46.8	17.7	82.3	3.27	75.54
	상층	93	3.2	28.0	34.4	34.4	31.2	68.8	3.00	66.67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9	20.3	37.4	37.4	25.2	74.8	3.07	69.10
	모르고 있었음	115	1.8	21.1	31.6	45.6	22.8	77.2	3.21	73.68
정치 이념	진보	78	5.1	21.8	33.3	39.7	26.9	73.1	3.08	69.23
	중도	96	1.1	21.3	36.2	41.5	22.3	77.7	3.18	72.69
	보수	60	1.7	20.0	35.0	43.3	21.7	78.3	3.20	73.3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0	18.0	34.5	44.5	21.0	79.0	3.21	73.50
	중층	35	2.9	34.3	34.3	28.6	37.1	62.9	2.89	62.86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3) 통일이 북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시례수 (명)	매우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것이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손해	이익			
전체	240	0.8	1.3	23.2	74.7	2.1	97.9	3.72	90.58	
성별	남성	79	1.3	2.6	17.9	78.2	3.8	96.2	3.73	91.02
	여성	161	0.6	0.6	25.8	73.0	1.3	98.7	3.71	90.36
연령	20대 이하	38	0.0	2.6	26.3	71.1	2.6	97.4	3.68	89.47
	30대	52	2.0	0.0	20.0	78.0	2.0	98.0	3.74	91.33
	40대	74	0.0	0.0	29.7	70.3	0.0	100.0	3.70	90.09
	50대	52	0.0	3.8	11.5	84.6	3.8	96.2	3.81	93.59
	60대 이상	24	4.3	0.0	30.4	65.2	4.3	95.7	3.57	85.51
결혼 상태	미혼	56	0.0	1.8	21.4	76.8	1.8	98.2	3.75	91.67
	기혼	112	1.8	0.0	21.6	76.6	1.8	98.2	3.73	90.99
	이혼, 사별 등	72	0.0	2.9	27.1	70.0	2.9	97.1	3.67	89.0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2.8	25.0	70.8	4.2	95.8	3.65	88.43
	6~10년 이하	84	0.0	0.0	22.6	77.4	0.0	100.0	3.77	92.46
	11~15년 이하	37	0.0	2.9	28.6	68.6	2.9	97.1	3.66	88.57
	16년 이상	47	2.2	0.0	17.4	80.4	2.2	97.8	3.76	92.0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3.6	18.2	78.2	3.6	96.4	3.75	91.51
	4~6년 이하	63	1.6	0.0	29.5	68.9	1.6	98.4	3.66	88.52
	7~9년 이하	85	0.0	0.0	23.5	76.5	0.0	100.0	3.76	92.16
	10년 이상	37	2.8	2.8	19.4	75.0	5.6	94.4	3.67	88.89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0.0	1.7	32.8	65.5	1.7	98.3	3.64	87.93
	고졸	111	1.8	0.9	21.8	75.5	2.7	97.3	3.71	90.30
	대졸 이상	70	0.0	1.4	17.4	81.2	1.4	98.6	3.80	93.24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0.0	1.9	24.8	73.3	1.9	98.1	3.71	90.48
	낮음	132	1.5	0.8	21.5	76.2	2.3	97.7	3.72	90.77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0.0	29.4	70.6	0.0	100.0	3.71	90.20
	중층	141	0.7	1.4	20.9	77.0	2.2	97.8	3.74	91.37
	상층	82	1.2	1.2	25.9	71.6	2.5	97.5	3.68	89.3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0.0	5.0	90.0	5.0	95.0	3.80	93.33
	중층	125	0.0	2.4	21.8	75.8	2.4	97.6	3.73	91.13
	상층	93	1.1	0.0	29.3	69.6	1.1	98.9	3.67	89.13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6	0.0	32.0	66.4	1.6	98.4	3.63	87.70
	모르고 있었음	115	0.0	2.6	14.0	83.3	2.6	97.4	3.81	93.57
정치 이념	진보	78	1.3	0.0	23.1	75.6	1.3	98.7	3.73	91.02
	중도	96	0.0	3.2	25.8	71.0	3.2	96.8	3.68	89.25
	보수	60	1.7	0.0	20.0	78.3	1.7	98.3	3.75	91.67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0	1.0	22.6	75.4	2.0	98.0	3.72	90.79
	중층	35	0.0	2.9	25.7	71.4	2.9	97.1	3.69	89.52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14) 통일이 응답자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위: %)

	시례수 (명)	매우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것이다	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손해	이익			
전체	240	0.4	4.6	26.8	68.2	5.0	95.0	3.63	87.59	
성별	남성	79	0.0	1.3	22.8	75.9	1.3	98.7	3.75	91.56
	여성	161	0.6	6.3	28.8	64.4	6.9	93.1	3.57	85.62
연령	20대 이하	38	0.0	10.5	15.8	73.7	10.5	89.5	3.63	87.72
	30대	52	0.0	3.8	25.0	71.2	3.8	96.2	3.67	89.10
	40대	74	0.0	4.1	32.4	63.5	4.1	95.9	3.59	86.49
	50대	52	0.0	3.8	25.0	71.2	3.8	96.2	3.67	89.10
	60대 이상	24	4.3	0.0	34.8	60.9	4.3	95.7	3.52	84.06
결혼 상태	미혼	56	0.0	7.1	19.6	73.2	7.1	92.9	3.66	88.69
	기혼	112	0.0	4.5	29.5	66.1	4.5	95.5	3.62	87.20
	이혼, 사별 등	72	1.4	2.8	28.2	67.6	4.2	95.8	3.62	87.32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4.2	25.0	69.4	5.6	94.4	3.63	87.50
	6~10년 이하	84	0.0	6.0	26.2	67.9	6.0	94.0	3.62	87.30
	11~15년 이하	37	0.0	5.6	30.6	63.9	5.6	94.4	3.58	86.11
	16년 이상	47	0.0	2.1	27.7	70.2	2.1	97.9	3.68	89.3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0.0	23.6	76.4	0.0	100.0	3.76	92.12
	4~6년 이하	63	1.6	6.5	27.4	64.5	8.1	91.9	3.55	84.95
	7~9년 이하	85	0.0	7.1	27.1	65.9	7.1	92.9	3.59	86.27
	10년 이상	37	0.0	2.7	29.7	67.6	2.7	97.3	3.65	88.29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10.3	24.1	63.8	12.1	87.9	3.50	83.33
	고졸	111	0.0	4.5	30.6	64.9	4.5	95.5	3.60	86.79
	대졸 이상	70	0.0	0.0	23.2	76.8	0.0	100.0	3.77	92.27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0.0	6.6	29.2	64.2	6.6	93.4	3.58	85.85
	낮음	132	0.8	3.1	25.2	71.0	3.8	96.2	3.66	88.8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1.8	11.8	70.6	17.6	82.4	3.47	82.35
	중층	141	0.0	4.3	25.7	70.0	4.3	95.7	3.66	88.57
	상층	82	0.0	3.7	31.7	64.6	3.7	96.3	3.61	86.9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5.0	15.0	80.0	5.0	95.0	3.75	91.67
	중층	125	0.0	4.8	27.2	68.0	4.8	95.2	3.63	87.73
	상층	93	1.1	4.3	28.0	66.7	5.4	94.6	3.60	86.74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0.8	5.7	31.7	61.8	6.5	93.5	3.54	84.82
	모르고 있었음	115	0.0	3.5	21.7	74.8	3.5	96.5	3.71	90.43
정치 이념	진보	78	1.3	2.6	28.2	67.9	3.8	96.2	3.63	87.61
	중도	96	0.0	5.3	30.5	64.2	5.3	94.7	3.59	86.31
	보수	60	0.0	6.7	18.3	75.0	6.7	93.3	3.68	89.44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0.5	3.0	25.9	70.6	3.5	96.5	3.67	88.89
	중층	35	0.0	11.4	31.4	57.1	11.4	88.6	3.46	81.90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15) 통일이 되어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지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

		시례수 (명)	3년 이내	3~5년	6~10년	11년~15년	15년 이상
전체		240	6.8	19.1	37.7	23.3	13.1
성별	남성	79	2.6	13.0	40.3	26.0	18.2
	여성	161	8.8	22.0	36.5	22.0	10.7
연령	20대 이하	38	10.5	15.8	39.5	15.8	18.4
	30대	52	8.2	10.2	34.7	32.7	14.3
	40대	74	4.1	20.5	37.0	26.0	12.3
	50대	52	7.7	21.2	44.2	21.2	5.8
	60대 이상	24	4.2	33.3	29.2	12.5	20.8
결혼 상태	미혼	56	9.3	14.8	37.0	20.4	18.5
	기혼	112	5.5	15.5	40.0	25.5	13.6
	이혼, 사별 등	72	6.9	27.8	34.7	22.2	8.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1.6	26.1	33.3	14.5	14.5
	6~10년 이하	84	4.8	13.1	45.2	26.2	10.7
	11~15년 이하	37	5.4	21.6	32.4	29.7	10.8
	16년 이상	47	4.3	17.4	34.8	26.1	17.4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4.5	29.1	40.0	9.1	7.3
	4~6년 이하	63	5.0	26.7	26.7	28.3	13.3
	7~9년 이하	85	4.8	13.1	46.4	20.2	15.5
	10년 이상	37	2.7	5.4	32.4	43.2	16.2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5.2	19.0	37.9	24.1	13.8
	고졸	111	4.7	19.6	39.3	23.4	13.1
	대졸 이상	70	10.0	18.6	35.7	22.9	12.9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8.7	19.4	36.9	19.4	15.5
	낮음	132	5.3	18.3	38.9	26.7	10.7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23.5	29.4	23.5	11.8
	중층	141	5.8	15.8	40.3	24.5	13.7
	상층	82	7.5	23.8	35.0	21.3	12.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33.3	28.6	28.6	4.8
	중층	125	5.6	17.7	42.7	20.2	13.7
	상층	93	8.9	16.7	33.3	26.7	14.4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5.0	18.2	44.6	19.0	13.2
	모르고 있었음	115	8.8	20.2	29.8	28.1	13.2
정치 이념	진보	78	8.0	17.3	38.7	24.0	12.0
	중도	96	6.3	20.0	40.0	18.9	14.7
	보수	60	6.7	16.7	35.0	28.3	13.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7.1	19.7	37.9	22.2	13.1
	중층	35	5.7	17.1	34.3	31.4	11.4
	상층	2	0.0	0.0	50.0	0.0	50.0

문16) 남한에서의 나의 형편은 내 이상에 가깝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5.8	16.7	50.0	27.5	22.5	77.5	2.99	66.39	
성별	남성	79	10.1	19.0	39.2	31.6	29.1	70.9	2.92	64.13
	여성	161	3.7	15.5	55.3	25.5	19.3	80.7	3.02	67.49
연령	20대 이하	38	2.6	28.9	55.3	13.2	31.6	68.4	2.79	59.65
	30대	52	5.8	17.3	51.9	25.0	23.1	76.9	2.96	65.38
	40대	74	6.8	16.2	50.0	27.0	23.0	77.0	2.97	65.77
	50대	52	5.8	13.5	46.2	34.6	19.2	80.8	3.10	69.87
	60대 이상	24	8.3	4.2	45.8	41.7	12.5	87.5	3.21	73.61
결혼 상태	미혼	56	1.8	28.6	44.6	25.0	30.4	69.6	2.93	64.29
	기혼	112	8.9	10.7	52.7	27.7	19.6	80.4	2.99	66.37
	이혼, 사별 등	72	4.2	16.7	50.0	29.2	20.8	79.2	3.04	68.0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4.2	22.2	41.7	31.9	26.4	73.6	3.01	67.13
	6~10년 이하	84	7.1	10.7	54.8	27.4	17.9	82.1	3.02	67.46
	11~15년 이하	37	8.1	16.2	54.1	21.6	24.3	75.7	2.89	63.06
	16년 이상	47	4.3	19.1	51.1	25.5	23.4	76.6	2.98	65.9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21.8	47.3	29.1	23.6	76.4	3.04	67.88
	4~6년 이하	63	7.9	11.1	49.2	31.7	19.0	81.0	3.05	68.25
	7~9년 이하	85	4.7	12.9	51.8	30.6	17.6	82.4	3.08	69.41
	10년 이상	37	10.8	27.0	51.4	10.8	37.8	62.2	2.62	54.0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4	10.3	60.3	25.9	13.8	86.2	3.09	69.54
	고졸	111	3.6	18.0	51.4	27.0	21.6	78.4	3.02	67.27
	대졸 이상	70	11.4	20.0	40.0	28.6	31.4	68.6	2.86	61.90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6.6	16.0	53.8	23.6	22.6	77.4	2.94	64.78
	낮음	132	5.3	17.4	47.7	29.5	22.7	77.3	3.02	67.17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7.6	41.2	29.4	29.4	70.6	2.88	62.74
	중층	141	7.1	19.9	46.8	26.2	27.0	73.0	2.92	64.07
	상층	82	2.4	11.0	57.3	29.3	13.4	86.6	3.13	71.14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9.5	14.3	47.6	28.6	23.8	76.2	2.95	65.08
	중층	125	4.8	20.0	49.6	25.6	24.8	75.2	2.96	65.33
	상층	93	6.5	12.9	51.6	29.0	19.4	80.6	3.03	67.74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5.6	15.3	55.6	23.4	21.0	79.0	2.97	65.59
	모르고 있었음	115	6.1	17.4	44.3	32.2	23.5	76.5	3.03	67.54
정치 이념	진보	78	6.4	16.7	37.2	39.7	23.1	76.9	3.10	70.08
	중도	96	5.2	14.6	62.5	17.7	19.8	80.2	2.93	64.24
	보수	60	5.0	20.0	48.3	26.7	25.0	75.0	2.97	65.55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5.9	18.3	50.5	25.2	24.3	75.7	2.95	65.02
	중층	35	2.9	8.6	45.7	42.9	11.4	88.6	3.29	76.19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17) 남한에서 내 형편은 매우 좋은 편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6.3	31.4	42.3	20.1	37.7	62.3	2.76	58.72	
성별	남성	79	6.3	25.3	48.1	20.3	31.6	68.4	2.82	60.76
	여성	161	6.3	34.4	39.4	20.0	40.6	59.4	2.73	57.71
연령	20대 이하	38	5.3	34.2	52.6	7.9	39.5	60.5	2.63	54.39
	30대	52	1.9	36.5	48.1	13.5	38.5	61.5	2.73	57.69
	40대	74	12.2	36.5	36.5	14.9	48.6	51.4	2.54	51.35
	50대	52	5.8	19.2	44.2	30.8	25.0	75.0	3.00	66.67
	60대 이상	24	0.0	26.1	26.1	47.8	26.1	73.9	3.22	73.91
결혼 상태	미혼	56	5.4	28.6	50.0	16.1	33.9	66.1	2.77	58.93
	기혼	112	6.3	34.8	39.3	19.6	41.1	58.9	2.72	57.44
	이혼, 사별 등	72	7.0	28.2	40.8	23.9	35.2	64.8	2.82	60.56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5.6	37.5	34.7	22.2	43.1	56.9	2.74	57.87
	6~10년 이하	84	8.3	25.0	44.0	22.6	33.3	66.7	2.81	60.32
	11~15년 이하	37	0.0	38.9	50.0	11.1	38.9	61.1	2.72	57.41
	16년 이상	47	8.5	27.7	44.7	19.1	36.2	63.8	2.74	58.1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7.3	32.7	38.2	21.8	40.0	60.0	2.75	58.18
	4~6년 이하	63	3.2	32.3	35.5	29.0	35.5	64.5	2.90	63.44
	7~9년 이하	85	7.1	30.6	44.7	17.6	37.6	62.4	2.73	57.65
	10년 이상	37	8.1	29.7	54.1	8.1	37.8	62.2	2.62	54.0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6.9	27.6	43.1	22.4	34.5	65.5	2.81	60.34
	고졸	111	2.7	33.3	43.2	20.7	36.0	64.0	2.82	60.66
	대졸 이상	70	11.6	31.9	40.6	15.9	43.5	56.5	2.61	53.62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5.7	32.1	48.1	14.2	37.7	62.3	2.71	56.92
	낮음	132	6.9	30.5	37.4	25.2	37.4	62.6	2.81	60.3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29.4	47.1	17.6	35.3	64.7	2.76	58.82
	중층	141	6.4	33.6	40.7	19.3	40.0	60.0	2.73	57.62
	상층	82	6.1	28.0	43.9	22.0	34.1	65.9	2.82	60.5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20.0	50.0	25.0	25.0	75.0	2.95	65.00
	중층	125	7.2	33.6	40.8	18.4	40.8	59.2	2.70	56.80
	상층	93	5.4	30.1	43.0	21.5	35.5	64.5	2.81	60.2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8.9	32.5	39.8	18.7	41.5	58.5	2.68	56.10
	모르고 있었음	115	3.5	30.4	44.3	21.7	33.9	66.1	2.84	61.45
정치 이념	진보	78	6.4	24.4	39.7	29.5	30.8	69.2	2.92	64.10
	중도	96	6.3	29.5	49.5	14.7	35.8	64.2	2.73	57.54
	보수	60	6.7	40.0	36.7	16.7	46.7	53.3	2.63	54.44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7.0	35.8	38.3	18.9	42.8	57.2	2.69	56.38
	중층	35	0.0	2.9	68.6	28.6	2.9	97.1	3.26	75.24
	상층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67

문18) 나는 남한에서의 형편에 만족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9	16.3	49.8	31.0	19.2	80.8	3.09	69.59	
성별	남성	79	5.1	11.4	48.1	35.4	16.5	83.5	3.14	71.31
	여성	161	1.9	18.8	50.6	28.8	20.6	79.4	3.06	68.75
연령	20대 이하	38	5.3	18.4	55.3	21.1	23.7	76.3	2.92	64.03
	30대	52	3.8	17.3	55.8	23.1	21.2	78.8	2.98	66.02
	40대	74	4.1	17.6	51.4	27.0	21.6	78.4	3.01	67.12
	50대	52	0.0	13.5	48.1	38.5	13.5	86.5	3.25	75.00
	60대 이상	24	0.0	13.0	26.1	60.9	13.0	87.0	3.48	82.61
결혼 상태	미혼	56	5.4	19.6	50.0	25.0	25.0	75.0	2.95	64.88
	기혼	112	1.8	17.9	48.2	32.1	19.6	80.4	3.11	70.24
	이혼, 사별 등	72	2.8	11.3	52.1	33.8	14.1	85.9	3.17	72.30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18.1	41.7	38.9	19.4	80.6	3.18	72.68
	6~10년 이하	84	4.8	15.5	48.8	31.0	20.2	79.8	3.06	68.65
	11~15년 이하	37	0.0	16.7	66.7	16.7	16.7	83.3	3.00	66.67
	16년 이상	47	4.3	14.9	51.1	29.8	19.1	80.9	3.06	68.79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16.4	45.5	36.4	18.2	81.8	3.16	72.12
	4~6년 이하	63	1.6	14.5	48.4	35.5	16.1	83.9	3.18	72.58
	7~9년 이하	85	3.5	14.1	51.8	30.6	17.6	82.4	3.09	69.80
	10년 이상	37	5.4	24.3	54.1	16.2	29.7	70.3	2.81	60.3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17.2	46.6	34.5	19.0	81.0	3.14	71.26
	고졸	111	2.7	14.4	55.0	27.9	17.1	82.9	3.08	69.37
	대졸 이상	70	4.3	18.8	44.9	31.9	23.2	76.8	3.04	68.12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8	16.0	54.7	26.4	18.9	81.1	3.05	68.24
	낮음	132	3.1	16.0	45.8	35.1	19.1	80.9	3.13	70.99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7.6	29.4	41.2	29.4	70.6	3.00	66.67
	중층	141	2.1	17.1	49.3	31.4	19.3	80.7	3.10	70.00
	상층	82	2.4	14.6	54.9	28.0	17.1	82.9	3.09	69.51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5.0	50.0	35.0	15.0	85.0	3.10	70.00
	중층	125	2.4	19.2	48.8	29.6	21.6	78.4	3.06	68.53
	상층	93	2.2	15.1	50.5	32.3	17.2	82.8	3.13	70.97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1	17.1	51.2	27.6	21.1	78.9	3.02	67.48
	모르고 있었음	115	1.7	14.8	48.7	34.8	16.5	83.5	3.17	72.17
정치 이념	진보	78	2.6	10.3	42.3	44.9	12.8	87.2	3.29	76.49
	중도	96	3.2	17.9	57.9	21.1	21.1	78.9	2.97	65.61
	보수	60	3.3	21.7	46.7	28.3	25.0	75.0	3.00	66.67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5	18.9	51.2	27.4	21.4	78.6	3.03	67.83
	중층	35	2.9	2.9	42.9	51.4	5.7	94.3	3.43	80.95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19) 나는 남한에서 내 삶의 의미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7.5	27.2	43.9	21.3	34.7	65.3	2.79	59.69	
성별	남성	79	6.3	31.6	40.5	21.5	38.0	62.0	2.77	59.07
	여성	161	8.1	25.0	45.6	21.3	33.1	66.9	2.80	60.00
연령	20대 이하	38	0.0	36.8	47.4	15.8	36.8	63.2	2.79	59.65
	30대	52	5.8	19.2	53.8	21.2	25.0	75.0	2.90	63.46
	40대	74	12.2	27.0	41.9	18.9	39.2	60.8	2.68	55.86
	50대	52	9.6	28.8	36.5	25.0	38.5	61.5	2.77	58.97
	60대 이상	24	4.3	26.1	39.1	30.4	30.4	69.6	2.96	65.22
결혼 상태	미혼	56	0.0	35.7	50.0	14.3	35.7	64.3	2.79	59.52
	기혼	112	9.8	28.6	40.2	21.4	38.4	61.6	2.73	57.74
	이혼, 사별 등	72	9.9	18.3	45.1	26.8	28.2	71.8	2.89	62.91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2.8	29.2	48.6	19.4	31.9	68.1	2.85	61.57
	6~10년 이하	84	8.3	29.8	38.1	23.8	38.1	61.9	2.77	59.13
	11~15년 이하	37	13.9	30.6	47.2	8.3	44.4	55.6	2.50	50.00
	16년 이상	47	8.5	17.0	44.7	29.8	25.5	74.5	2.96	65.25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27.3	47.3	23.6	29.1	70.9	2.93	64.24
	4~6년 이하	63	6.5	22.6	41.9	29.0	29.0	71.0	2.94	64.52
	7~9년 이하	85	8.2	32.9	41.2	17.6	41.2	58.8	2.68	56.08
	10년 이상	37	16.2	21.6	48.6	13.5	37.8	62.2	2.59	53.1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4	32.8	34.5	29.3	36.2	63.8	2.90	63.22
	고졸	111	6.3	26.1	49.5	18.0	32.4	67.6	2.79	59.76
	대졸 이상	70	13.0	24.6	43.5	18.8	37.7	62.3	2.68	56.04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3.8	28.3	49.1	18.9	32.1	67.9	2.83	61.01
	낮음	132	9.9	26.7	39.7	23.7	36.6	63.4	2.77	59.0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7.6	47.1	23.5	29.4	70.6	2.82	60.78
	중층	141	8.6	30.0	43.6	17.9	38.6	61.4	2.71	56.90
	상층	82	4.9	24.4	43.9	26.8	29.3	70.7	2.93	64.23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30.0	40.0	30.0	30.0	70.0	3.00	66.67
	중층	125	10.4	27.2	45.6	16.8	37.6	62.4	2.69	56.27
	상층	93	5.4	26.9	41.9	25.8	32.3	67.7	2.88	62.7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8.1	29.3	40.7	22.0	37.4	62.6	2.76	58.81
	모르고 있었음	115	7.0	25.2	47.0	20.9	32.2	67.8	2.82	60.58
정치 이념	진보	78	5.1	24.4	46.2	24.4	29.5	70.5	2.90	63.25
	중도	96	7.4	28.4	44.2	20.0	35.8	64.2	2.77	58.95
	보수	60	10.0	30.0	41.7	18.3	40.0	60.0	2.68	56.11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8.5	28.9	42.3	20.4	37.3	62.7	2.75	58.21
	중층	35	0.0	17.1	57.1	25.7	17.1	82.9	3.09	69.52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20) 나는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 남한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5	10.9	37.4	49.2	13.4	86.6	3.33	77.73	
성별	남성	79	3.8	15.4	35.9	44.9	19.2	80.8	3.22	73.93
	여성	161	1.9	8.8	38.1	51.3	10.6	89.4	3.39	79.58
연령	20대 이하	38	8.1	24.3	43.2	24.3	32.4	67.6	2.84	61.26
	30대	52	1.9	13.5	42.3	42.3	15.4	84.6	3.25	75.00
	40대	74	2.7	8.1	39.2	50.0	10.8	89.2	3.36	78.83
	50대	52	0.0	5.8	32.7	61.5	5.8	94.2	3.56	85.26
	60대 이상	24	0.0	4.3	21.7	73.9	4.3	95.7	3.70	89.85
결혼 상태	미혼	56	5.5	23.6	43.6	27.3	29.1	70.9	2.93	64.24
	기혼	112	0.9	10.7	36.6	51.8	11.6	88.4	3.39	79.76
	이혼, 사별 등	72	2.8	1.4	33.8	62.0	4.2	95.8	3.55	84.9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5.6	45.1	47.9	7.0	93.0	3.39	79.81
	6~10년 이하	84	6.0	15.5	26.2	52.4	21.4	78.6	3.25	75.00
	11~15년 이하	37	0.0	13.9	47.2	38.9	13.9	86.1	3.25	75.00
	16년 이상	47	0.0	8.5	38.3	53.2	8.5	91.5	3.45	81.5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5.5	41.8	50.9	7.3	92.7	3.42	80.61
	4~6년 이하	63	4.9	8.2	27.9	59.0	13.1	86.9	3.41	80.33
	7~9년 이하	85	1.2	11.8	36.5	50.6	12.9	87.1	3.36	78.82
	10년 이상	37	2.7	21.6	48.6	27.0	24.3	75.7	3.00	66.6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0.0	12.3	40.4	47.4	12.3	87.7	3.35	78.36
	고졸	111	1.8	10.8	36.0	51.4	12.6	87.4	3.37	78.98
	대졸 이상	70	5.8	10.1	37.7	46.4	15.9	84.1	3.25	74.88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9	14.3	40.0	42.9	17.1	82.9	3.23	74.28
	낮음	132	2.3	8.4	35.9	53.4	10.7	89.3	3.40	80.1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7.6	41.2	35.3	23.5	76.5	3.06	68.63
	중층	141	2.1	11.4	39.3	47.1	13.6	86.4	3.31	77.14
	상층	82	2.5	8.6	33.3	55.6	11.1	88.9	3.42	80.66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10.0	30.0	55.0	15.0	85.0	3.35	78.33
	중층	125	3.2	11.2	37.6	48.0	14.4	85.6	3.30	76.80
	상층	93	1.1	10.9	39.1	48.9	12.0	88.0	3.36	78.6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3	10.7	37.7	48.4	13.9	86.1	3.31	77.05
	모르고 있었음	115	1.7	10.4	37.4	50.4	12.2	87.8	3.37	78.84
정치 이념	진보	78	5.1	10.3	33.3	51.3	15.4	84.6	3.31	76.92
	중도	96	1.1	11.7	39.4	47.9	12.8	87.2	3.34	78.01
	보수	60	1.7	11.7	41.7	45.0	13.3	86.7	3.30	76.67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5	11.5	35.5	50.5	14.0	86.0	3.34	78.00
	중층	35	2.9	8.6	45.7	42.9	11.4	88.6	3.29	76.19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2) 나는 다른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5.0	30.8	30.0	4.2	65.8	34.2	2.03	34.44	
성별	남성	79	39.2	29.1	29.1	2.5	68.4	31.6	1.95	31.65
	여성	161	32.9	31.7	30.4	5.0	64.6	35.4	2.07	35.82
연령	20대 이하	38	52.6	31.6	13.2	2.6	84.2	15.8	1.66	21.93
	30대	52	30.8	36.5	25.0	7.7	67.3	32.7	2.10	36.54
	40대	74	39.2	27.0	33.8	0.0	66.2	33.8	1.95	31.53
	50대	52	30.8	34.6	30.8	3.8	65.4	34.6	2.08	35.90
	60대 이상	24	12.5	20.8	54.2	12.5	33.3	66.7	2.67	55.56
결혼 상태	미혼	56	44.6	28.6	25.0	1.8	73.2	26.8	1.84	27.98
	기혼	112	38.4	31.3	25.0	5.4	69.6	30.4	1.97	32.44
	이혼, 사별 등	72	22.2	31.9	41.7	4.2	54.2	45.8	2.28	42.5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0.6	33.3	30.6	5.6	63.9	36.1	2.11	37.04
	6~10년 이하	84	36.9	28.6	32.1	2.4	65.5	34.5	2.00	33.33
	11~15년 이하	37	43.2	37.8	18.9	0.0	81.1	18.9	1.76	25.22
	16년 이상	47	31.9	25.5	34.0	8.5	57.4	42.6	2.19	39.72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0.9	36.4	30.9	1.8	67.3	32.7	2.04	34.55
	4~6년 이하	63	36.5	25.4	30.2	7.9	61.9	38.1	2.10	36.51
	7~9년 이하	85	38.8	32.9	27.1	1.2	71.8	28.2	1.91	30.20
	10년 이상	37	29.7	27.0	35.1	8.1	56.8	43.2	2.22	40.5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5.9	36.2	31.0	6.9	62.1	37.9	2.19	39.65
	고졸	111	39.6	27.9	28.8	3.6	67.6	32.4	1.96	32.13
	대졸 이상	70	35.7	31.4	31.4	1.4	67.1	32.9	1.99	32.86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33.0	38.7	24.5	3.8	71.7	28.3	1.99	33.02
	낮음	132	35.6	25.0	34.8	4.5	60.6	39.4	2.08	36.11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2.9	11.8	23.5	11.8	64.7	35.3	1.94	31.37
	중층	141	40.4	29.8	27.7	2.1	70.2	29.8	1.91	30.50
	상층	82	22.0	36.6	35.4	6.1	58.5	41.5	2.26	41.8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7.6	28.6	14.3	9.5	76.2	23.8	1.86	28.57
	중층	125	39.2	28.0	30.4	2.4	67.2	32.8	1.96	32.00
	상층	93	26.9	35.5	32.3	5.4	62.4	37.6	2.16	38.7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0.6	29.0	34.7	5.6	59.7	40.3	2.15	38.44
	모르고 있었음	115	40.0	33.0	24.3	2.6	73.0	27.0	1.90	29.85
정치 이념	진보	78	39.7	26.9	29.5	3.8	66.7	33.3	1.97	32.48
	중도	96	34.4	34.4	27.1	4.2	68.8	31.3	2.01	33.68
	보수	60	31.7	30.0	33.3	5.0	61.7	38.3	2.12	37.2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2.7	31.7	31.2	4.5	64.4	35.6	2.07	35.81
	중층	35	48.6	28.6	20.0	2.9	77.1	22.9	1.77	25.71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22)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5.0	35.8	25.0	4.2	70.8	29.2	1.98	32.78	
성별	남성	79	34.2	36.7	24.1	5.1	70.9	29.1	2.00	33.33
	여성	161	35.4	35.4	25.5	3.7	70.8	29.2	1.98	32.50
연령	20대 이하	38	52.6	34.2	2.6	10.5	86.8	13.2	1.71	23.68
	30대	52	38.5	38.5	19.2	3.8	76.9	23.1	1.88	29.49
	40대	74	32.4	29.7	36.5	1.4	62.2	37.8	2.07	35.59
	50대	52	28.8	42.3	26.9	1.9	71.2	28.8	2.02	33.97
	60대 이상	24	20.8	37.5	33.3	8.3	58.3	41.7	2.29	43.06
결혼 상태	미혼	56	39.3	37.5	16.1	7.1	76.8	23.2	1.91	30.36
	기혼	112	39.3	33.0	25.0	2.7	72.3	27.7	1.91	30.36
	이혼, 사별 등	72	25.0	38.9	31.9	4.2	63.9	36.1	2.15	38.4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3.3	33.3	26.4	6.9	66.7	33.3	2.07	35.65
	6~10년 이하	84	36.9	39.3	20.2	3.6	76.2	23.8	1.90	30.16
	11~15년 이하	37	29.7	45.9	24.3	0.0	75.7	24.3	1.95	31.53
	16년 이상	47	38.3	25.5	31.9	4.3	63.8	36.2	2.02	34.04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6.4	36.4	23.6	3.6	72.7	27.3	1.95	31.51
	4~6년 이하	63	31.7	36.5	23.8	7.9	68.3	31.7	2.08	35.98
	7~9년 이하	85	34.1	40.0	24.7	1.2	74.1	25.9	1.93	30.98
	10년 이상	37	40.5	24.3	29.7	5.4	64.9	35.1	2.00	33.33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6.2	32.8	27.6	3.4	69.0	31.0	1.98	32.76
	고졸	111	33.3	36.0	24.3	6.3	69.4	30.6	2.04	34.53
	대졸 이상	70	37.1	38.6	24.3	0.0	75.7	24.3	1.87	29.05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32.1	36.8	25.5	5.7	68.9	31.1	2.05	34.91
	낮음	132	37.1	34.8	25.0	3.0	72.0	28.0	1.94	31.31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41.2	41.2	11.8	5.9	82.4	17.6	1.82	27.45
	중층	141	36.2	35.5	24.1	4.3	71.6	28.4	1.96	32.15
	상층	82	31.7	35.4	29.3	3.7	67.1	32.9	2.05	34.96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33.3	42.9	9.5	14.3	76.2	23.8	2.05	34.92
	중층	125	36.8	36.0	24.8	2.4	72.8	27.2	1.93	30.93
	상층	93	33.3	34.4	28.0	4.3	67.7	32.3	2.03	34.4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4.7	32.3	27.4	5.6	66.9	33.1	2.04	34.68
	모르고 있었음	115	35.7	40.0	21.7	2.6	75.7	24.3	1.91	30.43
정치 이념	진보	78	38.5	32.1	26.9	2.6	70.5	29.5	1.94	31.20
	중도	96	30.2	40.6	27.1	2.1	70.8	29.2	2.01	33.68
	보수	60	38.3	35.0	16.7	10.0	73.3	26.7	1.98	32.78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4.2	35.6	25.7	4.5	69.8	30.2	2.00	33.50
	중층	35	40.0	37.1	20.0	2.9	77.1	22.9	1.86	28.57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23) 내 생각은 남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4.4	25.4	54.7	5.5	39.8	60.2	2.51	50.42	
성별	남성	79	18.2	23.4	55.8	2.6	41.6	58.4	2.43	47.62
	여성	161	12.6	26.4	54.1	6.9	39.0	61.0	2.55	51.78
연령	20대 이하	38	13.2	26.3	55.3	5.3	39.5	60.5	2.53	50.88
	30대	52	9.6	26.9	57.7	5.8	36.5	63.5	2.60	53.20
	40대	74	17.8	27.4	47.9	6.8	45.2	54.8	2.44	47.94
	50대	52	10.0	24.0	64.0	2.0	34.0	66.0	2.58	52.67
	60대 이상	24	26.1	17.4	47.8	8.7	43.5	56.5	2.39	46.38
결혼 상태	미혼	56	7.1	25.0	66.1	1.8	32.1	67.9	2.63	54.17
	기혼	112	18.2	29.1	45.5	7.3	47.3	52.7	2.42	47.27
	이혼, 사별 등	72	14.3	20.0	60.0	5.7	34.3	65.7	2.57	52.3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6.7	16.7	62.5	4.2	33.3	66.7	2.54	51.39
	6~10년 이하	84	14.6	28.0	52.4	4.9	42.7	57.3	2.48	49.19
	11~15년 이하	37	2.8	38.9	55.6	2.8	41.7	58.3	2.58	52.78
	16년 이상	47	19.6	23.9	45.7	10.9	43.5	56.5	2.48	49.2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6.4	10.9	67.3	5.5	27.3	72.7	2.62	53.94
	4~6년 이하	63	18.0	24.6	50.8	6.6	42.6	57.4	2.46	48.63
	7~9년 이하	85	12.0	34.9	47.0	6.0	47.0	53.0	2.47	49.00
	10년 이상	37	10.8	27.0	59.5	2.7	37.8	62.2	2.54	51.3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5.8	19.3	63.2	1.8	35.1	64.9	2.51	50.29
	고졸	111	7.2	27.0	58.6	7.2	34.2	65.8	2.66	55.25
	대졸 이상	70	25.4	28.4	40.3	6.0	53.7	46.3	2.27	42.29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13.3	25.7	57.1	3.8	39.0	61.0	2.51	50.48
	낮음	132	14.7	25.6	52.7	7.0	40.3	59.7	2.52	50.6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8.8	37.5	37.5	6.3	56.3	43.8	2.31	43.75
	중층	141	15.9	27.5	52.9	3.6	43.5	56.5	2.44	48.07
	상층	82	11.0	19.5	61.0	8.5	30.5	69.5	2.67	55.6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30.0	45.0	15.0	40.0	60.0	2.65	55.00
	중층	125	17.2	24.6	53.3	4.9	41.8	58.2	2.46	48.63
	상층	93	10.8	25.8	59.1	4.3	36.6	63.4	2.57	52.33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9.8	25.4	57.4	7.4	35.2	64.8	2.62	54.10
	모르고 있었음	115	19.5	24.8	52.2	3.5	44.2	55.8	2.40	46.61
정치 이념	진보	78	18.2	26.0	50.6	5.2	44.2	55.8	2.43	47.62
	중도	96	11.7	23.4	57.4	7.4	35.1	64.9	2.61	53.55
	보수	60	11.9	28.8	57.6	1.7	40.7	59.3	2.49	49.7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5.1	25.1	53.3	6.5	40.2	59.8	2.51	50.42
	중층	35	11.4	28.6	60.0	0.0	40.0	60.0	2.49	49.52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24) 나는 내가 남한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6.3	20.4	47.5	25.8	26.7	73.3	2.93	64.30	
성별	남성	79	7.6	17.7	48.1	26.6	25.3	74.7	2.94	64.56
	여성	161	5.6	21.7	47.2	25.5	27.3	72.7	2.93	64.18
연령	20대 이하	38	2.6	31.6	42.1	23.7	34.2	65.8	2.87	62.28
	30대	52	3.8	23.1	42.3	30.8	26.9	73.1	3.00	66.67
	40대	74	9.5	23.0	50.0	17.6	32.4	67.6	2.76	58.56
	50대	52	7.7	11.5	51.9	28.8	19.2	80.8	3.02	67.31
	60대 이상	24	4.2	8.3	50.0	37.5	12.5	87.5	3.21	73.61
결혼 상태	미혼	56	3.6	25.0	48.2	23.2	28.6	71.4	2.91	63.69
	기혼	112	5.4	19.6	49.1	25.9	25.0	75.0	2.96	65.18
	이혼, 사별 등	72	9.7	18.1	44.4	27.8	27.8	72.2	2.90	63.4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9.7	27.8	40.3	22.2	37.5	62.5	2.75	58.33
	6~10년 이하	84	3.6	16.7	56.0	23.8	20.2	79.8	3.00	66.67
	11~15년 이하	37	8.1	21.6	45.9	24.3	29.7	70.3	2.86	62.16
	16년 이상	47	4.3	14.9	44.7	36.2	19.1	80.9	3.13	70.92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7.3	32.7	40.0	20.0	40.0	60.0	2.73	57.58
	4~6년 이하	63	6.3	19.0	42.9	31.7	25.4	74.6	3.00	66.67
	7~9년 이하	85	4.7	15.3	56.5	23.5	20.0	80.0	2.99	66.27
	10년 이상	37	8.1	16.2	45.9	29.7	24.3	75.7	2.97	65.7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6.9	20.7	48.3	24.1	27.6	72.4	2.90	63.22
	고졸	111	5.4	22.5	44.1	27.9	27.9	72.1	2.95	64.86
	대졸 이상	70	7.1	17.1	52.9	22.9	24.3	75.7	2.91	63.81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7.5	23.6	42.5	26.4	31.1	68.9	2.88	62.58
	낮음	132	5.3	18.2	50.8	25.8	23.5	76.5	2.97	65.66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5.9	70.6	23.5	5.9	94.1	3.18	72.55
	중층	141	7.1	23.4	45.4	24.1	30.5	69.5	2.87	62.17
	상층	82	6.1	18.3	46.3	29.3	24.4	75.6	2.99	66.26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9.5	61.9	23.8	14.3	85.7	3.05	68.25
	중층	125	4.8	20.8	50.4	24.0	25.6	74.4	2.94	64.53
	상층	93	8.6	22.6	40.9	28.0	31.2	68.8	2.88	62.7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6.5	23.4	46.0	24.2	29.8	70.2	2.88	62.63
	모르고 있었음	115	6.1	17.4	48.7	27.8	23.5	76.5	2.98	66.09
정치 이념	진보	78	6.4	15.4	50.0	28.2	21.8	78.2	3.00	66.67
	중도	96	6.3	25.0	44.8	24.0	31.3	68.8	2.86	62.15
	보수	60	5.0	21.7	51.7	21.7	26.7	73.3	2.90	63.3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7.4	20.3	47.5	24.8	27.7	72.3	2.90	63.20
	중층	35	0.0	22.9	45.7	31.4	22.9	77.1	3.09	69.52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25) 나는 내 자신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	9.7	39.8	49.2	11.0	89.0	3.37	78.95	
성별	남성	79	1.3	10.1	36.7	51.9	11.4	88.6	3.39	79.75
	여성	161	1.3	9.6	41.4	47.8	10.8	89.2	3.36	78.56
연령	20대 이하	38	0.0	10.8	48.6	40.5	10.8	89.2	3.30	76.58
	30대	52	2.0	11.8	39.2	47.1	13.7	86.3	3.31	77.12
	40대	74	2.7	12.2	41.9	43.2	14.9	85.1	3.26	75.22
	50대	52	0.0	3.8	38.5	57.7	3.8	96.2	3.54	84.61
	60대 이상	24	0.0	9.1	22.7	68.2	9.1	90.9	3.59	86.36
결혼 상태	미혼	56	0.0	14.5	43.6	41.8	14.5	85.5	3.27	75.76
	기혼	112	2.7	9.9	36.0	51.4	12.6	87.4	3.36	78.68
	이혼, 사별 등	72	0.0	5.7	42.9	51.4	5.7	94.3	3.46	81.90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8.3	37.5	52.8	9.7	90.3	3.42	80.55
	6~10년 이하	84	0.0	13.3	41.0	45.8	13.3	86.7	3.33	77.51
	11~15년 이하	37	5.7	8.6	51.4	34.3	14.3	85.7	3.14	71.43
	16년 이상	47	0.0	6.5	32.6	60.9	6.5	93.5	3.54	84.78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7.3	40.0	52.7	7.3	92.7	3.45	81.82
	4~6년 이하	63	1.6	9.7	30.6	58.1	11.3	88.7	3.45	81.72
	7~9년 이하	85	2.4	10.8	41.0	45.8	13.3	86.7	3.30	76.71
	10년 이상	37	0.0	11.1	52.8	36.1	11.1	88.9	3.25	75.00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0.0	10.3	41.4	48.3	10.3	89.7	3.38	79.31
	고졸	111	1.9	8.3	43.5	46.3	10.2	89.8	3.34	78.09
	대졸 이상	70	1.4	11.6	33.3	53.6	13.0	87.0	3.39	79.71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9	10.5	47.6	39.0	13.3	86.7	3.23	74.28
	낮음	132	0.0	9.3	33.3	57.4	9.3	90.7	3.48	82.69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17.6	41.2	41.2	17.6	82.4	3.24	74.51
	중층	141	2.2	8.7	36.2	52.9	10.9	89.1	3.40	79.95
	상층	82	0.0	9.9	45.7	44.4	9.9	90.1	3.35	78.1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25.0	25.0	50.0	25.0	75.0	3.25	75.00
	중층	125	0.8	5.7	41.0	52.5	6.6	93.4	3.45	81.69
	상층	93	2.2	11.8	41.9	44.1	14.0	86.0	3.28	75.98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5	10.7	39.7	47.1	13.2	86.8	3.31	77.13
	모르고 있었음	115	0.0	7.9	40.4	51.8	7.9	92.1	3.44	81.29
정치 이념	진보	78	1.3	11.5	32.1	55.1	12.8	87.2	3.41	80.34
	중도	96	2.2	8.6	45.2	44.1	10.8	89.2	3.31	77.06
	보수	60	0.0	10.2	42.4	47.5	10.2	89.8	3.37	79.10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5	10.1	38.4	50.0	11.6	88.4	3.37	78.96
	중층	35	0.0	8.6	45.7	45.7	8.6	91.4	3.37	79.05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26)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 밝히지 않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52.9	25.6	14.7	6.7	78.6	21.4	1.75	25.07	
성별	남성	79	52.6	29.5	12.8	5.1	82.1	17.9	1.71	23.50
	여성	161	53.1	23.8	15.6	7.5	76.9	23.1	1.77	25.83
연령	20대 이하	38	47.4	39.5	7.9	5.3	86.8	13.2	1.71	23.68
	30대	52	51.9	26.9	15.4	5.8	78.8	21.2	1.75	25.00
	40대	74	61.6	20.5	12.3	5.5	82.2	17.8	1.62	20.55
	50대	52	55.8	21.2	15.4	7.7	76.9	23.1	1.75	25.00
	60대 이상	24	30.4	26.1	30.4	13.0	56.5	43.5	2.26	42.03
결혼 상태	미혼	56	50.0	33.9	10.7	5.4	83.9	16.1	1.71	23.81
	기혼	112	54.1	25.2	14.4	6.3	79.3	20.7	1.73	24.32
	이혼, 사별 등	72	53.5	19.7	18.3	8.5	73.2	26.8	1.82	27.2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49.3	29.6	12.7	8.5	78.9	21.1	1.80	26.76
	6~10년 이하	84	54.8	25.0	13.1	7.1	79.8	20.2	1.73	24.21
	11~15년 이하	37	52.8	25.0	22.2	0.0	77.8	22.2	1.69	23.15
	16년 이상	47	55.3	21.3	14.9	8.5	76.6	23.4	1.77	25.5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57.4	29.6	9.3	3.7	87.0	13.0	1.59	19.75
	4~6년 이하	63	51.6	22.6	14.5	11.3	74.2	25.8	1.85	28.49
	7~9년 이하	85	49.4	29.4	14.1	7.1	78.8	21.2	1.79	26.27
	10년 이상	37	56.8	16.2	24.3	2.7	73.0	27.0	1.73	24.32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7.9	31.0	20.7	10.3	69.0	31.0	2.03	34.48
	고졸	111	58.6	26.1	12.6	2.7	84.7	15.3	1.59	19.82
	대졸 이상	70	57.4	20.6	13.2	8.8	77.9	22.1	1.74	24.51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42.9	35.2	17.1	4.8	78.1	21.9	1.84	27.94
	낮음	132	61.1	18.3	12.2	8.4	79.4	20.6	1.68	22.6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2.9	23.5	17.6	5.9	76.5	23.5	1.76	25.49
	중층	141	56.1	26.6	11.5	5.8	82.7	17.3	1.67	22.30
	상층	82	47.6	24.4	19.5	8.5	72.0	28.0	1.89	29.6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60.0	20.0	10.0	10.0	80.0	20.0	1.70	23.33
	중층	125	56.0	27.2	11.2	5.6	83.2	16.8	1.66	22.13
	상층	93	46.7	25.0	20.7	7.6	71.7	28.3	1.89	29.7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9.2	27.0	17.2	6.6	76.2	23.8	1.81	27.05
	모르고 있었음	115	57.4	23.5	12.2	7.0	80.9	19.1	1.69	22.90
정치 이념	진보	78	50.6	27.3	13.0	9.1	77.9	22.1	1.81	26.84
	중도	96	53.7	24.2	16.8	5.3	77.9	22.1	1.74	24.56
	보수	60	55.0	26.7	13.3	5.0	81.7	18.3	1.68	22.78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54.0	25.0	14.0	7.0	79.0	21.0	1.74	24.67
	중층	35	45.7	31.4	20.0	2.9	77.1	22.9	1.80	26.67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27) 나는 다른 한민족(남북한 포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41.7	40.0	17.0	1.3	81.7	18.3	1.78	25.96	
성별	남성	79	46.2	35.9	15.4	2.6	82.1	17.9	1.74	24.79
	여성	161	39.5	42.0	17.8	0.6	81.5	18.5	1.80	26.54
연령	20대 이하	38	54.1	35.1	8.1	2.7	89.2	10.8	1.59	19.82
	30대	52	40.4	51.9	5.8	1.9	92.3	7.7	1.69	23.08
	40대	74	38.4	41.1	20.5	0.0	79.5	20.5	1.82	27.40
	50대	52	49.0	30.6	20.4	0.0	79.6	20.4	1.71	23.81
	60대 이상	24	20.8	37.5	37.5	4.2	58.3	41.7	2.25	41.67
결혼 상태	미혼	56	40.7	40.7	16.7	1.9	81.5	18.5	1.80	26.54
	기혼	112	48.6	36.9	12.6	1.8	85.6	14.4	1.68	22.52
	이혼, 사별 등	72	31.4	44.3	24.3	0.0	75.7	24.3	1.93	30.9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5.2	39.4	22.5	2.8	74.6	25.4	1.93	30.99
	6~10년 이하	84	47.6	39.0	13.4	0.0	86.6	13.4	1.66	21.95
	11~15년 이하	37	50.0	41.7	8.3	0.0	91.7	8.3	1.58	19.44
	16년 이상	47	34.8	41.3	21.7	2.2	76.1	23.9	1.91	30.4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42.6	40.7	13.0	3.7	83.3	16.7	1.78	25.93
	4~6년 이하	63	32.3	43.5	22.6	1.6	75.8	24.2	1.94	31.18
	7~9년 이하	85	47.0	39.8	13.3	0.0	86.7	13.3	1.66	22.09
	10년 이상	37	44.4	33.3	22.2	0.0	77.8	22.2	1.78	25.93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3.9	37.5	28.6	0.0	71.4	28.6	1.95	31.55
	고졸	111	44.0	43.1	11.9	0.9	87.2	12.8	1.70	23.24
	대졸 이상	70	44.9	37.7	15.9	1.4	82.6	17.4	1.74	24.64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37.1	38.1	22.9	1.9	75.2	24.8	1.90	29.84
	낮음	132	44.5	42.2	12.5	0.8	86.7	13.3	1.70	23.18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41.2	47.1	11.8	0.0	88.2	11.8	1.71	23.53
	중층	141	43.9	38.1	16.5	1.4	82.0	18.0	1.76	25.18
	상층	82	38.0	41.8	19.0	1.3	79.7	20.3	1.84	27.8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0	45.0	5.0	0.0	95.0	5.0	1.55	18.33
	중층	125	44.4	41.1	13.7	0.8	85.5	14.5	1.71	23.66
	상층	93	35.6	37.8	24.4	2.2	73.3	26.7	1.93	31.1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5.8	40.8	22.5	0.8	76.7	23.3	1.88	29.44
	모르고 있었음	115	48.2	39.5	10.5	1.8	87.7	12.3	1.66	21.93
정치 이념	진보	78	38.2	46.1	14.5	1.3	84.2	15.8	1.79	26.32
	중도	96	44.7	39.4	14.9	1.1	84.0	16.0	1.72	24.11
	보수	60	41.7	33.3	23.3	1.7	75.0	25.0	1.85	28.3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40.7	39.7	19.1	0.5	80.4	19.6	1.79	26.47
	중층	35	50.0	41.2	2.9	5.9	91.2	8.8	1.65	21.57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28) 나는 우리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7.8	35.3	18.1	8.8	73.1	26.9	1.98	32.63	
성별	남성	79	37.2	26.9	23.1	12.8	64.1	35.9	2.12	37.18
	여성	161	38.1	39.4	15.6	6.9	77.5	22.5	1.91	30.42
연령	20대 이하	38	36.8	36.8	15.8	10.5	73.7	26.3	2.00	33.33
	30대	52	36.0	38.0	14.0	12.0	74.0	26.0	2.02	34.00
	40대	74	41.9	31.1	21.6	5.4	73.0	27.0	1.91	30.18
	50대	52	38.5	36.5	15.4	9.6	75.0	25.0	1.96	32.05
	60대 이상	24	29.2	37.5	25.0	8.3	66.7	33.3	2.13	37.50
결혼 상태	미혼	56	30.4	35.7	21.4	12.5	66.1	33.9	2.16	38.69
	기혼	112	48.2	35.5	11.8	4.5	83.6	16.4	1.73	24.24
	이혼, 사별 등	72	27.8	34.7	25.0	12.5	62.5	37.5	2.22	40.74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8.0	29.6	21.1	11.3	67.6	32.4	2.06	35.21
	6~10년 이하	84	41.7	35.7	15.5	7.1	77.4	22.6	1.88	29.36
	11~15년 이하	37	32.4	40.5	16.2	10.8	73.0	27.0	2.05	35.13
	16년 이상	47	34.8	39.1	19.6	6.5	73.9	26.1	1.98	32.61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2.7	30.9	21.8	14.5	63.6	36.4	2.18	39.39
	4~6년 이하	63	42.6	34.4	11.5	11.5	77.0	23.0	1.92	30.60
	7~9년 이하	85	38.8	42.4	14.1	4.7	81.2	18.8	1.85	28.24
	10년 이상	37	35.1	27.0	32.4	5.4	62.2	37.8	2.08	36.0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6.2	34.5	20.7	8.6	70.7	29.3	2.02	33.91
	고졸	111	34.5	37.3	20.0	8.2	71.8	28.2	2.02	33.94
	대졸 이상	70	44.3	32.9	12.9	10.0	77.1	22.9	1.89	29.52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9.5	40.0	23.8	6.7	69.5	30.5	2.08	35.87
	낮음	132	43.5	32.1	13.7	10.7	75.6	24.4	1.92	30.5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41.2	41.2	17.6	0.0	82.4	17.6	1.76	25.49
	중층	141	38.3	34.0	18.4	9.2	72.3	27.7	1.99	32.86
	상층	82	36.3	36.3	17.5	10.0	72.5	27.5	2.01	33.7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38.1	47.6	4.8	9.5	85.7	14.3	1.86	28.57
	중층	125	41.6	31.2	16.8	10.4	72.8	27.2	1.96	32.00
	상층	93	33.0	38.5	22.0	6.6	71.4	28.6	2.02	34.07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7.4	36.6	16.3	9.8	74.0	26.0	1.98	32.79
	모르고 있었음	115	38.6	34.2	19.3	7.9	72.8	27.2	1.96	32.16
정치 이념	진보	78	40.3	27.3	15.6	16.9	67.5	32.5	2.09	36.36
	중도	96	31.6	45.3	18.9	4.2	76.8	23.2	1.96	31.93
	보수	60	45.0	30.0	18.3	6.7	75.0	25.0	1.87	28.89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9.0	34.0	17.5	9.5	73.0	27.0	1.98	32.50
	중층	35	28.6	45.7	20.0	5.7	74.3	25.7	2.03	34.29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29) 내 생각은 다른 우리민족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9.7	44.8	22.2	3.3	74.5	25.5	1.99	33.05	
성별	남성	79	26.6	39.2	27.8	6.3	65.8	34.2	2.14	37.97
	여성	161	31.3	47.5	19.4	1.9	78.8	21.3	1.92	30.62
연령	20대 이하	38	18.4	57.9	23.7	0.0	76.3	23.7	2.05	35.09
	30대	52	21.2	53.8	19.2	5.8	75.0	25.0	2.10	36.54
	40대	74	37.0	41.1	20.5	1.4	78.1	21.9	1.86	28.77
	50대	52	32.7	42.3	21.2	3.8	75.0	25.0	1.96	32.05
	60대 이상	24	37.5	20.8	33.3	8.3	58.3	41.7	2.12	37.50
결혼 상태	미혼	56	17.9	55.4	23.2	3.6	73.2	26.8	2.12	37.50
	기혼	112	34.2	45.0	17.1	3.6	79.3	20.7	1.90	30.03
	이혼, 사별 등	72	31.9	36.1	29.2	2.8	68.1	31.9	2.03	34.26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0.6	47.2	19.4	2.8	77.8	22.2	1.94	31.48
	6~10년 이하	84	31.3	42.2	24.1	2.4	73.5	26.5	1.98	32.53
	11~15년 이하	37	21.6	51.4	24.3	2.7	73.0	27.0	2.08	36.04
	16년 이상	47	31.9	40.4	21.3	6.4	72.3	27.7	2.02	34.04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25.5	50.9	20.0	3.6	76.4	23.6	2.02	33.94
	4~6년 이하	63	36.5	38.1	20.6	4.8	74.6	25.4	1.94	31.22
	7~9년 이하	85	29.8	50.0	20.2	0.0	79.8	20.2	1.90	30.16
	10년 이상	37	24.3	35.1	32.4	8.1	59.5	40.5	2.24	41.4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9.3	41.4	27.6	1.7	70.7	29.3	2.02	33.91
	고졸	111	28.8	46.8	21.6	2.7	75.7	24.3	1.98	32.73
	대졸 이상	70	31.9	44.9	18.8	4.3	76.8	23.2	1.96	31.88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2.6	51.9	22.6	2.8	74.5	25.5	2.06	35.22
	낮음	132	35.1	39.7	21.4	3.8	74.8	25.2	1.94	31.3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37.5	50.0	12.5	0.0	87.5	12.5	1.75	25.00
	중층	141	27.7	46.1	22.7	3.5	73.8	26.2	2.02	34.04
	상층	82	31.7	41.5	23.2	3.7	73.2	26.8	1.99	32.93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20.0	45.0	35.0	0.0	65.0	35.0	2.15	38.33
	중층	125	32.8	44.0	19.2	4.0	76.8	23.2	1.94	31.47
	상층	93	26.9	46.2	23.7	3.2	73.1	26.9	2.03	34.4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9.0	44.4	22.6	4.0	73.4	26.6	2.02	33.87
	모르고 있었음	115	30.7	44.7	21.9	2.6	75.4	24.6	1.96	32.16
정치 이념	진보	78	35.9	41.0	17.9	5.1	76.9	23.1	1.92	30.77
	중도	96	26.0	49.0	22.9	2.1	75.0	25.0	2.01	33.68
	보수	60	27.1	44.1	25.4	3.4	71.2	28.8	2.05	35.0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1.8	43.8	20.9	3.5	75.6	24.4	1.96	32.01
	중층	35	17.1	54.3	25.7	2.9	71.4	28.6	2.14	38.09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30) 나는 내 자신이 한민족(남북한 포함)답다고 생각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4.2	6.3	39.7	49.8	10.5	89.5	3.35	78.34	
성별	남성	79	2.6	6.5	39.0	51.9	9.1	90.9	3.40	80.09
	여성	161	5.0	6.3	40.0	48.8	11.3	88.8	3.33	77.50
연령	20대 이하	38	0.0	8.1	45.9	45.9	8.1	91.9	3.38	79.28
	30대	52	3.8	3.8	38.5	53.8	7.7	92.3	3.42	80.77
	40대	74	8.2	8.2	32.9	50.7	16.4	83.6	3.26	75.34
	50대	52	3.8	1.9	48.1	46.2	5.8	94.2	3.37	78.85
	60대 이상	24	0.0	13.0	34.8	52.2	13.0	87.0	3.39	79.71
결혼 상태	미혼	56	0.0	7.3	47.3	45.5	7.3	92.7	3.38	79.39
	기혼	112	2.7	5.4	33.9	58.0	8.0	92.0	3.47	82.44
	이혼, 사별 등	72	10.0	7.1	42.9	40.0	17.1	82.9	3.13	70.9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2.9	5.7	37.1	54.3	8.6	91.4	3.43	80.95
	6~10년 이하	84	7.2	7.2	43.4	42.2	14.5	85.5	3.20	73.49
	11~15년 이하	37	2.7	5.4	43.2	48.6	8.1	91.9	3.38	79.28
	16년 이상	47	2.1	6.4	34.0	57.4	8.5	91.5	3.47	82.2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7	5.6	38.9	51.9	9.3	90.7	3.39	79.63
	4~6년 이하	63	3.2	4.8	35.5	56.5	8.1	91.9	3.45	81.72
	7~9년 이하	85	6.0	8.3	41.7	44.0	14.3	85.7	3.24	74.60
	10년 이상	37	2.7	5.4	43.2	48.6	8.1	91.9	3.38	79.2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3.5	3.5	47.4	45.6	7.0	93.0	3.35	78.36
	고졸	111	5.5	6.4	37.3	50.9	11.8	88.2	3.34	77.88
	대졸 이상	70	2.9	8.7	37.7	50.7	11.6	88.4	3.36	78.74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5.7	6.6	44.3	43.4	12.3	87.7	3.25	75.16
	낮음	132	3.1	6.2	36.4	54.3	9.3	90.7	3.42	80.62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5.9	41.2	52.9	5.9	94.1	3.47	82.35
	중층	141	4.3	6.4	40.0	49.3	10.7	89.3	3.34	78.09
	상층	82	5.0	6.3	38.8	50.0	11.3	88.8	3.34	77.92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9.5	4.8	33.3	52.4	14.3	85.7	3.29	76.19
	중층	125	4.0	4.8	41.9	49.2	8.9	91.1	3.36	78.76
	상층	93	3.3	8.8	38.5	49.5	12.1	87.9	3.34	78.0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5	8.3	44.6	44.6	10.7	89.3	3.31	77.13
	모르고 있었음	115	6.1	4.3	33.9	55.7	10.4	89.6	3.39	79.71
정치 이념	진보	78	3.9	3.9	42.9	49.4	7.8	92.2	3.38	79.22
	중도	96	2.1	8.5	42.6	46.8	10.6	89.4	3.34	78.01
	보수	60	6.7	6.7	31.7	55.0	13.3	86.7	3.35	78.3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4.5	6.5	38.7	50.3	11.1	88.9	3.35	78.22
	중층	35	0.0	2.9	48.6	48.6	2.9	97.1	3.46	81.90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31) 나는 내 자신이 한민족(남북한 포함)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증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0	6.4	32.8	57.9	9.4	90.6	3.46	81.84	
성별	남성	79	2.6	7.7	32.1	57.7	10.3	89.7	3.45	81.62
	여성	161	3.2	5.7	33.1	58.0	8.9	91.1	3.46	81.95
연령	20대 이하	38	0.0	8.1	51.4	40.5	8.1	91.9	3.32	77.48
	30대	52	2.0	5.9	29.4	62.7	7.8	92.2	3.53	84.31
	40대	74	6.8	5.4	32.4	55.4	12.2	87.8	3.36	78.83
	50대	52	1.9	7.7	23.1	67.3	9.6	90.4	3.56	85.26
	60대 이상	24	0.0	4.8	33.3	61.9	4.8	95.2	3.57	85.71
결혼 상태	미혼	56	0.0	9.1	47.3	43.6	9.1	90.9	3.35	78.18
	기혼	112	3.6	7.2	23.4	65.8	10.8	89.2	3.51	83.78
	이혼, 사별 등	72	4.3	2.9	36.2	56.5	7.2	92.8	3.45	81.64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4.3	31.9	62.3	5.8	94.2	3.55	85.02
	6~10년 이하	84	3.6	7.2	30.1	59.0	10.8	89.2	3.45	81.53
	11~15년 이하	37	5.4	5.4	48.6	40.5	10.8	89.2	3.24	74.77
	16년 이상	47	2.2	8.7	26.1	63.0	10.9	89.1	3.50	83.3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9	5.7	30.2	62.3	7.5	92.5	3.53	84.28
	4~6년 이하	63	1.6	3.3	27.9	67.2	4.9	95.1	3.61	86.88
	7~9년 이하	85	4.8	7.1	34.5	53.6	11.9	88.1	3.37	78.97
	10년 이상	37	2.7	10.8	40.5	45.9	13.5	86.5	3.30	76.5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0.0	1.8	35.1	63.2	1.8	98.2	3.61	87.13
	고졸	111	2.8	8.3	36.1	52.8	11.1	88.9	3.39	79.63
	대졸 이상	70	5.8	7.2	26.1	60.9	13.0	87.0	3.42	80.68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9	8.7	39.4	49.0	11.5	88.5	3.35	78.20
	낮음	132	3.1	3.9	27.9	65.1	7.0	93.0	3.55	85.01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0.0	35.3	58.8	5.9	94.1	3.47	82.35
	중층	141	3.6	7.9	32.1	56.4	11.4	88.6	3.41	80.48
	상층	82	1.3	5.1	33.3	60.3	6.4	93.6	3.53	84.1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0.0	42.9	52.4	4.8	95.2	3.43	80.95
	중층	125	3.2	6.5	30.6	59.7	9.7	90.3	3.47	82.26
	상층	93	2.2	7.8	33.3	56.7	10.0	90.0	3.44	81.48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7	7.4	38.0	52.9	9.1	90.9	3.42	80.72
	모르고 있었음	115	4.4	4.4	27.4	63.7	8.8	91.2	3.50	83.48
정치 이념	진보	78	2.6	5.1	25.6	66.7	7.7	92.3	3.56	85.47
	중도	96	2.2	7.5	43.0	47.3	9.7	90.3	3.35	78.49
	보수	60	5.1	6.8	25.4	62.7	11.9	88.1	3.46	81.9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6	6.6	32.0	57.9	10.2	89.8	3.44	81.39
	중층	35	0.0	5.7	34.3	60.0	5.7	94.3	3.54	84.76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32)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한민족(남북한 포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밝히지 않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40.3	35.2	16.5	8.1	75.4	24.6	1.92	30.79	
성별	남성	79	47.4	30.8	16.7	5.1	78.2	21.8	1.79	26.50
	여성	161	36.7	37.3	16.5	9.5	74.1	25.9	1.99	32.91
연령	20대 이하	38	36.8	39.5	18.4	5.3	76.3	23.7	1.92	30.70
	30대	52	45.1	41.2	9.8	3.9	86.3	13.7	1.73	24.18
	40대	74	38.4	35.6	16.4	9.6	74.0	26.0	1.97	32.42
	50대	52	46.2	32.7	13.5	7.7	78.8	21.2	1.83	27.56
결혼 상태	60대 이상	24	27.3	18.2	36.4	18.2	45.5	54.5	2.45	48.48
	미혼	56	39.3	33.9	17.9	8.9	73.2	26.8	1.96	32.14
	기혼	112	44.5	39.1	10.0	6.4	83.6	16.4	1.78	26.06
탈북 이후 기간	이혼, 사별 등	72	34.3	30.0	25.7	10.0	64.3	35.7	2.11	37.14
	5년 이하	72	42.9	27.1	25.7	4.3	70.0	30.0	1.91	30.48
	6~10년 이하	84	40.5	32.1	15.5	11.9	72.6	27.4	1.99	32.94
	11~15년 이하	37	33.3	50.0	11.1	5.6	83.3	16.7	1.89	29.63
남한 거주 기간	16년 이상	47	41.3	41.3	8.7	8.7	82.6	17.4	1.85	28.26
	3년 이하	55	49.1	32.1	13.2	5.7	81.1	18.9	1.75	25.16
	4~6년 이하	63	37.7	26.2	27.9	8.2	63.9	36.1	2.07	35.52
	7~9년 이하	85	35.3	40.0	14.1	10.6	75.3	24.7	2.00	33.33
탈북전 학력	10년 이상	37	43.2	43.2	8.1	5.4	86.5	13.5	1.76	25.22
	중졸 이하	58	36.2	34.5	24.1	5.2	70.7	29.3	1.98	32.76
	고졸	111	41.8	35.5	15.5	7.3	77.3	22.7	1.88	29.39
탈북전 총성심	대졸 이상	70	41.2	35.3	11.8	11.8	76.5	23.5	1.94	31.37
	높음	106	32.0	39.8	22.3	5.8	71.8	28.2	2.02	33.98
탈북전 경제계층	낮음	132	46.6	31.3	12.2	9.9	77.9	22.1	1.85	28.50
	하층	17	29.4	41.2	23.5	5.9	70.6	29.4	2.06	35.29
	중층	141	44.6	34.5	13.7	7.2	79.1	20.9	1.83	27.82
탈북전 정치계층	상층	82	35.0	35.0	20.0	10.0	70.0	30.0	2.05	35.00
	하층	21	45.0	35.0	10.0	10.0	80.0	20.0	1.85	28.33
	중층	125	43.2	35.2	14.4	7.2	78.4	21.6	1.86	28.53
탈북전 남한정보	상층	93	35.2	35.2	20.9	8.8	70.3	29.7	2.03	34.43
	알고 있었음	124	40.5	32.2	19.0	8.3	72.7	27.3	1.95	31.68
정치 이념	모르고 있었음	115	40.4	37.7	14.0	7.9	78.1	21.9	1.89	29.82
	진보	78	39.0	36.4	15.6	9.1	75.3	24.7	1.95	31.60
	중도	96	36.2	39.4	17.0	7.4	75.5	24.5	1.96	31.91
탈북후 경제 계층	보수	60	46.7	28.3	18.3	6.7	75.0	25.0	1.85	28.33
	하층	202	40.9	32.8	17.7	8.6	73.7	26.3	1.94	31.31
	중층	35	34.3	51.4	8.6	5.7	85.7	14.3	1.86	28.57
	상층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0

문33) 나는 남한의 전반적 정치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1	35.0	44.7	7.2	48.1	51.9	2.46	48.66	
성별	남성	79	5.1	34.2	51.9	8.9	39.2	60.8	2.65	54.85
	여성	161	17.1	35.4	41.1	6.3	52.5	47.5	2.37	45.57
연령	20대 이하	38	10.5	36.8	50.0	2.6	47.4	52.6	2.45	48.25
	30대	52	11.8	35.3	43.1	9.8	47.1	52.9	2.51	50.33
	40대	74	14.9	37.8	39.2	8.1	52.7	47.3	2.41	46.85
	50대	52	7.7	32.7	55.8	3.8	40.4	59.6	2.56	51.92
	60대 이상	24	27.3	27.3	31.8	13.6	54.5	45.5	2.32	43.94
결혼 상태	미혼	56	5.4	42.9	48.2	3.6	48.2	51.8	2.50	50.00
	기혼	112	12.6	30.6	47.7	9.0	43.2	56.8	2.53	51.05
	이혼, 사별 등	72	20.0	35.7	37.1	7.1	55.7	44.3	2.31	43.81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5.5	36.6	43.7	4.2	52.1	47.9	2.37	45.54
	6~10년 이하	84	9.6	33.7	45.8	10.8	43.4	56.6	2.58	52.61
	11~15년 이하	37	13.9	36.1	47.2	2.8	50.0	50.0	2.39	46.30
	16년 이상	47	14.9	34.0	42.6	8.5	48.9	51.1	2.45	48.2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5	35.2	42.6	3.7	53.7	46.3	2.31	43.83
	4~6년 이하	63	14.5	32.3	50.0	3.2	46.8	53.2	2.42	47.31
	7~9년 이하	85	11.9	36.9	41.7	9.5	48.8	51.2	2.49	49.60
	10년 이상	37	5.4	35.1	45.9	13.5	40.5	59.5	2.68	55.8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4.0	31.6	49.1	5.3	45.6	54.4	2.46	48.54
	고졸	111	15.3	37.8	38.7	8.1	53.2	46.8	2.40	46.55
	대졸 이상	70	8.8	33.8	50.0	7.4	42.6	57.4	2.56	51.96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13.3	33.3	46.7	6.7	46.7	53.3	2.47	48.89
	낮음	132	13.1	36.9	42.3	7.7	50.0	50.0	2.45	48.2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8.8	31.3	31.3	18.8	50.0	50.0	2.50	50.00
	중층	141	9.3	36.4	47.1	7.1	45.7	54.3	2.52	50.71
	상층	82	18.5	33.3	43.2	4.9	51.9	48.1	2.35	44.86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21.1	36.8	31.6	10.5	57.9	42.1	2.32	43.86
	중층	125	8.8	34.4	48.8	8.0	43.2	56.8	2.56	52.00
	상층	93	17.4	35.9	42.4	4.3	53.3	46.7	2.34	44.56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9.0	43.0	33.1	5.0	62.0	38.0	2.24	41.32
	모르고 있었음	115	7.0	27.0	56.5	9.6	33.9	66.1	2.69	56.23
정치 이념	진보	78	11.7	35.1	49.4	3.9	46.8	53.2	2.45	48.48
	중도	96	13.8	42.6	39.4	4.3	56.4	43.6	2.34	44.68
	보수	60	11.7	25.0	48.3	15.0	36.7	63.3	2.67	55.56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4.6	34.7	42.7	8.0	49.2	50.8	2.44	48.07
	중층	35	2.9	40.0	54.3	2.9	42.9	57.1	2.57	52.38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34) 민주주의를 하려면 의견이 다른 여러 개의 당(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5.4	17.5	35.8	41.3	22.9	77.1	3.13	70.97	
성별	남성	79	3.8	8.9	34.2	53.2	12.7	87.3	3.37	78.90
	여성	161	6.2	21.7	36.6	35.4	28.0	72.0	3.01	67.08
연령	20대 이하	38	2.6	13.2	42.1	42.1	15.8	84.2	3.24	74.56
	30대	52	1.9	17.3	40.4	40.4	19.2	80.8	3.19	73.08
	40대	74	6.8	21.6	31.1	40.5	28.4	71.6	3.05	68.47
	50대	52	7.7	19.2	40.4	32.7	26.9	73.1	2.98	66.02
	60대 이상	24	8.3	8.3	20.8	62.5	16.7	83.3	3.38	79.17
결혼 상태	미혼	56	3.6	14.3	35.7	46.4	17.9	82.1	3.25	75.00
	기혼	112	6.3	15.2	37.5	41.1	21.4	78.6	3.13	71.13
	이혼, 사별 등	72	5.6	23.6	33.3	37.5	29.2	70.8	3.03	67.5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6.9	19.4	23.6	50.0	26.4	73.6	3.17	72.22
	6~10년 이하	84	4.8	16.7	42.9	35.7	21.4	78.6	3.10	69.84
	11~15년 이하	37	5.4	21.6	45.9	27.0	27.0	73.0	2.95	64.86
	16년 이상	47	4.3	12.8	34.0	48.9	17.0	83.0	3.28	75.89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7.3	21.8	25.5	45.5	29.1	70.9	3.09	69.70
	4~6년 이하	63	3.2	17.5	38.1	41.3	20.6	79.4	3.17	72.49
	7~9년 이하	85	8.2	16.5	40.0	35.3	24.7	75.3	3.02	67.45
	10년 이상	37	0.0	13.5	37.8	48.6	13.5	86.5	3.35	78.3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6.9	8.6	43.1	41.4	15.5	84.5	3.19	72.99
	고졸	111	2.7	20.7	38.7	37.8	23.4	76.6	3.12	70.57
	대졸 이상	70	8.6	18.6	25.7	47.1	27.1	72.9	3.11	70.48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4.7	18.9	34.0	42.5	23.6	76.4	3.14	71.38
	낮음	132	6.1	16.7	37.1	40.2	22.7	77.3	3.11	70.4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1.8	35.3	47.1	17.6	82.4	3.24	74.51
	중층	141	5.0	17.0	37.6	40.4	22.0	78.0	3.13	71.16
	상층	82	6.1	19.5	32.9	41.5	25.6	74.4	3.10	69.92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14.3	47.6	33.3	19.0	81.0	3.10	69.84
	중층	125	5.6	16.0	39.2	39.2	21.6	78.4	3.12	70.67
	상층	93	5.4	19.4	29.0	46.2	24.7	75.3	3.16	72.04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7.3	16.9	39.5	36.3	24.2	75.8	3.05	68.28
	모르고 있었음	115	3.5	18.3	32.2	46.1	21.7	78.3	3.21	73.62
정치 이념	진보	78	3.8	12.8	41.0	42.3	16.7	83.3	3.22	73.93
	중도	96	5.2	25.0	36.5	33.3	30.2	69.8	2.98	65.97
	보수	60	8.3	10.0	28.3	53.3	18.3	81.7	3.27	75.55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5.4	17.3	33.2	44.1	22.8	77.2	3.16	71.95
	중층	35	5.7	20.0	45.7	28.6	25.7	74.3	2.97	65.71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35) 모든 당(정당)들에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7.9	22.1	35.8	34.2	30.0	70.0	2.96	65.42	
성별	남성	79	10.1	16.5	31.6	41.8	26.6	73.4	3.05	68.35
	여성	161	6.8	24.8	37.9	30.4	31.7	68.3	2.92	63.97
연령	20대 이하	38	5.3	23.7	34.2	36.8	28.9	71.1	3.03	67.54
	30대	52	1.9	26.9	32.7	38.5	28.8	71.2	3.08	69.23
	40대	74	12.2	18.9	43.2	25.7	31.1	68.9	2.82	60.81
	50대	52	7.7	28.8	32.7	30.8	36.5	63.5	2.87	62.18
	60대 이상	24	12.5	4.2	29.2	54.2	16.7	83.3	3.25	75.00
결혼 상태	미혼	56	5.4	21.4	35.7	37.5	26.8	73.2	3.05	68.45
	기혼	112	9.8	20.5	34.8	34.8	30.4	69.6	2.95	64.88
	이혼, 사별 등	72	6.9	25.0	37.5	30.6	31.9	68.1	2.92	63.8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8.3	22.2	30.6	38.9	30.6	69.4	3.00	66.67
	6~10년 이하	84	7.1	22.6	40.5	29.8	29.8	70.2	2.93	64.29
	11~15년 이하	37	13.5	27.0	32.4	27.0	40.5	59.5	2.73	57.66
	16년 이상	47	4.3	17.0	38.3	40.4	21.3	78.7	3.15	71.6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7.3	23.6	36.4	32.7	30.9	69.1	2.95	64.85
	4~6년 이하	63	6.3	19.0	36.5	38.1	25.4	74.6	3.06	68.78
	7~9년 이하	85	11.8	23.5	34.1	30.6	35.3	64.7	2.84	61.18
	10년 이상	37	2.7	21.6	37.8	37.8	24.3	75.7	3.11	70.2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6.9	17.2	32.8	43.1	24.1	75.9	3.12	70.69
	고졸	111	5.4	25.2	39.6	29.7	30.6	69.4	2.94	64.56
	대졸 이상	70	12.9	21.4	32.9	32.9	34.3	65.7	2.86	61.90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4.7	26.4	33.0	35.8	31.1	68.9	3.00	66.67
	낮음	132	10.6	18.2	38.6	32.6	28.8	71.2	2.93	64.39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7.6	41.2	29.4	29.4	70.6	2.88	62.74
	중층	141	8.5	25.5	32.6	33.3	34.0	66.0	2.91	63.59
	상층	82	6.1	17.1	40.2	36.6	23.2	76.8	3.07	69.10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9.5	14.3	47.6	28.6	23.8	76.2	2.95	65.08
	중층	125	10.4	22.4	39.2	28.0	32.8	67.2	2.85	61.60
	상층	93	4.3	23.7	28.0	44.1	28.0	72.0	3.12	70.6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6.5	23.4	37.1	33.1	29.8	70.2	2.97	65.59
	모르고 있었음	115	9.6	20.9	34.8	34.8	30.4	69.6	2.95	64.93
정치 이념	진보	78	7.7	16.7	43.6	32.1	24.4	75.6	3.00	66.67
	중도	96	9.4	22.9	38.5	29.2	32.3	67.7	2.88	62.50
	보수	60	6.7	28.3	21.7	43.3	35.0	65.0	3.02	67.2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6.4	22.8	33.7	37.1	29.2	70.8	3.01	67.16
	중층	35	14.3	20.0	51.4	14.3	34.3	65.7	2.66	55.24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36) 하나의 당(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가 잘 안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6.8	20.3	43.0	30.0	27.0	73.0	2.96	65.40	
성별	남성	79	7.6	21.5	38.0	32.9	29.1	70.9	2.96	65.40
	여성	161	6.3	19.6	45.6	28.5	25.9	74.1	2.96	65.40
연령	20대 이하	38	2.7	24.3	45.9	27.0	27.0	73.0	2.97	65.77
	30대	52	2.0	21.6	43.1	33.3	23.5	76.5	3.08	69.28
	40대	74	9.5	17.6	43.2	29.7	27.0	73.0	2.93	64.41
	50대	52	7.7	26.9	40.4	25.0	34.6	65.4	2.83	60.90
	60대 이상	24	13.0	4.3	43.5	39.1	17.4	82.6	3.09	69.56
결혼 상태	미혼	56	7.1	23.2	46.4	23.2	30.4	69.6	2.86	61.90
	기혼	112	8.1	18.0	36.0	37.8	26.1	73.9	3.04	67.87
	이혼, 사별 등	72	4.3	21.4	51.4	22.9	25.7	74.3	2.93	64.2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7.0	19.7	47.9	25.4	26.8	73.2	2.92	63.85
	6~10년 이하	84	9.5	16.7	45.2	28.6	26.2	73.8	2.93	64.29
	11~15년 이하	37	5.6	33.3	30.6	30.6	38.9	61.1	2.86	62.04
	16년 이상	47	2.2	17.4	41.3	39.1	19.6	80.4	3.17	72.4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6	21.8	47.3	27.3	25.5	74.5	2.98	66.06
	4~6년 이하	63	10.0	21.7	40.0	28.3	31.7	68.3	2.87	62.22
	7~9년 이하	85	8.2	18.8	43.5	29.4	27.1	72.9	2.94	64.71
	10년 이상	37	2.7	18.9	40.5	37.8	21.6	78.4	3.14	71.1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22.4	48.3	27.6	24.1	75.9	3.02	67.24
	고졸	111	8.2	19.1	43.6	29.1	27.3	72.7	2.94	64.54
	대졸 이상	70	8.7	20.3	37.7	33.3	29.0	71.0	2.96	65.22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4.8	20.2	48.1	26.9	25.0	75.0	2.97	65.70
	낮음	132	8.4	20.6	38.9	32.1	29.0	71.0	2.95	64.88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1.8	47.1	35.3	17.6	82.4	3.12	70.59
	중층	141	10.0	20.0	40.7	29.3	30.0	70.0	2.89	63.09
	상층	82	1.3	22.5	46.3	30.0	23.8	76.3	3.05	68.33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10.0	50.0	30.0	20.0	80.0	3.00	66.67
	중층	125	9.6	20.8	41.6	28.0	30.4	69.6	2.88	62.67
	상층	93	2.2	22.0	44.0	31.9	24.2	75.8	3.05	68.50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9	23.0	45.1	27.0	27.9	72.1	2.94	64.75
	모르고 있었음	115	8.8	16.7	41.2	33.3	25.4	74.6	2.99	66.37
정치 이념	진보	78	6.4	21.8	39.7	32.1	28.2	71.8	2.97	65.81
	중도	96	4.3	20.2	51.1	24.5	24.5	75.5	2.96	65.25
	보수	60	11.9	18.6	35.6	33.9	30.5	69.5	2.92	63.84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6.5	17.0	46.0	30.5	23.5	76.5	3.00	66.83
	중층	35	8.6	40.0	22.9	28.6	48.6	51.4	2.71	57.14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37) 야당(현재 집권하지 못한 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8	10.5	35.9	49.8	14.3	85.7	3.32	77.21	
성별	남성	79	3.8	12.7	39.2	44.3	16.5	83.5	3.24	74.68
	여성	161	3.8	9.5	34.2	52.5	13.3	86.7	3.35	78.48
연령	20대 이하	38	5.3	23.7	44.7	26.3	28.9	71.1	2.92	64.03
	30대	52	3.8	13.5	44.2	38.5	17.3	82.7	3.17	72.44
	40대	74	4.1	5.4	32.4	58.1	9.5	90.5	3.45	81.53
	50대	52	2.0	7.8	27.5	62.7	9.8	90.2	3.51	83.66
결혼 상태	60대 이상	24	4.5	4.5	31.8	59.1	9.1	90.9	3.45	81.82
	미혼	56	3.6	21.4	39.3	35.7	25.0	75.0	3.07	69.05
	기혼	112	2.7	4.5	34.8	58.0	7.1	92.9	3.48	82.74
이혼, 사별 등	이혼, 사별 등	72	5.8	11.6	34.8	47.8	17.4	82.6	3.25	74.88
	5년 이하	72	2.8	9.7	33.3	54.2	12.5	87.5	3.39	79.63
	6~10년 이하	84	4.8	13.3	37.3	44.6	18.1	81.9	3.22	73.89
탈북 이후 기간	11~15년 이하	37	2.8	13.9	41.7	41.7	16.7	83.3	3.22	74.07
	16년 이상	47	4.3	4.3	32.6	58.7	8.7	91.3	3.46	81.88
	3년 이하	55	0.0	10.9	36.4	52.7	10.9	89.1	3.42	80.61
남한 거주 기간	4~6년 이하	63	6.5	11.3	32.3	50.0	17.7	82.3	3.26	75.27
	7~9년 이하	85	3.6	11.9	39.3	45.2	15.5	84.5	3.26	75.40
	10년 이상	37	5.6	5.6	33.3	55.6	11.1	88.9	3.39	79.63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5.2	12.1	32.8	50.0	17.2	82.8	3.28	75.86
	고졸	111	3.6	10.0	36.4	50.0	13.6	86.4	3.33	77.57
	대졸 이상	70	2.9	10.3	38.2	48.5	13.2	86.8	3.32	77.45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4.7	13.2	40.6	41.5	17.9	82.1	3.19	72.96
	낮음	132	3.1	8.5	31.8	56.6	11.6	88.4	3.42	80.62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6.3	6.3	37.5	50.0	12.5	87.5	3.31	77.08
	중층	141	5.0	8.6	38.1	48.2	13.7	86.3	3.29	76.50
	상층	82	1.2	14.6	31.7	52.4	15.9	84.1	3.35	78.4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10.5	36.8	52.6	10.5	89.5	3.42	80.70
	중층	125	5.6	8.0	38.4	48.0	13.6	86.4	3.29	76.27
	상층	93	2.2	14.1	31.5	52.2	16.3	83.7	3.34	77.90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1	12.4	33.9	49.6	16.5	83.5	3.29	76.31
	모르고 있었음	115	3.5	8.7	37.4	50.4	12.2	87.8	3.35	78.26
정치 이념	진보	78	2.6	11.7	36.4	49.4	14.3	85.7	3.32	77.49
	중도	96	4.3	12.8	37.2	45.7	17.0	83.0	3.24	74.82
	보수	60	5.0	6.7	35.0	53.3	11.7	88.3	3.37	78.89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5	10.1	35.7	51.8	12.6	87.4	3.37	78.89
	중층	35	5.7	14.3	40.0	40.0	20.0	80.0	3.14	71.43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38) 자유가 많아 무질서한 사회에 사는 것보다 강력한 법질서로 운영되는 사회에 사는 것이 낫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5.0	17.2	34.7	43.1	22.2	77.8	3.16	71.97	
성별	남성	79	6.3	20.3	32.9	40.5	26.6	73.4	3.08	69.20
	여성	161	4.4	15.6	35.6	44.4	20.0	80.0	3.20	73.33
연령	20대 이하	38	5.3	28.9	31.6	34.2	34.2	65.8	2.95	64.91
	30대	52	3.8	23.1	32.7	40.4	26.9	73.1	3.10	69.87
	40대	74	8.1	13.5	41.9	36.5	21.6	78.4	3.07	68.92
	50대	52	1.9	9.6	36.5	51.9	11.5	88.5	3.38	79.49
	60대 이상	24	4.3	13.0	17.4	65.2	17.4	82.6	3.43	81.16
결혼 상태	미혼	56	3.6	21.4	35.7	39.3	25.0	75.0	3.11	70.24
	기혼	112	8.9	17.9	33.0	40.2	26.8	73.2	3.04	68.15
	이혼, 사별 등	72	0.0	12.7	36.6	50.7	12.7	87.3	3.38	79.34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2.8	19.4	29.2	48.6	22.2	77.8	3.24	74.54
	6~10년 이하	84	4.8	16.7	34.5	44.0	21.4	78.6	3.18	72.62
	11~15년 이하	37	8.3	11.1	44.4	36.1	19.4	80.6	3.08	69.44
	16년 이상	47	6.4	19.1	36.2	38.3	25.5	74.5	3.06	68.79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	27.3	32.7	38.2	29.1	70.9	3.07	69.09
	4~6년 이하	63	4.8	19.4	25.8	50.0	24.2	75.8	3.21	73.66
	7~9년 이하	85	4.7	10.6	40.0	44.7	15.3	84.7	3.25	74.90
	10년 이상	37	10.8	13.5	40.5	35.1	24.3	75.7	3.00	66.67
탈북전 희력	중졸 이하	58	6.9	19.0	39.7	34.5	25.9	74.1	3.02	67.24
	고졸	111	2.7	17.1	33.3	46.8	19.8	80.2	3.24	74.77
	대졸 이상	70	7.2	15.9	33.3	43.5	23.2	76.8	3.13	71.01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5.7	23.6	35.8	34.9	29.2	70.8	3.00	66.67
	낮음	132	4.6	12.2	34.4	48.9	16.8	83.2	3.27	75.8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11.8	29.4	58.8	11.8	88.2	3.47	82.35
	중층	141	7.9	14.3	37.9	40.0	22.1	77.9	3.10	70.00
	상층	82	1.2	23.2	30.5	45.1	24.4	75.6	3.20	73.1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0.0	45.0	50.0	5.0	95.0	3.40	80.00
	중층	125	8.0	14.4	32.8	44.8	22.4	77.6	3.14	71.47
	상층	93	1.1	23.7	35.5	39.8	24.7	75.3	3.14	71.33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9	16.3	39.0	39.8	21.1	78.9	3.14	71.27
	모르고 있었음	115	5.2	18.3	29.6	47.0	23.5	76.5	3.18	72.75
정치 이념	진보	78	6.4	11.5	37.2	44.9	17.9	82.1	3.21	73.50
	중도	96	2.1	22.1	32.6	43.2	24.2	75.8	3.17	72.28
	보수	60	8.3	16.7	35.0	40.0	25.0	75.0	3.07	68.89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4.5	16.4	33.3	45.8	20.9	79.1	3.20	73.47
	중층	35	8.6	20.0	45.7	25.7	28.6	71.4	2.89	62.86
	상층	2	0.0	0.0	0.0	100.0	0.0	100.0	4.00	100.00

문39) 시위는 무질서한 상태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시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위: %)

	시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1.8	34.9	32.8	20.6	46.6	53.4	2.62	54.06	
성별	남성	79	13.9	44.3	29.1	12.7	58.2	41.8	2.41	46.83
	여성	161	10.7	30.2	34.6	24.5	40.9	59.1	2.73	57.65
연령	20대 이하	38	15.8	50.0	23.7	10.5	65.8	34.2	2.29	42.98
	30대	52	11.5	34.6	42.3	11.5	46.2	53.8	2.54	51.28
	40대	74	10.8	31.1	31.1	27.0	41.9	58.1	2.74	58.11
	50대	52	5.8	32.7	34.6	26.9	38.5	61.5	2.83	60.90
	60대 이상	24	22.7	27.3	27.3	22.7	50.0	50.0	2.50	50.00
결혼 상태	미혼	56	12.5	53.6	21.4	12.5	66.1	33.9	2.34	44.64
	기혼	112	13.4	29.5	37.5	19.6	42.9	57.1	2.63	54.46
	이혼, 사별 등	72	8.6	28.6	34.3	28.6	37.1	62.9	2.83	60.9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2.5	40.3	29.2	18.1	52.8	47.2	2.53	50.93
	6~10년 이하	84	11.9	29.8	31.0	27.4	41.7	58.3	2.74	57.94
	11~15년 이하	37	13.9	36.1	41.7	8.3	50.0	50.0	2.44	48.15
	16년 이상	47	8.7	34.8	34.8	21.7	43.5	56.5	2.70	56.52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9.3	44.4	33.3	13.0	53.7	46.3	2.50	50.00
	4~6년 이하	63	12.9	33.9	27.4	25.8	46.8	53.2	2.66	55.38
	7~9년 이하	85	11.8	27.1	35.3	25.9	38.8	61.2	2.75	58.43
	10년 이상	37	13.5	40.5	35.1	10.8	54.1	45.9	2.43	47.7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8.8	29.8	36.8	24.6	38.6	61.4	2.77	59.06
	고졸	111	14.4	39.6	25.2	20.7	54.1	45.9	2.52	50.75
	대졸 이상	70	10.1	31.9	40.6	17.4	42.0	58.0	2.65	55.07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8.6	41.0	34.3	16.2	49.5	50.5	2.58	52.70
	낮음	132	13.7	30.5	31.3	24.4	44.3	55.7	2.66	55.47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23.5	35.3	29.4	35.3	64.7	2.82	60.78
	중층	141	10.7	37.1	34.3	17.9	47.9	52.1	2.59	53.09
	상층	82	13.6	33.3	29.6	23.5	46.9	53.1	2.63	54.32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20.0	20.0	45.0	15.0	40.0	60.0	2.55	51.67
	중층	125	12.0	40.0	28.8	19.2	52.0	48.0	2.55	51.73
	상층	93	9.8	31.5	35.9	22.8	41.3	58.7	2.72	57.25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1.5	36.9	32.0	19.7	48.4	51.6	2.60	53.28
	모르고 있었음	115	12.2	33.0	33.0	21.7	45.2	54.8	2.64	54.78
정치 이념	진보	78	6.4	28.2	38.5	26.9	34.6	65.4	2.86	61.97
	중도	96	16.8	40.0	28.4	14.7	56.8	43.2	2.41	47.02
	보수	60	11.7	38.3	31.7	18.3	50.0	50.0	2.57	52.2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1.5	35.0	32.0	21.5	46.5	53.5	2.63	54.50
	중층	35	11.4	37.1	40.0	11.4	48.6	51.4	2.51	50.48
	상층	2	0.0	0.0	0.0	100.0	0.0	100.0	4.00	100.00

문40)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0.9	28.2	30.7	30.3	39.1	60.9	2.80	60.08	
성별	남성	79	14.1	28.2	25.6	32.1	42.3	57.7	2.76	58.55
	여성	161	9.4	28.1	33.1	29.4	37.5	62.5	2.82	60.83
연령	20대 이하	38	18.4	44.7	26.3	10.5	63.2	36.8	2.29	42.98
	30대	52	13.5	48.1	26.9	11.5	61.5	38.5	2.37	45.51
	40대	74	4.2	22.2	34.7	38.9	26.4	73.6	3.08	69.44
	50대	52	7.7	13.5	38.5	40.4	21.2	78.8	3.12	70.51
	60대 이상	24	20.8	8.3	16.7	54.2	29.2	70.8	3.04	68.05
결혼 상태	미혼	56	21.4	41.1	25.0	12.5	62.5	37.5	2.29	42.86
	기혼	112	6.4	28.2	32.7	32.7	34.5	65.5	2.92	63.94
	이혼, 사별 등	72	9.7	18.1	31.9	40.3	27.8	72.2	3.03	67.5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9.7	22.2	34.7	33.3	31.9	68.1	2.92	63.89
	6~10년 이하	84	12.0	27.7	26.5	33.7	39.8	60.2	2.82	60.64
	11~15년 이하	37	10.8	37.8	29.7	21.6	48.6	51.4	2.62	54.05
	16년 이상	47	10.9	30.4	32.6	26.1	41.3	58.7	2.74	57.9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9.1	25.5	40.0	25.5	34.5	65.5	2.82	60.61
	4~6년 이하	63	11.1	25.4	25.4	38.1	36.5	63.5	2.90	63.49
	7~9년 이하	85	14.5	28.9	27.7	28.9	43.4	56.6	2.71	57.03
	10년 이상	37	5.4	35.1	32.4	27.0	40.5	59.5	2.81	60.3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0.3	25.9	39.7	24.1	36.2	63.8	2.78	59.19
	고졸	111	10.8	36.0	21.6	31.5	46.8	53.2	2.74	57.96
	대졸 이상	70	10.3	17.6	38.2	33.8	27.9	72.1	2.96	65.20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13.3	30.5	35.2	21.0	43.8	56.2	2.64	54.60
	낮음	132	9.2	26.0	27.5	37.4	35.1	64.9	2.93	64.38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47.1	11.8	35.3	52.9	47.1	2.76	58.82
	중층	141	8.6	29.5	33.8	28.1	38.1	61.9	2.81	60.43
	상층	82	15.9	22.0	29.3	32.9	37.8	62.2	2.79	59.76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9.5	33.3	28.6	28.6	42.9	57.1	2.76	58.73
	중층	125	8.1	31.7	30.1	30.1	39.8	60.2	2.82	60.70
	상층	93	15.1	22.6	32.3	30.1	37.6	62.4	2.77	59.14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2.2	34.1	26.0	27.6	46.3	53.7	2.69	56.37
	모르고 있었음	115	9.6	21.9	35.1	33.3	31.6	68.4	2.92	64.03
정치 이념	진보	78	7.8	23.4	28.6	40.3	31.2	68.8	3.01	67.10
	중도	96	15.8	31.6	31.6	21.1	47.4	52.6	2.58	52.63
	보수	60	8.3	30.0	33.3	28.3	38.3	61.7	2.82	60.55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1.5	26.0	32.0	30.5	37.5	62.5	2.82	60.50
	중층	35	8.6	40.0	25.7	25.7	48.6	51.4	2.69	56.19
	상층	2	0.0	0.0	0.0	100.0	0.0	100.0	4.00	100.00

문41) 내 주장이 옳다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61.7	24.6	11.3	2.5	86.3	13.8	1.55	18.19	
성별	남성	79	68.4	19.0	10.1	2.5	87.3	12.7	1.47	15.61
	여성	161	58.4	27.3	11.8	2.5	85.7	14.3	1.58	19.46
연령	20대 이하	38	60.5	28.9	5.3	5.3	89.5	10.5	1.55	18.42
	30대	52	63.5	23.1	13.5	0.0	86.5	13.5	1.50	16.67
	40대	74	58.1	29.7	9.5	2.7	87.8	12.2	1.57	18.92
	50대	52	75.0	15.4	7.7	1.9	90.4	9.6	1.37	12.18
	60대 이상	24	41.7	25.0	29.2	4.2	66.7	33.3	1.96	31.94
결혼 상태	미혼	56	60.7	26.8	8.9	3.6	87.5	12.5	1.55	18.45
	기혼	112	64.3	24.1	10.7	0.9	88.4	11.6	1.48	16.07
	이혼, 사별 등	72	58.3	23.6	13.9	4.2	81.9	18.1	1.64	21.30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51.4	29.2	15.3	4.2	80.6	19.4	1.72	24.07
	6~10년 이하	84	65.5	21.4	10.7	2.4	86.9	13.1	1.50	16.67
	11~15년 이하	37	64.9	27.0	8.1	0.0	91.9	8.1	1.43	14.41
	16년 이상	47	68.1	21.3	8.5	2.1	89.4	10.6	1.45	14.89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63.6	25.5	9.1	1.8	89.1	10.9	1.49	16.36
	4~6년 이하	63	57.1	25.4	12.7	4.8	82.5	17.5	1.65	21.69
	7~9년 이하	85	64.7	21.2	11.8	2.4	85.9	14.1	1.52	17.25
	10년 이상	37	59.5	29.7	10.8	0.0	89.2	10.8	1.51	17.12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60.3	29.3	3.4	6.9	89.7	10.3	1.57	18.97
	고졸	111	62.2	23.4	14.4	0.0	85.6	14.4	1.52	17.42
	대졸 이상	70	62.9	21.4	12.9	2.9	84.3	15.7	1.56	18.57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60.4	21.7	15.1	2.8	82.1	17.9	1.60	20.13
	낮음	132	62.1	27.3	8.3	2.3	89.4	10.6	1.51	16.92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82.4	11.8	5.9	0.0	94.1	5.9	1.24	7.84
	중층	141	60.3	24.8	13.5	1.4	85.1	14.9	1.56	18.68
	상층	82	59.8	26.8	8.5	4.9	86.6	13.4	1.59	19.51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7.1	33.3	9.5	0.0	90.5	9.5	1.52	17.46
	중층	125	64.0	21.6	13.6	0.8	85.6	14.4	1.51	17.07
	상층	93	60.2	26.9	7.5	5.4	87.1	12.9	1.58	19.35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58.9	26.6	12.1	2.4	85.5	14.5	1.58	19.35
	모르고 있었음	115	64.3	22.6	10.4	2.6	87.0	13.0	1.51	17.10
정치 이념	진보	78	64.1	24.4	10.3	1.3	88.5	11.5	1.49	16.24
	중도	96	62.5	24.0	12.5	1.0	86.5	13.5	1.52	17.36
	보수	60	56.7	26.7	10.0	6.7	83.3	16.7	1.67	22.2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61.9	24.3	10.9	3.0	86.1	13.9	1.55	18.32
	중층	35	60.0	28.6	11.4	0.0	88.6	11.4	1.51	17.14
	상층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0

문42) 나는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3.8	4.6	36.8	54.8	8.4	91.6	3.43	80.89	
성별	남성	79	2.5	2.5	31.6	63.3	5.1	94.9	3.56	85.23
	여성	161	4.4	5.6	39.4	50.6	10.0	90.0	3.36	78.75
연령	20대 이하	38	0.0	2.6	34.2	63.2	2.6	97.4	3.61	86.84
	30대	52	1.9	9.6	32.7	55.8	11.5	88.5	3.42	80.77
	40대	74	5.4	5.4	33.8	55.4	10.8	89.2	3.39	79.73
	50대	52	7.7	1.9	38.5	51.9	9.6	90.4	3.35	78.20
	60대 이상	24	0.0	0.0	56.5	43.5	0.0	100.0	3.43	81.16
결혼 상태	미혼	56	0.0	1.8	44.6	53.6	1.8	98.2	3.52	83.93
	기혼	112	4.5	3.6	33.0	58.9	8.0	92.0	3.46	82.14
	이혼, 사별 등	72	5.6	8.5	36.6	49.3	14.1	85.9	3.30	76.5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2.8	2.8	37.5	56.9	5.6	94.4	3.49	82.87
	6~10년 이하	84	1.2	8.3	38.1	52.4	9.5	90.5	3.42	80.55
	11~15년 이하	37	11.1	0.0	33.3	55.6	11.1	88.9	3.33	77.78
	16년 이상	47	4.3	4.3	36.2	55.3	8.5	91.5	3.43	80.85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7.3	3.6	41.8	47.3	10.9	89.1	3.29	76.36
	4~6년 이하	63	0.0	4.8	33.9	61.3	4.8	95.2	3.56	85.48
	7~9년 이하	85	3.5	3.5	41.2	51.8	7.1	92.9	3.41	80.39
	10년 이상	37	5.4	8.1	24.3	62.2	13.5	86.5	3.43	81.0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5.2	43.1	50.0	6.9	93.1	3.41	80.46
	고졸	111	3.6	4.5	35.1	56.8	8.1	91.9	3.45	81.68
	대졸 이상	70	5.8	4.3	34.8	55.1	10.1	89.9	3.39	79.71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1.9	6.6	40.6	50.9	8.5	91.5	3.41	80.19
	낮음	132	5.3	3.1	34.4	57.3	8.4	91.6	3.44	81.17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0.0	23.5	70.6	5.9	94.1	3.59	86.27
	중층	141	3.6	3.6	39.3	53.6	7.1	92.9	3.43	80.95
	상층	82	3.7	7.3	35.4	53.7	11.0	89.0	3.39	79.6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0.0	20.0	70.0	10.0	90.0	3.50	83.33
	중층	125	4.0	5.6	37.6	52.8	9.6	90.4	3.39	79.73
	상층	93	2.2	4.3	39.8	53.8	6.5	93.5	3.45	81.7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3.3	4.9	41.5	50.4	8.1	91.9	3.39	79.67
	모르고 있었음	115	4.3	4.3	31.3	60.0	8.7	91.3	3.47	82.32
정치 이념	진보	78	2.6	7.7	38.5	51.3	10.3	89.7	3.38	79.49
	중도	96	5.3	3.2	42.1	49.5	8.4	91.6	3.36	78.60
	보수	60	1.7	3.3	26.7	68.3	5.0	95.0	3.62	87.22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3.0	5.5	37.3	54.2	8.5	91.5	3.43	80.93
	중층	35	8.6	0.0	34.3	57.1	8.6	91.4	3.40	80.00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43) 나는 우리 지구(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3.1	28.2	28.6	20.2	51.3	48.7	2.46	48.60	
성별	남성	79	21.8	26.9	21.8	29.5	48.7	51.3	2.59	52.99
	여성	161	23.8	28.7	31.9	15.6	52.5	47.5	2.39	46.46
연령	20대 이하	38	28.9	39.5	21.1	10.5	68.4	31.6	2.13	37.72
	30대	52	15.7	31.4	33.3	19.6	47.1	52.9	2.57	52.29
	40대	74	14.9	25.7	33.8	25.7	40.5	59.5	2.70	56.76
	50대	52	32.7	25.0	23.1	19.2	57.7	42.3	2.29	42.95
	60대 이상	24	34.8	17.4	26.1	21.7	52.2	47.8	2.35	44.93
결혼 상태	미혼	56	26.8	37.5	23.2	12.5	64.3	35.7	2.21	40.48
	기혼	112	14.4	27.9	33.3	24.3	42.3	57.7	2.68	55.86
	이혼, 사별 등	72	33.8	21.1	25.4	19.7	54.9	45.1	2.31	43.66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5.2	31.0	21.1	12.7	66.2	33.8	2.11	37.09
	6~10년 이하	84	15.5	31.0	31.0	22.6	46.4	53.6	2.61	53.57
	11~15년 이하	37	27.8	25.0	27.8	19.4	52.8	47.2	2.39	46.30
	16년 이상	47	14.9	21.3	36.2	27.7	36.2	63.8	2.77	58.8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3.3	33.3	20.4	13.0	66.7	33.3	2.13	37.65
	4~6년 이하	63	27.4	30.6	25.8	16.1	58.1	41.9	2.31	43.55
	7~9년 이하	85	20.0	24.7	34.1	21.2	44.7	55.3	2.56	52.16
	10년 이상	37	8.1	24.3	32.4	35.1	32.4	67.6	2.95	64.8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9.3	32.8	25.9	12.1	62.1	37.9	2.21	40.23
	고졸	111	26.1	30.6	25.2	18.0	56.8	43.2	2.35	45.04
	대졸 이상	70	13.2	20.6	36.8	29.4	33.8	66.2	2.82	60.78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30.5	21.9	28.6	19.0	52.4	47.6	2.36	45.40
	낮음	132	17.6	33.6	27.5	21.4	51.1	48.9	2.53	50.89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35.3	29.4	17.6	17.6	64.7	35.3	2.18	39.22
	중층	141	20.9	27.3	30.2	21.6	48.2	51.8	2.53	50.84
	상층	82	24.4	29.3	28.0	18.3	53.7	46.3	2.40	46.7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5.0	40.0	30.0	15.0	55.0	45.0	2.45	48.33
	중층	125	21.8	29.0	26.6	22.6	50.8	49.2	2.50	50.00
	상층	93	25.8	24.7	31.2	18.3	50.5	49.5	2.42	47.3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6.8	27.6	28.5	17.1	54.5	45.5	2.36	45.26
	모르고 있었음	115	19.3	28.9	28.1	23.7	48.2	51.8	2.56	52.05
정치 이념	진보	78	24.4	30.8	28.2	16.7	55.1	44.9	2.37	45.73
	중도	96	21.1	33.7	25.3	20.0	54.7	45.3	2.44	48.07
	보수	60	20.3	18.6	33.9	27.1	39.0	61.0	2.68	55.9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3.0	28.0	27.5	21.5	51.0	49.0	2.48	49.17
	중층	35	20.0	31.4	34.3	14.3	51.4	48.6	2.43	47.62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44)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참가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1.3	14.6	28.5	45.6	25.9	74.1	3.08	69.46	
성별	남성	79	11.5	12.8	25.6	50.0	24.4	75.6	3.14	71.37
	여성	161	11.2	15.5	29.8	43.5	26.7	73.3	3.06	68.53
연령	20대 이하	38	13.2	18.4	36.8	31.6	31.6	68.4	2.87	62.28
	30대	52	11.5	21.2	30.8	36.5	32.7	67.3	2.92	64.10
	40대	74	11.0	15.1	26.0	47.9	26.0	74.0	3.11	70.32
	50대	52	13.5	7.7	23.1	55.8	21.2	78.8	3.21	73.72
	60대 이상	24	4.2	8.3	29.2	58.3	12.5	87.5	3.42	80.55
결혼 상태	미혼	56	10.7	23.2	30.4	35.7	33.9	66.1	2.91	63.69
	기혼	112	6.3	13.5	25.2	55.0	19.8	80.2	3.29	76.28
	이혼, 사별 등	72	19.4	9.7	31.9	38.9	29.2	70.8	2.90	63.4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9.7	15.5	32.4	32.4	35.2	64.8	2.77	59.15
	6~10년 이하	84	7.1	11.9	28.6	52.4	19.0	81.0	3.26	75.40
	11~15년 이하	37	2.7	29.7	35.1	32.4	32.4	67.6	2.97	65.77
	16년 이상	47	12.8	6.4	17.0	63.8	19.1	80.9	3.32	77.30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1.5	13.0	31.5	24.1	44.4	55.6	2.48	49.38
	4~6년 이하	63	4.8	12.7	23.8	58.7	17.5	82.5	3.37	78.84
	7~9년 이하	85	3.5	20.0	35.3	41.2	23.5	76.5	3.14	71.37
	10년 이상	37	10.8	8.1	16.2	64.9	18.9	81.1	3.35	78.3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5.5	19.0	31.0	34.5	34.5	65.5	2.84	61.49
	고졸	111	12.6	17.1	28.8	41.4	29.7	70.3	2.99	66.37
	대졸 이상	70	5.8	7.2	26.1	60.9	13.0	87.0	3.42	80.68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14.3	18.1	34.3	33.3	32.4	67.6	2.87	62.22
	낮음	132	9.1	12.1	24.2	54.5	21.2	78.8	3.24	74.7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7.6	23.5	52.9	23.5	76.5	3.24	74.51
	중층	141	12.1	12.1	30.0	45.7	24.3	75.7	3.09	69.76
	상층	82	11.0	18.3	26.8	43.9	29.3	70.7	3.04	67.8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4.3	23.8	23.8	38.1	38.1	61.9	2.86	61.90
	중층	125	12.0	12.8	28.0	47.2	24.8	75.2	3.10	70.13
	상층	93	8.7	15.2	30.4	45.7	23.9	76.1	3.13	71.0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9.8	16.3	28.5	45.5	26.0	74.0	3.10	69.92
	모르고 있었음	115	13.0	13.0	28.7	45.2	26.1	73.9	3.06	68.69
정치 이념	진보	78	14.3	13.0	22.1	50.6	27.3	72.7	3.09	69.70
	중도	96	11.5	21.9	29.2	37.5	33.3	66.7	2.93	64.24
	보수	60	5.0	6.7	35.0	53.3	11.7	88.3	3.37	78.89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1.4	14.4	28.9	45.3	25.9	74.1	3.08	69.32
	중층	35	11.4	17.1	25.7	45.7	28.6	71.4	3.06	68.57
	상층	2	0.0	0.0	0.0	100.0	0.0	100.0	4.00	100.00

문45) 나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기관에 찾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0.9	13.0	43.1	33.1	23.8	76.2	2.98	66.11	
성별	남성	79	13.8	13.1	45.6	27.5	26.9	73.1	2.87	62.29
	여성	161	7.9	15.8	47.4	28.9	23.7	76.3	2.97	65.79
연령	20대 이하	38	3.9	7.8	43.1	45.1	11.8	88.2	3.29	76.47
	30대	52	12.2	13.5	43.2	31.1	25.7	74.3	2.93	64.41
	40대	74	17.3	15.4	42.3	25.0	32.7	67.3	2.75	58.33
	50대	52	12.5	12.5	37.5	37.5	25.0	75.0	3.00	66.67
	60대 이상	24	10.7	16.1	41.1	32.1	26.8	73.2	2.95	64.88
결혼 상태	미혼	56	9.0	8.1	45.9	36.9	17.1	82.9	3.11	70.27
	기혼	112	13.9	18.1	40.3	27.8	31.9	68.1	2.82	60.65
	이혼, 사별 등	72	9.7	19.4	38.9	31.9	29.2	70.8	2.93	64.3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7.1	13.1	45.2	34.5	20.2	79.8	3.07	69.05
	6~10년 이하	84	13.5	5.4	51.4	29.7	18.9	81.1	2.97	65.77
	11~15년 이하	37	17.4	8.7	39.1	34.8	26.1	73.9	2.91	63.77
	16년 이상	47	14.5	12.7	45.5	27.3	27.3	72.7	2.85	61.82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4.8	19.4	35.5	40.3	24.2	75.8	3.11	70.43
	4~6년 이하	63	11.8	10.6	47.1	30.6	22.4	77.6	2.96	65.49
	7~9년 이하	85	13.5	8.1	43.2	35.1	21.6	78.4	3.00	66.67
	10년 이상	37	8.6	17.2	44.8	29.3	25.9	74.1	2.95	64.9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1.7	13.5	45.9	28.8	25.2	74.8	2.92	63.96
	고졸	111	11.4	8.6	37.1	42.9	20.0	80.0	3.11	70.48
	대졸 이상	70	6.7	13.3	54.3	25.7	20.0	80.0	2.99	66.35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13.6	12.9	34.8	38.6	26.5	73.5	2.98	66.16
	낮음	132	17.6	5.9	29.4	47.1	23.5	76.5	3.06	68.6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9.9	14.2	44.0	31.9	24.1	75.9	2.98	65.96
	중층	141	11.1	12.3	44.4	32.1	23.5	76.5	2.98	65.84
	상층	82	4.8	14.3	47.6	33.3	19.0	81.0	3.10	69.84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2.0	12.8	41.6	33.6	24.8	75.2	2.97	65.60
	중층	125	10.9	13.0	43.5	32.6	23.9	76.1	2.98	65.94
	상층	93	14.6	18.7	43.9	22.8	33.3	66.7	2.75	58.27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7.0	7.0	41.7	44.3	13.9	86.1	3.23	74.49
	모르고 있었음	115	6.4	17.9	42.3	33.3	24.4	75.6	3.03	67.52
정치 이념	진보	78	15.8	12.6	37.9	33.7	28.4	71.6	2.89	63.16
	중도	96	8.3	8.3	50.0	33.3	16.7	83.3	3.08	69.44
	보수	60	11.9	13.9	42.8	31.3	25.9	74.1	2.94	64.51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9	8.6	42.9	45.7	11.4	88.6	3.31	77.14
	중층	35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상층	2	0.0	0.0	0.0	100.0	0.0	100.0	4.00	100.00



문46)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8	17.6	49.8	18.8	31.4	68.6	2.74	57.88	
성별	남성	79	15.2	17.7	54.4	12.7	32.9	67.1	2.65	54.85
	여성	161	13.1	17.5	47.5	21.9	30.6	69.4	2.78	59.37
연령	20대 이하	38	13.5	21.6	51.4	13.5	35.1	64.9	2.65	54.95
	30대	52	7.7	21.2	55.8	15.4	28.8	71.2	2.79	59.61
	40대	74	17.6	18.9	45.9	17.6	36.5	63.5	2.64	54.50
	50대	52	15.4	13.5	46.2	25.0	28.8	71.2	2.81	60.26
결혼 상태	60대 이상	24	12.5	8.3	54.2	25.0	20.8	79.2	2.92	63.89
	미혼	56	14.5	21.8	47.3	16.4	36.4	63.6	2.65	55.15
	기혼	112	11.6	20.5	50.9	17.0	32.1	67.9	2.73	57.74
탈북 이후 기간	이혼, 사별 등	72	16.7	9.7	50.0	23.6	26.4	73.6	2.81	60.18
	5년 이하	72	13.9	16.7	51.4	18.1	30.6	69.4	2.74	57.87
	6~10년 이하	84	9.6	18.1	51.8	20.5	27.7	72.3	2.83	61.04
	11~15년 이하	37	10.8	21.6	56.8	10.8	32.4	67.6	2.68	55.86
남한 거주 기간	16년 이상	47	23.4	14.9	38.3	23.4	38.3	61.7	2.62	53.90
	3년 이하	55	16.4	14.5	49.1	20.0	30.9	69.1	2.73	57.58
	4~6년 이하	63	12.7	19.0	46.0	22.2	31.7	68.3	2.78	59.26
	7~9년 이하	85	10.7	19.0	52.4	17.9	29.8	70.2	2.77	59.13
탈북전 학력	10년 이상	37	18.9	16.2	51.4	13.5	35.1	64.9	2.59	53.15
	중졸 이하	58	19.3	12.3	52.6	15.8	31.6	68.4	2.65	54.97
	고졸	111	11.7	19.8	45.9	22.5	31.5	68.5	2.79	59.76
탈북전 충성심	대졸 이상	70	12.9	18.6	54.3	14.3	31.4	68.6	2.70	56.67
	높음	106	12.4	20.0	50.5	17.1	32.4	67.6	2.72	57.46
탈북전 경제계층	낮음	132	15.2	15.9	49.2	19.7	31.1	68.9	2.73	57.83
	하층	17	11.8	11.8	41.2	35.3	23.5	76.5	3.00	66.67
	중층	141	12.1	21.3	50.4	16.3	33.3	66.7	2.71	56.97
탈북전 정치계층	상층	82	17.3	12.3	50.6	19.8	29.6	70.4	2.73	57.61
	하층	21	4.8	14.3	57.1	23.8	19.0	81.0	3.00	66.67
	중층	125	14.4	19.2	48.8	17.6	33.6	66.4	2.70	56.53
탈북전 남한정보	상층	93	15.2	16.3	50.0	18.5	31.5	68.5	2.72	57.25
	알고 있었음	124	12.9	21.8	40.3	25.0	34.7	65.3	2.77	59.14
정치 이념	모르고 있었음	115	14.9	13.2	59.6	12.3	28.1	71.9	2.69	56.43
	진보	78	12.8	12.8	52.6	21.8	25.6	74.4	2.83	61.11
	중도	96	12.5	20.8	50.0	16.7	33.3	66.7	2.71	56.94
탈북후 경제 계층	보수	60	18.6	18.6	47.5	15.3	37.3	62.7	2.59	53.11
	하층	202	13.4	18.4	48.8	19.4	31.8	68.2	2.74	58.04
	중층	35	14.3	11.4	57.1	17.1	25.7	74.3	2.77	59.05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47)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정당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0.5	18.0	48.1	23.4	28.5	71.5	2.85	61.51	
성별	남성	79	11.4	17.7	55.7	15.2	29.1	70.9	2.75	58.23
	여성	161	10.0	18.1	44.4	27.5	28.1	71.9	2.89	63.12
연령	20대 이하	38	2.6	28.9	44.7	23.7	31.6	68.4	2.89	63.16
	30대	52	5.9	15.7	64.7	13.7	21.6	78.4	2.86	62.09
	40대	74	14.9	16.2	43.2	25.7	31.1	68.9	2.80	59.91
	50대	52	11.5	19.2	40.4	28.8	30.8	69.2	2.87	62.18
	60대 이상	24	16.7	8.3	50.0	25.0	25.0	75.0	2.83	61.11
결혼 상태	미혼	56	8.9	25.0	42.9	23.2	33.9	66.1	2.80	60.12
	기혼	112	8.9	17.0	51.8	22.3	25.9	74.1	2.88	62.50
	이혼, 사별 등	72	14.1	14.1	46.5	25.4	28.2	71.8	2.83	61.0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6.9	16.7	56.9	19.4	23.6	76.4	2.89	62.96
	6~10년 이하	84	12.0	10.8	53.0	24.1	22.9	77.1	2.89	63.05
	11~15년 이하	37	8.1	35.1	32.4	24.3	43.2	56.8	2.73	57.66
	16년 이상	47	14.9	19.1	38.3	27.7	34.0	66.0	2.79	59.5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7.4	18.5	55.6	18.5	25.9	74.1	2.85	61.73
	4~6년 이하	63	14.3	17.5	41.3	27.0	31.7	68.3	2.81	60.32
	7~9년 이하	85	10.6	17.6	48.2	23.5	28.2	71.8	2.85	61.57
	10년 이상	37	8.1	18.9	48.6	24.3	27.0	73.0	2.89	63.0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2.1	15.5	51.7	20.7	27.6	72.4	2.81	60.34
	고졸	111	8.2	19.1	46.4	26.4	27.3	72.7	2.91	63.64
	대졸 이상	70	12.9	18.6	48.6	20.0	31.4	68.6	2.76	58.57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7.6	20.0	56.2	16.2	27.6	72.4	2.81	60.32
	낮음	132	12.9	16.7	41.7	28.8	29.5	70.5	2.86	62.12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23.5	35.3	29.4	35.3	64.7	2.82	60.78
	중층	141	11.4	16.4	51.4	20.7	27.9	72.1	2.81	60.48
	상층	82	8.5	19.5	45.1	26.8	28.0	72.0	2.90	63.41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9.5	19.0	52.4	19.0	28.6	71.4	2.81	60.32
	중층	125	11.3	15.3	50.0	23.4	26.6	73.4	2.85	61.83
	상층	93	9.7	21.5	44.1	24.7	31.2	68.8	2.84	61.2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0.6	21.1	34.1	34.1	31.7	68.3	2.92	63.96
	모르고 있었음	115	10.4	13.9	63.5	12.2	24.3	75.7	2.77	59.13
정치 이념	진보	78	11.5	16.7	39.7	32.1	28.2	71.8	2.92	64.10
	중도	96	8.3	21.9	51.0	18.8	30.2	69.8	2.80	60.07
	보수	60	11.9	13.6	55.9	18.6	25.4	74.6	2.81	60.45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0.4	16.9	47.8	24.9	27.4	72.6	2.87	62.35
	중층	35	8.6	22.9	54.3	14.3	31.4	68.6	2.74	58.09
	상층	2	50.0	0.0	0.0	50.0	50.0	50.0	2.50	50.00

문48)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선거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5.5	26.1	39.5	18.9	41.6	58.4	2.62	53.92	
성별	남성	79	19.2	21.8	42.3	16.7	41.0	59.0	2.56	52.14
	여성	161	13.8	28.1	38.1	20.0	41.9	58.1	2.64	54.79
연령	20대 이하	38	7.9	50.0	21.1	21.1	57.9	42.1	2.55	51.75
	30대	52	13.5	25.0	50.0	11.5	38.5	61.5	2.60	53.20
	40대	74	21.6	23.0	40.5	14.9	44.6	55.4	2.49	49.55
	50대	52	14.0	20.0	44.0	22.0	34.0	66.0	2.74	58.00
	60대 이상	24	16.7	12.5	33.3	37.5	29.2	70.8	2.92	63.89
결혼 상태	미혼	56	12.7	34.5	32.7	20.0	47.3	52.7	2.60	53.33
	기혼	112	18.0	23.4	41.4	17.1	41.4	58.6	2.58	52.55
	이혼, 사별 등	72	13.9	23.6	41.7	20.8	37.5	62.5	2.69	56.4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3.9	23.6	43.1	19.4	37.5	62.5	2.68	56.02
	6~10년 이하	84	18.3	20.7	41.5	19.5	39.0	61.0	2.62	54.06
	11~15년 이하	37	10.8	40.5	32.4	16.2	51.4	48.6	2.54	51.35
	16년 이상	47	17.0	27.7	36.2	19.1	44.7	55.3	2.57	52.48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2.7	27.3	38.2	21.8	40.0	60.0	2.69	56.36
	4~6년 이하	63	19.7	21.3	34.4	24.6	41.0	59.0	2.64	54.64
	7~9년 이하	85	11.8	27.1	45.9	15.3	38.8	61.2	2.65	54.90
	10년 이상	37	21.6	29.7	35.1	13.5	51.4	48.6	2.41	46.85
탈북전 희력	중졸 이하	58	10.5	22.8	43.9	22.8	33.3	66.7	2.79	59.65
	고졸	111	16.2	27.9	36.0	19.8	44.1	55.9	2.59	53.15
	대졸 이상	70	18.8	26.1	42.0	13.0	44.9	55.1	2.49	49.76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12.3	29.2	42.5	16.0	41.5	58.5	2.62	54.09
	낮음	132	18.5	23.8	36.9	20.8	42.3	57.7	2.60	53.3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23.5	41.2	23.5	35.3	64.7	2.76	58.82
	중층	141	17.9	22.1	44.3	15.7	40.0	60.0	2.58	52.62
	상층	82	12.3	33.3	30.9	23.5	45.7	54.3	2.65	55.14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33.3	28.6	33.3	38.1	61.9	2.90	63.49
	중층	125	18.5	21.0	45.2	15.3	39.5	60.5	2.57	52.42
	상층	93	14.1	31.5	33.7	20.7	45.7	54.3	2.61	53.62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4.6	26.8	33.3	25.2	41.5	58.5	2.69	56.37
	모르고 있었음	115	16.7	25.4	45.6	12.3	42.1	57.9	2.54	51.17
정치 이념	진보	78	15.8	21.1	36.8	26.3	36.8	63.2	2.74	57.89
	중도	96	13.5	29.2	43.8	13.5	42.7	57.3	2.57	52.43
	보수	60	20.0	28.3	33.3	18.3	48.3	51.7	2.50	50.00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5.0	24.5	41.5	19.0	39.5	60.5	2.65	54.83
	중층	35	20.0	34.3	25.7	20.0	54.3	45.7	2.46	48.57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49)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은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4.2	25.8	37.9	12.1	50.0	50.0	2.38	45.97	
성별	남성	79	27.8	20.3	43.0	8.9	48.1	51.9	2.33	44.30
	여성	161	22.4	28.6	35.4	13.7	50.9	49.1	2.40	46.79
연령	20대 이하	38	13.2	28.9	47.4	10.5	42.1	57.9	2.55	51.75
	30대	52	19.2	26.9	46.2	7.7	46.2	53.8	2.42	47.44
	40대	74	32.4	29.7	31.1	6.8	62.2	37.8	2.12	37.39
	50대	52	30.8	23.1	26.9	19.2	53.8	46.2	2.35	44.87
	60대 이상	24	12.5	12.5	50.0	25.0	25.0	75.0	2.87	62.50
결혼 상태	미혼	56	17.9	23.2	48.2	10.7	41.1	58.9	2.52	50.59
	기혼	112	30.4	21.4	40.2	8.0	51.8	48.2	2.26	41.96
	이혼, 사별 등	72	19.4	34.7	26.4	19.4	54.2	45.8	2.46	48.61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8.1	31.9	37.5	12.5	50.0	50.0	2.44	48.15
	6~10년 이하	84	23.8	25.0	39.3	11.9	48.8	51.2	2.39	46.43
	11~15년 이하	37	21.6	21.6	48.6	8.1	43.2	56.8	2.43	47.75
	16년 이상	47	36.2	21.3	27.7	14.9	57.4	42.6	2.21	40.4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23.6	32.7	32.7	10.9	56.4	43.6	2.31	43.64
	4~6년 이하	63	17.5	27.0	38.1	17.5	44.4	55.6	2.56	51.85
	7~9년 이하	85	25.9	24.7	37.6	11.8	50.6	49.4	2.35	45.10
	10년 이상	37	32.4	16.2	45.9	5.4	48.6	51.4	2.24	41.44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5.9	17.2	39.7	17.2	43.1	56.9	2.48	49.42
	고졸	111	19.8	30.6	36.9	12.6	50.5	49.5	2.42	47.45
	대졸 이상	70	30.0	25.7	38.6	5.7	55.7	44.3	2.20	40.00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2.6	29.2	36.8	11.3	51.9	48.1	2.37	45.60
	낮음	132	25.0	23.5	38.6	12.9	48.5	51.5	2.39	46.46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7.6	29.4	41.2	11.8	47.1	52.9	2.47	49.02
	중층	141	25.5	25.5	40.4	8.5	51.1	48.9	2.32	43.97
	상층	82	23.2	25.6	32.9	18.3	48.8	51.2	2.46	48.78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33.3	19.0	42.9	4.8	52.4	47.6	2.19	39.68
	중층	125	24.0	25.6	39.2	11.2	49.6	50.4	2.38	45.87
	상층	93	22.6	28.0	34.4	15.1	50.5	49.5	2.42	47.3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2.6	22.6	40.3	14.5	45.2	54.8	2.47	48.92
	모르고 있었음	115	26.1	29.6	34.8	9.6	55.7	44.3	2.28	42.61
정치 이념	진보	78	21.8	25.6	37.2	15.4	47.4	52.6	2.46	48.72
	중도	96	24.0	27.1	35.4	13.5	51.0	49.0	2.39	46.18
	보수	60	28.3	23.3	43.3	5.0	51.7	48.3	2.25	41.67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4.8	25.7	37.6	11.9	50.5	49.5	2.37	45.54
	중층	35	22.9	25.7	40.0	11.4	48.6	51.4	2.40	46.67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50) 나는 남한의 전반적 경제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1.3	31.4	52.3	5.0	42.7	57.3	2.51	50.35	
성별	남성	79	7.6	35.4	48.1	8.9	43.0	57.0	2.58	52.74
	여성	161	13.1	29.4	54.4	3.1	42.5	57.5	2.47	49.17
연령	20대 이하	38	7.9	34.2	50.0	7.9	42.1	57.9	2.58	52.63
	30대	52	7.7	32.7	51.9	7.7	40.4	59.6	2.60	53.20
	40대	74	9.5	31.1	55.4	4.1	40.5	59.5	2.54	51.35
	50대	52	13.5	32.7	51.9	1.9	46.2	53.8	2.42	47.44
	60대 이상	24	26.1	21.7	47.8	4.3	47.8	52.2	2.30	43.48
결혼 상태	미혼	56	8.9	33.9	50.0	7.1	42.9	57.1	2.55	51.79
	기혼	112	8.0	26.8	59.8	5.4	34.8	65.2	2.63	54.17
	이혼, 사별 등	72	18.3	36.6	42.3	2.8	54.9	45.1	2.30	43.19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6.7	36.1	44.4	2.8	52.8	47.2	2.33	44.44
	6~10년 이하	84	9.5	28.6	53.6	8.3	38.1	61.9	2.61	53.57
	11~15년 이하	37	2.8	38.9	55.6	2.8	41.7	58.3	2.58	52.78
	16년 이상	47	12.8	23.4	59.6	4.3	36.2	63.8	2.55	51.7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4.5	40.0	43.6	1.8	54.5	45.5	2.33	44.24
	4~6년 이하	63	17.7	22.6	56.5	3.2	40.3	59.7	2.45	48.39
	7~9년 이하	85	7.1	35.3	50.6	7.1	42.4	57.6	2.58	52.55
	10년 이상	37	5.4	24.3	62.2	8.1	29.7	70.3	2.73	57.6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8.6	36.2	50.0	5.2	44.8	55.2	2.52	50.57
	고졸	111	12.6	33.3	49.5	4.5	45.9	54.1	2.46	48.65
	대졸 이상	70	11.6	24.6	58.0	5.8	36.2	63.8	2.58	52.66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8.5	37.7	48.1	5.7	46.2	53.8	2.51	50.31
	낮음	132	13.7	26.7	55.0	4.6	40.5	59.5	2.50	50.1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23.5	52.9	17.6	29.4	70.6	2.82	60.78
	중층	141	9.3	34.3	52.1	4.3	43.6	56.4	2.51	50.48
	상층	82	15.9	28.0	52.4	3.7	43.9	56.1	2.44	47.97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0.0	30.0	50.0	10.0	40.0	60.0	2.60	53.33
	중층	125	10.4	28.8	55.2	5.6	39.2	60.8	2.56	52.00
	상층	93	12.9	35.5	48.4	3.2	48.4	51.6	2.42	47.3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3.0	36.6	47.2	3.3	49.6	50.4	2.41	46.88
	모르고 있었음	115	9.6	25.2	58.3	7.0	34.8	65.2	2.63	54.20
정치 이념	진보	78	14.1	28.2	53.8	3.8	42.3	57.7	2.47	49.14
	중도	96	10.5	33.7	51.6	4.2	44.2	55.8	2.49	49.82
	보수	60	8.3	31.7	51.7	8.3	40.0	60.0	2.60	53.33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2.9	30.3	51.2	5.5	43.3	56.7	2.49	49.75
	중층	35	2.9	37.1	57.1	2.9	40.0	60.0	2.60	53.33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5) 나는 현재 남한에서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8	34.7	41.8	9.6	48.5	51.5	2.47	49.09	
성별	남성	79	7.7	30.8	43.6	17.9	38.5	61.5	2.72	57.26
	여성	161	16.8	36.6	41.0	5.6	53.4	46.6	2.35	45.13
연령	20대 이하	38	2.6	36.8	50.0	10.5	39.5	60.5	2.68	56.14
	30대	52	13.7	21.6	54.9	9.8	35.3	64.7	2.61	53.59
	40대	74	14.9	36.5	36.5	12.2	51.4	48.6	2.46	48.65
	50대	52	15.4	44.2	32.7	7.7	59.6	40.4	2.33	44.23
	60대 이상	24	25.0	33.3	37.5	4.2	58.3	41.7	2.21	40.28
결혼 상태	미혼	56	7.1	35.7	48.2	8.9	42.9	57.1	2.59	52.98
	기혼	112	12.6	30.6	42.3	14.4	43.2	56.8	2.59	52.85
	이혼, 사별 등	72	20.8	40.3	36.1	2.8	61.1	38.9	2.21	40.2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9.7	35.2	39.4	5.6	54.9	45.1	2.31	43.66
	6~10년 이하	84	6.0	39.3	40.5	14.3	45.2	54.8	2.63	54.36
	11~15년 이하	37	13.5	32.4	43.2	10.8	45.9	54.1	2.51	50.45
	16년 이상	47	19.1	27.7	46.8	6.4	46.8	53.2	2.40	46.81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4.8	46.3	33.3	5.6	61.1	38.9	2.30	43.21
	4~6년 이하	63	20.6	27.0	42.9	9.5	47.6	52.4	2.41	47.09
	7~9년 이하	85	8.2	36.5	44.7	10.6	44.7	55.3	2.58	52.55
	10년 이상	37	13.5	27.0	45.9	13.5	40.5	59.5	2.59	53.1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5.5	43.1	34.5	6.9	58.6	41.4	2.33	44.25
	고졸	111	14.5	38.2	39.1	8.2	52.7	47.3	2.41	46.97
	대졸 이상	70	10.0	22.9	52.9	14.3	32.9	67.1	2.71	57.14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8.6	37.1	45.7	8.6	45.7	54.3	2.54	51.43
	낮음	132	18.2	33.3	37.9	10.6	51.5	48.5	2.41	46.97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7.6	47.1	23.5	29.4	70.6	2.82	60.78
	중층	141	12.1	33.3	44.7	9.9	45.4	54.6	2.52	50.83
	상층	82	17.3	40.7	35.8	6.2	58.0	42.0	2.31	43.62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4.3	33.3	38.1	14.3	47.6	52.4	2.52	50.79
	중층	125	11.2	31.2	46.4	11.2	42.4	57.6	2.58	52.53
	상층	93	16.3	40.2	37.0	6.5	56.5	43.5	2.34	44.56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7.9	33.3	43.1	5.7	51.2	48.8	2.37	45.53
	모르고 있었음	115	9.6	36.5	40.0	13.9	46.1	53.9	2.58	52.75
정치 이념	진보	78	14.1	30.8	44.9	10.3	44.9	55.1	2.51	50.43
	중도	96	13.7	33.7	43.2	9.5	47.4	52.6	2.48	49.47
	보수	60	10.0	43.3	36.7	10.0	53.3	46.7	2.47	48.89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4.9	37.3	41.3	6.5	52.2	47.8	2.39	46.43
	중층	35	2.9	20.0	48.6	28.6	22.9	77.1	3.03	67.62
	상층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0

문52) 나는 남한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0.1	27.3	49.6	13.0	37.4	62.6	2.66	55.18	
성별	남성	79	11.5	28.2	39.7	20.5	39.7	60.3	2.69	56.41
	여성	161	9.4	26.9	54.4	9.4	36.3	63.7	2.64	54.58
연령	20대 이하	38	5.3	23.7	55.3	15.8	28.9	71.1	2.82	60.53
	30대	52	1.9	28.8	53.8	15.4	30.8	69.2	2.83	60.90
	40대	74	16.2	27.0	44.6	12.2	43.2	56.8	2.53	50.90
	50대	52	9.8	31.4	49.0	9.8	41.2	58.8	2.59	52.94
	60대 이상	24	17.4	21.7	47.8	13.0	39.1	60.9	2.57	52.17
결혼 상태	미혼	56	5.4	30.4	50.0	14.3	35.7	64.3	2.73	57.74
	기혼	112	8.1	23.4	55.0	13.5	31.5	68.5	2.74	57.96
	이혼, 사별 등	72	16.9	31.0	40.8	11.3	47.9	52.1	2.46	48.83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1.1	34.7	47.2	6.9	45.8	54.2	2.50	50.00
	6~10년 이하	84	10.7	22.6	52.4	14.3	33.3	66.7	2.70	56.75
	11~15년 이하	37	5.7	25.7	48.6	20.0	31.4	68.6	2.83	60.95
	16년 이상	47	10.6	25.5	48.9	14.9	36.2	63.8	2.68	56.0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2.7	32.7	47.3	7.3	45.5	54.5	2.49	49.70
	4~6년 이하	63	8.1	27.4	53.2	11.3	35.5	64.5	2.68	55.91
	7~9년 이하	85	12.9	25.9	47.1	14.1	38.8	61.2	2.62	54.12
	10년 이상	37	2.8	22.2	52.8	22.2	25.0	75.0	2.94	64.81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0.3	27.6	48.3	13.8	37.9	62.1	2.66	55.17
	고졸	111	9.9	30.6	49.5	9.9	40.5	59.5	2.59	53.15
	대졸 이상	70	10.3	20.6	51.5	17.6	30.9	69.1	2.76	58.82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8.5	27.4	53.8	10.4	35.8	64.2	2.66	55.35
	낮음	132	10.8	27.7	46.2	15.4	38.5	61.5	2.66	55.38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17.6	52.9	23.5	23.5	76.5	2.94	64.71
	중층	141	10.1	26.6	51.8	11.5	36.7	63.3	2.65	54.92
	상층	82	11.0	30.5	45.1	13.4	41.5	58.5	2.61	53.66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5.0	30.0	45.0	20.0	35.0	65.0	2.80	60.00
	중층	125	10.5	23.4	53.2	12.9	33.9	66.1	2.69	56.18
	상층	93	10.8	32.3	45.2	11.8	43.0	57.0	2.58	52.6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3.8	25.2	48.8	12.2	39.0	61.0	2.59	53.12
	모르고 있었음	115	6.1	29.6	50.4	13.9	35.7	64.3	2.72	57.39
정치 이념	진보	78	5.1	37.2	44.9	12.8	42.3	57.7	2.65	55.13
	중도	96	10.5	26.3	48.4	14.7	36.8	63.2	2.67	55.79
	보수	60	15.3	16.9	57.6	10.2	32.2	67.8	2.63	54.24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0.5	27.5	51.5	10.5	38.0	62.0	2.62	54.00
	중층	35	5.7	22.9	42.9	28.6	28.6	71.4	2.94	64.76
	상층	2	50.0	50.0	0.0	0.0	100.0	0.0	1.50	16.67

문53) 나는 내가 번 수입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2.1	22.5	43.8	21.7	34.6	65.4	2.75	58.33	
성별	남성	79	10.1	13.9	49.4	26.6	24.1	75.9	2.92	64.13
	여성	161	13.0	26.7	41.0	19.3	39.8	60.2	2.66	55.49
연령	20대 이하	38	5.3	31.6	39.5	23.7	36.8	63.2	2.82	60.53
	30대	52	13.5	13.5	53.8	19.2	26.9	73.1	2.79	59.61
	40대	74	12.2	29.7	37.8	20.3	41.9	58.1	2.66	55.40
	50대	52	15.4	15.4	48.1	21.2	30.8	69.2	2.75	58.33
	60대 이상	24	12.5	20.8	37.5	29.2	33.3	66.7	2.83	61.11
결혼 상태	미혼	56	10.7	23.2	46.4	19.6	33.9	66.1	2.75	58.33
	기혼	112	10.7	17.9	46.4	25.0	28.6	71.4	2.86	61.90
	이혼, 사별 등	72	15.3	29.2	37.5	18.1	44.4	55.6	2.58	52.7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1.1	22.2	50.0	16.7	33.3	66.7	2.72	57.41
	6~10년 이하	84	9.5	25.0	35.7	29.8	34.5	65.5	2.86	61.90
	11~15년 이하	37	21.6	16.2	51.4	10.8	37.8	62.2	2.51	50.45
	16년 이상	47	10.6	23.4	42.6	23.4	34.0	66.0	2.79	59.5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9.1	20.0	54.5	16.4	29.1	70.9	2.78	59.39
	4~6년 이하	63	7.9	30.2	31.7	30.2	38.1	61.9	2.84	61.38
	7~9년 이하	85	15.3	21.2	40.0	23.5	36.5	63.5	2.72	57.25
	10년 이상	37	16.2	16.2	56.8	10.8	32.4	67.6	2.62	54.0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2.1	15.5	41.4	31.0	27.6	72.4	2.91	63.79
	고졸	111	12.6	24.3	47.7	15.3	36.9	63.1	2.66	55.25
	대졸 이상	70	11.4	25.7	40.0	22.9	37.1	62.9	2.74	58.09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6.6	20.8	52.8	19.8	27.4	72.6	2.86	61.95
	낮음	132	15.9	24.2	36.4	23.5	40.2	59.8	2.67	55.81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11.8	41.2	35.3	23.5	76.5	3.00	66.67
	중층	141	13.5	20.6	48.2	17.7	34.0	66.0	2.70	56.74
	상층	82	9.8	28.0	36.6	25.6	37.8	62.2	2.78	59.3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14.3	66.7	14.3	19.0	81.0	2.90	63.49
	중층	125	14.4	19.2	44.8	21.6	33.6	66.4	2.74	57.87
	상층	93	10.8	29.0	36.6	23.7	39.8	60.2	2.73	57.7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5.3	24.2	38.7	21.8	39.5	60.5	2.67	55.64
	모르고 있었음	115	8.7	20.0	49.6	21.7	28.7	71.3	2.84	61.45
정치 이념	진보	78	11.5	23.1	34.6	30.8	34.6	65.4	2.85	61.54
	중도	96	13.5	26.0	41.7	18.8	39.6	60.4	2.66	55.21
	보수	60	11.7	16.7	55.0	16.7	28.3	71.7	2.77	58.89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3.4	24.8	43.6	18.3	38.1	61.9	2.67	55.61
	중층	35	2.9	8.6	45.7	42.9	11.4	88.6	3.29	76.19
	상층	2	50.0	0.0	50.0	0.0	50.0	50.0	2.00	33.33



문54) 한 직장, 한 자영업에서 1년 이상 일을 해보았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2.6	15.5	24.3	37.7	38.1	61.9	2.77	59.00	
성별	남성	79	16.5	17.7	19.0	46.8	34.2	65.8	2.96	65.40
	여성	161	25.6	14.4	26.9	33.1	40.0	60.0	2.67	55.83
연령	20대 이하	38	28.9	23.7	23.7	23.7	52.6	47.4	2.42	47.37
	30대	52	11.5	15.4	28.8	44.2	26.9	73.1	3.06	68.59
	40대	74	21.6	12.2	23.0	43.2	33.8	66.2	2.88	62.61
	50대	52	19.2	11.5	26.9	42.3	30.8	69.2	2.92	64.10
	60대 이상	24	47.8	21.7	13.0	17.4	69.6	30.4	2.00	33.33
결혼 상태	미혼	56	21.4	21.4	32.1	25.0	42.9	57.1	2.61	53.57
	기혼	112	16.1	9.8	25.0	49.1	25.9	74.1	3.07	69.05
	이혼, 사별 등	72	33.8	19.7	16.9	29.6	53.5	46.5	2.42	47.42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34.7	20.8	18.1	26.4	55.6	44.4	2.36	45.37
	6~10년 이하	84	19.0	10.7	22.6	47.6	29.8	70.2	2.99	66.27
	11~15년 이하	37	18.9	13.5	24.3	43.2	32.4	67.6	2.92	63.96
	16년 이상	47	13.0	17.4	37.0	32.6	30.4	69.6	2.89	63.04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38.9	25.9	18.5	16.7	64.8	35.2	2.13	37.65
	4~6년 이하	63	31.7	15.9	14.3	38.1	47.6	52.4	2.59	52.91
	7~9년 이하	85	12.9	9.4	31.8	45.9	22.4	77.6	3.11	70.20
	10년 이상	37	5.4	13.5	32.4	48.6	18.9	81.1	3.24	74.77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9.8	22.8	19.3	28.1	52.6	47.4	2.46	48.54
	고졸	111	20.7	15.3	28.8	35.1	36.0	64.0	2.78	59.46
	대졸 이상	70	20.0	10.0	21.4	48.6	30.0	70.0	2.99	66.19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2.9	19.0	29.5	28.6	41.9	58.1	2.64	54.60
	낮음	132	22.7	12.9	19.7	44.7	35.6	64.4	2.86	62.12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1.8	0.0	5.9	82.4	11.8	88.2	3.59	86.27
	중층	141	19.9	16.3	25.5	38.3	36.2	63.8	2.82	60.76
	상층	82	29.6	17.3	25.9	27.2	46.9	53.1	2.51	50.21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23.8	9.5	4.8	61.9	33.3	66.7	3.05	68.25
	중층	125	18.4	16.8	21.6	43.2	35.2	64.8	2.90	63.20
	상층	93	28.3	15.2	31.5	25.0	43.5	56.5	2.53	51.0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24.4	17.9	28.5	29.3	42.3	57.7	2.63	54.20
	모르고 있었음	115	20.9	12.2	20.0	47.0	33.0	67.0	2.93	64.35
정치 이념	진보	78	25.6	20.5	17.9	35.9	46.2	53.8	2.64	54.70
	중도	96	20.8	14.6	31.3	33.3	35.4	64.6	2.77	59.03
	보수	60	20.0	10.0	21.7	48.3	30.0	70.0	2.98	66.11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23.9	14.9	26.4	34.8	38.8	61.2	2.72	57.38
	중층	35	11.4	17.1	14.3	57.1	28.6	71.4	3.17	72.38
	상층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0

문55~70)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문항55~문항60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사례수 (명)	문항55	문항56	문항57	문항58	문항59	문항60
전체		240	79.6	76.7	67.9	59.6	43.7	42.1
성별	남성	79	82.3	84.8	74.7	69.6	59.5	59.5
	여성	161	78.3	72.7	64.6	54.7	36.0	33.5
연령	20대 이하	38	60.5	65.8	76.3	42.1	50.0	44.7
	30대	52	80.8	82.7	63.5	51.9	40.4	59.6
	40대	74	85.1	79.7	68.9	66.2	43.2	33.8
	50대	52	82.7	73.1	65.4	65.4	42.3	34.6
	60대 이상	24	83.3	79.2	66.7	70.8	45.8	41.7
결혼 상태	미혼	56	67.9	73.2	75.0	37.5	41.1	50.0
	기혼	112	83.9	80.4	68.7	73.2	49.1	41.1
	이혼, 사별 등	72	81.9	73.6	61.1	55.6	37.5	37.5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75.0	76.4	75.0	62.5	48.6	50.0
	6~10년 이하	84	82.1	79.8	65.5	57.1	41.7	42.9
	11~15년 이하	37	75.7	75.7	59.5	45.9	43.2	35.1
	16년 이상	47	85.1	72.3	68.1	70.2	40.4	34.0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81.8	80.0	72.7	60.0	49.1	52.7
	4~6년 이하	63	74.6	77.8	69.8	66.7	42.9	38.1
	7~9년 이하	85	80.0	74.1	69.4	52.9	40.0	36.5
	10년 이상	37	83.8	75.7	54.1	62.2	45.9	45.9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75.9	72.4	77.6	53.4	36.2	36.2
	고졸	111	76.6	75.7	64.9	61.3	45.9	42.3
	대졸 이상	70	88.6	82.9	65.7	62.9	47.1	47.1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79.2	75.5	69.8	55.7	45.3	46.2
	낮음	132	79.5	77.3	67.4	62.9	42.4	39.4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76.5	88.2	76.5	47.1	17.6	35.3
	중층	141	79.4	80.1	62.4	58.9	44.0	45.4
	상층	82	80.5	68.3	75.6	63.4	48.8	37.8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85.7	90.5	71.4	57.1	38.1	38.1
	중층	125	82.4	79.2	62.4	61.6	46.4	42.4
	상층	93	74.2	69.9	74.2	57.0	40.9	41.9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79.0	78.2	66.1	58.1	44.4	42.7
	모르고 있었음	115	80.9	74.8	70.4	61.7	43.5	41.7
정치 이념	진보	78	84.6	74.4	75.6	65.4	53.8	42.3
	중도	96	71.9	76.0	63.5	52.1	38.5	36.5
	보수	60	83.3	78.3	66.7	63.3	40.0	51.7
탈북후 경제계층	하층	202	78.7	75.2	67.8	59.9	41.1	44.1
	중층	35	85.7	85.7	71.4	57.1	62.9	34.3
	상층	2	100.0	100.0	50.0	100.0	0.0	0.0

- 자본주의 이해 문항 55: 학교에서나 직장,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사람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56: 노동자의 임금은 능력과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57: 자본주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58: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59: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0: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능력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문55-70)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문항61~문항66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사례수 (명)	문항61	문항62	문항63	문항64	문항65	문항66
전체		240	51.2	19.2	57.1	51.7	8.7	48.3
성별	남성	79	62.0	29.1	62.0	60.8	13.9	63.3
	여성	161	46.0	14.3	54.7	47.2	6.2	41.0
연령	20대 이하	38	57.9	18.4	36.8	52.6	7.9	47.4
	30대	52	51.9	19.2	51.9	53.8	5.8	57.7
	40대	74	44.6	21.6	63.5	50.0	12.2	45.9
	50대	52	55.8	15.4	71.2	57.7	9.6	44.2
	60대 이상	24	50.0	20.8	50.0	37.5	4.2	45.8
결혼 상태	미혼	56	64.3	21.4	46.4	53.6	8.9	50.0
	기혼	112	45.5	14.3	61.6	58.9	7.2	50.9
	이혼, 사별 등	72	50.0	25.0	58.3	38.9	11.2	43.1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51.4	16.7	61.1	45.8	9.7	48.6
	6~10년 이하	84	48.8	22.6	52.4	59.5	11.9	57.1
	11~15년 이하	37	54.1	8.1	45.9	51.4	8.1	37.8
	16년 이상	47	53.2	25.5	68.1	46.8	2.1	40.4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50.9	18.2	56.4	43.6	9.0	47.3
	4~6년 이하	63	46.0	19.0	57.1	46.0	9.5	49.2
	7~9년 이하	85	48.2	15.3	57.6	60.0	7.0	48.2
	10년 이상	37	67.6	29.7	56.8	54.1	10.8	48.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55.2	15.5	53.4	46.6	8.6	34.5
	고졸	111	45.9	18.0	58.6	50.5	7.2	51.4
	대졸 이상	70	57.1	24.3	58.6	58.6	11.5	55.7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52.8	17.9	50.9	50.9	10.3	48.1
	낮음	132	50.8	20.5	61.4	52.3	7.5	48.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47.1	11.8	35.3	58.8	5.9	52.9
	중층	141	52.5	19.1	58.2	52.5	9.2	51.8
	상층	82	50.0	20.7	59.8	48.8	8.5	41.5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7.6	14.3	61.9	52.4	4.8	42.9
	중층	125	52.8	20.0	60.0	52.8	9.6	52.8
	상층	93	50.5	18.3	52.7	50.5	7.5	44.1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46.0	18.5	57.3	52.4	6.5	41.1
	모르고 있었음	115	56.5	20.0	56.5	51.3	11.3	56.5
정치 이념	진보	78	53.8	28.2	64.1	60.3	12.8	53.8
	중도	96	44.8	14.6	51.0	42.7	3.1	40.6
	보수	60	58.3	15.0	61.7	56.7	11.7	55.0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52.0	18.3	56.4	51.0	7.0	48.5
	중층	35	48.6	25.7	60.0	57.1	20.0	48.6
	상층	2	50.0	0.0	100.0	50.0	0.0	50.0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1: 개인소유제도가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할 것이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2: 전문적 기술이 없는 노동자(청소부, 식당 주방일, 일용직 노동자 등)가 받는 월급은 자신들의 능력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하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3: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4: 공장을 경영할 때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5: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6: 개인소유 기업제도는 전반적으로 공평하며 효율적인 제도이다.

문55~70)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문항67~문항70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사례수 (명)	문항67	문항68	문항69	문항70	16개 문항 합의 평균(점)	16개 문항 합의 평균(%)
전체		240	45.0	23.8	18.3	13.3	7.5	46.8
성별	남성	79	57.0	38.0	21.5	15.2	9.0	56.3
	여성	161	39.1	16.8	16.8	12.4	6.8	42.2
연령	20대 이하	38	50.0	13.2	18.4	23.7	7.1	44.4
	30대	52	42.3	26.9	21.2	17.3	7.8	48.4
	40대	74	43.2	27.0	21.6	14.9	7.6	47.5
	50대	52	44.2	28.8	15.4	1.9	7.6	47.2
결혼 상태	60대 이상	24	50.0	12.5	8.3	8.3	7.1	44.3
	미혼	56	51.8	26.8	21.4	21.4	7.6	47.2
	기혼	112	46.4	22.3	18.8	13.4	7.9	49.2
탈북 이후 기간	이혼, 사별 등	72	37.5	23.6	15.3	6.9	6.8	42.8
	5년 이하	72	51.4	12.5	13.9	12.5	7.5	46.7
	6~10년 이하	84	46.4	32.1	23.8	15.5	7.9	49.2
	11~15년 이하	37	32.4	21.6	13.5	8.1	6.6	41.2
남한 거주 기간	16년 이상	47	42.6	27.7	19.1	14.9	7.6	47.2
	3년 이하	55	52.7	9.1	23.6	14.5	7.6	47.3
	4~6년 이하	63	42.9	17.5	11.1	9.5	7.1	44.6
	7~9년 이하	85	40.0	30.6	18.8	12.9	7.4	46.5
탈북전 학력	10년 이상	37	48.6	40.5	21.6	18.9	8.1	50.5
	중졸 이하	58	43.1	13.8	20.7	13.8	6.9	43.4
	고졸	111	37.8	27.9	16.2	12.6	7.4	46.0
탈북전 층성심	대졸 이상	70	57.1	25.7	18.6	14.3	8.2	51.4
	높음	106	44.3	18.9	21.7	15.1	7.4	46.5
탈북전 경제계층	낮음	132	45.5	27.3	15.9	12.1	7.6	47.2
	하층	17	35.3	23.5	11.8	23.5	7.0	43.8
	중층	141	47.5	27.0	20.6	16.3	7.7	48.0
탈북전 정치계층	상층	82	42.7	18.3	15.9	6.1	7.3	45.4
	하층	21	52.4	14.3	14.3	9.5	7.4	46.4
	중층	125	43.2	28.8	20.8	16.8	7.8	48.5
탈북전 남한정보	상층	93	45.2	19.4	16.1	9.7	7.2	44.7
	알고 있었음	124	41.9	21.8	16.9	12.9	7.3	45.6
정치 이념	모르고 있었음	115	48.7	26.1	19.1	13.9	7.7	48.3
	진보	78	46.2	17.9	16.7	12.8	8.1	50.6
	중도	96	39.6	17.7	16.7	16.7	6.7	41.6
탈북후 경제 계층	보수	60	53.3	43.3	25.0	10.0	8.2	51.1
	하층	202	44.6	23.3	17.3	10.9	7.4	46.3
	중층	35	48.6	28.6	25.7	25.7	8.2	51.4
	상층	2	50.0	0.0	0.0	50.0	7.5	46.9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7: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8: 노동조합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69: 기업과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당하게 내고 있다.
- 자본주의 이해 문항 70: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문기)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	7.9	38.5	52.3	9.2	90.8	3.42	80.61	
성별	남성	79	0.0	8.9	32.9	58.2	8.9	91.1	3.49	83.12
	여성	161	1.9	7.5	41.3	49.4	9.4	90.6	3.38	79.37
연령	20대 이하	38	0.0	18.4	50.0	31.6	18.4	81.6	3.13	71.05
	30대	52	0.0	7.7	30.8	61.5	7.7	92.3	3.54	84.61
	40대	74	0.0	4.1	41.9	54.1	4.1	95.9	3.50	83.33
	50대	52	1.9	5.8	30.8	61.5	7.7	92.3	3.52	83.97
	60대 이상	24	8.7	8.7	43.5	39.1	17.4	82.6	3.13	71.01
결혼 상태	미혼	56	0.0	10.7	42.9	46.4	10.7	89.3	3.36	78.57
	기혼	112	0.9	5.4	39.3	54.5	6.3	93.8	3.47	82.44
	이혼, 사별 등	72	2.8	9.9	33.8	53.5	12.7	87.3	3.38	79.34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4	6.9	34.7	56.9	8.3	91.7	3.47	82.41
	6~10년 이하	84	1.2	8.4	36.1	54.2	9.6	90.4	3.43	81.12
	11~15년 이하	37	0.0	5.4	56.8	37.8	5.4	94.6	3.32	77.48
	16년 이상	47	2.1	10.6	34.0	53.2	12.8	87.2	3.38	79.4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0.0	10.9	32.7	56.4	10.9	89.1	3.45	81.82
	4~6년 이하	63	1.6	4.8	33.3	60.3	6.3	93.7	3.52	84.13
	7~9년 이하	85	2.4	9.5	47.6	40.5	11.9	88.1	3.26	75.40
	10년 이상	37	0.0	5.4	35.1	59.5	5.4	94.6	3.54	84.68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	6.9	37.9	53.4	8.6	91.4	3.43	81.03
	고졸	111	1.8	11.7	41.4	45.0	13.5	86.5	3.30	76.58
	대졸 이상	70	0.0	2.9	34.8	62.3	2.9	97.1	3.59	86.47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0.9	10.4	39.6	49.1	11.3	88.7	3.37	78.93
	낮음	132	1.5	6.1	37.4	55.0	7.6	92.4	3.46	81.93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0.0	6.3	50.0	43.8	6.3	93.8	3.38	79.17
	중층	141	0.7	9.9	38.3	51.1	10.6	89.4	3.40	79.90
	상층	82	2.4	4.9	36.6	56.1	7.3	92.7	3.46	82.11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중층	125	0.8	8.8	36.0	54.4	9.6	90.4	3.44	81.33
	상층	93	2.2	8.6	39.8	49.5	10.8	89.2	3.37	78.85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6	9.8	39.8	48.8	11.4	88.6	3.36	78.59
	모르고 있었음	115	0.9	6.1	36.5	56.5	7.0	93.0	3.49	82.90
정치 이념	진보	78	0.0	3.9	32.5	63.6	3.9	96.1	3.60	86.58
	중도	96	2.1	11.5	43.8	42.7	13.5	86.5	3.27	75.69
	보수	60	1.7	8.3	40.0	50.0	10.0	90.0	3.38	79.44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5	7.0	37.8	53.7	8.5	91.5	3.44	81.26
	중층	35	0.0	11.4	42.9	45.7	11.4	88.6	3.34	78.09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72)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3.4	22.2	47.3	17.2	35.6	64.4	2.68	56.07	
성별	남성	79	13.9	21.5	46.8	17.7	35.4	64.6	2.68	56.12
	여성	161	13.1	22.5	47.5	16.9	35.6	64.4	2.68	56.04
연령	20대 이하	38	10.5	26.3	50.0	13.2	36.8	63.2	2.66	55.26
	30대	52	13.7	25.5	45.1	15.7	39.2	60.8	2.63	54.25
	40대	74	18.9	18.9	43.2	18.9	37.8	62.2	2.62	54.05
	50대	52	11.5	25.0	46.2	17.3	36.5	63.5	2.69	56.41
	60대 이상	24	4.2	12.5	62.5	20.8	16.7	83.3	3.00	66.67
결혼 상태	미혼	56	16.1	28.6	44.6	10.7	44.6	55.4	2.50	50.00
	기혼	112	9.0	18.0	52.3	20.7	27.0	73.0	2.85	61.56
	이혼, 사별 등	72	18.1	23.6	41.7	16.7	41.7	58.3	2.57	52.31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15.3	22.2	48.6	13.9	37.5	62.5	2.61	53.70
	6~10년 이하	84	11.9	14.3	52.4	21.4	26.2	73.8	2.83	61.11
	11~15년 이하	37	10.8	29.7	45.9	13.5	40.5	59.5	2.62	54.05
	16년 이상	47	15.2	30.4	37.0	17.4	45.7	54.3	2.57	52.17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18.2	20.0	47.3	14.5	38.2	61.8	2.58	52.73
	4~6년 이하	63	12.9	21.0	53.2	12.9	33.9	66.1	2.66	55.38
	7~9년 이하	85	10.6	21.2	45.9	22.4	31.8	68.2	2.80	60.00
	10년 이상	37	13.5	29.7	40.5	16.2	43.2	56.8	2.59	53.1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7.2	20.7	48.3	13.8	37.9	62.1	2.59	52.87
	고졸	111	9.9	23.4	50.5	16.2	33.3	66.7	2.73	57.66
	대졸 이상	70	15.7	21.4	41.4	21.4	37.1	62.9	2.69	56.19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16.2	28.6	38.1	17.1	44.8	55.2	2.56	52.06
	낮음	132	11.4	17.4	54.5	16.7	28.8	71.2	2.77	58.84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17.6	11.8	58.8	11.8	29.4	70.6	2.65	54.90
	중층	141	12.8	22.0	49.6	15.6	34.8	65.2	2.68	56.03
	상층	82	13.6	24.7	40.7	21.0	38.3	61.7	2.69	56.38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14.3	19.0	57.1	9.5	33.3	66.7	2.62	53.97
	중층	125	12.0	19.2	52.8	16.0	31.2	68.8	2.73	57.60
	상층	93	15.2	27.2	38.0	19.6	42.4	57.6	2.62	53.98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2.2	22.0	46.3	19.5	34.1	65.9	2.73	57.72
	모르고 있었음	115	14.8	21.7	48.7	14.8	36.5	63.5	2.63	54.49
정치 이념	진보	78	14.1	23.1	44.9	17.9	37.2	62.8	2.67	55.56
	중도	96	11.6	24.2	49.5	14.7	35.8	64.2	2.67	55.79
	보수	60	15.0	20.0	46.7	18.3	35.0	65.0	2.68	56.11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3.4	23.4	44.8	18.4	36.8	63.2	2.68	56.05
	중층	35	14.3	14.3	62.9	8.6	28.6	71.4	2.66	55.24
	상층	2	0.0	0.0	50.0	50.0	0.0	100.0	3.50	83.33

문73)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11.3	20.2	47.5	21.0	31.5	68.5	2.78	59.38	
성별	남성	79	17.7	29.1	43.0	10.1	46.8	53.2	2.46	48.52
	여성	161	8.2	15.7	49.7	26.4	23.9	76.1	2.94	64.78
연령	20대 이하	38	10.5	34.2	44.7	10.5	44.7	55.3	2.55	51.75
	30대	52	3.8	26.9	51.9	17.3	30.8	69.2	2.83	60.90
	40대	74	12.2	20.3	47.3	20.3	32.4	67.6	2.76	58.56
	50대	52	22.0	6.0	42.0	30.0	28.0	72.0	2.80	60.00
	60대 이상	24	4.2	12.5	54.2	29.2	16.7	83.3	3.08	69.44
결혼 상태	미혼	56	10.9	27.3	45.5	16.4	38.2	61.8	2.67	55.76
	기혼	112	12.5	18.8	47.3	21.4	31.3	68.8	2.78	59.23
	이혼, 사별 등	72	9.9	16.9	49.3	23.9	26.8	73.2	2.87	62.44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5.6	22.2	55.6	16.7	27.8	72.2	2.83	61.11
	6~10년 이하	84	18.3	14.6	48.8	18.3	32.9	67.1	2.67	55.69
	11~15년 이하	37	8.1	21.6	37.8	32.4	29.7	70.3	2.95	64.86
	16년 이상	47	10.6	25.5	40.4	23.4	36.2	63.8	2.77	58.86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9.1	23.6	47.3	20.0	32.7	67.3	2.78	59.39
	4~6년 이하	63	8.1	25.8	48.4	17.7	33.9	66.1	2.76	58.60
	7~9년 이하	85	15.5	13.1	51.2	20.2	28.6	71.4	2.76	58.73
	10년 이상	37	10.8	21.6	37.8	29.7	32.4	67.6	2.86	62.16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15.8	15.8	54.4	14.0	31.6	68.4	2.67	55.56
	고졸	111	7.3	22.7	42.7	27.3	30.0	70.0	2.90	63.33
	대졸 이상	70	14.3	20.0	50.0	15.7	34.3	65.7	2.67	55.71
탈북전 충성심	높음	106	9.4	26.4	44.3	19.8	35.8	64.2	2.75	58.18
	낮음	132	13.1	15.4	50.0	21.5	28.5	71.5	2.80	60.00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5.9	23.5	52.9	17.6	29.4	70.6	2.82	60.78
	중층	141	12.9	18.6	48.6	20.0	31.4	68.6	2.76	58.57
	상층	82	9.9	22.2	44.4	23.5	32.1	67.9	2.81	60.4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4.8	23.8	57.1	14.3	28.6	71.4	2.81	60.32
	중층	125	13.7	19.4	47.6	19.4	33.1	66.9	2.73	57.53
	상층	93	9.8	20.7	45.7	23.9	30.4	69.6	2.84	61.23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0.7	20.5	41.8	27.0	31.1	68.9	2.85	61.75
	모르고 있었음	115	12.2	19.1	53.9	14.8	31.3	68.7	2.71	57.10
정치 이념	진보	78	15.6	14.3	49.4	20.8	29.9	70.1	2.75	58.44
	중도	96	6.3	22.9	50.0	20.8	29.2	70.8	2.85	61.80
	보수	60	15.3	25.4	42.4	16.9	40.7	59.3	2.61	53.67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1.5	17.5	47.0	24.0	29.0	71.0	2.84	61.17
	중층	35	11.4	34.3	48.6	5.7	45.7	54.3	2.49	49.52
	상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66.67

문74)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기대했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4점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40	21.3	39.7	30.1	8.8	61.1	38.9	2.26	42.12	
성별	남성	79	25.3	34.2	27.8	12.7	59.5	40.5	2.28	42.62
	여성	161	19.4	42.5	31.3	6.9	61.9	38.1	2.26	41.87
연령	20대 이하	38	18.4	36.8	39.5	5.3	55.3	44.7	2.32	43.86
	30대	52	21.6	45.1	23.5	9.8	66.7	33.3	2.22	40.52
	40대	74	29.7	47.3	17.6	5.4	77.0	23.0	1.99	32.88
	50대	52	17.3	32.7	36.5	13.5	50.0	50.0	2.46	48.72
	60대 이상	24	8.3	25.0	54.2	12.5	33.3	66.7	2.71	56.94
결혼 상태	미혼	56	19.6	35.7	35.7	8.9	55.4	44.6	2.34	44.64
	기혼	112	20.7	41.4	28.8	9.0	62.2	37.8	2.26	42.04
	이혼, 사별 등	72	23.6	40.3	27.8	8.3	63.9	36.1	2.21	40.28
탈북 이후 기간	5년 이하	72	20.8	41.7	27.8	9.7	62.5	37.5	2.26	42.13
	6~10년 이하	84	22.6	33.3	36.9	7.1	56.0	44.0	2.29	42.86
	11~15년 이하	37	16.2	48.6	21.6	13.5	64.9	35.1	2.32	44.14
	16년 이상	47	23.9	41.3	28.3	6.5	65.2	34.8	2.17	39.13
남한 거주 기간	3년 이하	55	23.6	41.8	25.5	9.1	65.5	34.5	2.20	40.00
	4~6년 이하	63	22.6	38.7	32.3	6.5	61.3	38.7	2.23	40.86
	7~9년 이하	85	20.0	40.0	34.1	5.9	60.0	40.0	2.26	41.96
	10년 이상	37	18.9	37.8	24.3	18.9	56.8	43.2	2.43	47.75
탈북전 학력	중졸 이하	58	25.9	32.8	32.8	8.6	58.6	41.4	2.24	41.38
	고졸	111	17.1	40.5	31.5	10.8	57.7	42.3	2.36	45.34
	대졸 이상	70	24.3	44.3	25.7	5.7	68.6	31.4	2.13	37.62
탈북전 총성심	높음	106	26.7	41.0	23.8	8.6	67.6	32.4	2.14	38.09
	낮음	132	17.4	38.6	35.6	8.3	56.1	43.9	2.35	44.95
탈북전 경제계층	하층	17	23.5	41.2	17.6	17.6	64.7	35.3	2.29	43.14
	중층	141	21.3	40.4	29.8	8.5	61.7	38.3	2.26	41.84
	상층	82	21.0	38.3	33.3	7.4	59.3	40.7	2.27	42.39
탈북전 정치계층	하층	21	23.8	38.1	28.6	9.5	61.9	38.1	2.24	41.27
	중층	125	23.2	39.2	30.4	7.2	62.4	37.6	2.22	40.53
	상층	93	18.5	41.3	29.3	10.9	59.8	40.2	2.33	44.20
탈북전 남한정보	알고 있었음	124	17.9	39.8	35.0	7.3	57.7	42.3	2.32	43.90
	모르고 있었음	115	25.2	40.0	24.3	10.4	65.2	34.8	2.20	40.00
정치 이념	진보	78	21.8	43.6	30.8	3.8	65.4	34.6	2.17	38.89
	중도	96	18.9	40.0	32.6	8.4	58.9	41.1	2.31	43.51
	보수	60	25.0	35.0	26.7	13.3	60.0	40.0	2.28	42.78
탈북후 경제 계층	하층	202	19.4	39.8	31.3	9.5	59.2	40.8	2.31	43.61
	중층	35	28.6	40.0	25.7	5.7	68.6	31.4	2.09	36.19
	상층	2	100.0	0.0	0.0	0.0	100.0	0.0	1.00	0.00

### 3. 설문지

<p>안녕하십니까?</p> <p>통일연구원에서는 현재 남북한 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남북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학술적 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p> <p>이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표집절차에 따라 선정되었기에 저희 면접원이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조사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면접원의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설문 조사 진행 중 언제든지 설문조사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p> <p><b>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b></p> <p>대단히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 9. .</p> <p>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p>
<p>※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통일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통계법」</p> <p>제33조 (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다음의 주장 또는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2-8번).									
2.	경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3.	남북한 간 전쟁중지, 자유로운 왕래,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통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집중해서 시청하거나 듣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통일을 위해서 기부금(돈)을 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통일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9.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장중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같은 민족이니까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③ 남북 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④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⑤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다음은 통일의 기대 익 및 손실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0.	통일이 국가적으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①		②		③		④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1.	통일이 국가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2.	통일이 남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3.	통일이 북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4.	통일이 응답자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5.	통일이 되어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지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3년 이내 ② 3년 ~ 5년 ③ 6년 ~ 10년 ④ 11년 ~ 15년 ⑤ 15년 이상								

다음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6.	남한에서의 나의 형편은 내 리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17.	남한에서 내 형편은 매우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남한에서의 형편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남한에서 내 삶의 의미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 남한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다른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①		②		③		④	
23.	내 생각은 남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내가 남한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내 자신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6.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밝히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다른 한민족(남북한 포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①		②		③		④	
29.	내 생각은 다른 우리 민족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내 자신이 한민족(남북한 포함)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내 자신이 한민족(남북한 포함)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2.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한민족(남북한 포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밝히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남한의 정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33.	나는 남한의 전반적 정치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4.	민주주의를 하려면 의견이 다른 여러 개의 당(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5.	모든 당(정당)들에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6.	하나의 당(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가 잘 안된다.	①		②		③		④	
37.	야당(현재 집권하지 못한 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8.	자유가 많아 무질서한 사회에 사는 것보다 강력한 법질서로 운영되는 사회에 사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39.	시위는 무질서한 상태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시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40.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41.	내 주장이 옳다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2.	나는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3.	나는 우리 자구(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안다.	①		②		③		④	
44.	나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참가했다.	①		②		③		④	
45.	나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기관에 찾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6.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7.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정당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8.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선거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9.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은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남한의 경제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50.	나는 남한의 전반적 경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1.	나는 현재 남한에서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52.	나는 남한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53.	나는 내가 번 수입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54.	한 직장, 한 자영업에서 1년 이상 일을 해보았다.	①		②		③		④	

아래 글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55.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학교에서나 직장,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사람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② 학교에서나 직장,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사람과 사회를 파괴한다. ③ 잘 모르겠다.
56.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노동자의 임금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노동자의 임금은 능력과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57.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자본주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② 자본주의 제도는 사람을 아주 이기적으로 만든다 /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든다. ③ 잘 모르겠다.
58.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착취했기 때문이다. ③ 잘 모르겠다.

59.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사람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은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잘 모르겠다.
60.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벌어야 한다. ②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61.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개인소유제도가 없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할 것이다. ② 개인소유제도가 없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62.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전문적 기술이 없는 노동자(청소부, 식당 주방일, 일용직 노동자 등)가 받는 월급은 자신들의 능력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하다. ② 전문적 기술이 없는 노동자(청소부, 식당 주방일, 일용직 노동자 등)가 받는 월급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 ③ 잘 모르겠다.
63.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③ 잘 모르겠다.
64.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공장을 경영할 때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② 공장을 경영할 때 중요한 결정은 경영자가 내려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65.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②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은 때로는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66.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개인소유 기업제도는 전반적으로 공평하며 효율적인 제도이다. ② 개인소유 기업제도는 전반적으로 경제 불황과 가난한 사람을 만든다. ③ 잘 모르겠다.
67.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②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은 별로 이득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68.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노동조합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69.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기업과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당하게 내고 있다. ② 기업과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70.	아래 세 문장 중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②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다음은 통일 이후 경제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71.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2.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73.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74.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기대했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생년, 월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생

3.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혼인신고하지 않은 동거

4. (해당자에 한해)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_\_\_\_\_명)

다음은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북한에서 언제 탈북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6.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 해당 직업을 가졌던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① 일반직장에 다님 \_\_\_\_\_년

② 직장에서 직을 걸고 장사를 했음 \_\_\_\_\_년

③ 시장에서 장사를 했음 \_\_\_\_\_년

④ 가정에서 살림을 했음 \_\_\_\_\_년

⑤ 학생 \_\_\_\_\_년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7. 북한에서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

② 소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중학교 졸업

⑤ 전문학교 졸업/중퇴

⑥ 대학교 졸업/중퇴

⑦ 대학원 이상

8.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_\_\_\_\_도 \_\_\_\_\_시(군)

9. 북한에서 군대 복무를 하셨습니까?

- ① 하지 않음
- ② 복무하였음 ( \_\_\_\_\_년 입대, \_\_\_\_\_년 제대)

10. 북한에 거주할 때, 당에 대한 본인의 충성심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었다                      ② 다소 낮았다                      ③ 다소 높았다
- ④ 매우 높았다

11. 북한에서 거주할 때 본인의 정치적 계층을 6개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족은 북한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12. 북한에서 거주할 때 본인의 잘 사는 정도를 6개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족은 북한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13.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알지 못했다              ② 그리 알지 못했다
- ③ 다소 알고 있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다음은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남한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15.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 ① 아니요.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재학                      ⑥ 대학교 졸업/중퇴
- ⑦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중퇴                      ⑧ 대학원-박사과정 졸업/중퇴
- ⑨ 직업학교 졸업/중퇴

16.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새정치민주연합                      ③ 통합진보당
- ④ 정의당                      ⑤ 기타 (\_\_\_\_\_당)                      ⑥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

17.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진보적이다              ② 다소 진보적이다                      ③ 중도이다
- ④ 다소 보수적이다              ⑤ 매우 보수적이다

18.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_\_\_\_\_만원

19.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가정의 소득 수준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균보다 훨씬 높다              ② 평균보다 약간 높다                      ③ 평균과 비슷하다
- ④ 평균보다 약간 낮다              ⑤ 평균보다 훨씬 낮다

20. 한국사회의 계층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족은 한국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2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수산업/축산업
- ②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자 등)
- ③ 판매/서비스직(점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 ⑤ 사무/기술직(회사직원, 교사, 프로그래머 등)
- ⑥ 경영/관리직(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 ⑦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 ⑧ 전업주부
- ⑨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⑩ 군인/경찰
- ⑪ 무직, 정년, 휴직
- ⑫ 일용직(아르바이트, 일당 노동자 등)
- ⑬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진병근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 연구보고서

### 2013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 논문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 학술회의총서

비매품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헌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한국<sup>의</sup>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